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硏究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硏究所

◇ 研究責任者 ◇

權　海　浩　（本研究所 研究委員・法博）

머 리 말

國民福祉 요구 증대에 상응한 국민의 租稅負擔 증가와 國際間의 거래 등 경제사상의 확대 및 多岐化에 따른 租稅法의 複雜化, 所得稅의 申告納付制度의 실시등으로 인하여 稅務士의 役割은 더욱 중요시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硏究」가 이미 발간된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硏究」와 함께 學界는 물론 政策立案者, 稅務行政에 진력하는 公務員, 특히 우리나라의 稅務士들에게 다소라도 도움되기를 기대한다.

日本稅理士制度의 萌芽는 1900년대 초를 전후한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의 혼란기부터 자연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법적 제도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기까지는 오랜 역사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특히 1961년 「稅務士法」의 제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稅務士制度 발전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韓國稅務士會도 동참하고 있는 1992년 亞太稅務(理)士協會(AOTCA)의 발족과 稅務代理業務의 開放化의 실시를 눈앞에 둔 현재 우리나라의 稅務士制度와 日本稅理士制度는 명실공히 競爭的 關係이면서도 共存共榮의 運命을 같이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硏究는 하나의 시작으로 앞으로의 계속적인 硏究를 기대하면서, 본 硏究를 위하여 渡日하여 資料를 蒐集하는 등 정열적인 연구에 진력한 본 硏究所 硏究委員인 權海浩 稅務士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硏究를 위하여 權 硏究委員의 渡日時 여러가지 便宜와 資料를 제공하여 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平田公敏 會長 이하 任職員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1995. 6.

韓國租稅硏究所長 申 相 式

凡例와 略語

法務省--法務部

大藏省--財務部

自治省-內務部

裁判所--法院

國稅局--地方國稅廳

國稅局長--地方國稅廳長

通達--通牒

日本稅理士會連合會--日稅連

日本稅理士共榮會--日稅共

日本稅理士政治連盟--日稅政連

日本稅務硏究센터--日稅硏

日本辯護士會連合會--日辯連

社會保險勞務士--社勞士

民事訴訟法--民訴法

刑事訴訟法--刑訴法

租稅特別措置法--租特法

目　　次

第 1 章　序　論 13

Ⅰ. 稅務士와 稅理士 13
Ⅱ. 日本의 稅理士 14
Ⅲ. 稅理士의 社會的 位置 42 15
Ⅳ. 稅理士會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17
Ⅴ. 硏究方法 19

第 2 章　稅理士制度의 法的 沿革 21

第 1 節　稅理士制度의 黎明 21
Ⅰ. 明治初期의 稅制 21
Ⅱ. 淸日戰爭後 營業稅法의 制定과 稅務代理 發生 21
Ⅲ. 露日戰爭에 따른 增稅와 稅務代理業者의 誕生 23
Ⅳ. 稅務代辯者 取締規則의 制定 23
Ⅴ. 1927년 計理士法 制定 24
Ⅵ. 1933년 稅務代理人法案의 提案과 廢案 26

第 2 節　1942년 稅理士制度의 確立을 위한 立法 28
Ⅰ. 稅務代理士法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28
Ⅱ. 國會의 審議狀況 29
Ⅲ. 1942년 稅務代理士法의 成立과 特色 31

第 3 節 1951年 民主的 稅理士制度로의 改善 33
Ⅰ. 稅制民主化와 稅理士制度에 관한 「샤프 勸告(Shoup's advice)」33
Ⅱ. Shoup 勸告에 대한 政府의 對應 35
Ⅲ. 稅理士制度에 관한 제2차 Shoup 勸告 37
Ⅳ. 「稅理士法」으로의 改正方針 및 그 要綱 39
Ⅴ. 稅理士法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41
Ⅵ. 辯護士 關係에 대한 國會의 審議狀況 42
Ⅶ. 稅理士法의 特色 45

第 4 節 1956年 稅理士會의 强化 充實을 위한 法 改正 46
Ⅰ. 1956년 稅理士法 改正의 背景 46
Ⅱ. 稅理士法 改正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50
Ⅲ. 國會의 審議狀況 50
Ⅳ. 改正 稅理士法의 特色 53

第 5 節 1961年 稅理士會의 自主性 確立을 위한 法 改正 54
Ⅰ. 稅理士法 改正 經過와 要綱 54
Ⅱ. 改正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54
Ⅲ. 國會의 審議狀況 55
Ⅳ. 改正 稅理士法의 特色과 槪要 55

第 6 節 1968年 稅理士制度의 全面的 改正意圖 挫折 56
Ⅰ. 稅理士法 全面 改正의 必要性과 그 目的 56
Ⅱ. 改正案의 作成 經緯 57
Ⅲ. 稅理士法 改正 要綱 및 提案理由 58

Ⅳ. 國會의 審議狀況과 廢案 經緯 58
Ⅴ. 改正案에 대한 日稅連등의 要望과 政府의 見解 60

第 7 節 1979년 稅理士法 改正 努力 66
Ⅰ. 稅理士法 改正 提案 經緯 67
Ⅱ. 稅理士法 改正에 대한 政府側과 日稅連과의 折衝 67
Ⅲ. 稅理士法 改正에 대한 國會의 動向 68
Ⅳ. 稅理士法 改正法律案 要綱 및 提案理由 69
Ⅴ. 國會의 審議중 廢案 經緯 71

第 8 節 1980년 稅理士法 改正 75
Ⅰ. 國會의 審議過程 75
Ⅱ. 改正稅理士法의 特色과 槪要 84

第 3 章 日本稅務代理士會期의 發展過程 87

第 1 節 오오사카(大阪)稅務代辯會의 設立 87

第 2 節 戰時體制 突入과 社會經濟 情勢 87

第 3 節 京都稅務代辯者協會의 設立과 代理人制度 確立 努力 89
Ⅰ. 京都 稅務代辯者協會 設立 89
Ⅱ. 全日本稅務代理人法 制定 期成同盟會 創立 89
Ⅲ. 日本稅務代理人連合會 結成 90
Ⅳ. 東京稅務代理人會의 結成 90

第 4 節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의 誕生 92
Ⅰ. 稅務代理士法 制定(1942년) 92
Ⅱ. 稅務代理士會 設立 및 同連合會 誕生 93

第 5 節 四國·北陸稅理士會등 新設 94

第 4 章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期의 發展過程 95

第 1 節 戰時動員 體制 强化와 敗戰 95

第 2 節 北陸·關東信越·九州北部稅務代理士會 등 新設 96

第 3 節 샤프의 勸告와 稅制上 特色 97
Ⅰ. 經濟安定9原則 實行 97
Ⅱ. 샤프 使節團 來日 98
Ⅲ. 샤프 稅制 改革案 101

第 4 節 1949年 辯護士法 改正 經緯 102

第 5 節 韓國 動亂으로 인한 特需 102

第 5 章 社團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期의 發展過程 104

第 1 節 社團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104

第 2 節 機關紙「稅理士界」發刊 104

第 3 節 長期 稅務職 勤續公務員의 自動資格取得 問題 105

Ⅰ. 長期 勤續 稅務公務員의 稅理士資格 取得 要求 105

Ⅱ. 日稅連과 辯護士會의 反對 106

第 4 節 「稅務監査制度」에 대한 陳情書 提出 108

第 5 節 無資格 稅理士 退治 問題 등 108

第 6 節 會社 設立 事務에 관한 業務 調整 110

第 6 章 特別法人 日稅連期의 發展 112

第 1 節 組織의 整備와 擴充 112

Ⅰ. 社團法人에서 特別法人으로 112

Ⅱ. 稅理士 政治連盟의 結成과 活躍 113

Ⅲ. 沖繩(오끼나와)稅理士會 創設 121

Ⅳ. 會長 選任制度 改善 124

Ⅴ. 稅理士會의 支部 128

Ⅵ. 稅理士事務所 名稱 統一 129

Ⅶ. 稅制審議會 發足 130

Ⅷ. 租稅審判所 設置 등 建議 132

Ⅸ. 全國稅理士共榮會 設立 135

Ⅹ.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센터의 設立 135

XI.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의 構築 141
XII. 國稅廳의 硏究 委託 142
XIII. 日稅硏究賞(日稅連學術硏究奬勵賞) 制度 143
XIV. 稅理士會 周年 記念 行事 143
XV. 稅理士 實態調査 146
XVI. 日稅連 會館 建設問題 149

第 2 節 稅理士業務의 排他的 獨占權 確保와 職域 擴張 努力 150
I.「中小企業診斷士」法案 反對運動 151
II. 訴訟代理權 獲得을 위한 稅理士法 改正 努力 151
III. 靑色申告會 問題 153
IV. 稅理士의「稅務監査制度」建議 154
V.「社會保險勞務士法」問題 解決 155
VI.「不動産鑑定士法」問題 解決 157
VII. 公認會計士의 稅理士會 入會 問題 158
VIII.「臨時稅理士」反對運動 161
IX.「行政書士法」改正 問題 解決 164
X. 제1차 商法 改正 反對運動(外部 監査法人 範圍 縮小) 165
XI. 제2차 商法 改正 反對運動(商法·監査特例法 改正 反對) 171
XII. 제3차 商法 改正 反對運動(大·小會社 區分 立法) 174
XIII. 通算省의「顧問稅理士」問題 178
XIV. 稅理士法의 根本的 改正 努力 182
XV.「中小企業 承繼稅制」問題 186
XVI. 固定資産評價 證明書 交付 事務의 簡素化 運動 187
XVII. 白色 申告者 記帳制度에 대한 對應 187

ⅩⅦ. 稅務公務員에 대한 事前「指定硏修」實施 190
ⅩⅨ. 建設省의「建設業經理士」呼稱 變更 問題 191
ⅩⅩ. 農業協同組合의「臨稅」問題 193
ⅩⅩⅠ. 建設省의「不動産 콘설턴트(consultant)」問題 197

第 3 節 國際化, 對外 關係 200
Ⅰ. 日稅連의 U. R. 對策 200
Ⅱ. 亞太稅理士協會(AOTCA) 結成 201

第 7 章 稅理士 制度 203

第 1 節 稅理士制度의 基本 理念 203
Ⅰ. 稅理士의 法的 地位 203
Ⅱ. 稅理士의 使命 205

第 2 節 稅理士業務와 法的 性格 208
Ⅰ. 稅理士의 意義 208
Ⅱ. 稅理士의 業務 209

第 3 節 稅理士의 權利와 義務 215
Ⅰ. 稅理士 開業을 前提로 한 權利와 義務 215
Ⅱ. 開業後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權利와 義務 218
Ⅲ. 稅理士의 業務에 直接 관련되지 않는 權利와 義務 227

第 4 節 稅理士의 責任 230

Ⅰ. 稅理士의 民事上 責任 230
Ⅱ. 稅理士의 行政上 責任 236
Ⅲ. 稅理士의 刑事上 責任 240

第 5 節 稅理士試驗制度 242
Ⅰ. 稅理士 試驗制度의 沿革 242
Ⅱ. 稅理士 試驗制度 243
Ⅲ. 試驗結果 247
Ⅳ. 1994년 稅理士試驗(제44회) 槪要 250

第 6 節 稅理士의 報酬 251
Ⅰ. 稅理士의 業務 및 付隨業務와 報酬 251
Ⅱ. 稅理士의 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 限度額 252
Ⅲ. 會計業務에 대한 報酬 最高 限度額 262

第 7 節 稅理士와 稅務行政 爭訟 262
Ⅰ. 稅務行政 爭訟에 있어서 稅理士의 權限 263
Ⅱ. 稅務行政 爭訟에 있어서 訴訟代理 267

第 8 章 稅理士 및 稅理士事務所의 實態 287

第 1 節 調査要領 및 回答狀況 287

第 2 節 第4回 稅理士 實態調査 結果의 槪要 291
Ⅰ.「稅理士에 관한 調査」 293

II.「稅理士業務에 관한 調査」 294

第 3 節 「稅理士에 관한 調査」 結果(Ⅰ ~ XIX) 296

Ⅰ. 性別 296

II. 年齡 297

III. 最終學歷 298

Ⅳ. 業務從事 年數 300

Ⅴ. 稅理士의 資格 300

Ⅵ. 資格取得前의 職業 302

Ⅶ. 他「士」業 資格 302

Ⅷ. 勤務稅理士 303

Ⅸ.稅理士事務所의 經營形態 305

Ⅹ. 會計法人 306

Ⅺ. 컴퓨터(會計法人 包含) 利用 狀況 308

Ⅻ. MAS 業務(會計法人 包含) 310

XIII. 兼資格 稅理士業務 付隨 社會保險勞務士業務 311

XIV. 從業員 및 專從者(會計法人 包含) 311

XV. 法人의 任員 就任 312

XVI. 公共的 職責 314

XVII. 稅務關聯團體·職業團體등의 任員 就任 314

XVIII. 稅理士 職業賠償責任保險 315

XIX. 納稅者로부터 稅理士業務에 관련한 損害賠償 請求 317

第 4 節 「稅理士의 業務에 관한 調査」 結果 317

Ⅰ. 個人·法人의 關與 形態別 關與 件數 317

Ⅱ. 個人·法人의 規模別 關與 件數 320
Ⅲ. 稅目別 關與 件數 323
Ⅳ. 報酬別 關與 件數(顧問契約이 있는 경우) 325
Ⅴ. 稅理士事務所의 收入金額 326
Ⅵ. 總所得 金額(土地의 讓渡所得金額 등 臨時的 所得 除外) 328
Ⅶ. 總所得 金額의 收入內譯(土地 讓渡所得 등 臨時所得 除外) 329
Ⅷ. 稅務調査 330
Ⅸ. 不服申請 332
Ⅹ. 稅務訴訟 333

第 9 章 結 論 335

[附錄]

稅 理 士 法 (1989년 法律 제110호) 341
稅 理 士 法 施 行 令 369
稅 理 士 法 施 行 規 則 375
日 本 稅 理 士 會 連 合 會 會 則 (1994年 4月 21日 現在) 382
稅理士 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關한 基準(1992年 3月 26日 改正) ... 403
會計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關한 基準(1987年 3月 25日 改正) 410

第 1 章 序 論

Ⅰ. 稅務士와 稅理士

현재 法律로서 稅務(理)士制度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獨逸 일본·오스트리아 등 수개국이 있다.[1]

일본 稅理士制度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稅務士制度와 유사하여 언어 장벽만 해소된다면 구라파연합(EU)의 세무연합회(CFE)와 같이 양국 稅務專門家들의 공동 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稅務專門人의 명칭까지도 한때는 일부 「稅務士」로 사용하기도 하였고,[2] 전국 통일 명칭으로도 고려되었으나 語感上의 문제로 인하여 「稅理士」로 확정되었던 것이다.[3]

우리나라의 稅務士制度가 1961년 9월 「稅務士法」의 制定으로 처음 시작된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法律 制定 이전에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稅務代辯者」라는 형태로 자연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法制度內로 수용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연혁적 차이가 있다.

일본의 稅理士制度의 발전단계를 시기별로 대별해 보면,

① 稅務代辯業期(1894년 淸日戰爭부터 1942년 稅務代理士法 제정까지)

② 稅務代理士期(1942년부터 1951년 稅理士法 제정까지)

③ 稅理士 前期(1951년 稅理士法 제정부터 1963년 개정안의 廢案까지)

④ 稅理士 後期(1964년 稅理士法 제정부터 현재까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곧 稅務에 관한 職業 專門人으로서의 稅理士가 사회로부터 「認知」, 國稅當

---

1) 各國의 稅務士制度의 比較論的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는, 東海稅理士會(日本), 韓國稅務士考試會, 諸外國の稅理士制度, 東京: 新日本法規出版(株), 1994 등 참조.

2) ① 大阪稅務代理人會도 처음에는 「大阪稅務士會」로 발족하였다. 東京地方稅理士會, 東京地方稅理士會五十年史, 1993년, 3. 31, p.106.
② 第3章 第3節 II 참조.

3) 第3章 第3節 Ⅳ 참조.

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支配」, 다시 「脫出」, 완전한 「獨立」의 발전과정을 거쳤다.[4]

필자는 日本 稅制와 稅理士制度의 관계에 있어서, 戰後 自律的 根據 과세를 위한 納稅義務者의 記帳 實態 등 申告納稅制度 實施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1947년 일찍부터 申告納稅制度[5]의 채택으로 稅務業務에 관한 職業專門家인 稅理士의 역할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稅理士制度의 早期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II. 日本의 稅理士

일본의 경우 소위 「○○ 士」 등 資格認定 職業專門家의 職種은 정부 機關에 의한 것이 辯護士 이하 59종, 民間團體에 의한 것이 經營士 이하 37종이나 된다.[6]

첫째, 정부 機關에서 부여하는 자격으로서는 法務省의 辯護士, 司法書士, 土地家屋調査士 등과 大藏省의 稅理士, 公認會計士, 計理士, 通關士 등 정부 각 部處 부여자격이 있고,

둘째, 民間團體에서 부여하는 稱號는 不動産監査士(日本不動産監査協會), 經營士(日本經營士協會), 管理會計士(日本 콘설턴트 그룹) 등이 있다.[7]

이들 稱號나 자격을 부여하는 許可 또는 認可의 실태는 司法試驗이나 稅理士試驗과 같이 어려운 시험과정을 거치는 것에서부터 勤續 年數나 職種 또는

---

4) 松澤 智, 稅理士の職務と責任, 東京:中央經濟社, 1985, p.3.
申東雲, 金聖煥, 權海浩, 稅理士制度의 發展方向, 韓國租稅研究所, 1988, p.81.

5) 日本 稅制는 戰後 1947년 일찍부터 申告納稅制度를 채택하였으나 自律的 根據 課稅를 위한 納稅義務者의 記帳 實態 등 申告納稅制度 實施 여건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우선 靑色申告制度에 의한 記帳優待策을 실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984년에는 白色申告者에 대한 記帳義務가 규정된다. 따라서 稅務業務에 관한 職業專門家인 稅理士의 역할은 필연적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련 사정에 대하여는 第6章 第2節 Ⅻ 3 참조.

6) 山本鮮一, 稅務行政の 法的限界, 東京:泉文堂, 1988, p.67.
「戰後의 士族一覽表」중 政府 機關에서 부여하는 資格 또는 稱號에 대하여는, 上揭書, pp.77~78.

7) 民間團體에서 부여하는 資格 또는 稱號에 대하여는, 上揭書, pp.78~79.

맡은 職責에 따라 無試驗으로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들 名稱이나 자격의 종류에는 「法律에 근거하는 것」, 「條例에 의한 것」, 「告示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이를 자격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法令에 의하여 「業務獨占權」을 부여하고 있는 것, 企業등에 일정 有資格者의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반사적으로 有資格者에게 「職域確保權」을 간접적으로 보장한 것과 단순히 「名稱使用權」만 인정한 것 등이 있다.[8]

III. 稅理士의 社會的 位置

稅理士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떠한 社會的 地位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1. 國民的 要請에서 본 稅理士의 位置

成田 敎授[9]는 기본적으로 資格免許制는 國民의 權利, 生命·財産의 保護, 安全의 保護 및 현대의 社會·經濟·文化生活을 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의 제공 등 목적에 奉仕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적 요청 입장에서 다음 3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1 그룹 「必要 不可缺하다고 인정되는 職種」----辯護士, 辨理士, 稅理士, 公認會計士 등,

② 2 그룹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편리한 職種」----建築士, 行政書士, 司法書士, 土地家屋調査士 등,

③ 3 그룹 「기존의 排他的 利益의 確保를 위한 職種」----技能士, 技術士,

---

8) ① 上揭書, pp.68~69.
②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成田賴明, 「いわゆる士法の現狀と問題點」, 1970년 10월 1일, ジュリスト463號, p.40.

9) 成田賴明, 橫浜國大 敎授.

測量士 등.

2. 總理府의 職業分類에 따른 稅理士의 位置

總理府의 職業分類表에서 稅理士는 大分類「기타 事業의 部」, 中分類「辯護士, 稅理士, 建築士 등」(0-4)에 속하고, 小分類에서는「稅務經營專門써어비스업」, 細分類에서는「稅理士」(0-421)와「公認會計士」(0-422)로 나뉘어져 있다.

3. 業務의 內容에 의한 位置

이들 資格士를 社會奉仕 業務의 내용에 따라 다음 3 유형으로 分類할 수 있다.

① 判斷에 관한 事項을 담당하는 業務 --- 일정한 사회적 사명을 띠고 고결한 人格과 고도의 學識 및 經驗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위의 1 그룹에 속하는 직종이다.

② 節次에 관한 事項을 주로하는 業務 --- 複雜 細分化된 조직 기구중에서 특정 부문에 속하는 知識과 經驗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위의 2 그룹에 속하는 직종이다.

③ 處理에 관한 事項을 행하는 業務 --- 緻密하고 迅速·正確한 처리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위의 3 그룹에 속하는 직종이다.

국가는 憲法에서 국민에게「職業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자유를 제한하여 ①에 속하는 직종에 대하여는「業務獨占權」을, ②에 속하는 직종에 대하여는「職域確保權」을, ③에 속하는 직종에 대하여는「名稱使用權」을 각각 보장하여 일반 국민의「權利의 保全」과「節次의 便宜」및「處理의 迅速」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10]

---

10) 山本鮮一, 前揭書, p.71.

실제로 필자가 日本稅理士制度 조사차 일본을 여행하면서 보고·듣고·느낀 것은 稅理士가 辯護士나 公認會計士 등과 함께 가장 각광받는 직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과 아울러 국민적 신뢰와 존경도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94년말 현재 稅理士는 61,415명, 辯護士 15,114명, 公認會計士 13,004명[11]이 등록하여 봉사하고 있다.

Ⅳ. 稅理士會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일본 稅理士들의 조직은 각 國稅局(우리나라의 地方國稅廳에 해당) 별로 하나의 「稅理士會」(단 稅理士의 수가 일정 이상일때 國稅局長(우리나라의 地方國稅廳長)의 허가를 얻어 두 개의 稅理士會로 분할할 수 있다)를 조직하여, 1994년 말 현재 14개 稅理士會가 있다.

이들 각 地方稅理士會가 회원이 되어 特別法人인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이하 「日稅連」이라 한다)가 東京에 있다. 즉, 日稅連은 각 稅理士의 連合會가 아니라 稅理士會의 連合會인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地方稅理士會의 下部組織으로서 '稅理士會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支部會員에 대한 指導·連絡·監督을 하기 위하여'[12] 稅務署別로 「支部」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稅務士會의 「署別協議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稅理士는 1994년 5월 기준 年 日稅連 會費 15,600円, 稅理士會 會費 66,000円, 支部 會費 24,000円 정도의 會費를 부담하여 會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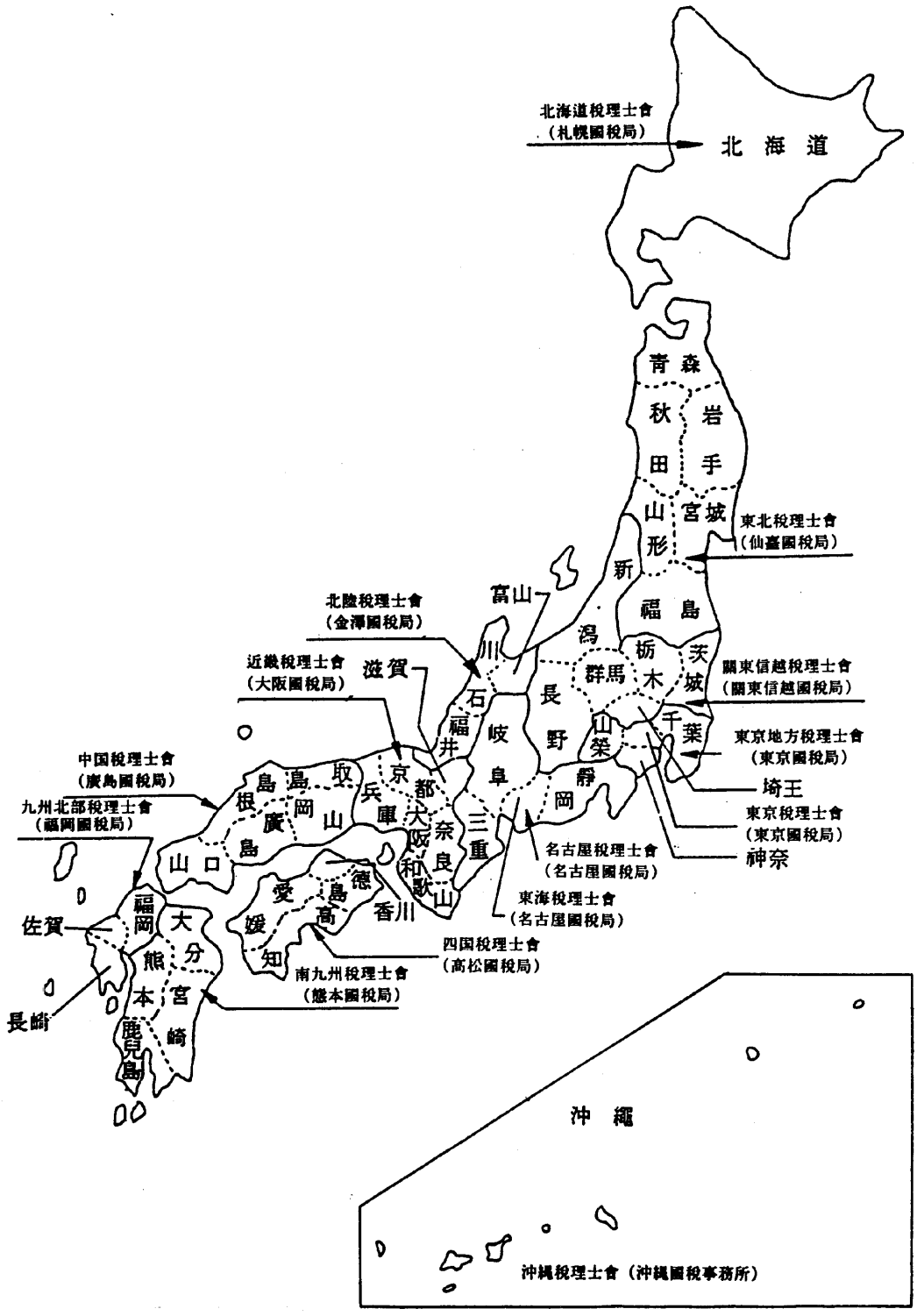
國稅廳 傘下의 各 國稅局別 稅理士會의 區域과 회원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11) 稅理士 數는 94년 9월 말, 辯護士 數는 94년 12월 말, 公認會計士 數는 94년 8월 말 현재의 人員數이다.

12) 近畿稅理士會, 近畿稅理士會會史 第二號, 1985, p.27.

1. 全國 稅理士會(管轄 國稅局)의 區域



2. 全國 稅理士會 一覽表[13)]

會　　名	會長姓名	會員數	連絡電話	管轄國稅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平田公敏	61,415	03-3798-0031	
東京稅理士會	關本和幸	15,661	03-3356-4461	東京國稅局
東京地方稅理士會	藤村茂	5,747	045-243-0511	〃　〃
關東信越稅理士會	平田公敏	6,270	048-643-1661	關東信越國稅局
近畿稅理士會	森金次郎	11,672	06-941-6886	大阪國稅局
北海道稅理士會	笠井彦隆	2,001	011-621-7101	札幌國稅局
東北稅理士會	今野和郎	2,664	022-222-0503	仙台國稅局
名古屋稅理士會	加茂武	3,298	052-752-7711	名古屋 國稅局
東海稅理士會	稻葉甲子雄	3,391	052-581-7508	〃　〃
北陸稅理士會	野村清	1,288	0762-23-1841	金澤國稅局
中國稅理士會	間賀田耕吾	3,119	082-246-0088	廣島國稅局
四國稅理士會	宮田泰	1,544	0878-23-2515	高松國稅局
九州北部稅理士會	永松繁雄	2,665	092-473-8761	福岡國稅局
南九州稅理士會	末崎將弘	1,840	096-372-1151	熊本國稅局
沖繩稅理士會	宮里純永	255	098-862-5542	沖繩國稅局

V. 硏究方法

本書의 序論에서는 日本稅理士의 社會的 地位와 稅理士會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日本稅理士制度의 萌芽期부터 法律 개정을 중심으로 발전의 沿革을 살펴보고 제3장부터 6장에서는 制度의 發展相을 중심으로 다시 소급하여 현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전신인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期(1942년)부터 이후 社團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1951년), 다시 特別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1957년)로 조직이 개편·강화되면서 稅理士業務의 排他的 獨占性 확보와 職域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발자취를 살펴보고, 제7장에서는 日本稅理士

13) 95년 4월 3일 近畿稅理士會 제공 FAX 자료에 의하여 발췌한 것임.

制度중 중요 핵심인 稅理士制度의 基本 理念, 稅理士業務와 法的 性格, 稅理士의 權利와 義務, 稅理士의 責任, 稅理士試驗制度, 稅理士의 報酬, 稅理士와 稅務行政 爭訟 등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第8章에서는 1994년 4월부터 실시한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 報告」의 분석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고, 附錄으로서 日本稅理士制度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稅理士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과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會則, 稅理士의 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 稅理士의 會計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등을 번역하여 添附하였다.

第 2 章　稅理士制度의 法的 沿革

第 1 節　稅理士制度의 黎明

Ⅰ. 明治初期의 稅制

에도막부(江戶幕府)하의 260여 藩 體制에서 1868년 明治維新으로 王政이 復古되자 점차 전국 통일적인 租稅制度가 확립되었다. 1873년(明治 6년) 地租改正令이 公布되었으나 실지 개정완료된 것은 1881년이었다. 1888년 일본 최초로 所得稅가 창설[1]되었는데 처음에는 商工業者에게만 과세하였고, 稅率도 1%~3%로 미미하였다. 이 시기의 稅制는 地租中心主義[2]였고 商工業者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稅務官署와의 분쟁도 표면화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Ⅱ. 淸日戰爭後 營業稅法의 制定과 稅務代理 發生

1. 稅務代理人의 誕生

1894년 8월 朝鮮問題를 원인으로 淸日戰爭이 일어나자 日本軍은 朝鮮半島는 물론 遼東半島에까지 진출하였고, 이 戰爭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비로

---

1) ① 所得稅 도입 경위에 관하여는, 權海浩, 「日本의 個人所得 課稅制度」, 主要國의 個人所得 課稅制度중, 韓國租稅硏究所, 1988, p.309.
② 이 「所得稅法」은 稅法이라 하였으나, 國會構成과 憲法制定 이전이므로 엄밀한 의미로 보아 法律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舊稅는 그 效力을 갖는다」는 원리에 따라, 「國會開設 以前에 될 수 있는 한 다수의 稅目을 '舊稅'로서 제도화하여 政府의 財政權을 確立」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權海浩, 「豫算法律主義에 관한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法學博士學位 論文, p.131.

2) 1888년 租稅收入은 地租 53.6%, 酒稅 26.4%에 비하여 所得稅는 1.6%에 지나지 않았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制度沿革史(增補改訂版), 東京:ぎょうせい, 1987, p.9.

소 세계 강대국들과 條約上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豫算 규모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稅收確保를 위하여 1896년 3월 營業稅法(法律 제33호)을 制定하여 1897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所得稅와 營業稅가 商工業者 전체에 과세됨으로써 종전의 地租中心의 稅制가 개편됨은 물론 商工業者의 稅負擔이 점점 과중되었다.

이에 關西地方의 特定商工業者는 退職稅務 公務員이나 會計에 소양있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稅務相談을 의뢰하게 되었고, 특히 1897년 德島縣의 商工業者 有志들은 자발적으로 「德島縣 國稅業同盟會」[3]를 조직하여 營業稅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의뢰하였다.

현행 稅理士法 제2조의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作成 및 稅務相談의 원시적 業務는 이와 같이 退職 稅務公務員, 會計에 소양이 있는 자, 地方有力者 등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2. 稅務署 創設 沿革

일본 세무행정의 整備와 稅務署의 創設이 營業稅가 도입된 1896년(명치 29년)에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만 하다. 明治 前期는 國稅의 賦課徵收도 地方의 郡區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나 1889년 國稅徵收法이 제정되어 각 府縣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그 실무는 각 府縣 收稅部 出張所에서 취급하다가 1890년 直稅分署와 間稅分署로 개정되어 전국에 479개 分署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가 豫算이 팽창되고 稅目과 稅收가 증가하여 정부의 地方機關 지도·감독에도 한계가 있어 각 地方納稅者간의 공평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1896년 10월 收稅의 地方機關을 府縣의 行政機關으로부터 분리하여 大藏省 直轄機關으로 하고 전국에 20 稅務管理局과 504 稅務署가 설치되었다. 이 稅務管理局은 稅務監督局 다시 財務局으로 개칭되었다가 현재의 國稅局

3) 上揭書, p.10.

(우리나라 지방국세청 해당)으로 된 것이다.[4]

Ⅲ. 露日戰爭에 따른 增稅와 稅務代理業者의 誕生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와의 外交 교섭이 결렬되고 戰爭狀態에 돌입한다. 이에 따른 경비조달을 위하여 非常特別稅法案이 帝國國會에 제안되었는데, 이 法案은 單一法案으로서 각종의 內國稅 및 關稅의 增稅를 규정함은 물론 몇 가지 新稅를 창설하여 「非常特別稅」라는 명칭하에 일괄적으로 과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營業稅가 다시 중과됨은 물론 종전 所得稅의 課稅對象이 되지 않았던 商工業者들까지 所得稅가 과세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稅務에 관한 대리를 專門家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이때부터 稅務代理業務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職業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職業群의 발생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으나, 반면에 납세자의 稅務 지식의 無知를 악용하여 고의적인 審査請求나 訴願 기타 부정부당한 요구를 납세자에게 하거나 稅務官署에 대하여 紛爭을 야기시켜 그에 따른 해결의 報酬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報酬에 대한 訴訟을 제기하는 등 납세자를 괴롭히는 폐해도 적지 않았다.

Ⅳ. 稅務代辯者 取締規則의 制定

이에 오오사카(大阪)府에서는 1912년 府令 제45호로 「大阪稅務代辯者 取締規則」[5]을 制定하였고, 이어 교오토오(京都)府도 1936년(昭和 11년) 府令 제13호로 「京都稅務代辯者 取締規則」을 制定하였다.

이들 稅務代辯者 取締規則에는

---

4) 東京稅理士會, 東京稅理士會五十年史, pp.54~56.
5) 원문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13~14.

① 稅務代辯者라함은 타인의 協議 또는 委任을 받아 稅務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稅務官署에 대하여 申告, 請求, 願屆 기타 일체의 代辯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稅務代辯者가 되고자 하는 자는 警察署長의 허가를 요한다.

③ 타인의 名義를 빌리거나 脫稅 또는 부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 등 일정요건을 결한 자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는다.

④ 稅務代辯者는 일정 양식에 따른 事件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에는 稅務代辯事務所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등 일정의 신용유지의무를 과하였고,

⑥ 이 신용유지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는(稅務署長이 아니라) 警察署長이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과,

⑦ 警察署長의 허가를 받지 않고 稅務代辯 業務를 행한 자 등에 대하여는 拘留 또는 科料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들 규칙은 明治 말기부터 昭和 초기에 걸친 소위 法制史上 搖籃期에 制定된 것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명의 대여를 결격 조항으로 한 것이나, 사무소의 명칭사용 제한을 규정하여 稅務代辯者의 신용유지를 꾀하였다는 점 등은 앞날을 내다본 立法例라고 할 수 있으나, 事件簿의 비치의무 등 規制法的 요소가 다분히 있어 이러한 유사한 규정이 현행법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행 稅理士法을 規制立法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6]

V. 1927년 計理士法 制定

1927년 3월 정부 제안으로 「計理士法」(法律 제31호)이 議決·公布되었다.

이 法案에 앞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의원들의 유사한 法案의 제안이

---

6) 上揭書, p.12.

있었으나 성립하지 못하였다.

즉, 제1회는 1914년(大正 3년) 3월 「會計監査士法案」으로 石田仁太郎 외 1명이 제안하였으나 제31회 帝國國會의 해산으로 성립되지 못하였고,

제2회는 1915년 6월 역시 「會計監査士法案」으로 高木益太郎 의원 명의로 제안되었으나 衆議院委員會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제3회는 1915년 12월 高木益太郎 의원 외 1명의 명의로 「會計監査士法案」이 제안되었으나, 加藤彰康 의원 외 3명 명의로 「會計士法案」이 동시에 제안되어 衆議院委員會에서는 單一法案으로 조정되어 衆議院 本會議에서도 가결되었으나, 貴族院에서 審議未了로 廢案되었고,

제4회는 1918년 高木益太郎 의원 외 2명의 명의로 제안되었으나 衆議院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제5회는 1919년 高木益太郎과 近藤達兒 의원 명의로 「會計士法案」으로 제안되어 衆議院은 통과되었으나 貴族院에서 審議未了되었고,

제6회는 1920년 關直彦과 高木益太郎 의원 명의로 「會計士法案」으로 제안되어 衆議院은 통과 후 貴族院에 송부되었으나 국회 해산으로 審議未了되었고,

제7회는 1925년 高木益太郎, 黑住成章, 砂田重政 세 의원 명의로 제안되어 衆議院을 통과하고 貴族院에 송부되었으나 결국 審議未了되었었다. 그러나 이 때는 당시 農務大臣이었던 高橋是清이 이 法案을 정부가 다시 제안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하였고 그후 「計理士法案」으로 제안·성립되었던 것이다.

당시 商工大臣이었던 藤澤幾之輔의 제안이유 설명을 보면, '…… 經濟界의 발달과 더불어 會計에 관한 사무는 각종 사업의 경영상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게되었고 점점 複雜多岐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특히 전문적 지식과 경험있는 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이와 같은 직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금번 計理士制度를 법제상으로 인정하고 그 자격을 정함과 동시에 그

직책의 중대함에 비추어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하여서도 적당한 統制 監督을 행하는 것이 至當하므로 이 法案을 제출하는 바이다.…… '

衆議院은 이 法案에 대하여 대체적인 質疑를 행한 다음 이의없이 가결하였는데 衆議院 審議중에는, '辯護士會나 辯理士會와 마찬가지로 왜 計理士法上 자치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計理士를 司法과 行政의 보조기관으로 여러 가지 사무에 종사케할 필요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辯護士會나 辯理士會는 각 地方裁判所나 特許區와 같은 중심 장소에 있으나 計理士에 대하여는 각 도시에 산재해있고, 적은 도시나 시골에는 없으므로 강제적으로 計理士會를 조직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으로 우선은 計理士를 정부 보조기관으로 사무에 종사케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정부는 왜 「計理士」라는 명칭을 채용하였는가?' 등의 質疑가 있었다.

이에 藤澤國務長官은 '현재 會計士라는 명칭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 法案에서 「會計士」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計理의 의미는 단순히 계산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商科大學등에서는 현재 會計學을 計理學으로 주창하고 있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計理士」라는 칭호를 채용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貴族院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審議를 거쳤으나 무리없이 가결 성립되었고, 이후 이들 計理士가 稅務代理業務를 담당하였다.

Ⅵ. 1933년 稅務代理人法案의 提案과 廢案

당시 稅務代辯人으로서 稅務官署에 출입할 수 있는 職業人은 ① 자칭 會計士 ② 計理士 ③ 退職稅務公務員 ④ 辯護士 ⑤ 所得調査要員 ⑥ 기타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오오사카府에서 「大阪稅務代辯者取締規則」이 制定되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法制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稅務代理業者의 不正·不當行爲가 단절되지 않아 세무행정상 우려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1930년 西日本計理士會 總會 결의로 「稅務代理人取締規則 制定에 관

한 建議書」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1932년 計理士法 개정 期成會도 「稅務代理人法 制定에 관한 建議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33년 3월 金井正夫 외 1명은 「稅務代理人法案」을 衆議院에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稅務에 관한 것은 국가 財政의 중추를 이루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납세자의 稅務 지식이 극히 유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委任을 받아 稅務 절차의 대리를 業으로 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납세자에게 不正·不當한 요구를 하거나 稅務官署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시킨다든지 혹은 稅額의 減額, 更正, 기타 관계로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報酬를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그 報酬에 관한 소송을 提起하는 자가 續出하여 납세자를 괴롭히는 자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일반 납세자의 폐해를 제거함과 동시에 稅務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세무행정의 원활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稅務代理人 法案을 制定하여 그 자격을 정하고 규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 法案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法案에서,

① 稅務代理人은 타인의 委任을 받아 稅務에 관하여 해당 官公署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 기타 절차의 대리(소송행위 제외)를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자,

② 稅務代理 試驗制度를 채용하여 그 합격자가 稅務代理人의 자격을 가지고,

③ 일정의 학교 졸업자 및 稅務公務員과 計理士에 대하여는 稅務代理人 試驗委員의 전형에 의하여 稅務代理人의 자격을 부여하고,

④ 缺格 條項의 설정,

⑤ 稅務代理人의 登錄制度 채용,

⑥ 無資格者등의 稅務代理등 非違行爲 금지,

⑦ 事件簿의 設置 義務와 守秘義務

⑧ 稅務代理人의 報酬規定 설정,

⑨ 主務長官은 義務違反 稅務代理人에 대하여 譴責, 千円 이하의 科料, 1년

이내의 業務停止 및 業務禁止 등 4종의 懲戒處分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⑩ 無資格者의 稅務代理 행위시의 刑事處罰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法案[7]은 衆議院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第 2 節 1942년 稅理士制度의 確立을 위한 立法

Ⅰ. 稅務代理士法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1. 稅務代理士法의 必要性

1941년 12월 8일 새벽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太平洋戰爭이 개시되고 다음 해의 臨時軍事費特別會計 豫算額은 180億円으로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른 直接稅 중심의 大增稅를 위한 稅制改正으로 「租稅攻勢」라는 新語가 생겨났다.

전쟁으로 인하여 제출된 所得稅法改正案등 12건의 增稅 관계 法律案은 6회째의 增稅案으로 稅負擔의 급증을 요하는 것이었고, 기업측으로서도 경영상 稅務에 관한 지식이 더욱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소위 稅務代理業者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고, 이들의 不正·不當行爲로 인한 폐해가 속출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다룰 기본적인 法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없어 稅務代理士法을 制定하여 業者의 자격을 한정함과 동시에 許可制度로 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꾀하고 감독을 충실히하여 세무행정의 원활·적정 운영을 꾀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2. 提案理由

---

7) 이 法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上揭書, pp.19~22.

이러한 필요로 稅務代理士法이 먼저 貴族院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大藏大臣 賀屋興宣씨의 제안 설명을 보면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 租稅는 국가 財政上 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의 適否가 곧바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 경제 情勢가 複雜多岐해감에 따라 세무행정의 운영 및 국민의 경제생활 역시 복잡곤란해지고 있다. 특히 戰時下에서 財政需要의 증가에 따라 계속되는 增稅가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상당한 정도의 增稅 조치를 하게 되나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더욱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되어 진다. (中略)

이에 새로운 稅務代理士法을 制定하여 稅務代理士制度를 두고 그 소질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여 戰時에 있어서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즉, 本 法案에는 稅務代理士의 자질의 향상을 꾀하고 그 業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稅務代理士의 자격을 한정하고, 일정 자격을 가진 자가 主務長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稅務代理士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所得稅와 法人稅 및 기타 租稅에 관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稅務官署에 제출할 書類의 作成이나 審査請求등의 대리, 기타 相談에 응하는 것을 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稅務代理士會를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品位의 維持, 稅務代理業의 개선·진보를 꾀하고 또 이들이 받을 報酬에 대하여도 규제를 하며, 이들이 國稅의 포탈을 指示, 相談, 不當報酬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許可의 取消나 業務의 停止處分 등 罰則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國會의 審議狀況

稅務代理士法은 1942년 1월 18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1월 23일부터 貴族院, 계속하여 衆議院에서 審議되었으며 그 중요한 質疑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貴族院에서

子爵 大河內輝耕 委員은 '본 法案에서 稅務代理士가 脫稅相談등의 不正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의 罰則을 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가?'

또 '稅務代理士의 報酬에 관하여 稅務代理士會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는 어떠한 표준과 어떠한 방법으로 정할 작정인가?' 등 다수의 질문이 있었다.[8]

2. 衆議院에서

駒井 委員(후에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 初代會長이 됨)은 '종래 稅務代理業者는 납세자의 권리옹호를 유일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 法案에서는 稅務代理士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지도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稅務當局의 협력자가 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補助機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안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稅務代理士法의 立法 정신을 質疑한데 대하여,

池田勇人 政府側 委員은, '종래와 같은 無統制의 稅務代辯者에게 稅務官署와 납세자간을 알선하게 한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稅務代理者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稅務官署의 補助機關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納稅思想을 선전보급케하고 또 납세자의 선량한 지도자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稅務代理士의 稅務官署의 補助機關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駒井 委員이 다시 稅理士業務와 辯護士業務, 計理士業務와의 관계에 대하여 質疑한데 대하여,

---

8) 上揭書, pp.27~30.

池田 委員은, '辯護士가 그 본래의 직무의 일부로써 稅法의 해석에 관하여 감정하는 것은 稅務代理士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計理士가 그 본래의 계산사무에 부수하여 稅務當局에 제출하는 考課狀을 작성하는 것은 稅務代理士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計理士가 稅務官署에 제출할 것을 목적으로 考課狀을 작성한다든지 申告書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稅務代理士法에 저촉된다'[9]고 하였는데, 특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새로운 특수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제의 취지로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III. 1942년 稅務代理士法의 成立과 特色

稅務代理士法案은 국회에서 특별한 반대없이 가결되어 1942년 2월 23일 法律 제46호로 公布됨으로써 업계의 다년간의 숙원이였던 稅務代理士制度가 확립되었는바 이 法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稅務代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는 자를 稅務代理士에 한정한 것이다. 즉,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特別法人稅, 戰時利得稅, 外貨債特別稅 및 相續稅에 관하여 타인의 위촉에 따라 稅務官署에 제출하여야할 書類, 즉 申告書, 申請書, 支給調書 등을 작성하거나 審査請求, 訴願의 提起등에 따른 代理를 행하거나 相談에 응하는 등의 業務를 할 수 있는 자를 稅務代理士로 한정한 것이었다.

만약 稅務代理士가 아닌 자가 稅務代理業을 행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懲役 또는 1千円 이하의 罰金에 처하고, 이러한 處罰을 받은 자는 이후 5년간 稅務代理士가 될 수 없다.

또 稅務代理業務의 범위에 속하는 租稅를 國稅에 한정하고 地方稅를 제외한 취지는 당시 地方稅 중에는 稅務代理士가 관여하는 租稅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며, 國稅 중에서도 所得稅, 法人稅 등 몇 개의 稅目을 한정한 취지는

9) 上揭書, p.31.

稅務代理士가 관여하는 租稅는 주로 直接稅이고 課稅標準 결정에 대한 審査請求나 訴願의 提起등이 인정되는 것도 이들 租稅였기 때문이다.

둘째, 稅務代理士는 그 자질의 향상을 꾀하고 稅務代理業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격을 한정한 것이었다.

稅務代理士의 자격을 갖는 자는 辯護士, 計理士, 國稅의 事務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 및 租稅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 하였고,

셋째, 稅務代理士가 되기 위하여는 大藏大臣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였다.

자격있는 자라도 稅務代理士가 되기 위하여서는 許可申請書를 住所地 관할 稅務署長을 경유하여 大藏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大藏大臣이 稅務代理士의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大藏次官을 會長으로 하는 議決機關인 稅務代理士銓衡委員會의 銓衡을 거치도록 하였다.

稅務代理士의 許可는 1890년 法律 제106호 및 訴願法에 규정하는 免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만약 不許可한 경우에도 訴願이나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稅務代理士法은 稅務代理士의 자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稅務代理士의 규제 감독 규정을 두었다.

① 事務所의 設置義務

② 帳簿의 作成義務

③ 作成한 書類의 署名捺印義務

④ 使用人에 대한 申告義務

⑤ 脫稅相談등의 禁止義務 등

다섯째, 稅務代理士의 자치적 品位維持와 稅務代理士業務의 진보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각 財務局(후에 國稅局, 우리나라 地方國稅廳에 해당) 管轄區域을 區域으로 하여 稅務代理士會를 설립하게 하고 그 區域內에 사무소를 둔 稅務代理士에 대하여 稅務代理士會의 入會를 강제함과 동시에 稅

務代理士會에 대하여는 大藏大臣의 認可를 요건으로 하여 회원의 退會處分權 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稅務代理士의 報酬額 결정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稅務代理士의 생활을 압박하여 稅務代理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반면 지나치게 高額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정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타당한 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를 위하여는 事件의 種類, 事件의 難易度와 事件依賴者에게 유리한 해결 여부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事件의 難易度는 所得稅, 相續稅 등 稅의 종류, 課稅標準의 金額등에 따라 판정하였고, 事件依賴者에게 유리한 해결시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다소 報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稅務代理士의 납세자의 이익옹호에 대한 열의를 갖게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나, 종래 審査請求등의 경우에 있어서 감액된 稅額을 표준으로 하여 몇 割이라는 식의 成功報酬는 脫稅등의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稅務代理士會의 決議 또는 그 任員의 행위가 法令 또는 會則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決議를 취소하거나 任員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등의 監督權을 財務局長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48년 公認會計士法의 制定등으로 稅務代理士法 개정은 있었으나 1951년까지 기본적인 개정은 없었다.

第 3 節 1951年 民主的 稅理士制度로의 改善

Ⅰ. 稅制民主化와 稅理士制度에 관한 「샤프 勸告(Shoup's advice)」

1949년 샤프(Shoup)[10]使節團은 일본의 稅制와 관련하여 종래의 稅務代理士

10) 샤프 勸告에 대하여는, 權海浩, 「日本의 法人所得 課稅制度」, 主要國의 法人所得 課稅制度중, 韓國租稅硏究所, 1987, p.346.

制度도 상세히 검토하여, 세무행정 운영의 민주적 발달을 위한 稅務代理業務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稅務代理者의 수준향상과 납세자 및 稅務官署를 위하여도 좋은 협력자가 되어 세무행정을 적절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勸告하고 있다(제1차 샤프 勸告-- 발췌).

'稅務公務員에 대하여 직업적으로 하는 납세자의 代理業務는 현재 稅務代理士[11]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다. 이들 稅務代理士는 大藏省(우리나라의 財務部에 해당)의 認可를 요하였고 그 활동 및 手數料는 동 省에 의하여 監督을 받는다.

한편 소수의 辯護士와 다수의 會計士가 稅務代理士의 認可를 받고 있으나, 그 業務의 대부분은 이전의 稅務公務員였던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세무행정상 純所得의 객관적 포촉이 불충분하고 그에 따라 稅務署와 납세자간의 교섭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대리로서의 租稅專門家라고 하기 보다 오히려 능숙한 「去來者」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 去來者라는 말은 買收·收賄 및 그에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완곡한 어구이다.

만약 단순히 한쪽만 편든다거나 관용만을 얻어내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대리를 훌륭히 행하여 稅務公務員으로 하여금 法律에 따라 행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견문이 풍부한 職業群이 있다면 세무행정의 적정 운영은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나아가서 적정한 세무행정을 행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稅務公務員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公務員과 같은 정도로 정통하고 있다면 그 專門家 일단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稅務代理士 계급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향상을 위한 책임은 주로 大藏省에 있다 할 것이다.

稅務代理士의 資格試驗에 대하여는 租稅法規와 租稅 및 經理의 절차 방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시험하여야 하고 그들의 활동은 엄중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11) 당시 稅務代理士數는 현재 3,200인이였다.

납세자를 査察하는 國稅廳의 특별한 査察團은 稅務代理士의 성실한 査察을 위하여도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稅務代理士業務에 관한 애로는 지체없이 충분히 調査되어야 하고, 稅務代理士가 稅務公務員을 면접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용이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公式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후에는 稅務公務員도 納稅者代理業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가 이들 專門家團의 써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면 稅務公務員의 피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납세자는 희망에 따라 친구나 기타 개인에게 대리를 시켜도 무방하나 개인이 稅務代理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稅務代理士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세무행정의 현상을 보면 납세자에 의한 異意申請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비용을 요하는 것이나, 세무행정이 개선되고 보다 專門化되어 稅務代理士의 능력과 성실성이 보증되어진다면 納稅代理를 그들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납세자를 위한 訴願取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각 財務局 및 稅務署에 대하여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사건은 개인적 기초 위에 서서 논의·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訴願 및 異意申請을 일괄하여 취급하는 것은 적당한 절차라고 볼 수 없고, 租稅事件은 일괄하여 논의·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의 계층에 대한 영향면에서부터 전반적인 行政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租稅債務 및 租稅에 관한 논쟁을 일괄하여 검토하는 것은 稅務公務員에 의하여 허가되어질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代理人의 참가만으로 될 것도 아니다'[12]라고 하였다.

II. Shoup 勸告에 대한 政府의 對應

1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42~43.

일본 정부는 1949년 9월 15일자 吉田總理에게 보낸 맥아더 사령부 문서의 내용에 따라 샤프 使節團이 작성한 「日本稅制報告書」를 수령하여 그 勸告를 기본원칙으로 당시의 財政經濟 실정을 고려하여 약간의 조정을 가한다음 즉시 稅制改正 立案에 착수하였는데 그 중 稅務代理士制度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租稅制度는 개정을 더해감에 따라 더욱 복잡해져 租稅에 관한 납세자의 상담 또는 대리등에 응하기 위하여 고도의 法律知識과 會計技術을 가진 專門職業家의 존재를 필요로 함은 물론 중소소득자에 대한 申告納稅制度를 일층 보급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하여는 이들 납세자의 納稅相談, 申告書등 書類作成등에 다수의 직업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들을 동시에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稅務代理士制度를 수준 높은 「稅務公證士」(가칭)와 보통의 「稅務代理士」의 二元的 체제로 法律案을 준비하였다. 즉,

첫째, 「稅務公證士」는 일정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독립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稅法과 會計學등에 관한 전문적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稅務代理士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의 國稅 및 地方稅에 대한 書類의 作成, 납세자의 대리(訴訟代理 제외) 및 租稅相談에 응하는 것 외에 稅務官署에 대하여 제출하는 財務諸表등에 증명을 하는 것을 業으로 한다. 公認會計士는 무시험으로 稅務公證士의 등록을 할 수가 있고, 公認會計士로서 고유의 자격에 따라 財務諸表에 대하여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당분간은 稅法上의 財務諸表등에 대하여 稅務公證士 또는 公認會計士의 증명을 요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稅務代理士」는 독립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비교적 쉬운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일정 범위의 國稅 또는 地方稅에 대하여 현행 稅務代理士와 마찬가지의 書類의 作成과 納稅者代理(訴訟代理 제외) 및 租稅相談에 응하는 것을 業으로 한다.

셋째, 稅務公證士 및 稅務代理士가 그 業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國稅廳에 비치된 登錄簿에 姓名과 사무소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넷째, 경과조치로써 改正法 시행후 3년 내에 稅務代理士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특별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稅務公證士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 등.

그러나 신설하려고 한 稅務公證士의 證明業務는 公認會計士의 證明業務와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公認會計士制度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稅務公證士의 業務 범위에서 證明業務를 삭제하여 稅務代理士 일원체제로서 수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法律案의 제출은 유보되었다.

문제가 된 전기의 證明業務에 대하여는 公認會計士制度와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稅務官署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등에 대하여 稅務官署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고쳐 改正法律案을 작성 준비하도록 하였다.

III. 稅理士制度에 관한 제2차 Shoup 勸告

일본 정부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은 제2차 샤프 稅制使節團은 稅務代理士會 대표와의 협의를 거친다음 稅務代理士法 改善指針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은 제2차 勸告를 하였다.

1. 納稅者의 代理人에 대하여

우선 辯護士와 公認會計士에 대하여는 인물시험 이외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稅務當局에 대하여 납세자의 代理를 인정하도록 한다.

다음 현재 개업중인 稅務代理士에 대하여는 인물시험만으로 業務를 계속하도록 인정하면서, 이후 稅務代理士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전문지식에 관한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현재 計理士로서 납세자의 代理行爲를 하려고 하는 자는 인물시험과 전문지식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후 새로운 計理士는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여 稅務公務員에 대하여 납세자를 대

리한 권한을 國稅廳에 의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의 姓名과 職種을 기재한 證票를 받도록 한다.

2. 納稅者의 代理를 할 수 있는 職種

납세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專門家로서는 辯護士, 公認會計士, 稅務代理人, 計理士 등 4 종류가 있다.

이러한 4 종류의 전문직종은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납세자 대리로 이용된다.

① 辯護士와 公認會計士--辯護士와 公認會計士는 인물시험 이외의 시험을 받을 필요없이 稅務當局에 대하여 납세자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들의 전문적 자격은 각각 그 전문적 지위를 얻으므로써 일반적 증명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② 稅務代理士--약 3,500인의 稅務代理士중 약 3,200인이 실제 납세자 대리를 하고 있다. 현재 稅務代理士는 인물시험 이외의 시험없이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稅務代理士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문적 능력을 시험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計理士--약 30,000인의 計理士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약 3,000인이 활약하고 있고, 그 중 약 1,200인이 稅務代理士를 겸하고 있다. 현재 稅務代理士를 겸하고 있지 않은 計理士는 業務能力을 시험하는 필기시험과 인물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이 國稅廳, 國稅局, 稅務署에 대한 납세자 대리 認可에 관한 원칙이다.

정식으로 자격을 받은 납세자 대리는 항상 協議나 異意申請에 대하여 聽問기타 會議에 그 의뢰자를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을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참관은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稅務當局의 재량에 의하여 인정되어지는 특전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申告書, 帳簿 기타 기록을 稅法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고 인증하는 자격있는 「稅務公證士」와 같은 새로운 직종의 납

세자의 대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13]

Ⅳ. 「稅理士法」으로의 改正方針 및 그 要綱

정부는 이상과 같은 稅務代理士制度에 관한 제2차 Shoup 勸告등을 기초로 민주적 세무행정을 위한 근본적 개혁 결의를 가지고 1951년 2월 새로운 稅理士法案을 준비하였는데 그 基本方針과 要綱은 다음과 같다.

1. 基本方針

稅務代理士制度를 개정하여 명칭을 「稅理士」라고 개칭하고, 자질향상 및 申告納稅制度의 적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試驗制度 및 登錄制度를 채용하여 稅務代理士法을 폐지하고 稅理士法을 制定한다.

2. 要綱

가. 職責

稅理士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사건에 대한 공평한 판단자로서 租稅法規에 규정된 納稅義務를 공정하게 실현하고 稅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한다.

나. 業務의 範圍

현행 稅務代理士의 業務와 그 외에 새로이 地方稅인 市町村民稅, 固定資産稅, 事業稅, 附加價値稅 등을 포함한다.

國稅局長(地方稅에 있어서는 해당 公共團體長)은 稅理士 이외의 자에 대하

13) 上揭書, pp.46~49.

여 특별한 경우 期間과 稅目,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정하여 租稅에 관한 申告書 作成·相談등에 응할 것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無報酬로 한다.

다. 權利·義務

稅務公務員은 稅理士가 靑色申告者에 대한 대리 권한을 부여하여줄 것을 書面으로 신청한 경우 그 대리 사항에 관하여는 납세자의 調査時期의 通知 및 稅理士와 協議하여야 할 意見陳述에 관하여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또 稅理士가 납세자에 대한 再調査와 審査請求의 取下, 訴願의 取下, 過誤納金의 還給請求 및 受領, 代理人의 選任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특별위임을 요한다.

라. 署名捺印 義務

稅務官署에 제출하는 서류에 본인과 더불어 代理人으로서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특히 辯護士나 公認會計士인 稅理士는 辯護士나 公認會計士인 稅理士임을 附記하여야 한다.

마. 稅理士의 資格試驗 및 登錄

稅理士는 辯護士, 公認會計士, 稅理士試驗 免除를 받은 자 또는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자로서 稅理士名簿에 登錄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바. 稅理士試驗

計理士와 會計士補 및 일정 연수의 경험을 가진 稅務公務員, 司法書士 및 이들과 동등 이상의 學識과 經驗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를 受驗資格者로 하고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富裕稅法, 國稅徵收法 및 地方稅法 중 3과목 선택

② 會計學중 簿記論 및 財務諸表論

③ 試驗科目의 일부 免除(생략)

사. 懲戒등(생략)

아. 經過措置

改正法 시행전 稅務代理士로서 業務를 행하고 있던 자는 改正法 시행후 稅理士로서 業務를 계속할 수 있다.

特別登錄에 있어서는 租稅法을 포함한 특별 의무강습을 적어도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자. 公認會計士와의 관계

公認會計士 試驗科目에는 稅理士法 시행일로부터 1년 후에는 租稅法을 추가하여야 하고, 租稅法을 포함하지 않는 公認會計士 시험에 합격하여 稅理士로 登錄한 자에 대하여는 租稅法을 포함한 특별의 의무강습을 적어도 30시간 이상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V. 稅理士法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새로운 稅理士法案은 1951년 3월 30일 川野芳滿외 4명 명의로 衆議院에 제안되었는데, 三宅則義 委員(전 東京稅理士會 會長)의 제안이유 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다. '……大藏委員會에 稅務代理士法의 개정에 관한 小委員會를 설치하고, 川野芳滿, 三宅則義등 5명의 소위원이 5회 委員會를 개최한 결과 稅理士法案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稅務代理士法은 1942년에 制定되어 戰後 申告納稅制度 및 靑色申告制度등의 실시로 租稅制度의 근본적 개정이 있었고, 稅務代理士의 직책도 점점 가중되어 그 자질향상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망되어 왔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새로운 試驗制度 및 登錄制度를 채용하고 人格

및 能力에 있어서 적절한 인재가 납세자의 대리등의 業務를 맡아 납세자의 신뢰와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여 租稅負擔의 적정화를 꾀하고 申告納稅制度의 적절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현행 稅務代理士法을 폐지하고 「稅理士法」을 制定하고자 한 것이다.

이하 본 法案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현행의 全員加入制의 稅務代理士會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任意加入脫退制의 民法 제34조의 社團法人인 稅理士會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稅理士會는 稅理士法에 따라 稅理士의 義務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改善 進步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원의 指導 및 連絡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또 稅理士會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民法 제34조의 社團法人인 稅理士會連合會를 조직할 수 있다…….'

이상의 原案중 「辯護士가 稅理士業務를 행할 때에는 稅理士의 登錄을 요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현행과 같이 소위 「通知辯護士制度」라는 변형된 수정이 있은 후 본 法案은 1951년 6월 15일 法律 제237호로 議決·公布되었다.

Ⅵ. 辯護士 關係에 대한 國會의 審議狀況

1. 衆議院에서

당초 辯護士도 제18조에 의하여 國稅廳에 登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大藏委員會에서 小山長規 委員으로부터 제51조에 '辯護士는 所屬辯護士會를 경유하여 國稅局長에게 通知함으로써 그 國稅局의 管轄區域에서 隨時로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되므로써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는 그 業務를 행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稅理士法 각조 규정에 의한 稅理士로 보게 되었다.

제51조의 삽입으로 條文整理가 있었으나 그 주지는 종래, 辯護士는 辯護士法에 의하여 당연히 稅務代理士 業務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稅理

士法이 통과되어 稅理士와의 관계 조정을 위한 修正案인 것이다. 이 修正案에서 所屬辯護士會의 國稅局長에 대한 通知方法, 稅目, 通知의 效力, 「隨時」의 의미[14]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宮幡靖 委員은 辯護士가 당연히 稅務代理士業務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15]

특히 泉 大藏省主稅局 調査課長은 '소위 이러한 「通知辯護士」에 대하여는 國稅廳에 登錄하지 않음으로써 國稅廳長官의 懲戒處分權을 발동하더라도 登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16] 결국 修正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2. 參議院에서

參議院 大藏委員會에서도 衆議院의 三宅則義 委員의 설명으로, 제51조의 辯護士는 所屬辯護士會를 경유하여 國稅局長에게 通知함으로써 그 國稅局 管轄區域 내에서 隨時로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다고 한 경우, 「隨時」의 의미는 시종 반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登錄하여야 한다'는 修正案의 可決을 주장하였다.

이에 大矢半次郎 委員도 상시 稅理士의 業務를 하는 辯護士는 반드시 登錄하도록 하는 것에 찬동하고 있고,

油井賢太郎 委員은 '……辯護士는 원래 稅理士業務에 대하여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修正案에 있어서 登錄한다는 점과 등록이 싫으면 通知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문상 애매한 점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애매한 法律이 없도록 희망한다…….'라고 하고 있고, 小林政夫 委員도 이에 찬동하고 있다.

---

14) 3개월, 6개월, 1년 등 비교적 단기간으로 할 것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1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5.
16) 上揭書, p.67.

이상의 審議過程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稅理士法 原案에는 辯護士法 제3조 제2항의 「辯護士는 당연히 稅務代理士의 事務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辯護士는 稅理士가 되는 자격을 갖는 것이나 稅理士業務를 하기 위하여는 國稅廳에 비치된 稅理士名簿에 登錄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① 稅理士의 事務는 본래 辯護士의 직무로서 새삼 稅理士法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② 辯護士는 法院이나 法務省(우리나라의 法務部에 해당)의 감독을 받지 않고 辯護士會의 자치 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稅理士法에 의하여 國稅廳의 감독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衆議院 法務委員會의 반대 의견이 있은데 대하여,

제안자측은 ① 辯護士도 稅理士業務를 행하는한 稅理士法上의 義務를 지켜야 하고, 稅理士의 業務는 申告, 대리등 法律事務라기 보다는 行政事務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稅理士法은 주로 行政事務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② 稅理士法에 있어서 國稅廳長官의 감독 권한은 稅理士業務 범위에 있어서만 또는 세무행정의 적정한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만 행하여지기 때문에 辯護士 고유의 분야에는 직접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原案은 현행 「通知辯護士制度」와 같이 修正되었다. 또 修正 규정중 「隨時,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복 계속적으로 常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辯護士 事務에 부수하여 隨時로 稅理士業務를 행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國稅廳側과의 쌍방 협의한 끝에 매년 通知를 更新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條項의 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다.[17]

17) 上揭書, p.73.

Ⅶ. 稅理士法의 特色

새로 制定된 稅理士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稅務代理士의 業務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였던 稅務代理士法에서, 稅理士는 中正한 立場에서 納稅義務者의 신뢰에 부응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를 적정히 실현하고 納稅에 관한 道義昂揚에도 노력할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

둘째, 稅務代理士法은 國稅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稅務代理士 選考審議會의 審査를 거쳐야 하던 것을 개정 稅理士法은 試驗制度를 채용하고 그 合格者에 대하여 國稅廳에 비치된 稅理士名簿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였다.

셋째, 稅務代理士法의 業務는 주로 특정 國稅에 관하여만 인정되었으나 改正稅理士法은 주요 地方稅까지 추가되어 오랜 동안의 業界의 요망이 반영되었다.

넷째, 稅理士의 자격이 있는 자는 辯護士, 公認會計士, 稅理士試驗合格者, 試驗免除者로 한정 열거되었다.

다섯째, 종래 稅務代理士의 權利 義務에 관한 규정의 불비사항을 보정하여 새로운 稅理士의 사명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여섯째, 종래 稅務代理士의 감독이 稅務代理士會의 자주적 감독과 國稅廳長官의 감독과의 이원체제인 것을 고쳐 國稅廳長官의 일원적 감독 체제로 개정되었다.

일곱째, 稅務代理士는 종래 稅務代理士法에 따라 稅務代理士會에 강제 가입토록 하였으나, 稅理士會는 民法 제34조에 규정한 社團法人으로 설립되고 회원의 加入과 脫退는 任意로 바뀌었다.

여덟째, 현재 稅務代理士는 稅理士試驗을 거치지 않고 稅理士名簿에 登錄을 요건으로 業務를 계속할 수 있다.

이 稅理士法의 制定으로 비로소 일본 稅理士制度가 굳건한 기초를 마련한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法의 성립을 위하여는 어떻게 보면 旣得權者라고 할 수 있는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는 물론 각 稅務代理士會의 任員들이 終戰後 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法 改正 운동에 獻身의 勞苦를 아끼지 않은 결과였다.[18]

第 4 節 1956年 稅理士會의 强化 充實을 위한 法 改正

Ⅰ. 1956년 稅理士法 改正의 背景

1. 稅務人 勞組側의 要求

1951년 稅理士法 시행 당시 국가 및 地方의 稅務公務員으로서 賦課事務에 종사한 기간이 15년 또는 20년에 달한 경우 稅理士試驗에 合格者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試驗委員의 인정을 받아 稅理士資格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후 이 조건 해당자에게 일괄하여 稅理士資格을 주지않고 단지 稅法에 관한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도록 개정하였다.

1954년 11월 國稅廳長官과 전국 稅勞組와의 교섭에서 조합측은 稅務公務員에게 稅理士資格을 부여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國稅廳側도 이러한 요구에 별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2. 남은 計理士側의 要求

또 計理士法은 1948년 7월 6일 公認會計士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18) 上揭書, pp.75~76.

당시 計理士였던 자는 登錄을 조건으로 종래의 稅務業務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후 稅理士法의 시행에 따라 稅務代理士法이 폐지되었고 당시의 稅務代理士는 모두 稅理士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때 종전의 計理士는 허가를 받아 간단히 稅務代理士가 되었으나, 稅理士法에 의하여 稅務代理士가 되지 않은 計理士도 3개월 기간 내에 許可申請을 하면 간단히 稅理士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과조치 완료후에는 計理士도 稅理士의 자격을 주지 않고 會計學에 관한 일부의 시험과목 면제만 인정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55년 衆議院 大藏委員會에서 山本勝市 委員은,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稅理士法 시행 당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못한 計理士가 상당히 있으나 현재의 計理士는 자신이 작성한 經理에 관한 서류를 稅務署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② 計理士는 종래 稅務代理士法 당시부터 당연히 稅務行爲를 할 수 있었고, 이후로 그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計理士法은 이미 폐지)는 등의 이유를 들어 計理士에게도 稅務業務 取扱을 할 수 있도록 救濟措置를 정부당국에 요구하였다.

이에 渡邊 大藏省 主稅局長과 淸野 國稅廳 總務課長은 '稅理士法의 개정은 稅務公務員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현재 검토중이므로 計理士의 救濟方案도 고려하여 改正法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3. 稅理士會側의 要求

稅理士會側은 이와 같은 稅務公務員등에 대한 특전 부여나 計理士의 구제 움직임에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日稅連 會長을 통하여 國稅廳長官에게

①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여 會計에 관한 整理·立案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② 稅務計算 서류의 監査證明을 稅理士業務에 추가하여 줄 것 등을 陳情書로 제출하였다.

4. 國稅廳 및 大藏省의 對應

國稅廳은 이러한 諸要望을 대폭 수용한후 다음 3 점에 주안을 둔 稅理士法 改正試案을 작성하여 大藏省側과 교섭하였다.

① 稅理士의 직업 명칭을 사용하여 會計에 관한 整理·立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稅理士가 課稅標準 또는 稅額의 계산의 적부에 대하여 監査證明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稅務公務員 및 計理士도 통상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稅理士가 되는 길을 열어줄 것 등이었다.

이에 大藏省側은,

첫째, 「會計의 整理·立案業務」는 현재 개인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稅理士業務로 특히 규정한다면 국가가 稅理士를 會計業務의 專門家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 公認會計士法이 있고 會計業務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稅理士는 이와 같은 會計에 관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會計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特權으로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둘째, 「監査證明의 業務」에 대하여는 會計書類의 監査證明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 稅務書類의 監査證明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會計書類의 監査證明과 그 기능이 다르다. 會計書類에 있어서는 公認會計士의 監査가 최종의 監査이고, 그것에 의하여 投資家등의 이익이 보호됨으로 監査證明制度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稅務書類는 稅務官署가 최종적 監査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 제3자의 독립 직업인의 監査證明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稅務書類의 작성에 독립 會計人이 관여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은 稅務官署와의 納稅義務의 원활화에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稅務書類의 작성에 있어서 책임있는 독립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세무행정상 의의가 있다.

따라서 稅理士의 소위 監査證明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과는 다른 것이고, 단지 稅務書類의 작성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가의 사실 및 관여한 범위에 있어서 稅務書類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稅務官署에 표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稅理士가 관여한 범위에 있어서 稅理士의 책임을 밝히기 위하여 懲戒 책임을 明定할 필요가 있다. 또 國稅廳案과 같이 稅理士가 관여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안건에 있어서는 更正決定을 하는 때에 관여한 稅理士의 의견을 구하여 관여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稅理士의 책임을 추급하면 될 것이다.

셋째, 「稅務公務員 및 計理士의 試驗免除」에 대하여 현재 稅理士가 되는 자격에는 辯護士, 公認會計士와 같이 무조건 자격을 가지는 자와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稅理士試驗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자 및 稅理士試驗에 합격한 자의 3 종류이다.

稅理士에는 稅務公務員 및 計理士로서 다년의 경험에 따라 충분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는 特別銓衡 형태로 稅理士資格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정 년한의 稅務公務員과 計理士에게 無試驗資格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大藏省案은 試驗制度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稅理士業界의 강한 반발로 政府原案에는 時限立法에 의한 特別試驗制度로 후퇴하였다.[19]

---

19) 上揭書, p.119.

II. 稅理士法 改正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1. 閣議決定

이러한 諸情勢에 입각하여, 稅理士가 稅務書類 작성에 있어서 정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書面을 당해 稅務書類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후 5년 기간 내에 일정 職歷을 가진 자에 대하여 特別稅理士試驗을 거쳐 稅理士資格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56년 政府案으로 閣議에서 결정되었다.

2. 提案說明

동년 3월 國會에 제출된 「稅理士法 改正法律案」에 대한 山手滿男 大藏 政務次官의 제안 이유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稅理士의 업무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稅理士가 所得稅, 法人稅 등의 申告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申告書 작성에 관하여 계산 또는 정리한 사항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함과 동시에 금후 5년간 시한으로 15년 이상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자와 20년 이상 地方稅 賦課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등 稅務公務員에 대하여 一般稅理士試驗 대신 特別稅理士試驗을 거쳐 稅理士資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稅務公務員이 稅理士가 대리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종래에는 靑色申告者에 한하여 代理稅理士에 대하여서도 通知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靑色申告者 이외의 申告代理 稅理士에게도 通知하도록 하는 등 稅理士法을 정비한다'고 하였다.

III. 國會의 審議狀況

1. 衆議院에서

衆議院 大藏委員會 橫山利秋 委員은, '…… 이번 기회에 政府側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納稅義務를 국민이 양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 3 가지 문제, 즉 첫째는 稅制의 근본적 改革, 둘째는 국민의 納稅지식문제. 셋째, 국민과 稅務署간에 稅理士와 같은 사람들의 원활한 역할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어서 그는 '稅理士試驗 科目중에 憲法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가? 稅理士는 단지 稅金의 法律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더 높은 입장에서, 憲法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이 稅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나 올바른 法律 적용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질의를 하고 있다(답변 생략).

日稅連側의 요망사항이었던 稅理士會에 대한 회원의 强制加入制度에 관하여는, 그것이 憲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政府原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司法書士法 및 土地家屋調査士法의 소위 間接强制加入制度가 채용되게 되었다.

衆議院 大藏委員會에서는 25명의 위원들에 의하여,

첫째,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稅務公務員으로서 稅理士가 된 자는 國稅廳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離職後 1년간은 離職前 1년 이내의 직책에 속하였던 事件에 대한 稅理士業務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둘째, 稅理士會에 入會하지 않은 자는 稅理士業務를 할 수 없도록 間接强制加入制度를 도입하고,

셋째, 公認會計士인 稅理士가 稅理士會에 入會하지 않은 경우에도 國稅局長에게 通知함으로써 의뢰받은 사건에 관한 稅理士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설정하는 소위 「通知公認會計士制度」의 창설 등 3 점을 내용으로 한 修正案이 제안되었고 修正案대로 衆議院을 통과하였다.

2. 參議院에서

參議院 大藏委員會에서 黑金泰美 衆議院 委員의 주지 설명중 '…… 稅理士

法의 시행상황을 볼때 稅理士業務의 집행을 보다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稅理士會에 入會하지 않은 자는 稅理士業務를 할 수 없도록 하여 稅理士會를 강화하고, 稅理士會에 가입함으로써 監督官廳의 충분한 감독과 자주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소위 間接强制的 규정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稅理士會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한 稅理士會는 民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公益法人이기 때문에 任意加入團體이다. 단지 稅理士의 使命 및 職責으로 볼 때 稅理士會가 稅理士의 義務의 遵守 또는 稅理士業務의 改善·進步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會員 指導·連絡에 관한 사무를 강력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稅理士會를 法律上 特別法人으로 하여 稅理士會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단지 이번의 稅理士會는 辯護士會와는 달리 표면상 직접적인 强制加入制度는 취하지 않았으나 稅理士會에 入會하지 않은 자는 稅理士業務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소위 간접적으로 强制加入토록 한 것이다.

이 법으로 修正된 새로운 稅理士會는 각 國稅局의 管轄區域마다 한 개씩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현재 동일 國稅局 관내에 2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 개 이상의 새로운 稅理士會를 존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이들 稅理士會가 장래에 合併 또는 해산하여 하나의 稅理士會로 될 것을 예상하여 合併 또는 해산에 관한 조치 규정도 설정하고자 한다.

현행법상의 稅理士會連合會도 稅理士會와 마찬가지로 民法上의 公益法人이나 이상과 같은 稅理士會의 개조에 따라 稅理士會連合會를 각 稅理士會를 당연 회원으로 하는 特別法人으로 하는 것이다.

또 公認會計士인 稅理士는 본래의 公認會計士의 직무를 주로 하면서 稅理士의 업무를 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는 稅理士會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國稅局長에게 그 의뢰자의 住所, 名稱, 商號 등을 通知하므로써 의뢰된 사건에 한하여 稅理士業務를 할 수가 있다.'

이어서 野溝勝 委員으로부터 公認會計士 문제에 관하여, '현재 公認會計士

의 단체는 협회와 같은 성격의 임의적인 것이나 이번 개정으로 稅理士會에 가입하지 않거나 혹은 國稅局長에게 通知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대에 역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나, 當初案과 修正案대로 參議院을 통과하였다.

Ⅳ. 改正 稅理士法의 特色

1956년 法律 제160호로 公布된 稅理士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稅理士가 계산한 사항등을 기재한 서류를 稅務申告時에 첨부하는 제도의 채택.

둘째, 稅務公務員등에 대한 特別試驗制度의 도입으로 5년 내에 근속 20년 이상의 稅務公務員 또는 業務經歷 10년 이상의 計理士 등에 대하여는 실무경험을 가미한 特別稅理士試驗에 의하여 稅理士資格을 취득하도록 한 점.

셋째, 회원의 稅理士에 대한 間接强制加入制度 도입.

즉, 登錄稅理士 전원의 强制加入은 憲法에서 보장하는 集會結社의 自由 및 職業選擇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 政府原案에는 빠졌으나, 國會의 修正形式으로 司法書士 및 土地家屋調査士와 같이 間接强制加入制를 도입하였다.

稅理士業務의 登錄, 즉 稅理士會 入會의 취지는 辯護士法, 辨理士法에도 登錄, 즉 入會制度가 이미 도입되었고, 최근 立法 예로서는 公認會計士法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상 여러 직업단체 모두의 전체적인 추이라 할 수 있다.

넷째, 稅理士會 및 日稅連은 종전의 民法上 公益法人에서 特別法人으로 한다. 이것은 法 改正으로 회원의 强制加入團體로 된 이상 그 성격도 공공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退職稅務公務員에 대하여 稅理士業務의 제한규정이 강화되었다.

퇴직후 1년간은 登錄拒否와 같은 강한 조치의 희망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離職後 1년간은 離職前 1년 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事件에 관하여 稅理士業

務를 제한하는 범위로 개정되었다.[20]

第 5 節 1961年 稅理士會의 自主性 確立을 위한 法 改正

Ⅰ. 稅理士法 改正 經過와 要綱

稅理士特別試驗制度가 1961년 6월 말로 기한 만료됨에 따라 日稅連은 稅理士法改正意見書를 관계 官廳에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稅理士業務의 明確化

② 稅理士의 資質向上

③ 稅理士의 自主性 確立 등

관계 官廳은 이를 검토한후 法令 改正事項과 취급통달 운영면 및 추후 검토사항으로 분류한후 業界와의 완전한 의견조정을 거쳐 1961년 3월 「稅理士法의 一部 改正 法律案」을 閣議에 제출하였다.

Ⅱ. 改正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동 法律 改正案은 1961년 3월 國會에 제안되었는데 田中茂穗 大藏政務次官의 제안 이유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51년 稅理士法이 실시된 이래 稅理士制度의 운영 경험을 고려하여 이후 稅理士의 나아갈 방향 기타 稅理士制度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나 그 결론을 얻기까지는 많은 기일이 요하므로 이번에는 稅理士의 登錄事務의 移轉 및 稅理士特別試驗의 존속기간 연장 등 稅理士法 일부개정을 하고자 한다.'

이 法案의 내용은,

첫째, 稅理士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國稅廳長官이 행하던 稅理

20) 上揭書, pp.137~138.

士의 登錄事務를 日稅連에 이양하고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둘째, 稅理士特別試驗制度의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稅理士特別試驗制度는 計理士 및 會計士補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 또는 事業稅와 固定資産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職員에 대하여는 20년 이상,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職員에 대하여는 25년 이상의 實務經驗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일반 이론중심의 시험보다도 實務中心의 特別試驗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케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5년 전부터 실시하여 온 것을 법문상 「5년간」을 「당분간」으로 개정하여 기간 연장코자 하는 것이다.

셋째, 稅理士試驗의 受驗資格, 試驗科目, 試驗免除資格, 特別試驗의 受驗資格 중 일부의 규정을 정비한다 등.

III. 國會의 審議狀況

特別試驗實施 해당자의 적용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村山達雄 大藏省 主稅局長은, '장차 稅理士問題와 관련하여 試驗制度 등 稅理士制度 전반에 걸쳐 다음 해에 特別調査會와 같은 것을 공식기관으로 설치하여 상세히 調査·檢討할 예정이므로 우선 3년 정도의 기간과 同 調査會 설치 이후 2년 정도의 기간이면 완전한 成案이 가능하므로 우선 「당분간」으로 하였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國會는 「정부는 本 法 公布일 이후 3년 예정으로 稅理士制度의 전반에 걸친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망한다」는 附帶決議案[21]을 첨부하여 法案이 議決되었다.

IV. 改正 稅理士法의 特色과 槪要

---

21) 上揭書, p.147.

1961년 國會를 통과한 法律 제137호 稅理士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稅理士登錄事務의 移讓

辯護士會나 辨理士會는 이미 스스로 登錄事務를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래 國稅廳長이 행하였던 登錄事務가 日稅連에 移讓되었고, 이 업무를 위하여 日稅連에 資格審査會가 설치되었다.

둘째, 이 法律 개정으로 稅理士業界가 오랜 동안 요망하여 왔던 日稅連 및 稅理士會의 자주성 확립의 기초가 확보되었다. 즉,

① 稅理士會則이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變更되었고,

② 稅理士會의 회원에 대한 監督權이 附與되었다.

셋째, 特別稅理士試驗制度의 存續期間 延長

특정 稅務經歷人에 대한 特別試驗制度가 1961년 6월 30일로 기간 만료되었으나, 「당분간」(대략 3년 기간) 기간 연장되었다.

넷째, 特別試驗受驗資格의 개정

立法, 司法, 行政을 불문하고 官公署에서 國稅 또는 地方稅에 종사한 職員으로서 일정 實務經驗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特別試驗受驗資格을 인정하는 제도로 확장되었다.

第 6 節 1968年 稅理士制度의 全面的 改正意圖 挫折

Ⅰ. 稅理士法 全面 改正의 必要性과 그 目的

일본의 稅理士制度는 1942년의 「稅務代理士法」에 의하여 처음으로 法制化된 후, 戰後 稅制民主化의 일환으로 申告納稅制度의 採用 및 靑色申告制度의 실시와 租稅制度의 기본적 개혁에 따라 納稅義務의 적정한 이행을 원조하는 稅務代理士의 직책도 가중되어 그 자질향상의 필요성이 일층 요망되었다.

이에 稅務代理士法에 대신하여 1951년 「稅理士法」이 制定되어 試驗制度 및

登錄制度와 稅理士業務의 範圍, 資格, 稅理士의 權利와 義務 및 懲戒處分과 稅理士團體에 관한 규정들이 확립되었고, 1961년에는 特別法人인 日稅連과 稅理士會의 자주적 독립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參議院 大藏委員會에서 「정부는 本 法 公布일 이후 3년 예정으로 稅理士制度의 전반에 걸친 검토를 완료할 것을 요망한다」는 附帶決議에 따라 日稅連 스스로,

① 稅理士業務의 明確化와 業務範圍의 擴大,

② 稅理士의 資質向上,

③ 稅理士業務의 公共性의 明確化 등을 내용으로 하는 法 改正案을 작성하였다.

II. 改正案의 作成 經緯

정부는 1962년 8월 새로 조직된 「稅制調査會」에 대하여 「금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 경제의 진전에 부응하는 기본적 租稅制度의 方向」을 諮問하였고, 그 일환으로 「現行 稅理士制度의 改善策」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稅制調査會는 그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稅理士業界, 辯護士業界, 기타 關係業界의 대표와 東京大學 法學部 敎授 기타 학식과 경험자 등 14명의 위원으로 된 稅理士制度特別部會를 설치하였고, 稅理士制度特別部會는 1963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7회에 걸쳐(그중 小委員會 7회) 審議를 거친 결과 1963년 7월 東京 및 關東信越 양 國稅局 管內 稅務官公署와 稅理士事務所 및 납세자에 대하여 「稅理士制度 運營實態에 관한 實態調査」를 하는 등 制度의 理論 및 實務 양면에 걸쳐 상세히 조사·검토하였다.

이 검토에 있어서는 다른 유사 職業專門家에 관한 立法 예와 諸外國의 稅理士制度의 조직 등을 비교·검토하여 日本租稅制度 전반에 걸친 稅理士制度의 기본적인 문제를 審議하였다.

稅理士制度特別部會는 그 審議 결과를 전원 일치로 稅制調査會에 보고하고,

稅制調査會는 동일부로 「稅理士制度에 관한 答申」[22]을 정부에 移送하였다.

III. 稅理士法 改正 要綱 및 提案理由

政府委員의 法案 제안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 稅理士制度는 1951년 시행된 이후 십수년간에 걸쳐 사회 經濟情勢 및 稅制의 현저한 추이를 고려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인정되어 정부로서는 稅理士制度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였고, 1년전 설치된 稅制調査會에서 稅理士制度에 대한 예의 검토를 하여 답신을 보내왔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검토한 후 이 法律案을 제출한다.'고 하였다.

IV. 國會의 審議狀況과 廢案 經緯

1. 衆議院에서

衆議院 大藏委員會의 小山省二 委員은, 본 法案 改正案에 가장 관련이 깊은 전국의 稅理士會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改正案을 제출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政府 委員은, 본 法案은 신설된 稅制調査會 및 稅理士制度特別部會[23]가 조사·연구하였고, 특히 稅理士制度特別部會에서는 의견 일치를 본 사항으로 稅理士會로서도 강한 반대가 없었으나, 그후 會의 내부 사정으로 약간의 반대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金子一平 委員은, '……稅理士의 공공적 사명을 자각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체제를 稅理士法에 규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납세자의 적정

22) 稅制調査會의 答申 요지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制度沿革史(初版), 東京:ぎょうせい, 1969, p.248.

23) 稅理士會連合會 會長, 副會長, 稅理士 1명 계 3명이 委員으로 참가하였다.

한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배려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泉 大藏省 主稅局長은

① 稅理士의 독점업무인 對象稅目을 원칙으로 전 稅目으로 확대하고,

② 稅理士의 부수업무인 會計業務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타인이 작성한 申告書에 대하여 審査證明制度를 인정하고, 대신에 稅理士會가 稅理士에 대하여 정기적인 硏修를 실시하도록 개선한다고 답변하였다.

또 稅理士의 懲戒 문제와 관련하여 田中武夫 委員은 辨理士, 公認會計士, 藥劑士 등에 대한 懲戒權者는 主務大臣으로 되어 있으나, 稅理士에 대한 懲戒權者는 國稅廳長官으로 되어 있다. 辨理士에 대한 監督官廳은 特許廳이고, 特許廳이나 國稅廳은 외청으로서 辨理士에 대한 懲戒處分을 通算省大臣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稅理士에 대한 懲戒處分權은 大藏大臣이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고,

林 法制局長官은, '稅理士에 대한 懲戒權을 大藏大臣이 갖느냐, 國稅廳長官이 갖느냐?' 하는 것은 立法 政策에 관한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시 田中武夫 委員이 '稅理士의 懲戒權者를 大藏大臣으로 수정할 의사가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田中 大藏大臣은, '현재 稅理士에 대한 懲戒權者가 國稅廳長官으로 된 것은 沿革的인 것이나 장래 문제로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당장 大藏大臣에게 移讓한다는 것은 監督權 問題, 기타 法文의 整理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질의를 거친 다음 渡邊美智雄 委員 외 25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修正案이 제출되었다.

첫째, 제47조의 稅理士의 懲戒節次를 수정하여 懲戒處分의 절차를 정하고, 審査委員會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

둘째,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舊法에 의하여 稅理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

여 大學院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旣得權的 입장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보완할 것 등.

결과적으로 이 法案은 稅理士의 稅務代理權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옹호에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稅務調査에 있어서 事前通知를 철저히 할 것 등의 附帶決議를 붙여 衆議院을 통과하였다.

2. 參議院에서

參議院 大藏委員會에서 堀末治 委員은, '稅務實務經驗者에 대한 資格認定制度의 도입 개요는 잘 들었고, 長官의 설명으로 美國이나 西獨의 無試驗稅理士資格 부여제도는 알았으나 외국과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政府側 답변은, '소위 士자가 붙은 자유직업에 있어서 그 업무는 오랜 동안의 經驗을 한 자가 자격을 갖는다는 제도로서 辯護士나 行政書士, 司法書士, 辨理士, 公證士 등이 그러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改正案의 토론 중 參議院의 自民黨은 1964년 12월 政策審議會 내에 「稅理士制度小委員會」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렸다.

1968년 3월 이 小委員會의 제1회 회의시 大藏省으로부터 改正案 작성 단계의 經緯와 稅理士會와의 의견 상이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청취하는 등 제5회까지 審議를 거쳤으나 6월 1일 동 法案은 廢案되고 말았다.

V. 改正案에 대한 日稅連등의 要望과 政府의 見解

1. 廢案된 法律案에 대한 政府側의 意見

「中正한 立場」이라는 자구의 삭제 문제와 납세자의 입장에서 稅理士制度 전반적 검토에 대한 政府側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稅理士制度의 근본적 방향에 관한 검토

첫째, 납세자와 稅務官署의 관계는 被告와 檢察官과 같은 대립관계이고 稅理士는 被告人의 人權을 擁護하는 辯護士와 같다고 보아 납세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근대 訴訟制度는 檢察官이 犯罪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公訴 사실로 起訴하고 그에 대하여 被告側은 違法性의 阻却등의 犯罪阻却事由를 주장하고 裁判官은 대립하는 이들의 주장을 청취하면서 裁判한다.

그런데 稅務關係에 있어서는 먼저 납세자가 法令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고 稅務官署는 납세자의 적정의무 이행이 안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바, 이 경우 稅務官署와 납세자의 입장은 檢察과 被告와의 관계와 같은 대립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稅理士를 辯護士와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稅理士는 납세자로부터 報酬를 받고 業務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납세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稅理士를 단순한 代理人의 입장만으로 생각한다면 일부러 특정의 有資格者에 한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하게 할 필요는 없고, 民法上의 代理人이면 족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規制法規를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稅理士制度를 두는 취지는 인격과 능력을 적절히 갖춘 인재가 납세자의 신뢰와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憲法에 정하여진 納稅義務를 정당하게 이행하게 하므로써 申告納稅制度의 원활·적정한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稅理士業務는 이와 같은 사회적·공공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稅務에 관한 일정 범위의 업무를 稅理士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稅理士에 대한 辯護士나 公認會計士와 마찬가지의 직업상의 특권을 주어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나. 稅理士業務의 공공성에 비추어 稅理士가 납세자의 위촉을 받아 업무

를 행하는 때는 中正의 立場과 양심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써 현행법 제1조의 「中正의 立場」은 이와 같은 취지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稅務書類의 範圍 問題

稅理士業務중 稅務書類의 作成業務의 대상이 되는 稅務書類에는 稅務署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決算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정부의 의견은, 決算書는 원래 商法의 규정에 의하여 作成義務가 있고 稅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稅法에서는 株主總會등의 承認을 받아 확정한 決算을 기초로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여 申告書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상 決算書를 신고서 첨부서류로써 제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決算書를 稅理士의 獨占業務 대상으로 하여 稅務書類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 會計專門家인 公認會計士의 업무에도 決算書의 작성은 獨占業務로 되어 있지 않다.

3. 稅理士에 대한 懲戒權 問題

稅理士에 대한 懲戒權의 소재가 國稅廳長官에게 있는 것은 부적당함으로 제3자인 懲戒審査會 會長 또는 大藏大臣으로 하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懲戒權者를 大藏大臣 또는 國稅廳長으로 하는 것은 立法 정책상의 문제이나 懲戒審査會 會長을 懲戒權者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4. 日稅連의 要望事項에 대한 政府側의 意見

가. 「中正한 立場」의 자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요망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稅理士制度를 둔 취지는 각 納稅義務者에 대하여 그들의 이익이 정당히 보호되도록 하면서 納稅義務가 신속·정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세무행정이 원활·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다.

稅理士業務의 이와 같은 공공성에 비추어 일정 有資格者에 한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稅理士가 납세자의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때 中正한 立場과 良心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1951년의 稅理士法 制定 당시 이미 짜여진 것이므로 특히 이 규정에 의한 폐해가 없는 바에 일부러 수정할 필요가 없다.

나. 改正案 제2조 제1항 제1호에 稅務에 관한 訴訟代理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요망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이러한 요망은 辯護士와의 업무분야 조정이라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稅務訴訟의 현실을 보면 訴訟法上 현재에도 인정하고 있는 輔佐人制度의 이용이 거의 없으나 이 輔佐人制度의 활용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 稅理士에 대한 懲戒處分을 稅理士會에 委任해 달라는 요망에 대하여,

監督官廳을 갖지 않는 辯護士制度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稅理士制度의 경우에는 監督官廳이 있는, 公認會計士, 不動産鑑定士, 行政書士 등 다른 職業專門家들과 마찬가지로 監督官廳이 일원적으로 懲戒權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실제 懲戒處分에 있어서는 새로이 國稅廳에 委員 6인으로 구성되는 稅理士懲戒審査會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委員중에는 稅理士會의 대표도 포함하고, 懲戒處分은 그 審査會의 議決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稅理士會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라. 稅理士會의 會則變更은 大藏大臣의 認可事項으로 하지 않도록 요망한데 대하여,

현재 稅理士會의 會則變更에 있어서 入會 및 退會에 관한 규정등 일정의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大藏大臣의 認可事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公益法人에 대한 主務官廳의 監督權 행사 방법을 검토해 보면 公益法人의 定款變更은 모두 主務官廳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稅理士會에 대하여는 이보다 약간 감독을 완화하였으므로 중요성으로 보나 다른 公益法人들과의 균형으로 보나 主務官廳의 감독을 현재 이하로 완화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마. 「通知公認會計士制度」는 폐지되어야 하고, 「通知辯護士制度」는 强制加入制로 바꿔야 한다는 요망에 대하여,

通知公認會計士에 대하여는 현재 公認會計士인 稅理士가 약 1,500인 중 1,250명(83%)이 이미 稅理士會에 入會하고 있고, 未入會者는 250여명(1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法律로써 强制入會를 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稅理士會와 公認會計士協會와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양 업계의 원활을 위하여도 바람직한 것이고, 또 未入會者 수가 적기 때문에 세무행정상 특히 폐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도 자체의 개정은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通知辯護士 문제에 대하여는, 辯護士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辯護士는 당연히 稅理士事務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상 당장 日稅連의 의견과 같은 개정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通知辯護士가 稅理士會에 入會하는 길은 전혀 없으므로 만약 이와 같은 辯護士가 스스로 희망하더라도 稅理士의 入會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通知辯護士에 대하여도 稅理士會에 入會의 길을 열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入會하게 하므로써 稅理士會의 指導·連絡 및 監督에 복종하여 稅理士業務의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24]

---

24)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200.

바. 稅務實務 經驗者에 대한 資格認定制度를 신설하지 말고 시험일원화 체제를 요망한데 대하여,

稅務公務員에 대한 稅理士資格 부여에 관하여는 辯護士法, 辨理士法, 行政書士法, 司法書士法 등 다른 직업 전문가에 대한 立法 예와 주요 諸外國의 稅理士制度를 참조하여 통상의 시험제도 외에 충분한 稅務實務 經驗者를 資格者로 인정한 것이므로 稅理士制度 운영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보아 改正案은 타당하다.

사. 簿記·財務諸表論을 논문식 시험 필수과목으로 할 것을 요망한데 대하여,

會計業務는 稅理士만의 獨占業務가 아니고 稅理士는 稅法의 운영에 의한 課稅問題에 관한 職業專門家라는 점에 있고, 또 현행의 稅法 특히 法人稅法이나 所得稅法의 이론 및 실무는 기본적으로는 簿記·會計에 관한 제원칙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들 稅法에 대한 지식을 시험함으로써 會計에 관한 능력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稅理士로서의 실무응용능력을 시험하는 논문식 시험의 필수과목은 改正案과 같이 所得稅法, 法人稅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簿記나 財務諸表論을 포함한 會計學은 본 시험중 단답식에 의한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다.

아. 稅理士가 稅務代理한 사안에 대한 更正의 경우에는 반드시 稅理士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고 그러한 절차를 결한 경우의 更正決定은 無效로 하여 줄 것을 요망한데 대하여,

稅理士의 관여 정도는 각각 다른 것으로써 현행법에서는 稅理士가 충분한 審査를 행한 경우의 사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申告書에 첨부하고 그 경우의 更正은 당해 稅理士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망의 주지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일부러 절차만 복잡하게 할 뿐 실익이 없다. 또 의견청취의 규정은

세무행정의 원활화에 보탬이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 절차를 결하였다고 하여 당해 行政處分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자. 稅理士가 計算事項 또는 審査事項을 기재한 書面을 첨부한 경우에 명백한 法令違反 또는 計算誤謬의 경우를 제외하고 更正不可를 요망한데 대하여,

申告書의 적부의 최종적 판단은 調査負擔의 공평유지를 관점으로 하는 국가의 行政權에 속하는 것이고, 적정하지 않은 申告書에 대하여 稅務官公署가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차. 調査의 事前通知를 엄격화하고 반드시 상당기간을 주어 代理人인 稅理士에게 通知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한데 대하여,

현재의 稅務調査實情으로 보면 法律上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事前通知를 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한 早期에 事前通知가 행하여지도록 운영상 배려할 것이다.

카. 稅理士가 稅務代理하는 경우 署名捺印의 效力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망한데 대하여,

署名捺印을 하지 않으면 申告書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를 생각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의 署名捺印 義務는 일반적으로 과하여지지 않고, 法人稅와 같이 그 義務를 과한 경우에도 申告書의 效力 요건은 아니다. 본인의 署名捺印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임을 비추어 본인의 代理人인 稅理士의 署名捺印을 申告書의 效力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25]

第 7 節 1979년 稅理士法 改正 努力

25) 上揭書, p.203.

Ⅰ. 稅理士法 改正 提案 經緯

1965년 정부는 稅理士法 改正案이 廢案된후 13년을 경과하여 1978년 「稅理士法 一部 改正法律案」을 제출하였다. 廢案 이후 稅理士法 개정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나 日稅連 양자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나 日稅連은 1966년 각계의 학식과 경험자로 구성된 「稅理士制度調査會」를 구성하여 2년여의 조사를 거친후 1968년 「稅理士制度의 方向에 관한 答申」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1972년 「稅理士法 개정에 관한 基本 要綱」을 작성하여 大藏省, 自治省(우리나라의 內務部에 해당), 國稅廳 등 관계 당국에 대하여 稅理士法 개정에 관한 建議書를 제출함과 동시에 日本辯護士會連合會와 日本公認會計士協會 등과도 稅理士法改正 문제에 대하여 간담하였다.

그간 1972년 橫山利秋 의원이 稅理士의 직책과 시험제도등에 대하여 정부의 의향을 알기 위하여 船田中 衆議院 議長에게 「稅理士制度에 관한 質問書」를 제출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總理로부터 船田中 衆議院 議長에게 「橫山利秋議員 제출 稅理士制度에 관한 質問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衆議院 法務委員會에서 橫山 의원이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稅理士法 개정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日稅連 밖에서는 종종 논의가 있었으나 약 10년간 공백기간이었다.

Ⅱ. 稅理士法 改正에 대한 政府側과 日稅連과의 折衝

稅理士法 개정 문제에 관하여 日稅連은 大藏省·國稅廳과 1976년 4월 「稅理士의 業務」, 6월에는 「稅理士業務의 制限등」과 「稅理士資格 및 稅理士의 權利義務」, 9월에는 「稅理士의 懲戒, 自主權, 稅理士會등」, 11월에는 「調査의 通知, 意見의 聽取」, 1977년 3월에는 「稅理士의 使命, 試驗制度, 자격등」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상세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를 골격으로 하여 1978년에 大藏省·

國稅廳과 日稅連간에 5회에 걸친 검토회가 행하여져 1978년 9월 검토·완료하였다.

Ⅲ. 稅理士法 改正에 대한 國會의 動向

1976년 1월부터 日稅連과 大藏省·國稅廳간에 稅理士法 개정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졌고 각 政黨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1978년에는 自民黨財政部會 내에 「稅理士問題小委員會」, 民社黨 내에도 「稅理士法改正問題特別委員會」, 社會黨 내에도 「稅理士法改正問題特別委員會」, 新自由클럽政策委員會 내에도 「稅理士法改正問題特別委員會」, 公明黨政策審議會大藏部會 내에도 「稅理士法改正小委員會」가 각각 설치되어 일제히 稅理士法 改正問題를 중요 이슈로 삼았다. 그 중 대표적인 自民黨小委員會의 정력적인 활동과 政府案으로 채택한 經緯를 살펴보면,

첫째, 1978년 4월 日稅連으로부터 稅理士法 改正問題의 경위와 현상에 관하여 들은 후 각 業界의 折衝狀況, 臨時稅務書類의 作成, 小企業對策問題[26]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고,

둘째, 6월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대하여 稅理士櫻友會, 大阪櫻美會, TKC全國會, 全國專業稅理士協會, 專業協議會, 全國婦人稅理士連盟, 全國靑年稅理士連盟, 第1稅理士協議會, 近畿稅務硏究會 등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셋째, 6월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대하여 日本辯護士會連合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넷째, 7월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대하여 全國靑色申告會總連合, 全國商工會連合會, 日本商工會議所, 全國法人會總連合, 全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

---

26) 自民黨의 이 「小企業對策問題」와 관련한 商法改正問題로 이어져 「會計調査人」 형태의 外部監査人 자격으로 稅理士의 관여를 위한 노력을 日稅連이 하게 되었다. 第6章 第2節 X 商法改正問題 참조.

業團體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다섯째, 9월에는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높은 新井隆一 早稻田大學 敎授와 日本行政書士會連合會 및 國稅勞動組合全國會議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여섯째, 10월에는 政府側으로부터 美國과 西獨의 稅理士制度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곱째, 1979년 1월부터 3회에 걸쳐 「稅理士法改正에 관한 주요 項目別 意見」에 대한 자유토론을 거쳐 3월에 「稅理士制度 改正 要綱」[27]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自民黨의 의견을 종합하여 政府案으로 「稅理士法 一部 改正 法律案」을 제안하였다.

Ⅳ. 稅理士法 改正法律案 要綱 및 提案理由

1. 關係機關과의 折衝

1979년 5월 自民黨의 稅理士法 改正法律案 要綱을 政府案으로 國會에 제출하였는데, 그간 大藏省·國稅廳은 관계 각 省, 廳간의 문제에 있어서,

① 自治省과는 行政書士의 稅理士業務의 對象範圍,

② 通算省·中小企業廳과는 商工會와 商工會議所등의 記帳指導關係,

③ 厚生勞動省과는 社會保險勞務士의 業務關係,

④ 運輸省과는 自動車業界의 自動車販賣關係의 申告, 申請등과 稅理士業務關係등을 절충하였다.

2. 稅理士法 改正案의 提案說明 및 要綱

---

27) 稅理士問題小委員會의 稅理士制度 改正 要綱 내용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259~264.

改正法律案에 대한 金子一平 大藏大臣의 제안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稅理士의 使命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納稅義務者의 신뢰에 부응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명을 다한다(제1조).

나. 稅理士의 業務

① 對象稅目의 範圍擴大--종전 7세목에서 國稅, 地方稅 全 稅目으로 확대

② 稅理士業務範圍의 明確化

③ 付隨業務에 관한 규정 신설

稅理士는 다른 法律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여 財務書類의 作成, 會計帳簿의 記帳代行[28] 기타 財務에 관한 사무를 업무로 할 수 있다.

다. 特別稅理士試驗制度의 改正

라. 登錄 즉시 入會로의 이행

마. 稅理士의 權利와 義務

① 타인이 작성한 申告書의 審査에 관한 書面添附制度 창설--稅理士는 타인이 작성한 申告書를 審査한 경우에 당해 申告書가 租稅에 관한 法令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한 때는 審査한 사항등을 기재한 書面을 그 申告書에 첨부할 수 있고, 稅務署長등은 그 申告書에 관계되는 租稅에 대하여 更正을 요하는 경우 그 更正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稅理士가 審査한 것일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稅理士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제30조의 2, 제35조).

---

28) 記帳業務는 稅理士業務의 附隨業務이므로 稅理士의 報酬 規定도 「稅理士의 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이 아니라 「會計業務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별도 부록 참조.

② 稅理士會에 의한 報酬의 制限

③ 稅理士事務所의 規制 强化

④ 帳簿의 記載事項 簡素化등

⑤ 稅理士事務所의 사용인등에 대한 監督義務 明示

⑥ 助言義務에 관한 규정 신설--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행하면서 위촉자가 부정하게 稅를 免脫하거나 不正還給을 받는 사실 또는 課稅標準등의 계산이 되는 기초를 은폐하거나 과장한 사실을 인지한 때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助言하여야 한다(제41조의 3).

바. 懲戒

① 懲戒節次의 合理化

② 懲戒를 위한 稅理士審査會의 設置

③ 懲戒處分의 效力發生 時期의 適正化

사. 稅理士會 및 日稅連

① 稅理士會의 分割--각 地方國稅局에 하나의 稅理士會를 원칙으로 하면서 稅理士會의 회원수가 일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이 區域을 정하여 새로운 稅理士會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제49조).

② 會則의 절대적 記載事項의 追加 등.

V. 國會의 審議중 廢案 經緯

1. 衆議院 大藏委員會에서

가. 行政書士 업무와의 조정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政府委員은 종전 行政書士가 취급하여왔던 申告書등의 작성에 관한 업무는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行政書士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旣得權을 충분

히 배려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通知公認會計士制度와 관련하여

大島弘 委員은 현행 間接强制入會制를 登錄 즉시 入會制로 개정함으로써 通知公認會計士制度를 폐지하였는데, 辯護士의 경우는 通知辯護士制度를 계속하면서 公認會計士에 대하여만 폐지한 이유를 질의하였다.

이에 福田 政府委員은, '辯護士는 辯護士法 제3조 제2항의 규정이 있으나 公認會計士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어떠한 職業法에 있어서도 登錄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登錄 즉시 入會가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다른 職業法과의 균형을 보거나 職業法의 취지로 보더라도 登錄하면 入會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한 것으로써 稅理士의 명의인 이상 稅理士會의 入會가 기본인 것이다.

따라서 公認會計士側도 현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通知로써 稅理士會에 入會하지 않고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혁적으로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취지를 생각하거나 또 公認會計士의 상당수가 稅務業務를 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辯護士와 다른 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登錄 즉시 入會, 즉 稅理士라는 명칭을 가지려면 稅理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는 다른 職業法과 같은 궤도를 취한 것이다.

辯護士의 경우에도 역시 稅理士의 명칭사용시에는 이 法律의 개정으로 稅理士會에도 入會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에는 通知로써 稅理士의 명칭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辯護士의 辯護士法으로부터 오는 특수한 지위인 것이다'[29]라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이어 大島 委員이 '그렇게되면 公認會計士協會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조정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하여,

---

29)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273~274.

福田 政府委員은 '公認會計士와 稅理士의 업무는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稅務代理라고 하는 것은 租稅의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 또는 守秘義務를 진 특수한 업무이고, 公認會計士는 이와는 다른 監査가 목적이기 때문에 입장이나 업무 분야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 公認會計士가 稅務業務를 하는 것도 좋으나 稅理士의 명칭을 갖는 이상은 稅理士會에 入會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반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는 公認會計士의 業務減少, 稅務業務增加 여부로 알력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登錄 즉시 入會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그대로 法律化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公認會計士側도 잘 알고 있고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付隨業務와 타인의 申告書의 審査인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써 公認會計士會로부터 별다른 요구가 없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30)

또 大島 委員은 '본 法 시행후 3년 간은 公認會計士도 종전과 같이 稅理士業務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당분간 國稅局長의 허가를 받아 행하고자 하는 稅理士業務의 규모가 소규모로써 위촉자의 수 등이 일정규모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稅理士業務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당분간이지만 소규모라는 위촉자의 수등 일정규모의 범위는 어떤 의미인가?'를 질의하였다.

이에 福田 政府委員은 '登錄 즉시 入會의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저절로 도출되는 제한 건수이다. 단지 그 실태는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 건수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또 그것은 건수뿐만 아니라 收入金額등으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登錄 즉시 入會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당분간 예외적으로 公認會計士의 명의로 稅務代理를 하는 것이므로 저절로 건수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通知公認會計士制度의 폐지와 登錄 즉시 入會制로 개정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다. 村山喜一(社會黨) 委員의 稅理士報酬規定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

30) 上揭書, pp.274~275.

米山武政 政府委員은 '현재의 稅理士報酬規定은 현행의 稅理士法 제39조에 國稅廳長官이 最高限度額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稅理士業務의 공공성을 기초로 하여 위촉자인 납세자를 부당한 高額報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다. 그러나 國稅廳長官은 현재 最高限度額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國稅廳長官이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 각 稅理士會가 그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보아 國稅廳長官 告示를 하지 않고 각 稅理士會가 報酬規定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改正案에서도 報酬規定은 最高限度額을 會則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는 물론 大藏大臣의 認可를 요하는 것으로써 이후에도 報酬를 정함에 있어서는 부당한 고액의 報酬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할 것이다'라는 답변하였다.

公正去來委員會의 說明員은 '稅理士의 會則으로 報酬의 最高限度額을 정하는 것은 본래 獨占禁止法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辯護士法이나 公認會計士法, 司法書士法, 行政書士法 등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 이로 비추어볼 때 이 규정은 報酬의 最高限度額을 정한 것이고, 그 취지는 위촉자를 부당한 高額의 報酬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會則을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도록 한 규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인으로서도 獨占禁止法上의 적용에 대하여는 좀더 실태를 파악한 후에 생각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靑色申告會·商工會가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가 이 개정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등등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衆議院 大藏委員會는 航空機導入 疑惑 문제와 관련한 僞證告發 문제로 國會審議가 空轉되었고, 6월 14일 회기 만료로 「稅理士法 일부 改正案에 관한 法律案」은 다른 法案과 마찬가지로 審議未了로 廢案되었다.

8월 30일 臨時國會가 소집되고 다른 法案과 함께 이 法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9월 7일 衆議院 해산으로 다시 廢案되고 말았다.[31]

---

31) 上揭書, p.293.

第 8 節 1980년 稅理士法 改正

Ⅰ. 國會의 審議過程

1. 衆議院에서

총선거 실시후 1979년 廢案되었던 「稅理士法의 일부 改正法律案」은 施行日 등에 대한 수정을 거친후 다시 衆議院에 제안되어 大藏委員會부터 질의에 들어갔는데,

가. 山田芳治 社會黨委員은 2회나 廢案된 후에도 동일 내용의 法案을 계속 제출하는 이유를 물은 후 稅理士의 使命問題에 대하여,

'改正案에서 稅理士의 使命은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공정한 입장」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稅理士의 使命·役割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權利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委員會의 會議錄을 열람해보면 稅理士가 납세자, 政府當局, 徵稅當局으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전문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들은 1949년 「제1차 Shoup 勸告」 등의 세무행정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으나, 오히려 行政權과 權力에 대하여 稅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서 權利를 옹호하는 입장이 稅理士의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납세자의 權利를 옹호한다는 말은 왜 명확히 사용해서는 안되는가, 또 사용하지 않는가 라는 점을 알고자 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福田 政府委員은 '제1조에서 종래 「中正한 立場」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稅務에 관한 專門家」라고 표현한 것은 稅理士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專門業種과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稅務의

專門家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 使命의 범위는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稅務라고 한 것은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 즉 行政에 있어서 稅務의 특수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權利의 擁護라는 司法槪念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專門家로서 독립·공정한 입장이라고 한 것은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을 통하여 또 의뢰자의 신뢰에 부응하면서 적정한 納稅義務 履行이 權利 擁護 자체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의 立法 예를 보더라도 「獨立不偏」이라는 獨逸法의 사고와 美國法 규정인 「적정한 申告書 작성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정당한 申告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는 샤프의 생각으로 보더라도 이 제1조의 취지를 稅務專門家로서 원조하면서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을 도우는 것이 稅務專門家로서 稅理士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32]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山田 委員이 '「權利를 擁護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하여,

福田 委員은 '權利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權利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司法의 경우에는 權利를 침해당한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納稅義務를 적정히 실현하게 하는 것이 稅務執行에 있어서 稅理士의 입장이고, 稅務執行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이라는 것은 過大 과세나 過小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써, 이는 權利라고 하기 보다도 그 과정상 납세자의 立場이 옹호된다고 하는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인 것으로써 말씀하신 취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다시 山田 委員의 '그러한 과정중에 權利가 擁護된다고 한다면 權利를 擁護한다고 표현하더라도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확실히 적정한 納稅와 적정한 법의 적용을 援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납세자의 權利를 擁護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福田 委員은 '반복되지만 權利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32) 上揭書, pp.294~295.

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시 司法과 行政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서 納稅義務가 전제된 것으로 權利의 擁護라고 하기 보다도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이 稅理士의 性格 및 使命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이어서 稅理士業務의 範圍問題, 他人作成 申告書등을 審査한 경우의 書面添附制度, 납세자의 異議申請, 公認會計士등과의 이해 관계 조정등에 관하여, 新稅의 導入과 對象 稅目과의 관련, 稅理士의 助言義務와 帳簿作成 등 義務와의 관련, 稅理士 懲戒處分의 效力 發生 時期, 支部의 稅理士에 대한 監督과 國稅廳長官의 監督과의 관련, 辯護士의 稅理士業務, 稅理士試驗制度, 稅理士像과 稅理士規制등에 관한 질의들이 있었다.

다. 日本共産黨 대표 正森成二 委員의 다음과 같은 반대 토론도 있었다. '반대의 첫째 이유는, 本 案이 稅理士 및 稅理士에 대하여 大藏省과 國稅廳의 監視·監督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稅理士를 국가의 徵稅體制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샤프 稅制 이래 自由申告를 기본으로 納稅制度의 기초로서 稅理士는 大藏省과 國稅廳의 監督하에서도 自主權의 확립과 납세자의 權利 擁護 입장에 서서 공정한 세무행정의 실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2년 日稅連이 발표한 稅理士法 개정에 관한 기본 要綱은 실로 이러한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本 改正案에 있어서는 助言義務나 사용인의 監督義務를 신설하고 稅理士에 대한 국가의 監視와 監督 권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위 稅理士에 대한 監視規制法的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것은 自主申告制度의 形骸化임과 동시에 稅理士와 稅理士會를 세무행정의 下層 機關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一般消費稅 도입의 포석으로써 徵稅體制의 정비가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엄격한 審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81년도 이후의

一般消費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本 案에 따라 間接稅 취급을 가능하도록 업무를 확대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助言義務, 相談, 記帳義務의 창설과 小規模業者 援助의 義務化 등은 國民課稅의 원활화와 稅務實務의 대량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一般消費稅 導入 후의 徵稅體制 구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勞動者나 中小企業家, 消費者 등 많은 국민으로 구성된 一般消費稅 반대를 위한 中央連絡會가 전국집회를 갖고 稅理士法 개정에 반대결의를 한 것도 실로 이 때문이다. 一般消費稅 導入 태도를 취하면서 本 案과는 무관계한 것처럼 변명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이중으로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本 案의 실현이 大藏省과 國稅廳과 강하게 결탁한 日稅連의 일부 간부의 의향에 의한 것으로 많은 양심적 稅理士는 오히려 本 案의 실현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勞動者와 中小業者와 함께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최후로 본인은 本 案이 체결된 뒤 후행되는 附帶決議에 대하여 언급해두고자 한다. 이 附帶決議 제1항은 「助言義務의 규정은 稅理士의 사회적 책임을 밝히는 倫理的 규정」이라고 하였으나 정부당국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단순한 윤리적 규정이 아니라 法 제46조에 의하여 일반적 징계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다음 항목에 「稅理士가 아닌 자가 稅理士業務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감시조치를 강구할 것」과 같이 이미 法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屋上屋과 같이 중복하는 것은, 項目중에 「제2조에 규정하는 稅務書類의 범위등에 관하여 商工會와 商工會議所 및 靑年申告會 등이 행하고 있는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번의 개정에 의하여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면에서 배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몇몇 단체에게만 편의를 인정한 言語道斷이라 할 수 있다.[33]

이상으로 보아 本 法案과 附帶決議는 확실히 위험한 反國民的인 것이 명백하므로, 본인은 이 法案의 성립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一般消費稅 導入에

33) 上揭書, pp.300~302.

따른 大衆 增稅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反國民的 增稅體制의 강화책이고, 稅理士라고 하여 당초부터 국민의 人權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친다.'

라. 衆議院 大藏委員會를 거쳐 1980년 2월 이 法案은 增岡博之 大藏委員長의 보고대로 가결되어 參議院으로 송부되었다.

2. 參議院에서

本 法案은 共産黨의 반대로 本 會議에서 취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大藏委員會부터 시작하였다. 당초 共産黨은 「稅理士法을 議題로부터 삭제할 것을 議事進行 動議」하였으나 動議가 부결되었으므로 審議가 속개된 것이다. 이들 중 중요질의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가. 多田省吾 委員이 '금회 改正案의 稅理士의 使命중에 「독립하여 公正한 立場」이 있으나 현행법의 「中正한 立場」과는 어떻게 다르며, 「독립하여 公正한 立場」에서 무엇으로부터 독립한 것이며 또 무엇에 대하여 公正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福田 政府委員은 '종래 「中正한 立場」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中立·公正이라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中立이라는 말은 납세자와 稅務當局과의 중간에 서서 어느 쪽의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래 稅理士는 납세자의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을 위하여 稅務專門家로서 특정인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獨自的·公正한 판단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獨立」이라 함은 稅務官署는 물론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특정의 입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의미이고, 또 「公正」이라는 의미는 租稅法規 및 그 근

저에 있는 건전한 사회적 양식에 비추어 올바르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敷衍하면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라고 한 것이 「독립하여 公正한 立場」의 위에 쓰여져 있다. 따라서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전문적 판단이라는 것이 선행하고 다시 그 뒤에 「, 」가 쓰여져 있어서 이를 없애더라도 그 자체가 일반적인 獨立·公正한 立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獨立」을 다른 말로 바꾸어 稅務官署로부터의 독립, 의뢰자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자기의 양심의 독립, 즉 이들 3자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립은 自由職業人의 본래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의뢰자와의 관계는 본래 民法上의 대리이나 憲法上의 納稅義務인 점에서 이와 같은 제1조의 제약이 있는 것이다. 독립이라는 것은 그 입장을 의미한 것이나, 이번에 公正이라는 것을 추가한 것은 사회적 가치판단이 가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인 租稅法律主義라는 憲法規定으로부터 도출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 이 「獨立하여 公正한 立場」의 해석인 것이다'[34]라고 답변하였다.

나. 多田省吾 委員이 다시 '나는 납세자의 權利 擁護라는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稅理士의 使命」중에도 稅理士는 의뢰자로부터 報酬를 받고 업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이익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權利 擁護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또 이 경우에 權利 擁護라는 문제는 裁判上의 소위 司法上의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政府側의 생각은?' 라는 질의를 한데 대하여,

福田 委員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司法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적정한 納稅義務의 실현 과정중의 무슨 權利라고 하기 보다 이익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것이 위촉자의 신뢰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여간 제1조의 전제에는 代理關係, 民法上의 代理를 기초로 한 관계로서

34) 上揭書, pp.305~306.

그것을 제1조가 納稅라는 특수한 공공적 문제이기 때문에 「使命」이라는 관점에서 代理關係를 다시 체크하고 규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다시 납세자의 權利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司法面의 문제로 이행하는 司法面 자체의 문제로써 취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行政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納稅義務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多田省吾 委員은 이어 稅理士業務의 範圍, 助言義務 등 문제에 대하여도 질의하였다. (이하 생략)

다. 市川傍枝 委員으로부터 '이번의 改正案의 주된 개정 趣旨'의 질의에 대하여,

福田 委員은 '이번의 法律 改正案은 납세자가 稅金을 納付할 때 신뢰할 수 있는 稅理士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稅理士의 지위도 향상하도록 하여 이후에도 이를 신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방향인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이어 稅理士의 자질 및 자격, 脫稅相談에 대한 罰則規定, 稅理士의 助言義務 問題, 稅理士의 業務, 登錄 즉시 入會制, 靑色申告會의 業務調整, 稅理士의 硏修 問題, 稅理士試驗 問題, 使用人의 監督義務 問題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마. 多田省吾 委員이 '稅理士審査會의 議決을 「기초로」 懲戒한다고 하였으나, 왜 「議決에 의하여」라고 하지 않은 것인가? 또 懲戒의 내용이 어느 정도 稅理士審査會의 의결에 좌우되는 것인가? 물론 大藏大臣의 단계에서 그 議決보다도 무겁게 懲戒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나 그 議決보다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의를 한데 대하여,

政府 委員은 '제안에서 분명히 「稅理士審査會의 議決에 따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稅理士審査會의 의결한 내용과 현실의 처분내용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단, 稅理士審査會의 의결 내용은 懲戒事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懲戒事由 해당 여부 판단의 경우에 懲戒處分의 내용을 여

하히 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있고, 懲戒事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稅理士審査會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懲戒는 違法인 것이나,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懲戒處分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稅理士審査會의 諮問을 구하고 그 諮問에 따라 處分權者인 大藏大臣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懲戒處分의 효력 발생 시기문제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바. 野末陳平 委員이 優良 稅理士에 대한 優待策, 書面添附制度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稅理士의 관여 건수가 많아 납세자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伊藤田敏雄 政府 委員은 '건수제한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된 경우는 들은 바가 없다. 稅理士業務도 역시 영업의 일종으로써 이를 일부러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역시 어느 정도 건수가 많아지면 사용인 수도 많게 되고, 사용인 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주시하여 폐해가 있으면 필요한 行政處分을 강구하거나 이후에 문제로써 제한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35]

사. 질의 종결후 일본 社會黨, 公明黨 및 民社黨 공동제안으로 「稅理士法一部改正 法律案의 一部 修正案」을 제출하였는데,

'法 제1조 稅理士의 使命중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하여 公正한 立場에서,」의 다음에 「申告納稅制度의 이념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法案 일부 修正을 제안한 것으로 片岡勝治 委員의 이유 설명은 다음과 같다.

'申告納稅制度라 함은 納付하여야할 稅額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이다. 즉,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課稅標準과 稅額등을 계산하고 그것을 申告書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시점에서 納付稅額이 확정되는

35) 上揭書, p.316.

제도로서, 稅務關係 당국에 의하여 申告書의 調査·審査등은 하지 않고, 물론 稅務署등의 承認이나 認定등의 行政措置도 일체 없는 제도이다. 단지 예외로서 未申告나 違法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稅務當局의 처분에 따라 稅額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소위 賦課課稅方式이다.

申告課稅方式의 이념은 일본의 課稅方式의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明治 이후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의의를 가졌던 賦課課稅 방식이 新憲法 발족에 의한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租稅制度로 바뀐 것이다. 稅理士制度의 향방도 納稅方式의 전환, 즉 申告納稅制의 채용의 확대에 따라 저절로 명확하게 된다. 이와 같이 申告納稅制度는 국민주권의 정치원리에 서서 主權者인 납세자가 스스로 租稅債務를 확정하는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稅理士에게 과해져야할 사회적 임무는 필연적으로 이 납세자의 自主申告權인 稅法上의 행위를 원조해 주고 稅法上의 권익을 옹호해 주는데 있는 것이다. 또 租稅法規가 점점 복잡해지는 현재 申告納稅制度下에서는 납세자의 후견적인 역할을 稅理士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稅理士制度 존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申告納稅制度下의 稅理士制度의 향방은 稅理士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포함한 공통의 이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이념이 稅理士制度와 이 稅理士法의 운용에 관철될 수 있다면 主權者인 납세자의 기대와 신뢰는 한층 더 두텁게 될 것이다. 이것이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에 공통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생각을 제1조의 稅理士 使命중에 명확히 하고 稅理士法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이 修正案의 이유이다'.[36]

이 修正案은 大藏委員會에서 채택되었고 參議院 本會議에서도 本 法案은 大藏委員長의 보고대로 修正 議決되었으나, 本 法案에 수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衆議院에 회부되었다.

衆議院 決議에서도 參議院의 修正決議에 동의하였으므로, 1965년 廢案 이래

---

36) 上揭書, pp.316~317.

15년만에 稅理士法 改正法律案이 성립되어 1980년 4월 14일 法律 제26호로 공포되었다.[37]

II. 改正稅理士法의 特色과 槪要

改正 稅理士法의 特色과 槪要는 다음과 같다.

1. 稅理士의 使命 明確化

舊法 제1조는 「稅理士의 職責」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稅理士의 자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稅理士의 使命」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고, 「中正의 立場」의 의의가 종래 불명확하다는 논의가 있어 新法에서는 제1조를 「稅理士의 使命」으로 하고, 「中正한 立場」을,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하여 公正한 立場」으로 고쳐 稅理士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사회적 지위를 일층 명확히 하였다.

또 參議院의 法律案 修正過程에서 「申告納稅制度의 이념에 따라」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戰後 日本國稅制度의 기본이 된 申告納稅制度下에 있어서 납세자의 稅理士에 대한 기대와 신뢰 및 稅理士制度의 존재의의를 더 한층 높인 것이라 생각한다. 또 「納稅에 관한 道義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취지가 「적정한 納稅義務의 實現」이라는 문언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稅理士가 納稅道義 고양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다.[38]

2. 稅理士業務에 관한 改正

37) 上揭書, p.319.
38) 上揭書, p.320.

① 對象 稅目의 擴大

② 稅理士業務 範圍의 明確化

③ 附隨業務[39]

3. 試驗制度에 관한 改正

① 特別試驗制度의 廢止

② 稅務公務員에 대한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의 稅理士試驗 免除制度의 新設

③ 試驗 科目의 改正

4. 稅理士의 權利 義務에 관한 改正

① 書面添附 制度

② 審査事項 記載書面 添附 制度

③ 事務所의 設置 義務

④ 帳簿作成 義務

⑤ 使用人등에 대한 監督 義務

⑥ 助言 義務

5. 懲戒處分에 관한 改正

---

39) 稅理士法은「稅理士의 名稱을 사용하여 他人의 의뢰에 따라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 財務書類의 作成, 會計帳簿의 記帳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事務를 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改正前에는 稅理士가 행하는 會計業務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이 실제상 業務로서 商業帳簿나 財務書類의 作成을 하여왔다. 會計業務는 누구라도 자유로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稅理士가 하는 會計業務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業務로서 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 法의 改正으로 稅理士가 會計의 專門家임을 稅理士法에 명확히 선언하였고, 종전부터의 稅理士業務와 병행하여 專門家로서 會計業務를 추인한 것이다.
이로써 稅理士는 會計專門家의 위치를 갖게 되어 이후 商法改正 작업시 中小會社를 대상으로 하는計算公開와 計算適正을 담보하는 제도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法務省으로부터 갖게 된다. 그러나 附隨業務라는 규정은 稅理士의 이름으로 會計業務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稅理士業務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① 懲戒處分의 效力 發生 時期

② 懲戒處分의 節次

6. 稅理士審査會의 新設

7. 稅理士會 및 日稅連에 관한 改正

① 登錄 즉시 入會制의 履行

② 稅理士會의 分割

③ 稅理士會 支部의 設置 義務

④ 會則事項의 追加

8. 罰則의 改正 등(내용 설명 생략).

第 3 章　日本稅務代理士會期의 發展過程

第 1 節　오오사카(大阪)稅務代辯會의 設立

1912(明治 45년)년 5월 16일 大阪府令 제45호로 大阪稅務代辯者取締規則이 제정되어 稅務代理를 행하는 자를 「稅務代辯者」라고 칭하였으나, 이들이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932년 2월에 大阪 地區의 稅務代辯人들은 회원의 단결과 업무상의 폐해를 시정하고 업계의 쇄신을 목적으로 「大阪稅務代辯會」를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稅務會計 專門家로서의 조직의 嚆矢로 추정된다.[1]

당시의 大阪稅務代辯會 定款에는 會의 명칭, 목적과 업무, 회원의 加入과 脫退, 회원의 權利와 義務, 任員의 資格·權限 및 選任과 解任, 會議, 會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2]

第 2 節　戰時體制 突入과 社會經濟 情勢

1929년 7월 中國의 軍閥인 張作霖의 暴死事件, 1931년 滿洲 奉天北部의 柳條溝의 鐵道 爆破事件을 계기로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이후 일본 정부는 戰時體制를 강화하였고, 1932년 齋藤內閣 이후 軍部 특히 陸軍의 發言權이 강화되고 軍部의 압력으로 워싱톤조약 및 런던조약을 파기하여 太平洋의 無條約時代가 된다. 1937년 北京郊外의 芦溝橋에서의 中·日 兩軍의 충돌로 中日戰爭이 발발하자 英國·美國·프랑스·蘇聯 등은 中國을 원조하였고, 이에 따른 급속한 戰時體制 전환으로 1938년에는 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여 「八紘一字」「擧國一

1)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343.
2) 上揭書, pp.343~346.

致」「贅澤(사치)은 敵이다」 등의 슬로건 하에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통제함으로써 人的·物的 자원을 戰力化하게 된다.

1939년 제2차 世界大戰이 발발하였으나 초기 일본은 「大戰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中國 문제 해결에 매진한다」는 전략이었으나, 1940년부터 국내적으로는 戰爭經濟體制로 국외적으로는 南方政策으로 확대함에 따라 모든 政黨은 해산되고 大日本産業報國會가 창립되어 勞動運動도 말살되었고 9월에는 日·獨·伊 3국동맹이 성립되므로써 美國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당초 1941년 개시된 獨·蘇戰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對蘇聯戰의 추이가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무력을 행사하여 北方問題를 해결한다」는 對蘇 전략과, 「南方進出 체제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對英·美 戰爭도 불사한다」는 南方政策을 결정하여 7월에는 關東軍特別大演習을 실시하였고 말레지아 반도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美國은 곧 在美 日本人 資産 凍結과 對日本 石油輸出 禁止 조치에 들어갔고, 英國도 英·日通商條約을 파기하여 A(미국), B(영국), C(중국), D(蘭) 라인의 결속을 공고히 하여 對日經濟封鎖와 軍事的 대항 자세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어 政權을 인수받은 東條英機 內閣은 특사를 파견하여 對美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滿洲로부터 日本軍의 철수와 滿洲事變 이전 상태로의 復歸, 天皇政權의 否認, 日·獨·伊 三國同盟의 破棄 등 고자세를 취하였으므로 1941년 12월 1일 開戰을 결정하고 12월 8일 宣戰布告없이 太平洋戰爭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른 그간의 稅制는 1937년 8월부터 실시된 北支事件特別稅, 支那事變特別稅法 등에 따라 增稅一邊倒의 戰時體制로 이행되었는데, 이 때 개정된 所得稅를 보면 分類所得稅와 綜合所得稅의 2원체제로 하고 分類所得稅는 所得의 種類에 따라 不動産, 配當과 利子, 事業, 勤勞, 山林, 退職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免稅点과 基礎控除 후의 비례세율 과세제였다.

당초에는 法人所得에 대하여 個人所得課稅와 마찬가지로 所得稅法중에 규

정되어 「第1種 所得稅」라는 稅目으로 과세되었으나 1940년 稅法 개정으로 法人稅法이 制定되어 「法人稅」로서 과세되게 되었다.[3]

第 3 節 京都稅務代辯者協會의 設立과 代理人制度 確立 努力

Ⅰ. 京都 稅務代辯者協會 設立

「大阪稅務代辯者取締規定」에 이어 1936년 3월 20일 京都府令 제13호로 「京都稅務代辯者取締規則」이 制定된 후 京都 地區의 회원의 지위와 신용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京都稅務代辯者協會」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1939년 京都稅務代辯者協會는, 부정·부당한 稅務代理業者를 감독하고 적정한 稅務代理業者에 대하여는 직능적 특권을 부여하여 그 지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전국 각지 지식인들의 요망에 따라 「稅務代理人法」을 制定하여 주도록 建議書[4]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Ⅱ. 全日本稅務代理人法 制定 期成同盟會 創立

1940년에는 大阪稅務士會(會長 北岡儀孝), 名古屋稅務代理人會(會長 磯部喜平), 京都稅務代辯者協會(會長 山內武平), 兵庫縣稅務代理人會(理事長 河野正豊)들은 日本稅務代理人連合會를 결성하고 大阪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稅務代理人法 制定 촉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同 連合會의 회원수는 1941년 5월

3) 法人稅法의 沿革에 대하여는, 權海浩, 「日本의 法人所得 課稅制度」, 主要國의 法人所得 課稅制度 중, 韓國租稅硏究所, 1987, pp.343~345 참조.
4) 建議書의 내용에 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352~353.

현재 182명이었다.

1941년 위 간부일동이 발기인이 되어 全日本稅務代理人法 制定 期成同盟會를 創立[5]하고 전국 각지의 稅務代理人業者들의 入會를 권유함과 동시에 請願書 및 稅務代理人法 草案[6]을 작성하여 大藏大臣에게 제출하였다.

Ⅲ. 日本稅務代理人連合會 結成

1941년 4월 15일 결성된 全日本稅務代理人法 制定 期成同盟會는 비상시하의 職域奉公과 職業倫理의 앙양을 목적으로 名古屋稅務代理人會가 주최가 되어 名古屋商工會議所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대회에서 稅務代理人法 制定을 위한 일치 단결을 선언하고 세무행정 운영의 보조적 기관으로서 공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대회 散會후 會議場을 옮겨서 금후의 法制定 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협의하기 위하여 全國期成同盟會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稅務代理人會가 法制定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가 있어 협의한 결과,

첫째, 全日本稅務代理人會連合會를 결성하여 그 連合會가 모체가 되어 法制定 운동을 재출발할 것,

둘째, 任員으로는 會長(또는 理事長) 1명, 副會長 3, 4명을 둘 것,

셋째, 각 地方會에 連絡委員을 會長외에 3명씩 둘 것 등을 결의하였고,

이어 日本稅務代理人連合會 會則 및 手數料 규정 등을 制定하였다.[7]

Ⅳ. 東京稅務代理人會의 結成

東京에는 住田金作 등 유력한 會計人을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의 稅務代理

5) 당시의 창립 總會의 상황에 관하여는 (일본) 法曹新聞 1941년 1월 25일자 참조.
6) 稅務代理人法의 草案의 내용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354~355 참조.
7) 會則 및 手數料 規定은, 上揭書, pp.357~359 참조.

人이 있었고, 橫浜(요꼬하마)에는 약 2, 30명의 同業者가 있었다. 당초에는 同業者會가 없었으나 關西地方의 稅務代理人會가 결성된 것을 전후로 하여 1941년 4월 12일 東京 거주 大藏省 출신 稅務代理人들이 모여 「東京稅務代理士會」를 결성하여 「國家 納稅政策의 適實」등 3 가지 내용을 담은 宣言書를 채택하였으나 당시의 회원수는 26명에 불과하였다.

이어 橫浜까지 통합하여 5월 2일 「東京稅務代理人會」로 발족하여 당초는 「稅務代理人」, 「公認稅務士」, 「稅務士」 등의 명칭이 논의되었으나, 「稅務士」라는 발음은 「稅의 蠢(무시, 「벌레」의 의미)」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의 명칭상 권위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협의 끝에 「稅務代理士」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었고, 大藏省의 村山達雄 사무관의 의견을 들어 「稅務代理士」라는 명칭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8]

東京稅務代理士會의 결성은 회원간의 親睦과 自肅自戒의 목적외에 「稅理士法案」의 제정에 목적이 있었다. 초대 會長으로 駒井重次가 추대되었는데 당시 民政黨 소속 의원으로서 현안이었던 稅理士法案의 국회 제출 관계상 최적임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稅理士法은 立法 대책은 주로 東京稅務代理士會가 연구·교섭하여야 하였는데 이 法案에 대한 稅務代理士側의 제일 큰 관심은, 첫째, 稅理士의 자격범위였고, 둘째는 稅務代理士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인식이었다.

稅務代理士를 許可制로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며 旣存業者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이 業者로서는 중대한 문제였고 稅務代理士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요망되었다. 「稅務代理士의 品位의 維持 및 業界의 進步·改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라는데는 異論이 없었으나, 「不正行爲를 規制한다」 뿐만 아니라 特權도 충분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稅務代理士는 납세자의 代理業이지만 납세자만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의 補助機關도 아니다. 稅務當局, 稅理士, 納稅者가 三位一體가 되어 적정

8) 上揭書, p.360.

과세와 負擔의 공평을 기하고 원활한 세무행정 운영이 행하여 지도록 하는 것이 본 法案 실시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關西地方 稅理士會로부터도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 정부와의 절충을 위하여 駒井 會長외 수인의 임원들이 업무을 희생하고 동분서주하였고, 정부 요로에서도 협조하여 官民合同 양해하에 法의 原案의 대강이 작성되었다.

1941년 12월 東京稅務代理士會 臨時總會가 개최된 자리에서 法案의 취지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1942년 1월 제국호텔에서 東京, 大阪, 名古屋 등 전국 각지 稅務代理士會의 任員이 소집되어 法案의 설명을 거친후, 1942년 1월 「稅務代理士法案」은 政府案으로서 國會에 제출·의결됨으로써 오랜 동안의 業界의 所望이 이루어졌다.

稅務代理士法이 公布되자 각지의 職業會計人은 그 소속 地區의 稅務代理士會에 속속 入會申請을 하였고 먼저 당해 代理士會에 入會한 후에 稅務代理士의 許可申請 절차를 진행하였다. 代理士會에서는 회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事業許可를 일괄 신청하여 통지를 받았는데, 동경시내를 일원으로 하는 「東京稅務代理士會」외에 인근 지방의 광범한 지역을 포함하는 「東京地方稅務代理士會」가 결성되었다.[9]

第 4 節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의 誕生

Ⅰ. 稅務代理士法 制定(1942년)

1941년 7월 東京에서 東京, 大阪, 名古屋, 神戶의 각 稅務代理士會의 任員이 모여 連合會 조직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東京會 會長이었던 駒井重次(衆議院 의원)를 會長 내정자로 하여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 會則을 成案하였다. 이

9) 上揭書, p.362.

어 11월 名古屋市에서 全國連合會 발회식을 거행하여 會長에는 駒井重次씨를 선출하였는데 이때 각회 소속 회원수는 大阪 74명, 東京 53명, 神戶 32명, 京都 25명, 名古屋 51명 합계 235명이었다.[10]

1941년 12월 8일 새벽 하와이 진주만의 기습성공으로 太平洋戰爭의 서전을 장식한 이후 日本軍은 필리핀, 말레지아 반도, 싱가폴 함락 등 1942년 봄까지는 太平洋戰爭 승리의 절정기였다. 그러나 1942년 4월 18일 美空軍의 일본 本土 空襲과 6월 미드웨이 海戰 慘敗로 일본의 패망은 일찍 예측되었고, 유럽에서도 獨逸軍의 스탈린그라드 敗戰(1943년 2월 2일)으로 戰勢는 반전되었다.

이러한 와중인 1942년 2월의 稅務代理士法案의 탄생은 그 역사적 의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II. 稅務代理士會 設立 및 同連合會 誕生

이 法案을 근거로 전국 稅務代理士는 地區別로 代理士會를 설립하여 東京稅務代理士會, 東京地方稅務代理士會와 名古屋稅務代理士會, 名古屋局地方稅務代理士會, 京都稅務代理士會, 大阪稅務代理士會, 大阪局地方稅務代理士會, 神戶稅務代理士會, 廣島稅務代理士會, 九州稅務代理士會, 北海道稅務代理士會, 東北稅務代理士會 합계 12개의 稅務代理士會가 탄생하였다.[11]

1942년 11월 정부는 連合會 設立을 위하여 각 地方 50명에게 設立委員 위촉을 하였고, 大藏省에서 設立委員會를 개최하여 會則[12] 및 豫算의 審議를 거쳐 1942년 11월 30일 設立認可 승인을 받아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가 탄생하였다.

---

10) 上揭書, p.364.
11) 각 地方 稅務代理士會 設立 狀況에 대하여는, 上揭書, pp.378~387.
12) 당시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 會則에 대하여는, 上揭書, pp.371~377.

第 5 節　四國·北陸稅理士會등 新設

戰勢가 불리하자 일본 정부는 1943년 9월 「國內態勢强化策」을 결정하고 租稅强化는 물론 12월에는 徵兵 年齡 引下 및 소위 學徒兵出陣등 戰時體制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도 軍用機 獻納金 10万円 모금운동을 펴는 한편 「國務에 協力」하여야 할 사항 등 代理士法 개정을 건의하고 大阪會에서 시작된 勤勞報國會등 戰爭 隨行 政策에 협력한다.

1943년 12월 四國稅務代理士會가 설립되었고, 1944년 1월 北陸稅務代理士會가 설립되어 14개 稅理士會로 되었다.

第 4 章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期의 發展過程

第 1 節　戰時動員 體制 强化와 敗戰

1944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決戰生活 非常措置를 실시하였고, 稅務代理士會로서도 전년도부터 개시하였던 軍用飛行機「稅務代理士號」의 獻納募金運動도 순조롭게 마쳐 3월말에는 목표액을 초과한 106,010円을 獻納하였고, 9월 20일 航空記念日에 東京 築地 新橋 演舞場에서 이 稅務代理士號의 命名式이 거행되어 海軍大臣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敗亡은 시간문제였다.

1945년 5월에는 獨逸도 무조건 항복하였고, 日本軍의 각 南方 현지군은 완전히 괴멸되어 6월에는 오끼나와 전멸, 8월의 廣島와 長崎의 原子爆彈 投下後 8월 15일 무조건 항복으로 終戰되었다. 이는 실로 滿洲事變 발발후 15년 太平洋戰爭 개시 3년 8개월 만에 일본 국민은 처음으로 敗戰과 被占領을 체험하게 된다.

9월 2일 미조리 艦上에서의 降伏文書 調印과 함께 맥아더 원수는 즉시 陸·海軍의 解體, 軍需工業停止의 일반명령 제1호를 발한데 이어「日本管理方針」,「포츠담선언에 따른 緊急 勅令」, 10월에는「男女同等權」,「勞動者의 團結과 組織」,「敎育의 自由化」,「專制로부터의 國民 解放」,「經濟民主化」등 5대 개혁을 발표하였다. 또「財閥」은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잠재적 戰力으로서 軍國主義者와 똑같은 책임이 있고 경제적 支配力의 집중은 반봉건적 관계를 존속시킨다는 이유로 해산하였다.

終戰되기 직전 稅務代理士會連合會의 건물이 1945년 3월 10일 大攻襲으로 燒失되었고, 美軍政의 분위기는 稅理士業界에도 영향을 미쳐「日本稅務代理士

會 會報」도 군사령부의 로젠타일 중위의 검열을 받아 발행할 정도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駒井 會長 이하 任員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稅務代理士의 報酬規定 개정과 業務擴張등의 개정에 노력하였고, 각 稅理士會의 區域調整이 있은 외에 최후로 설립되었던 北陸稅務代理士會는 1년도 못되어 폐지됨으로써 稅務代理士會는 13개로 축소되었다. 당시 회원수는 東京 570명, 東京地方 144명, 大阪 297명, 京都 101명, 神戶 108명, 大阪地方 68명, 北海道 64명, 東北 31명, 北陸 52명, 名古屋 169명, 名古屋地方 115명, 中國 60명, 四國 20명, 九州 161명이었다.

第 2 節 北陸·關東信越·九州北部稅務代理士會 등 新設

1946년은 敗戰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년으로써 平和日本建設을 위하여 「天皇의 人間宣言」에 이어 4월에는 軍國主義者를 모든 公職으로부터 추방하여 支配階層의 세대교체가 있었고, 11월에는 새로운 「日本國 憲法」이 제정·공포된다.

稅務代理士會로서도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하여 報酬規定 개정 작업이 있었다.

2차 大戰의 종말이 가까웠던 1945년 4월 54개국의 연합국 대표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國際聯合(U.N.)憲章을 채택하고 10월에는 51개국이 참가하여 國際聯合이 발족되었다. 미국이 共産主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封鎖政策을 내용으로 하는 「투르만 독트린」에 이어 「마샬플랜」을 제창하여 西獨을 포함한 서유럽에 經濟援助 정책을 실시하자, 蘇聯은 이에 대항하여 동유럽 제국과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지도하의 「코민포럼」을 구축하여 소위 自由主義 陣營과 社會主義 陣營의 양 세계로 나뉘는 「冷戰體制」가 전개되고, 이러한 정세는 美國의 對日政策에 민감하게 반영되어 일본도 反共主義 노선을 택하게 된다.

1947년 稅制面에서는 稅制民主化를 위하여 所得稅, 法人稅 등의 申告納稅制度를 채용함과 동시에 所得稅에 있어서는 종래의 分類所得稅와 綜合所得稅의

2원체제의 課稅制度를 폐지하고 超過累進稅率에 의한 一般所得稅 課稅體制로 개편하였다. 相續稅에 있어서도 새로이 贈與稅制度를 창설하여 친족간의 贈與에만 相續稅를 賦課하던 것을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하여서도 贈與稅를 과세하게 되었으나, 이때의 納稅狀況[1]은 극히 부진하여 國會 차원에서 「租稅完納運動中央本部」를 설치하여 租稅完納國民運動을 전개하였고, 이를 위해 2월에는 東京의 數寄屋橋공원에 納稅塔까지 세워야 할 정도였다.[2]

1947년 8월 大藏次官이었던 池田勇人씨를 會長으로 한 관민합동 稅務代理士制度 調査委員會가 창설되었다.[3]

1949년 4월 北陸稅務代理士會, 同月 關東信越稅務代理士會, 7월 九州北部稅務代理士會의 設立認可로 稅務代理士會의 총 수는 16개로 되었다.[4]

1949년 稅務代理士業務와 관련하여, 官廳에 출입할 때 접수의 절차를 생략하고 稅務代理士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非稅務代理士의 稅務代理 違反行爲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國稅廳이 전국 통일적으로 공통의 「通門證」을 발행하여 줄 것을 교섭하였다.

第 3 節 샤프의 勸告와 稅制上 特色

Ⅰ. 經濟安定9原則 實行

1948년 4월 1일 베를린 封鎖로 미소냉전은 극에 달하였고, 맥아더 사령부는 美國 본국의 지령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하여 ① 豫算의 均衡 ② 徵稅組織의

1) 1947년 賦課課稅制度에서 申告納稅制度로 전환된 뒤에도 稅務當局은 종전의 割當課稅方式대로 실정을 무시한 채 重壓課稅를 하자, 1948~49년 사이 70~80% 滯納이 발생하게 되고, '감춘 所得'의 포착과 滯納處分에 警察과 進駐軍이 권총을 차고 강행하는 등 强制執行을 하자 關東地方에서도 1일 평균 2~3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비참하였다. 權海浩, 「日本의 個人所得 課稅制度」, 主要國의 個人所得 課稅制度중, 韓國租稅硏究所, 1988, pp.482~483.

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413.

3) 上揭書, p.436.

4) 上揭書, p.427.

改善强化 ③ 日本經濟復興에 寄與하기 위한 融資 ④ 賃金의 安定 ⑤ 物價統制計劃의 擴大 ⑥ 外國貿易管理의 改善과 外國換管理의 强化 ⑦ 輸出를 신장하기 위한 物資割當과 配給制度의 改善 ⑧ 重要國産原料와 製品의 生産增强 ⑨ 食糧供出計劃의 能率 向上 등 「經濟安定9原則」의 실행을 명하였다.

이 해에 '惡稅의 챔피언'이라 불리워졌던 상품의 제조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액의 1%씩 과세하는 去來高稅가 창설된다.[5]

12월 公認會計士法 개정으로 稅務代理士에게 特別受驗資格이 주어졌다.

1949년 2월 맥아더의 經濟顧問으로 來日한 돗찌(Dodge)씨가 西獨의 經濟復興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경험을 살려 일본 인플레 수습과 경제안정에 주력한다. 그의 구상의 중점은 均衡財政, 健全財政을 주축으로 通貨의 蒸發抑制에 의한 인플레수습, 즉 강력한 디플레재정 정책이었다. 이러한 돗찌計劃을 租稅政策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샤프 勸告」(Carl Shoup's advice)를 받아들인다.

당시 일본의 稅制는 계속되는 인플레의 진행 위에 不公平이 극심하였고, 課稅面에 있어서 한편으로 가혹한 稅率에 의한 과세가 행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情實과 不正, 脫稅와 滯納이 일반적 현상이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돗찌 계획에 의한 均衡財政 및 經濟安定에 중대한 장애였다.

총사령부는 1947년부터 1948년까지 거액의 滯納額에 대하여 각 縣의 軍政班이 직접 개입하여 위의 經濟9原則 指令 제2항에서 일본 정부에 대하여 徵稅計劃의 促進强化와 脫稅者에 대한 刑事訴追의 가속화를 강력히 지시하는 등 徵稅强化에 노력하였다. 1948년 6월 徵稅機構를 개정하여 감독제도를 강화하였고, 1949년 5월 司令部는 國稅廳의 창설을 지령하여 徵稅機構의 통일강화를 도모하였다.

II. 샤프 使節團 來日

5) 上揭書, p.416.

1. 샤프 使節團의 訪日 目的

1949년 콜럼비아대학 敎授인 샤프(Shoup) 博士를 단장으로한 稅制使節團이 來日하였는데 당시 기자회견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稅制使節團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稅制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稅制改革勸告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① 經濟9原則에 명시된 정책에 합치되도록 경제안정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

② 이후 수년간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安定된 稅制를 확립하는 것,

③ 현행 稅制의 중요한 불공평요인을 일소하는 것,

④ 지방자치와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정책에 대한 財政的 支援을 위한 것,

⑤ 세무행정의 改善, 徵稅法의 엄격한 실시 노력을 하는 것 등으로서,

인플레 저지에는 충분한 稅收入이 필요하나 동시에 稅의 壓力은 全生産力을 감퇴하게할 정도로 과중해서는 안된다. 과세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稅의 負擔을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使節團은 현행 제도중에 불공평요인을 발견하면 이를 일소하도록 勸告할 것이다. 生産者도 消費者도 경제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데 이들 두 납세자의 稅額에 큰 차이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稅金은 명확하여 알기 쉬운 法律과 規則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으면 안된다. 납세자는 내년이나 그 다음 해의 稅制의 향방을 알 수 없으면 자신의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수가 없다. 계속하여 바뀌기만 하는 稅金은 곤란하게만 할 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稅制의 세부적인 변경은 매년 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변경은 납세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표는 훌륭한 세무행정과 稅法의 엄격한 실시 위에 稅務官吏의 공평무사한 친절한 태도 등 제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다. 또 목표달성의 성패는 納稅者側이 자발적으로 稅法을 지키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우수한 세무행정과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이 어울려서 비로소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우수한 세무행정」, 「稅法의 實施」, 「納稅者의 協力」의 세 조건이 본 使節團의 업무의 성공여부의 관건이다. 行政과 協力, 이 두 가지는 실로 稅制의 토대라 할 수 있고 이들 없이는 경제안정도, 영속성도, 稅의 공정한 부담도, 국가나 地方自治團體 양자간의 稅의 균형도 모두 달성할 수 없다. 중략

우리들은 우선 「日本稅制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각종의 稅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지를 두루 조사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개인에 대하여 공평함과 동시에 정부의 歲入으로보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稅制를 목표로 勸告書를 작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행은 來日 직후 각계각층과의 회담, 지방의 실태조사, 약 3개월간에 걸친 國稅, 府縣稅, 市町村稅를 조사하여 철저한 계획을 勸告하였다.

2. 샤프와 돗찌의 意見 差異

그러나 샤프씨와 돗찌씨는 의견상 차이가 있다. 즉, 資本蓄積 방식에 있어서 돗찌씨는 租稅를 가능한한 徵收한 후 蓄積하고 이를 債務償還등을 통하여 은행의 資本力을 충실하게 하자는 생각인데 비하여, 샤프씨는 오히려 企業이나 個人의 자발적인 축적을 기대하고 減稅에 의하여 해방된 국민소득이 국가의 매개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축적되도록 기대한 것이다. 所得稅 累進率의 提案, 法人超過 所得稅의 廢止, 資産再評價 등이 그 수단이다. 샤프 使節團은 본문 14장외에 부록 A, B, C, D 4편 등 國稅(稅理士制度 포함), 地方稅制度 전반에 대하여 공평한 租稅制度 확립을 목표로 한 각종 提案을 담은 방대한 報告書[6]를 제출하여 이후 일본 稅制·稅法 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III. 샤프 稅制 改革案

샤프 勸告에 따른 본격적 稅制改正案은 1950년 1월 17일 閣議에서 결정되었는데 그 특색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中央과 地方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안정된 租稅制度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요한 稅目은 가능한한 늘리고 稅收가 비교적 적고 공평성이 결여된 잡다한 稅種은 정리하였다.

둘째, 中央과 地方을 통한 전체적인 稅制시스템을 고려하여 각종 稅源을 그 성질에 따라 국가와 府縣, 市町村의 3 정치단체에 「縱割의 原則」에 따라 확실하게 분할하였다.

셋째, 新稅制에서는 所得稅中心主義를 관철하여 철저한 합리화를 기하였다.

넷째, 法人課稅制度에 있어서 法人擬制課稅方式을 채용하였다.

다섯째, 相續稅에 있어서 종래의 遺産稅 방식을 遺産取得稅 방식으로 고치고, 財産取得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取得者가 일생을 통하여 취득한 全財産을 종합누적으로 과세하여 일종의 財産相續稅 또는 財産無償取得稅라 할 수 있는 제도로 제정하였다.

여섯째, 종래의 事業稅를 폐지하고 附加價値稅를 창설하였다. 이 附加價値稅는 전혀 새로운 課稅制度로써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샤프 博士의 勸告는 事業稅와 같이 순익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보다 附加價値를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이 부담관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일곱째, 純損失의 移越控除, 臨時所得의 平均課稅, 配當所得控除, 靑色申告制度 도입 등[7]이었다.

샤프使節團은 샤프 博士는 물론 특히 스탠리 S. 셀리 敎授가 稅務代理士法

6) 일반적으로 샤프 勸告라 하며 그 개요에 대하여는, 上揭書, pp.423~425.
7) 上揭書, pp.431~434.

담당자로서 조언하였다.

第 4 節 1949年 辯護士法 改正 經緯

1949년 戰後 처음으로 辯護士制度에 대한 근본적 改正案이 제안되었다. 당시 辯護士法 제3조 제2항의 「辯護士는 당연히 辨理士 및 稅務代理士의 事務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나, 衆議院 法務委員會를 무수정 통과하였고 稅務代理士會連合會는 參議院 法務委員會의 審議 段階에서 비로소 그 정보를 입수하여 大藏省으로부터도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同連合會는 5월 18일 參議院 法務委員會 委員長 伊藤修宇씨 앞으로 「辯護士法案중 稅務代理士에 관한 條項의 수정에 관한 陳情書」를 제출하고, 連合會 代表가 國會를 방문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효력을 얻지 못하였다.

參議院 法務委員會에서는 이 法案이 否決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衆議院에 회송되어 2/3 이상의 다수결로 가결되어 통과된 것은 一大痛恨事라 아니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辯護士法과 稅理士法 간에 있어서 辯護士의 稅理士業務에 관하여 조정되지 않은 채 있는 것은 法制史上으로 보더라도 기이한 상태인 것이다.[8]

이러한 사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辯護士와 稅務士의 業務領域에 관한 미조정상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第 5 節 韓國 動亂으로 인한 特需

1950년 6.25 韓國動亂은 自由主義와 社會主義의 冷戰狀態에서 실제 戰端의

8) 上揭書, p.427.

시작이라는 의의도 갖는다.

U.N 安全保障理事會는 소련 대표가 결석한 채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는 敗戰으로 고통받는 일본 經濟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1949년 이래 실시된 디플레이션 정책은 그 주요 목표의 하나인 通貨安定을 가져왔으나 해외시장 부진에 따른 輸出의 停滯와 通貨의 增大, 租稅徵收의 강행에 따른 유효 수요의 감퇴등은 金融面으로부터 조정기능이 한계에 달하였으나 韓國動亂의 발발은 美國의 軍擴景氣를 중심으로 하는 海外物價의 폭등에 자극되어 이러한 국면을 일시에 일소하고 소위 特需景氣로 반전되어 滯貨一掃, 生産水準上昇 등 경제활황 국면으로 돌아서 10월에는 이미 太平洋戰爭前 기준을 돌파하게 된다.

經濟 基調는 買入市場으로부터 買收市場으로 전환하고 수출특수 관련 산업의 수익은 증가하여 투자활동이 활발화함으로써 일시에 경제계에 일반적 호황을 가져왔던 것이다.

第 5 章　社團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期의 發展過程

第 1 節　社團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美·日平和條約이 調印되어 일본은 종전후 6년만에 비로소 해방 독립국으로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特需景氣는 점차 퇴조하여 조정기를 맞는다.

稅理士法 개정으로 1951년 12월 8일 日本稅務代理士會連合會를 해산하고(해산總會는 東京 上野公園內 精養軒에서 개최), 동일자로 新使命을 띤 社團法人 日本稅理士會連合會 設立總會의 동의를 얻어 3월 22일 設立許可를 받았다.[1)]

당시 이 社團法人 日稅連에는 租稅制度調査委員會, 稅理士制度調査委員會, 弘報委員會 및 公認會計士法特別調査委員會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第 2 節　機關紙「稅理士界」發刊

稅法은 복잡하고 취급 통첩은 세밀하여 국민이 稅의 실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결과 당연한 分業化 현상으로서 稅理士의 職域의 확대는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稅務面에서의 稅理士가 신뢰를 받는 것은 대체적인 추세였고, 高橋 國稅廳長官의 미국시찰담에 의하면 美國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여기에 稅理士 모두의 敎養과 品位를 높히고 職域에 대한 연구 요청에 따라 1942년 稅務代理士法 制定 시기부터 발간된 稅務代理士會連合會「會報」를 발전시켜「稅理士界」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

1) 上揭書, p.448.

1952년 11월 20일 창간호를 발행하기로 정하고 뉴스와 논설등 원고를 수집 작성하는 한편, 題號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였으나 20여 가지의 의견 중에 뽑힌 것이 「稅理士界」였고, 題字는 松외(물굽이 외) 日稅連 會長이 쓰도록 부탁하였다.

때로는 稅理士會, 稅理士業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비판까지도 공평하게 게재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稅理士界는 稅理士會의 機關誌인데 왜 業界에 불리한 것까지 게재하느냐?'는 등 의견이 있으나 御用新聞이 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하고 是是非非나 비판을 모두 수용하여 業界의 발전과 계몽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신문 창간 직후 他社에서 商業紙인 「稅理士報」(현재는 명칭바뀜)가 발간되어 경쟁상태가 되기도 하였으나 稅理士界는 비영리지로서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2)]

稅理士界는 1953년 2월부터 매월 1회 발행하였으나 1957년 2월 日稅連이 社團法人에서 特別法人으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월 3회 발행하다가 다시 1975년 10월부터 월 2회 발행으로 바뀐후 현재는 매월 15일자로 월 1회 발행되며 구독료는 월 200円 년 2,000円이고 1994년 말 紙齡 제1083호까지 발행되었다.[3)]

그 외 전국 稅理士會別로 會報가 발간되고, 日稅連 홍보위원회 주최로 會報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第 3 節 長期 稅務職 勤續公務員의 自動資格取得 問題

Ⅰ. 長期 勤續 稅務公務員의 稅理士資格 取得 要求

---

2) 이하 稅理士界 發刊에 대하여는, 上揭書, pp.451~452.

3) 1990년 2월 10일 「1,000號 記念特集號」를 발행하였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90년 2월 10일.

1953년[4] 日稅連으로서는 稅理士의 强制加入制度와 그에 따른 稅理士會의 特別法人 轉換 問題, 稅務調査에 있어서 관계 稅理士에게 通知義務 問題, 稅務의 監査證明 問題와 公認會計士法 개정에 따른 問題 등 현안들이 많았다.

日稅連은 租稅制度調査委員會와 稅理士制度調査委員會를 구성하고 양 제도에 관한 稅理士法 개정에 관한 陳情書를 國會 및 각계 官廳에 제출하였다.

日稅連은 동년 1월 日本辯護士連合會와 辨理士會 등 3會 會長 會談을 개최하여 所得稅源泉徵收 및 特別消費稅撤廢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實行委員會를 통하여 3會가 連盟으로 共同 陳情書를 작성하여 그 실현을 노력하였다.

東京國稅局 외 1만 여명의 회원을 가진 關東 財務職員 勞動組合은 4월 전기대회를 갖고, 稅務公務員의 생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각종의 사항을 審議하는 「生活保護를 위한 鬪爭」 項目에서 稅理士法의 개정을 현안으로 제시하여 國會, 大藏省, 國稅廳, 日稅連 등에 대한 행동방안을 결의하였다. 특히 슬로건 중에는 「稅理士法의 合理的 개정」도 있었는데 전국 5만의 稅務公務員의 장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5년간 勤續稅務公務員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稅理士資格을 부여하는 法改正運動을 제안하였다.

II. 日稅連과 辯護士會의 反對

이에 대하여 東京會의 三宅씨는 '1951년 3월 稅理士法을 제안하였던 國會議員의 일인으로서 자신은 이 法律 改正運動에 유감이나마 찬성할 수 없다. 舊稅務代理士法을 현행 稅理士法으로 改正時 試驗制度를 채용한 것은 稅務代理士의 직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 소양의 향상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며, 15년 勤續稅務公務員에게 稅理士資格을 부여하였던 稅理士法의 경과규정(부칙 제5항)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 이를 부활한다는 것은 稅理士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稅務公務員 여러분들은 稅法免除를 받기 때문에

4) 1953년 1월 20일 美國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就任하고, 7월 27일 韓國休戰協定이 調印된 해다.

會計學에 관한 試驗을 쳐서 관민일체가 되어 稅理士法이 원활한 운영에 협력하도록 기대한다'고 하였고,

또 稅理士試驗 委員인 住田金作씨는, '稅務公務員 여러분들의 요망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같은 15년이라 하더라도 근무 직종의 년한에 따라 균형이 맞지 않는다. 15년 이상 勤續한다면 자연히 會計學을 마스터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불균형을 테스트하는데는 현재 試驗制度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를 말하였다.

中國會의 池永金市씨는 '15년간 稅務公務員으로 있었다고 하여 모두가 稅理士로서의 충분한 학식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실제로 總務係, 關稅係에 근무하였던 자가 稅理士가 되어 法人稅 事務를 취급하는 예가 많다.'

또 福岡市의 前野直之씨는, '稅理士의 위신을 실추하는 원인이 된다. 현재 稅務公務員중에 人格과 識見에 있어서 稅理士가 될 만한 인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럭저럭 15년을 경과한 것만으로 아무런 실력도 없는 자가 稅理士가 된다면 여러 가지 불상사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東京會의 石津四郎씨는, '稅理士法은 稅務公務員의 行政處理 道具나 退職者救濟法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稅務公務員들의 法改正에 대한 노력은 집요하여 稅理士制度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에도 충분히 대처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 日本辯護士連合會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였다.

① 稅理士의 敎養과 品位를 앙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現行法上 稅務公務員에 대한 受驗資格과 같이 너무 관대하다).

② 稅務公務員이 종전의 관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오히려 동일 財務局 관내에서는 試驗合格者라 하더라도 일정 기한 開業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③ 年金受領權을 취득한 후에 다시 일정의 特權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등.

第 4 節 「稅務監査制度」에 대한 陳情書 提出

1953년 7월 日稅連은 稅理士法 개정의 주요 과제인 「稅務監査制度」에 대하여 구체화하기 위하여 稅務計算의 監査事務에 관한 懇談會를 가진후 「稅務計算 書類 監査 또는 證明」에 대한 陳情書를 관계 機關에 제출하였는데,

'稅理士法 제33조에 의하면 稅理士가 稅務代理 및 稅務書類의 作成을 한 경우에는 署名捺印을 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稅理士가 職業專門家로서 稅務計算書類(첨부서류 포함)을 監査하여 공정불변의 입장에서 當否를 비판하고 監査의 개요와 監査의 의견을 監査報告書에 명료하게 표시한다면 稅務官廳의 調査를 간편하게 하고 사무의 능률을 향상함으로써 徵稅費를 경감하고 納稅義務를 적정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5]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당장 이 陳情에 대한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후 特別法人 稅理士會로 전환후에도 계속하여 稅務監査制度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6]

第 5 節 無資格 稅理士 退治 問題 등

1954년 社團法人 公認會計士協會와 社團法人 日本計理士會 및 日稅連은 職業會計人團體協議會를 결성하여 상호 협조 및 職業會計人의 사회적·법률적 지위 향상 발전과 그 職域 확대를 꾀하였다.

동년 5월 東京會 大森部會가 稅理士事務所의 계속 종사 從業員에 대한 표창식을 거행한 것은 稅理士事務所의 경영상 일대 획기적인 것이었다.

神戶會는 所得稅確定申告 기간 중 稅務署 내에 無料稅務相談所를 개설하여

---

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464~465.
6) 第6章 第2節 Ⅳ 참조.

協力奉仕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稅理士 본래의 직능과 稅理士會의 의무를 재인식 시킴과 동시에 無資格稅理士 일소의 효과도 있었다.

東京會에서는 無資格稅理士 퇴치 월간행사로 표어를 모집하였는데 당선된 표어는 다음과 같다.

1등「확실한 證票, 미소짓는 應對」

2등「無資格稅理士 퇴치하여 納稅 명랑화」

3등「稅의 진드기, 無資格稅理士에 要注意」

1954년 10월 日稅連은 東京法人會連合會 및 東京靑色申告會連合會 등과 협의를 갖고 法人會나 靑色申告會가 稅務代理 행위 등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자가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였다.

또 종전에는 稅理士會만이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國稅廳의 無資格稅理士에 대한 규제 요령이 발표되었다.[7]

① 관내 稅理士會의 협력을 얻어 無資格稅理士를 적출할 것,

② 不適格 稅理士에 대하여는 부내 관계 部課室의 협력을 얻어 적출할 것,

③ 稅務署 玄關 기타 보이기 쉬운 장소에 적이한 방법으로 입간판이나 포스터등을 이용하여 게시할 것.

稅理士制度委員會는 여러 번 審議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업무확대를 위한 法改正運動을 전개하였으나 제안되지 못하였다.

① 稅務書類의 監査 證明 업무등의 稅理士業務 확대,

② 稅理士試驗의 受驗資格 강화,

③ 稅務調査時 事前通知 범위 확대,

④ 通知辯護士制度의 개정,

⑤ 稅理士會連合會의 조직 변경,

⑥ 稅理士會의 强制加入制度의 도입 등.

1960년에도 業界에서는 無資格稅理士 문제와 惡質 稅理士 문제가 대두되어

---

7)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476.

稅理士의 品位 문제가 國會 차원에서까지 논의되었다.

第 6 節 會社 設立 事務에 관한 業務 調整

1954년 日稅連이 주력한 것은 稅理士가 종래 행하여왔던 會社 設立 事務와 辯護士業務와의 조정 문제였다. 日本辯護士連合會는 「종래 사회 관습적으로 稅理士·計理士·公認會計士·司法書士가 會社 定款의 기초 작성에서부터 會社 設立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報酬를 받고 그 업무의 하나로써 행하여왔던 것은, 1951년 法律 제21호인 辯護士法 제7조 단서의 '정당한 업무에 부수하여 행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條項이 삭제된 금일에는 분명히 非辯護士의 法律事務에 해당하므로 위법행위를 면할 수 없다.

辯護士會는 法律 秩序維持를 위하여 이 취지를 밝혀 위반자의 자제와 변칙적 사회관행을 일소코자 하였다. 그리고 일정 기간후의 위반에 대하여는 辯護士法 제72조의 강력한 발동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은 후 1954년 2월 日稅連과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이 성립되었다.[8)]

① 현행 辯護士法上의 「法律事務」라 함은 稅理士法 기타 法律에서 稅理士 기타의 것으로 인정된 것 외에는 모두 辯護士의 업무로 한다.

② 「法律事務」라 함은 전문적인 法律知識을 필요로하는 사무를 말한다. 會社의 設立을 위한 定款 作成, 株式拂入書 作成은 法律的 판단을 요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法律事務로 본다.

③ 구체적인 것은 개별 사항에 따르나 최종적으로는 司法府의 判決에 따른다.

④ 종래의 관습으로 취급하여왔던 점을 고려하여 告發등의 法律的 수단을 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한다 등.

---

8)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470. ②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184~185.

1956년 6월에는 法律 제165호로 稅理士法 일부 개정이 있었고 特殊法人으로 전국 17개의 新稅理士會가 탄생하였다.

第 6 章　特別法人 日稅連期의 發展

第 1 節　組織의 整備와 擴充

Ⅰ. 社團法人에서 特別法人으로

1957년[1] 일본의 經濟 情勢는 國際收支의 赤字累積의 혼미상태였으나 전년도의 神武 호경기 덕분에 1,900여億円의 자연증수가 예상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 자연증수를 이용하여 1,000億円 減稅政策을 실시하여

첫째, 所得稅 稅率의 累進度를 완화하여 대부분의 납세자의 稅負擔을 반분정도 이하로 경감하고,

둘째 中小法人 부담을 경감하며,

셋째 租稅法上의 각종 특별조치를 정리하여 합리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社團法人 日稅連(1951년 발족)은 1957년 1월 해산 總會를 개최하고 연이어 特別法人인 새로운 連合會를 創立하기 위한 總會를 개최하였다.[2]

동년 9월에는 자유 직업인의 事業稅 철폐를 기도하는 地方稅法改正協議會를 日稅連에서 개최하여 日本辯護士連合會, 辨理士會, 公認會計士協會, 日本計理士會의 각 대표간에 협의를 거쳐 事業稅 철폐 운동을 진행하였다.

1958년 4월 國稅廳에서 세무행정 懇談會가 개최되어 日稅連側에서는 특히 稅理士法 제34조의 通知義務 이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망함과 아울러 法人調査에 있어서 申告是認通知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稅務官廳은 조사시 事前通知를 이행할 것과 是認通知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3]

---

1) 1957년 10월 4일 蘇聯이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제1호 人工衛星 발사에 성공하고 전면 군축과 평화공존을 제창하여 적극적 평화공세를 편다.
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499.
3) 上揭書, p.507.

1959년[4] 自民黨은 「700億円 減稅」를 選擧公約으로 내걸어 국민의 지지를 얻어냈고, 租稅徵收制度調査會의 답신에 따라 租稅(債權)와 일반 債權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955년 이래 검토되어 왔던 國稅徵收法을 전면적·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은 租稅法 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다.

II. 稅理士 政治連盟의 結成과 活躍

1. 稅政連 設立의 趣旨

稅理士를 둘러싼 환경은 날로 엄격해지는데 稅理士制度가 社會的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발전하기 위하여는 稅理士도 政治에 관심을 갖고 政治力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稅理士會는 强制加入의 特別公益法人이므로 政治活動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5]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日本稅理士政治連盟(이하 「日稅政連」이라 함)이 조직되었다. 稅理士會 회원은 그 자격으로 日稅政連의 회원이 되어 稅理士의 공통 문제에 관하여 政治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職業的 政治團體인 것이다.

사실 전국 稅理士가 결집하기만 하면 그 家族과 從業員, 去來先을 합하여 700여만 표 이상을 확보하여 同志를 國會에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에

---

4) 1959년 9월에는 伊勢灣의 태풍으로 사망·행방불명만도 5천인이 넘는 大慘死가 있었으나 經濟面에서는 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 균형, 고용상태의 개선의 제난관이 해소되는 호경기를 맞는다.
1960년 美·蘇간의 해빙무드는 1960년 5월 16일 美國의 U2機의 격추사건으로 동결되고 동서 4대국 수뇌회담도 유산된 후 美國에서는 35대 케네디 大統領이 당선되고, 한국에서는 4.19혁명으로 自由黨 政權의 퇴진과 이승만 大統領의 하야가 있었고, 日本에서는 1월에 있은 日美安保條約 및 行政協定에 대한 극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부 극렬한 노동스트라이크에 불구하고 貿易自由化 정책 결정에 이어 政府의 「國民所得倍增計劃」등 고도성장 정책과 2,000億円 이상의 租稅 자연증수가 예상되었었다.

5) 稅理士會는 强制加入의 特別公益法人이기 때문에 ① 公職選擧法에 의한 選擧支援活動이나 ② 政治資金 規定法에 의한 政治獻金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체제의 稅政連이 필요한 것이다. 稅政連은 規約에 정한 政府, 政黨, 國會議員에 대한 陳情이나 請願등의 활동을 한다.

당초 東京稅理士會가 솔선하여 政治結社를 만들어 地方 選擧에서도 많은 業界 인사를 당선시켜 그 조직을 전국에 확대코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稅理士制度 발전을 위하여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등에 입후보한 회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등이었다.[6]

2. 納稅者政治連盟의 發足

日稅連은 1963년[7] 초부터 新時代에 부응할 수 있는 자주적 職業團體 확립에 전력을 집중할 각오로써 2월 前田 日稅連 會長 일행이 池田 首相(1899~1965, 大藏省 主稅局長, 大藏次官을 역임한 바 있는 財政通 政治人이다)을 방문하여 「稅理士制度의 改革」과 「稅理士業界의 政治連盟 結成問題」등 稅理士會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문제에 대하여 首相의 협력을 부탁하였고 2월에 있을 東京會의 「東京稅理士政治連盟」 발회식에 직접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8]

2월 28일 東京稅理士會는 東京稅理士政治連盟 結成大會를 갖고 全國 稅理士의 政治結社化運動의 제일보를 내디뎠다. 당일 출석자는 약 200여명, 池田 首相을 代理한 官房長官과 각 政黨代表들도 참석하였다.

東京稅理士會가 이와 같은 政治連盟을 結成한 취지는 稅理士業界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業務面에서 고도화함과 더불어 政治도 관심을 깊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業界가 政治와 연대를 갖고 政治力을 축적한다면 당면의 稅理士法 개정도 종래와 같이 논의로써 종결되지 않고 적극적인 職域의 확보·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稅理士政治連盟은 1951년 稅理士法이 制定된 이래 10여년을 경과하는 동안

---

6)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563~564.

7) 1963년 7월 美·英·蘇 3국은 核實驗禁止 條約에 調印하고, 11월 美國의 케네디 大統領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暗殺事件이 발생하였고, 12월에는 韓國의 朴正熙 大統領이 취임하여 형식상 民政으로 부활한 해다.

8)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560~562.

社會 經濟 情勢가 격변하는 중에서도 稅理士制度가 法制度로서 명실공히 확립되고 발전되었으나, 당시 稅理士法은 발전된 社會 情勢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의 개정을 최대의 목표로 1963년 10월 「全國納稅者政治連盟」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확대·조직되었다.

1963년 10월 東京 日比谷 公會堂에서 전국에서 모인 일반 납세자, 稅理士 약 3,500 여명, 각 政界 代表,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全國納稅者政治連盟은 中小企業 納稅者를 위한 租稅制度의 확립에 매진한다는 決議文'[9]을 채택하고, 오후에는 稅理士法 개정 추진을 위한 궐기대회가 열려 '납세자를 위한 稅理士制度의 실현 決議文'을 채택하고 國會와 大藏省 등 관계 요로에 진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稅理士가 관여하는 企業등의 납세자들도 회원으로 加入되어, '本 連盟은 납세자의 政治意識을 고양하고 경제의 번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議會主義 政治體制의 강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規約 제3조)고 한 바와 같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國民的 政治團體의 색채를 강하게 띤 것이었다.

3. 日本稅理士政治連盟으로 改編

全國納稅者政治連盟을 稅理士의 獨自的인 政治團體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1968년 1월 東京에서 열린 제4차 대회에서 「日本稅理士政治連盟」으로 改編하기로 하였는데, 政治連盟이 稅理士會와 표리일체가 되어 連盟의 주체성을 명확히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10]이다.

이때부터 正會員은 稅理士만으로 하고 납세자는 贊助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改編도 目的條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稅理士의 政治團

9) 全國納稅者政治連盟 結成 趣旨文과 決議文은, 上揭書, pp.570~574.
10) 上揭書, p.658.

體라는 성격은 여전히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후 稅理士業界는 商法改正問題의 와중에 휘말리게 되고 日稅政連은 同法改正反對運動의 선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日稅政連을 稅理士政治連盟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과 같이 納稅者政治連盟的 성격으로 계속할 것인가의 사상적 배경을 둘러싼 우여곡절이 있었다.

4. 稅理士의 政治團體로서의 性格 明確化

이러한 과정을 거쳐 日稅政連은 稅理士政治連盟으로서 職業的 政治團體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1974년 5월 '本 連盟은 稅理士의 社會的·經濟的 지위 향상 도모'를 주된 목표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위한 民主的 稅理士制度와 租稅制度 및 세무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政治活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同規約 제3조 목적)로 바꾸게 되었다.

이로써 日稅政連은 명실공히 稅理士의 政治團體的인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동시에 전국 단일의 日稅政連으로부터 전국 13개 단위 稅政連으로 각각 독립하여, 日稅政連은 13개 단위 稅政連의 연합체로 되었다.

5. 稅理士會와의 表裏一體 관계의 明定

日稅政連은 稅理士의, 稅理士에 의한, 稅理士를 위한 政治團體이기 때문에 稅理士會와는 「表裏一體」, 「車의 兩輪」, 「脣齒의 關係」[11]라는 것이 종래부터 누누이 지적·확인되어 왔던 기본 원칙이다.[12]

法的 組織으로서는 稅理士會와 稅政連은 별개이나 表裏一體의 관계로서 稅理士會의 요망을 실현하기 위한 政治運動을 稅政連이 맡아서 한다. 이러한 政

11)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446.
12) 이러한 정신은 1977년 8월의 大阪稅政連 規約 제3조 목적을 보면 「本 連盟은 大阪合同稅理士會의 방침에 따라……」라고 분명히 宣言하고 있다.

治運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한 稅理士會의 前歷任員이 稅政連의 正副會長에 就任하도록 하고 있다.

6. 稅政連의 組織과 機構(近畿稅政連의 예)

稅理士會 회원인 稅理士는 本 連盟의 회원이 된다(規約 5,6조). 本 連盟은 ① 大會·總務會등의 議決機關 ② 本部 주요 任員 및 支部連會長에 의하여 구성된 國會議員 選擧등에 있어서 推薦候補者를 심사결정하는 推薦審査會[13] ③ 會長·副會長·幹事長·副幹事長 등 執行機關 ④ 이들 任員으로 구성되는 正副幹事長會등 執行審議機關 ⑤ 監査機關으로서의 會計監査 및 기타 機關이 있다.

本 連盟의 하부조직으로서 稅理士會의 支部를 단위로 하는 支部와 衆議院議員選擧區別 支部를 構成單位로 하는 支部連合會가 있다.

本 連盟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本 連盟의 指導下에 「稅理士에 의한 推薦國會議員등 後援會」를 결성하고, 이미 稅理士法 改正運動이나 商法改正問題에 있어서 강력한 政治的 뒷받침을 하여왔다.

7. 稅政連 活動의 方向 및 成果

稅政連은 1968년 2월 이후 連盟의 조직강화 확충 결과 1970년 10월 日稅政連 제3회 定期大會에는 전국 衆·參議員 30 여명이 내빈으로 참석할 정도이다.[14]

1983년 9월 日稅政連은 각 단위 稅政連의 연계를 강화·단결하고 추천 國會

13) 地方議會議員, 衆議院議員, 參議院議員 등의 選擧에 있어서 推薦候補者를 결정하여 그 選擧의 지원활동을 한다. 稅理士에 의한 推薦國會議員등의 後援會는 다른 自由職業團體에서는 예가 없는 독특한 것으로서 이는 稅政連의 최중요 시책이다. 推薦方法, 推薦의 基準 등에 대하여는, 近畿稅理士政治連盟の概要, pp.8~9.

14)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84.

議員의 후원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政治力을 강화하여 목표달성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다음과 같은 운동방침 6 개 項目을 정하였다.

① 추천 國會議員등의 後援會를 통하여 일상 政治活動을 강화한다.

② 稅制 및 세무행정 改善運動을 강화한다.

③ 小企業納稅者 대책의 근본적 改善을 위한 운동을 한다.

④ 商法改正運動에 대하여 中小會社 보호의 입장에서 적절한 운동을 한다.

⑤「會計監査에 관한 基本問題」해결을 위한 운동을 한다.

⑥ 稅理士制度 및 職域의 侵害 동향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한다 등.

최근의 稅政連 活動의 구체적 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80년 稅理士法의 全面 改正을 실현하였다.

나. 1981년 社勞士法 개정에 있어서는 稅理士가 행하는 社勞士業務의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法改正을 저지하였다.

다. 1981년에서 1982년의 建設業經理士問題에 있어서는 主務官廳인 建設省에 의하여

① 명칭을 建設業經理事務士로 바꾸도록 하였고, ② 장래적인 職業資格制度로서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③ 建設業의 經理나 稅務事務의 改善을 指導하는 경우에는 稅理士를 활용하도록 하여 建設業界를 指導하게 하는 등 回答文書를 받아냈다.

라. 商法改正問題에 있어서

① 1981년 會計監査人에 의한 强制監査對象會社의 범위를 좁혀 會計檢査人에 의한 任意監査導入을 저지하였다.

② 1990년 計算書類의 登記所 公開義務 會社의 범위의 基準에 대하여 當初案을 인상하여 「資本金 1億円 이상의 株式會社」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1981년 개정의 强制監査範圍의 확대에 맹렬한 反對運動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計算의 公開와 그 適正擔保의 制度(會計調査人에 의한 調査制度등)와는 별도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趣旨의 陳情에 대하여도 登記所의 公開制度單獨導入案을 보류케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 稅制 改正時

① 1985년에는 特例適用者에 대한 源泉所得稅의 納付期限을 12월분은 申告에 의하여 익년 20일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1988년도 稅制改正에서 缺損金 移越 控除의 일부정지를 폐지하고 缺損金의 繰戾에 의한 還給制度의 부활을 실현하였으며,

③ 稅制의 根本的 改革과 관련하여 家內勞動에 대한 part time 勤務者에 대한 取扱과 中小法人의 交際費 課稅强化를 반대하였다.

④ 消費稅導入을 포함한 稅制改革 관련 6法案중 個人事業者의 消費稅의 申告納付期間의 修正에 대하여는 租特法의 一部改正에 의하여 3년간은 申告와 納付를 3월말까지 猶豫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⑤ 1985년 稅法改正에 따라 法人이 源泉徵收된 所得稅가 당년도 法人稅에서 控除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않고 차년도 이후 法人稅에서 控除하거나, 控除되지 않은 때는 4년후에 밖에 환급하지 않는 特例였으나 稅政連의 陳情에 의하여 1993년 3월 폐지되었다.

⑥ 1991년에는 1990년 商法改正에 따라 稅制上 特例措置로서 5년 이내에 株式會社가 利益 또는 準備金을 資本에 전입하는 경우 最低資本金 범위 내 1,000万円에서 看做配當課稅를 하지 않을 것과, 株式會社 및 有限會社가 最低資本金을 충족하기 위하여 增資하는 때 登錄免許稅를 3.5/1,000로 輕減토록하는 주장을 실현하였다.

⑦ 1992년에는 個人事業者에 관계되는 消費稅의 確定申告期限의 特別措置의 適用期限(3월말일)을 2년간 연장조치하도록 하였다.

8. 稅政連의 財政

稅政連의 財政은 현재 會費와 寄附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으나, 支部連合會의 활동의 財源은 會費收納額의 15%가 本部로부터 支部連 交付金으로서 交付된다. 또 支部의 活動의 財源은 支部連으로부터 支部에 交付된다(支部에의 交付金의 配分에 대하여는 각 支部連에서 결정한다).

9. 稅政連의 今後의 課題

今後의 課題로서 가장 긴급한 것은 「不動産 콘설턴트(consultant)」制度의 創設問題[15]와 商法改正問題이다. 또 稅制改正問題에 대하여도 민간 유일의 稅務專門家로서 綜合的인 견지에서 권위있는 稅制建議가 이루어지도록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稅務關聯 團體의 顧問稅理士方式은 稅理士法 違反의 은폐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稅理士를 빙자한 公費에 의한 巨大事務所化하여 稅理士制度의 붕괴의 위기등 政治家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도 많다.

1994년 9월 東京에서의 제28회 定期大會 開催時 平田 日稅連 會長의 '…… 稅政連은 立法府에, 日稅連은 行政府를 말아서 각각 기능을 다하여 懸案事項을 해결하자……'[16]는 인사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日稅政連은 日稅連 발전의 외곽을 담당하는 방패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94년도에는 '有限會社의 最低資本金 한도까지의 자본증가에 출자하기 위한

15) 日稅連으로서는 당초 반대하였으나 建設省 정책에 찬성으로 전환하였음. 第6章 第2節 XXI 建設省의 「不動産 콘설턴트」 問題 참조.
16)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94년 10월 15일자 제2면.

이익배당의 非課稅措置 實現'을 위한 운동과 中小會社의 계산적정을 위한 제도의 창설(稅理士의 역할 확대)을 위한 운동과 稅理士業務 및 職域을 침해하는 동향에 대한 반대운동등 7項目[17]을 보고하고 있다.

III. 沖繩(오끼나와)稅理士會 創設

1. 沖繩의 復歸와 免許資格 一體化

1972년 5월 15일 오랜 동안의 懸案이었던 27년만의 沖繩의 본토 복귀로 稅理士制度도 본토와의 일체화가 실현되었다.[18] 稅理士關係를 포함한 각종의 免許試驗 및 免許資格에 대하여도 1968년 美日琉諮問委員會가 免許의 일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沖繩 열도 高等辯務官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勸告하였다. 그 결과 沖繩 복귀시까지의 잠정조처로써 沖繩에서 본토의 免許資格에 관한 시험을 행함과 동시에 沖繩의 免許資格者에 대하여 본토의 免許資格을 부여하도록 조처하여, 1969년 「沖繩의 免許試驗 및 免許資格의 特例에 관한 暫定措置 法案」이 國會에 제안되었다.

2. 暫定措置 法案의 提案과 理由說明

「沖繩의 免許試驗 및 免許資格의 特例에 관한 暫定措置 法案」은 衆議院의 沖繩·北方特別委員會에서 審議되었는데, 沖繩과 본토와는 免許資格制度 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는 당초부터 司法試驗, 公認會計士試驗 등 18종에 관한 본토의 시험을 沖繩에서도 실시하고, 또 土地家屋調査

17)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94년 10월 15일자 제2면.
18) 1972년 4월 25일 沖繩의 本土 復歸와 동시에 沖繩稅理士會가 日稅連 會員으로 될 수 있도록 臨時總會를 개최하여 日稅連 會則 및 會務執行規則 一部 改正을 可決하였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72년 5월 11일.

士, 公認會計士등 27종의 오끼나와의 免許資格者에 대하여 본토의 免許資格을 부여하는 등 特別措置를 하였으나, 稅理士등의 경우와 같이 沖繩과 본토와의 제도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免許資格에 대하여는 일정 강습을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3. 暫定措置 法案의 國會審議狀況(생략)

4. 暫定措置 關係 法令(생략)

5. 稅理士資格 一體化를 위한 試驗 및 法定講習 實施

暫定措置法은 1969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본토와 沖繩은 稅理士資格이 일체화되었고 처음으로 동년 8월 일제히 실시하였으나 시험 초일 沖繩의 태풍으로 인한 수험불능으로 2개월 후 보충시험을 실시한다.

法定講習은 1970년 那覇市에서 연 39일간 所得稅法, 法人稅法, 國稅徵收法, 簿記論 및 財務諸表論 외 相續稅法, 事業稅, 固定資産稅 등이 國稅廳에서 파견된 강사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며 강습수료자는 60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귀후에도 본토의 諸制度를 沖繩에 원활하게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1971년 12월 「沖繩復歸에 따른 特別措置에 관한 法律」 등 관계 法律이 성립되었다.

6. 沖繩稅理士會의 誕生

沖繩의 稅理士制度는 1961년 稅務代理士法施行規則의 制定에 의하여 발족하였으나, 稅務代理士會가 설립인가된 것은 1963년 12월로서 당시의 회원은 21명이었다. 그러나 1964년 8월 新稅理士法이 制定되고 稅務代理士는 稅理士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稅務代理士會도 조직을 변경하여 새로이 社團法人

沖繩稅理士會가 設立·認可되었다. 1970년에는 沖繩의 稅理士法도 沖繩에 있어서 免許試驗 및 免許資格의 特例에 관한 暫定措置法의 시행에 맞추어 본토의 稅理士法과 일체화된 결과 社團法人 沖繩稅理士會는 해산하고 特別法人인 沖繩稅理士會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沖繩稅理士會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間接强制入會制度는 물론 登錄權도 갖게 되었다.

그 간 稅理士가 행한 업무의 내용은 본토의 稅理士業務와 마찬가지로 記帳業務와 稅務代理가 주이고, 미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稅理士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969년 6월 暫定措置法이 실시되기까지는 沖繩의 稅理士는 沖繩地域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沖繩稅理士會는 독립한 稅理士會로서 日稅連傘下의 一單位會로 새로이 발족하였고 당시 회원은 45명이었다.[19]

1969년 11월 沖繩의 반환은 1950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다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日稅連은 1969년 1월 24일 本土와 沖繩의 稅理士制度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沖繩의 稅理士會 및 稅理士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調査團을 파견하였고, 大藏省에서도 稅理士實態調査를 하였다. 1969년 3월 4일간의 조사결과 「沖繩稅理士制度에 관한 調査報告書」에서 稅理士의 現況, 本土와의 資格統一에 관한 문제점, 沖繩稅理士法의 현상 및 이후의 문제점, 沖繩의 稅制上의 문제점등이 상세히 보고되었다. 이에 대한 답례로 沖繩稅理士는 稅理士會에서도 8월 會長 이하 3명이 본토 복귀에 따른 잠정조치로써 統一化法案에 따른 沖繩稅理士의 法的 講習 實施에 대한 懇談會를 가졌다. 이에 日稅連은 12월 大藏大臣과 國稅廳長官에 대하여 沖繩에 있어서의 免許試驗 및 免許資格의 特例에 관한 暫定措置法의 시행에 따른 特例에 관하여 요망하였다.[20]

---

19)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223~224.
20) 上揭書, p.674.

Ⅳ. 會長 選任制度 改善

1. 制度의 沿革

1984년 9월 19일 日稅連 正副會長 會議에서 會長 選任制度의 개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그 내용은 會長은 任員 改選의 해 就任한 稅理士會長(14인)과 그 해에 就任 豫定인 理事 候補者(100인) 全員(계 114인)을 選擧人으로 하여 直接選擧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실질적 選擧人과 소위 각 稅理士會의 理事會 構成員을 비교컨대 日稅連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日稅連의 任員(혹은 실질적 최고 의지 決定機關인 理事會의 構成員)을 會長 選擧人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당해 選擧人에게는 그 選任되는 會長과 기간을 같이하는 稅理士會 會長과 理事 候補者로서 하게 하는 것이 조직단체로서의 합일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둘째, 「잘 아는 사람을 選出한다」는 選擧의 상식으로 보면 당해 稅理士會長 및 理事候補者의 반수 이상이 유임되는 실태로 보더라도 會長選擧人團의 構成員은 그들이 가장 적당하다.

셋째, 「少數票가 會長 選任時의 득표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選擧運動이 매년 격화되고 있다」 「권한있는 審議機關의 議決 결과에 의한 雪崩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현행 제도의 3 가지 문제점(會務制度委員會의 지적)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21]

다음 10월 2일 正副會長 會議에서는 아래와 같은 2 가지 제안이 있었으나 익년 실시를 위하여 次期 正副會長 會議에서 다시 협의키로 하였다.

제1안, 日稅連의 新理事會 構成員 豫定者(114명)를 選出하고, 會長 候補者 1인을 선정하여 總會에서 會長으로 選任한다.

---

21) 上揭書, pp.966~967.

제2안, 日稅連이 「會連合會」임을 고려하여 日稅連이 總會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選任된 稅理士會의 會長이 記名 投票에 의하여 會長을 選任하는 것으로 한다. '議決權 數는 稅理士會의 會員數로 한다', 단 全稅理士會의 同意가 있는 때는 投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10월 24일 正副會長 會議에서는 지금까지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여 會務制度委員會가 原案을 작성할 것을 委任하였다.

12월 19일 正副會長 會議에서 任員 選任에 관한 규정은 會則과 會務執行規則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새로운 任員選任規則을 제정할 것을 협의하였다.

① 稅理士會의 會長으로 구성하는 會長候補 推薦會를 개최하고 추천된 會長候補중 3명 이내를 추천한다.

② 稅理士會의 會長과 日稅連의 理事候補者로서 구성하는 「會長選考會」에서 會長豫定者를 선출한다.

이에 대하여 會長候補者를 3명 이내로 하는 것은 1명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異論이 있어 3명으로 고쳤고, 議決權 수에 대하여서는 각 會의 會員數와 同數로 하기로 하였다.

다음, 會長 選考會의 構成員이 되는 選考人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稅理士會 단위로 會員數에 비례·안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금후 검토키로 하고, 任員 選任規則案 및 會則 및 會務執行規則의 一部 變更原案을 審議完了하여 1985년 1월 常務理事會에 회부되었다.[22]

1985년 1월 11일 常務理事會에서 日稅連會則 및 會務執行規則의 일부 개정과 任員選任規則(案)의 制定에 관하여 審議하였다. 任員選任規則의 制定에 대하여 현재 任員選任에 관한 문제는 「會長 選擧運動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열되어 가기 때문에 이후의 會務運營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과 동시에 任員 選任規則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會長 選

22) 上揭書, p.968.

任 方法은,

① 稅理士會長들로 구성하는 會長候補推薦會를 개최하고, 同推薦會의 회일 전일까지 추천된 자중 會長候補者로서 3명을 추천한다(추천받은 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 이 때 議決權 수는 각 稅理士會의 會員數와 同數로 한다.

② 稅理士會의 會長 및 日稅連의 理事候補者로 구성되는 會長選考會를 任員改選總會의 전일까지 개최하여 會長 豫定者를 選出한다.

③ 總會에서 會長 豫定者를 會長으로 選任한다는 것이다.

1월 26일 理事會에서, 會長選任管理委員會를 設置하고 委員은 각 稅理士會 1인으로 하고 委員會는 會長候補者를 추천하기 위한 會長推薦會를 개최하여 會長候補를 推薦하되 候補者가 1인인 경우에는 過半數 득표를 요건으로 하기로 하였다.

2월 日稅連臨時總會에서 任員選任規則 및 會則, 會務執行規則 일부 변경이 가결되었다.

1985년 7월 26일 제29회 定期總會에서 이 절차에 따라 飯島岱藏씨가 會長으로 選任되었다.[23]

2. 1993년 會長選擧

가. 連合會 會長 選任方法

93. 6. 15. 會長選擧 公告 會長選任管理委員會.

7. 5~6. 推薦書 접수.

7. 7. 候補 推薦會(稅理士會長).

7. 10~13. 候補者 접수.

7. 26. 會長選考會(會長 14名, 本會 理事 割當人員을 各 稅理士會에

23) 上揭書, p.995.

서 추천 100名 합계 114名이 투표함. 理事數는 상기표 우측 人員).

平田公敏(關東信越稅理士會 會長) 69票

關本和幸(東京稅理士會 會長) 25票

加茂 武(名古屋稅理士會 會長) 20票

7. 27. 37回 定期總會(14 稅理士會)에서 第5號 議案으로 前日 '會長選考會에서 會長으로 선출된 者(平田公敏)'를 新任會長으로 議決.

나. 93年 各 稅理士會 會長 選任內容

會 名	新任會長名	任期 始作	任期 滿了(各 會則 條項)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平田公敏	93년	2회째 정기총회종료시(14조)
東京稅理士會	關本和幸	〃	〃 〃 (22조)
東京地方稅理士會	藤村 茂	〃	事業年度開始후2년간 (20조)
關東信越稅理士會	平田公敏	〃	〃 〃 (20조)
近畿稅理士會	森 金次郎	〃	2회째 정기총회종료시(21조)
北海道稅理士會	笠井彦隆	〃	〃 〃 (20조)
東北稅理士會	今野和郎	〃	〃 〃 (20조)
名古屋稅理士會	加茂 武	〃	〃 〃 (20조)
東海稅理士會	稻葉甲子雄	〃	〃 〃 (20조)
北陸稅理士會	野村 清	〃	〃 〃 (20조)
中國稅理士會	間賀田耕吾	〃	〃 〃 (20조)
四國稅理士會	宮田 泰	〃	〃 〃 (20조)
九州北部稅理士會	永松繁雄	〃	〃 〃 (20조)
南九州稅理士會	末崎將弘	〃	〃 〃 (20조)
沖繩稅理士會	宮里純永	〃	〃 〃 (19조)

V. 稅理士會의 支部

稅理士法 제49조의 3에서 稅理士會의 支部는 「稅理士會는 國稅局의 관할구역 내의 지역을 관할하는 稅務署의 관할구역을 地區로 하거나, 또는 國稅局의 관할구역 내의 都道府縣의 구역을 地區로 하여 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支部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다.

支部의 본질은 法文上으로나 民法上의 公益法人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稅理士會 내의 하부기구의 하나임이 분명하여 독립적인 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나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도 할 수 없다.

支部의 목적은 一局 一會의 원칙때문에 稅理士會의 地區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회원과의 연락·조정을 지역적으로 담당케하는 것이다.

그리고 支部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稅理士會의 내부기구이면서도 官廳의 地方支分部局이나 會社의 支店등과는 달리 자주성을 가진다. 단지 그것은 稅理士會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 및 支部의 목적달성 범위에 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외에 支部의 조직·운영상 유의점으로서는,

① 支部의 소속에 있어 入會金을 과하는 등의 장벽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② 支部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속원으로부터 會費등의 負擔金을 徵收하는 경우에는 稅理士會의 會則에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支部規約등의 제정·변경에 있어서는 稅理士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이다.[24]

---

24) 上揭書, pp.713~714.

Ⅵ. 稅理士事務所 名稱 統一

稅理士法 개정에 따른 會則 改正時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을 「(姓名)稅理士事務所」라고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法的 根據에 의문을 제기하여 해당 條項의 削除要求를 하는 회원들도 있어 신중히 대책을 검토하던중 1982년 2월 다음과 같은 法制局의 견해를 전달받았다.[25]

첫째, 稅理士法 제40조 제2항에서 「稅理士事務所」라고 한 것은 定義 規定이고 일정 명칭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日稅連의 自治規定에서 일정 제한을 가한 것은 회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 다수가 결정한 것이라면 합리적 제도로서 일부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명칭을 통일하는 것은 「無資格稅理士의 排除」「納稅者의 利益」이라는 차원의 공공성에 있고 稅理士 자신의 고객 확보 관련상 합리성이 있다면, 일부 회원에게 약간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과의 비교하여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제한은 私的自治의 허용범위이다.

셋째, 그러나 「기타의 文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한 것은 합리적 제약이라 할 수 없어 違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부당한 것이다.

日稅連은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시급히 會則을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會務制度特別委員會에 諮問을 받았다.

① 法制局의 견해에 따라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稅理士事務所에 당해 稅理士의 姓名을 붙이는 등 누구의 稅理士事務所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本 會의 會則에서는 自治規定으로서 稅理士事務所의 名稱規定을 두어 無資格稅理士의 排除와 納稅者의 利益등 회원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고

25) 上揭書, p.934.

③ 登錄하는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두어, 「(姓名)稅理士事務所」를 원칙으로 하되, 「稅理士(姓名)事務所」로 한다.

姓名을 쓰기가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承認을 얻어 「姓」등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되, 「공동」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후 登錄名稱 문제를 검토한 결과 正副會長 會議에서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임을 明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原案을 확정하여 常務理事會에 제안하였으나 常務理事會에서는 다음 2 가지 原案 修正案을 제시하였다.

①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稅理士事務所라는 文字에 당해 稅理士의 姓名을 붙이는 것과 당해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임을 명시하는 것.

② 原案을 訓示規定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明示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고친다.

논의 결과 ② 案이 채택되었다.

稅理士名簿에 登錄하는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1982년 7월 定期總會에서 日稅連 會則이 일부 개정되어 「당해 稅理士事務所임을 明示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訓示規定으로 고쳤다.

1982년 8월 正副會長 會議時의 결정사항으로서 각 稅理士會는,

① 「(姓名)稅理士事務所」

② 「稅理士(姓名)事務所」

③ 이외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임을 明示하는 것으로 申請者의 協力을 얻어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大藏省도 8월 稅理士名簿에 登錄하는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에 관한 日稅連 會則의 일부 改正案을 認可하고 각 稅理士會에 대하여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에 대하여 시달하였다.[26]

Ⅶ. 稅制審議會 發足

---

26) 上揭書, pp.935~936.

1. 稅制審議會의 構成

1966년[27] 2월 日稅連은 杉村章三郎 등 17명의 委員[28]을 위촉하여 「稅制審議會」를 설치하였다.

1942년 稅務代理士法 制定 이래 稅理士制度가 항상 政府主導型으로 끌려가는데 대한 業界側의 반성으로 정부의 諮問機關인 「稅制調査會」에 대하여 재야의 입장에서 대항할 수 있는 자주적·이론적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29]

日稅連 稅制審議會는 국민 경제의 실태에 적응한 租稅關係法規實現을 위한 調査硏究를 하여 稅制 및 세무행정에 관하여 業界의 권위있는 의견을 公表하고 관계 방면에 제출하는 등 日稅連의 社會公共的 사명 실천에 기여하였으나, 5년간 실시한 결과 그 조직과 운영에 만네리즘 경향이 있어 1971년 3월 委員과 幹事의 任期滿了를 기회로 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대폭 개혁하였다.

① 審議會는 特別委員 및 專門委員으로 구성하고 委員의 정수는 24명 정도로 한다.

② 特別委員은 민간 각계의 稅制 및 세무행정에 관한 학식경험자 중에서, 專門委員은 稅理士會員 중에서 각각 日稅連 會長이 위촉한다.

③ 專門委員의 정수는 1/3 정도로 하고, 그 반수 정도를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 委員의 任期는 特別委員은 1년, 專門委員은 2년으로 한다.

⑤ 審議會의 會長은 特別委員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2. 審議會의 運營

---

27) 1965년은 韓日간에 基本條約協定議定書가 調印된 해이고, 1966년은 베트남 戰爭이 한창인 시기였으며, 中國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는 8월 18일 「프로리테리아文化大革命 祝賀 100萬人 集會」에 처음으로 紅衛兵이 출현하여 이후 4舊(舊思想, 舊文化, 舊風俗, 舊慣習) 파괴운동을 시작하는 소위 「紅衛兵旋風」이 있었다. 이 해에도 日本은 稅制上 3,069億円의 減稅政策을 실시하였다.

28) 委員의 名單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618~619.

29) 東京稅理士會, 東京稅理士會五十年史, p.254.

첫째, 審議會의 運營은 委員 全員에 의한 總會審議 및 專門委員會 審議의 2가지로 하고 審議期間중 매월 1회 會合을 원칙으로 한다(總會는 總括審議를 행하고, 答申文案의 작성은 專門委員會가 담당한다).

둘째, 常任委員은 수시 會合을 가져 審議會의 소관 사무를 정리한다.

셋째, 전 각호외에 審議會 運營의 稅目은 規則 및 議事 細則으로 정한다 등.[30]

稅制審議會는 1971년 업무로서, 「주요문제에 대하여는 稅制審議會의 諮問을 거쳐 日稅連 會長에게 答申한다」는 취지를 살려 동년 5월

① 소위 稅務署長의 재량권에 대하여

② 加算稅 課稅基準에 대하여

③ 1972년도 稅制改正에 대하여

④ 장기 稅制에 대하여(附加價値稅 창설의 가부) 등 4항목에 관하여 諮問하였다.

특히 稅務署長의 재량권의 유무에 대하여 많은 사례와 의견이 피력되었고, 加算稅의 課稅基準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과 重加算稅 稅率의 인하와 重加算稅의 賦課處分 理由 附記, 課稅時 納稅者의 辨明機會 부여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고, 장기 稅制에 있어서 附加價値稅의 도입은 1969년 당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도입이 적당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31]

Ⅷ. 租稅審判所 設置 등 建議

1. 租稅審判所 設置 建議

1960년 4월 16,17일 名古屋에서 개최된 日本稅法學會에서 稅理士들이 새로

3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722.
31) 上揭書, pp.722~724.

운 租稅審判所의 설치를 제의하여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1967년 10월 日稅連은 「租稅審判所設置에 관한 中間 意見書」를 관계 당국에 건의하였는데 意見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租稅審判所의 設置는 租稅救濟制度의 실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제도의 실현을 강력히 요망한다.

둘째, 租稅審判所를 설치하는 경우 그 審判官은 審判事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租稅에 관한 학식있는 司法官, 辯護士, 稅理士 및 租稅에 관한 학식과 경험자중에서 總理大臣이 임명한다. 審判官에 대하여는 身分을 보장한다.

셋째, 租稅審判所의 권한은 訴訟事案에 대하여 판정적 권한을 갖고 그 裁決은 確定力·拘束力을 갖는다.

넷째, 稅理士는 租稅救濟 申請人의 대리인으로서 意見·陳述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관련하여 최근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諸法規의 流動化가 현저함에 따라 관계 法規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시야에서 검토를 하여 이상적인 稅理士制度의 실현을 기하는데 일관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필요에서 12월 「法對策本部」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임무는 社勞士法對策, 商法 개정에 따른 監査役 문제와 會計業務를 稅理士의 業務로서 法制化할 것을 포함한 稅理士法의 전면적 개정 방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그 조직으로서는 이미 발족되어 있는 勞務士法對策委員會 외에 商法改正對策委員會, 稅理士法改正對策委員會의 3 特別委員會를 두기로 하고 本部長에는 日稅連 副會長이 맡기로 하였다.

1968년 4월 社會黨에서 「國稅審判法案」이 제안되었고, 政府稅制調査會는 6월 「國稅不服審判所案」을 확정하였다. 이 國稅不服審判所(가칭)은 審判權을 갖는 國稅廳의 附屬機關으로서 審判所長의 裁決이 國稅廳長官의 통달의 내용을 침범하는 경우 國稅廳長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에 國稅廳長官은 國稅審査會의 의견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日稅連은 「납세자의

權利救濟 制度에 관한 意見書」를 수차 제출하였으며, 12월 國稅不服審判所 設置 構想을 法文化한 개정 要綱이 확정되었다.

2. 1970년「國稅不服審判所」設置

1969년 2월 閣議에서 납세자의 權利救濟 機關으로서「國稅不服審判所」의 설치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國稅通則法의 일부 改正案이 國會에 제출되었는데 이에 따라 日稅連 法對策本部는,

첫째, 審判所 審判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政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稅法에 대한 專門家인 稅理士를 추가할 것과,

둘째, 審判制度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國稅審査會委員의 약간명을 日稅連이 추천하는 회원중에서 임명해 줄 것을 요망하는 陳情書를 제출하였다.[32]

그러나 이 國稅通則法 일부 개정에 관한 法律案은 衆議院에서 통과되었으나 參議院에서는「大學法案」의 혼란으로 인하여 최종일까지 審議未了로 廢案되었다가 1970년 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납세자의 權利救濟制度의 改善을 위하여 종래 協議團에 대신하여「國稅不服審判所」가 설치되었다.

종래 協議團에 대한 납세자의 비판에 부응하고 제3자적 성격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그 특색은 제3자적 입장에서 납세자의 不服을 審査하고 스스로 裁決하며 國稅審査會의 諮問위에 기존의 國稅廳長官의 통달과 다른 法令 해석에 따라 裁決할 수 있고 그 절차는 行政不服審査節次를 기초로 하여 간이 신속하게 납세자의 救濟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 異議申請 및 始審的 審査請求의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다시 更正請求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되었다.[33]

---

32) 上揭書, p.675.
33) 上揭書, p.689.

Ⅸ. 全國稅理士共榮會 設立

1974년 11월 11일 稅務援助對策으로 日稅連은 全國稅理士共榮會(이하「全稅共」이라 함)를 設立하기로 하였다.[34] 「全國稅理士와 그 去來先등 관계자의 福祉 控除 및 經濟的 地位 向上과 親睦을 증진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 사업으로서는 ① 去來企業의 繁榮에 공헌하는 것, ② 稅理士業界의 發展에 기여하는 것, ③ 提携企業과 共榮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 것 등이다.[35]

Ⅹ.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센터의 設立

1. 日本稅務研究센터의 設立

1984년 일본 稅理士史에 특필할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센터(이하 '日稅研'이라 함)가 창설되었다. 이 財團法人의 設立은 日稅連과 全稅共이 상호 협력하여, 設立事務는 日稅連이 財産出捐은 全稅共이 맡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가 동년 9월 17일 大藏大臣의 設立許可를 받았는데 이는 日稅連의 2년 여의 노력과 全稅共의 약 7년 여 간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사무소는 당초 東京都 港區 芝浦「東芝빌딩」日稅連內에 두었으나 동년 12월 港區 浜松町 秀和交差点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이 財團法人의 設立目的 및 事業은 다음과 같다.[36]

2. 設立目的과 事業

---

34) 上揭書, pp.933~934.
35)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468~469.
36)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958~959.

가. 設立目的

이 法人은 租稅制度, 租稅行政, 稅理士制度 및 企業會計등에 관한 調査硏究를 행하고 그 진보·발달을 촉진함과 함께 그 보급·계몽을 하므로써 稅理士의 公共的 사명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事業

이 法人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한다.

① 租稅制度, 稅務行政, 稅理士制度 및 企業會計등에 관한 調査硏究 및 그 成果의 公表

② 租稅制度, 稅務行政, 稅理士制度 및 企業會計등에 관한 내외의 資料情報의 收集 및 그 活用

③ 租稅에 관한 法令, 判例 및 通達등의 데이타 뱅크 창설 및 그 活用

④ 稅理士會가 행하는 稅務援助事業의 助成

⑤ 硏修會, 講演會등의 개최

⑥ 圖書등의 監修, 編集, 刊行 및 頒布

⑦ 기타 法人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 등

3. 日稅硏 設立 經緯

全稅共은 1976년 1월 개최된 제1회 定期總會에서 團體의 構成員을 稅理士뿐만 아니라 널리 관련 關係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財團法人을 設立할 것을 議決하여 設立許可와 申請 節次를 진행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자 1978년 日稅連에 제언하여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日稅連은 「日稅連周邊團體對策協議會」를 설치하고 全稅共 및 日本稅理士控除會등 周邊 團體에 대하여 그 조직 운영의 共榮化·合理化를 모색중이

기도 하여 일부러 全稅共의 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점차 財團設立 기운이 높아지자 1982년 3월 正副會長 會議에서 「財團法人設立關係事務委任要領에 관한 基本 構想」이 議題가 되어 정식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日稅連은 4월 常務理事會에서 「財團法人設立準備特別委員會」를 구성하고 약 2년동안 십수회에 걸쳐 協議 및 國稅廳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設立準備作業을 하였고, 設立趣意書, 寄附行爲, 事業計劃 및 豫算등에 대한 각 原案을 구상하였다. 1982년 7월 日稅連은 全稅共과 全稅共 名義의 財團法人設立準備基金 計座 定期預金證書(액면 10億円)의 預金 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協定書를 체결, 1984년 5월 常務理事會에서 設立趣意書, 寄附行爲 各案 및 관계 서류를 협의 결정하고, 全稅共도 5월 臨時總會에서 「財團法人 設立에 관한 件」을 제안 寄附行爲등 7개 議案을 가결하여 6월 「財團法人 日本 稅務硏究센터」 設立許可 申請에 대한 全稅共側의 同意를 얻었는데, 당시의 設立趣意書[37]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稅制는 納付하여야 할 稅額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申告에 따라 확정하는 申告納稅制度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자주적 申告에 의하여 納稅額을 확정하도록 納稅義務者를 원조하고 그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한다는 극히 중대한 공공적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부터 각 稅理士는 그들의 使命, 즉 納稅義務者의 신뢰와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여 申告納稅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專門家로서의 硏究를 깊이 계속하여 왔으며, 또 稅理士가 조직하는 團體인 稅理士會 및 日稅連도 그러한 사업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거래가 복잡·광역화되어 租稅法規등도 복잡다기화된 상황하에서 이러한 使命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는 종래와 같은 稅理士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日稅連과 각 稅理士會가 하는 사업에도

37) 上揭書, p.961.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 왔다.

이에 稅理士 및 그 關係者로서 조직하는 福祉控除 團體인 全稅共에서는 오랜동안 事業利益의 축적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租稅制度, 稅務行政, 稅理士制度 및 企業會計등에 관한 調査·硏究를 행하고 그의 진보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보급 계몽을 하므로써 稅理士의 공영적 사명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財團法人 日本稅務硏究센터의 設立을 계획한 것이다. 財團法人의 設立에 의하여 稅理士의 公共的 使命의 충분한 달성이 확보되고 나아가서 日本稅制의 근간인 申告納稅制度의 일층 발전이 실현되는 것을 확신한다.'

4. 日稅硏의 發足

1984년 8월 財團法人 日本稅務硏究센터 初代 理事長에는 日稅連 會長인 織本秀實씨기 就任하고 9월 17일 財團의 設立이 許可되었다. 이로써 항구적인 機關이 設立되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租稅制度에 관한 국민적 과제인 기본적·실천적인 조사 연구 업무를 행함과 동시에 내외의 資料의 收集, 高度 情報化 社會에 적응한 데이타 뱅크, 稅務援助 등등 다면적이고 심도깊은 사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기본 資産은 물론 거대한 經常資金의 계속적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稅理士와 그 關係者들로 조직된 控除團體인 全稅共으로부터의 出捐과 본 財團의 贊助會員의 贊助金으로 충당된다.

10월 제1회 財團理事會를 개최하여 評議員과 顧問의 위촉, 贊助會員의 募集要領 기타 소요 諸規定을 제정하였다.

5. 日稅硏의 事業

1985년 주요 事業인 租稅制度등에 관한 調査硏究 태세를 갖추고 日稅連 任員을 겸하는 武田昌輔(成大), 金子宏(東京大), 新井隆一(早稻田大) 3 敎授를 중심으로 硏究 테-마의 選定, 硏究員의 人選, 硏究方向등을 협의하는 한편 內外의 圖書, 資料의 收集整備에 주력하였다.

초년도 硏究分野는 租稅制度와 租稅行政 2 분야로서 稅理士制度 및 企業會計 分野에 대하여는 日稅連의 위탁에 따라 硏究를 추진하였는데, 硏究 테-마는 2월 24일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각 專門委員(大學敎授, 稅理士, 辯護士등)에게 硏究하게 하고, 稅務上 발생하는 實務問題는 「發生實例硏究會」를 설치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38]

機關誌로서는 稅理士會員, 贊助會員, 기타 널리 관계 방면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稅硏」[39]을 격월로 발행키로 하고 연구진전 상황등외에 租稅에 관한 論文, 稅制資料, 稅務情報, 事例硏究의 성과등을 게재·홍보키로 하고 1985년 9월 20일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985년 武田昌輔, 金子宏, 新井隆一을 중심으로 6 硏究 테-마를 공동 연구 방식으로 하고 약 1년에 걸친 硏究會를 통하여 1986년 5월부터 각 硏究員의 분담 집필에 따른 硏究論文이 제출되어 8월 「日稅硏 論集」 제1호(稅制의 기본적 改革方向 외)와 제2호(借地權 과세의 硏究)를 동시에 발간하였다.

1986년도 硏究 事業은 계속 硏究 테-마인 「資産評價」와 「稅務調査」외에 ① 公益法人등에 대한 課稅方向 ② 中小企業稅制 ③ 源泉徵收制度 ④ 國際課稅의 諸問題(이상 租稅制度) ⑤ 稅理士法人의 法的 性格(稅理士制度) ⑥ 減價償却制度(企業會計)의 6 테-마를 추가하는 한편 租稅에 관한 기초이론 硏究를 하기로 하였다. 또 초년도에 발족한 「發生實例硏究會」를 개편하여 判決·裁決 기타 중요 事例를 소재로 하는 해석 및 적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租稅法事例硏究會」를 발족하였고, 이후에도 硏究가 계속되어 日稅連의 brain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8) 上揭書, p.1021.
39) 1994년 말 현재 稅硏 58호까지 발행되었다.

1994년 11월 10일 日稅硏 創立 제10주년 記念式을 全稅共 創立 20주년 記念式과 공동 개최하였는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네트워크 21」이라는 심포지엄을 日稅連, 日稅硏, 全稅共, 讀賣新聞社 공동 주최로 개최함과 동시에 記念論文集등 기념 출판을 하였다.

6. 日稅硏 圖書室

日稅硏은 調査硏究事業과 부대하여 圖書室 開設을 목적으로 1986년 11월 秀和交差点빌딩에서 港區 芝浦의 島倉恒産빌딩으로 이전하면서 1987년 3월 27일 贊助會員을 비롯한 稅理士, 大學 關係者 기타 租稅에 관한 硏究를 행하는 자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圖書室을 開設하였다.[40]

1994년 5월 필자가 日本稅理士制度 연구차 日稅連을 거쳐 日稅硏에 방문하였을 때 佐藤貞夫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일 먼저 안내받은 곳이 이 圖書室이다. 당시 臧書는 1만 4천여권(잡지 제외)이나 된다고 하며 각종 간행물은 물론 각 대학의 연구물도 비치되어 있었고, 93년 9월부터 원격지 대출과 팩스에 의한 복사써비스까지 해준다고 자랑하였다.

한국의 稅務士들에게도 동일한 써비스를 해줄 수 없느냐고 농담반 청을 하였더니 來訪하여 이용시에는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담당자까지도 약속을 해주었다. 韓國稅務士들의 시간 편의등을 고려하여 臧書 圖書目錄 일부를 분양하여 줄 수 없느냐는 필자의 간청에 한참을 고심(?) 끝에 담당자와 숙의한후 쾌히 한 질을 건내주어 좋은 선물로 가지고와서 韓國稅務士會 租稅硏究所에 보관하였으니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아울러 당시 좋은 선물을 준 日稅硏의 佐藤貞夫 사무국장과 시종 필자를 친절히 조언해 주고 안내해 주었던 日稅連 古川 彰 事務局長과 福島 保 國際課 課長에게 감사를 드린다.

---

4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1022~1023.

XI.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의 構築

1. 稅理士 데이타통신의 시작

1977년 1월 20일 오후 1시부터 協同組合 中部 稅理士 데이타통신 시스템이 名古屋 郵便貯金會館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이 組合은 名古屋과 東海 양 稅理士會 所屬 稅理士와 제휴하여 획기적인 협조로 만든 것이라는데 의의가 크다.[41]

2.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의 構築

1985년 2월 正副會長 會議에서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 事業의 추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 事業은 運營協議會(日稅連, 全稅共, 全國데이타, 財團法人日稅硏의 4단체로 구성)에서 조기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데이타 뱅크의 著作權 및 運營方法에 있어서 데이타 뱅크의 構築과 維持의 막대한 資金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동년 4월 日稅連은 東京稅理士 會館에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 「國稅三法 稼動」 記念式을 가졌다. 그것은 稅理士綜合 데이타 뱅크 構築의 일환으로서 國稅三法稼動을 목표로 編集·入力作業을 진행한 결과, 1982년부터 진행하여 오던 相續稅法과 1984년 法人稅法에 이어 所得稅法이 가동되기에 이르러 명실공히 國稅三法에 대한 判例, 裁決, 通達, 相談事例에 대한 稅務情報가 신속히 입수 가능함으로써 회원의 질적 개선에 공헌하였다.

이후에는 地方稅, 經營情報開發에 착수하고 技術面에서는 稅理士會나 全稅理士가 활용하기 위하여 會員所有端末機의 이용에 대하여 日本電信電話 (주)의 인증 기종만도 117종에 이르렀다.

---

41) 上揭書, p.837.

이후 이 데이타 뱅크의 이용·확대에 노력한 결과 민간데이타 뱅크 정보로서 建設情報(CORNET) 써비스와 株式情報(SPIC) 써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42]

데이타 뱅크는 日稅連을 중심으로 관련 團體와 協議를 거쳐 贊助會員에 관하여는 「贊助會員 規約」을 정하여 入會募集하여 운영하는 한편, 全稅共과 稅理士會 데이타 通信 全國協議會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團體의 특성을 살려 상호 협력하면서 稅法, 데이타 베이스를 개발하여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등의 國稅 3法에 각각의 判例, 裁判例, 通達, 相談事例등을 수록하여 稅理士와 그 去來先을 위한 高度 情報化 時代에 유용한 稅務情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43]

XII. 國稅廳의 硏究 委託

國稅廳에서는 1977년부터 稅理士에 대하여 委託硏究制度를 창설하고 세무행정상의 문제에 대하여서 硏究를 委託하여 그 報告를 세무행정의 적정·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1942년 稅理士制度가 확립된 이래 稅理士 및 稅理士會의 역할에 관하여 國稅廳이 신뢰하고, 稅務業務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라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좋은 龜鑑이 되리라 생각한다.

1977년도 豫算으로 약 500万円을 計上하여 주로 硏究 委託 謝禮金에 충당하였다. 制度의 개요는,

① 制度의 운용은 國稅廳長과 國稅局長이 실시한다.

② 硏究는 매년 豫算의 範圍內에서 稅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稅理士에게 委託한다.

---

42) 上揭書, pp.991~992.
43) 上揭書, p.1023.

③ 研究課題는 원칙적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研究期間은 6개월로 한다.

④ 研究作業은 文書로서 報告외에 각 國稅局마다 研究發表會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44]

XIII 日稅研究賞(日稅連學術研究奬勵賞) 制度

日稅連은 1978년부터 稅制와 세무행정 및 稅理士制度에 관한 著書와 論文中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2월 23일 稅理士記念日에 표창하기로 하고 會報등에 모집하여 2월 3일 개최된 審査委員會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1977년도의 日稅連研究賞은 4명에게 수여하고,[45] 이후 계속하고 있다.

XIV 稅理士會 周年 記念 行事

1. 20周年 記念 行事(1962년)

稅理士制度가 확립(1942년 「稅務代理士法」 성립)된 이래 명실공히 일본의 稅務專門家 단체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한 日稅連은 1962년[46] 11월 21,22일 「稅理士制度 20周年 記念式」을 東京 日比谷公會堂에서 皇太子도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

44) 上揭書, p.837.

45) 上揭書, p.850.

46) ① 1961년 東獨의 베를린의 교통제한 문제와 8월의 蘇聯의 수폭실험, 美國의 네바다 지하핵실험 재개등으로 동서 관계는 악화되고, 1962년 10월 케네디 大統領은 蘇聯의 미사일기지 건설을 이유로 쿠바에 대한 海上封鎖를 선언함으로써 蘇聯이 全軍에 전투준비 체제를 명령하여 세계를 전면 핵전쟁의 위험에 빠졌으나 蘇聯이 쿠바로부터 공격적 무기를 철수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② 한국에는 朴正熙 장군에 의한 5.16 軍事革命이 있었고,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 82$선에서 1962년부터 한국의 기아상태 탈출을 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한 때다.

이 자리에서는 稅理士制度의 社會公共性의 인식과 稅理士 倫理의 확립, 고도의 職能技術의 연마, 국민의 納稅道義 앙양과 企業經營合理化 지도 등 國家財政 운용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민복지에 공헌할 것을 기약하는 決議文[47]을 채택하였다.

1962년 정부는 稅制의 체계적 정비의 기초로서 각 稅의 기본적 法律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國稅通則法을 새로이 제정하여, 소송제도와 利子稅·加算稅 제도를 개선·합리화하였다.[48] 동년 8월 정부는 諮問機關으로서 稅制調査會를 두어 稅理士制度의 전면적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日稅連은 稅理士制度 制定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稅理士制度沿革史」를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던 것을 십수년이 지난 1969년 1월 세리사제도 시행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同編纂이 실현되었다.

2. 30周年 記念 行事(1972년)

1969년 10월, 3년후에 개최될 30주년 記念事業의 일환으로 「國際會計人 職業團體 會議」를 개최하기로 의논하고 동 예비 會議로써 아시아 블록 대회를 1970년 1월 14,15일 양일간 타일랜드의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49]

1970년 1월 13일 「國際 稅務·會計職業人 團體 會議 豫備會談」 결단식이 稅理士會館에서 열렸는데, 이 「國際 稅務·會計職業人 團體 會議」는 稅理士制度 시행 30주년의 기념뿐만 아니라 諸外國의 稅務·會計專門家 團體의 代表者와 關係者를 초청하여 각국의 租稅政策 및 稅務行政制度 및 職業專門家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는 타일랜드,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버마, 세일론 등의 각국 대표가 참가하여 1월 14, 15일 방콕의 나라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47) 決議文의 내용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549.
48) 上揭書, p.543.
49) 上揭書, p.684.

同會에서는 아시아 諸國의 稅制와 稅務·會計 職業人制度 및 國際稅務·會計 職業人 團體會議 개최를 테마로 하여 각국의 대표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고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 정부의 大藏省과 國稅廳은 일본과 필리핀간의 租稅條約 촉진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50]

1970년 8월 개최된 稅理士會長 懇談會에서 稅理士 記念日 및 總奉仕日의 실시에 대하여서도 審議되었는데, 稅理士記念日은 매년 稅務代理士法 制定日인 2월 23일로 정하고, 稅理士總奉仕日은 同記念日 사업의 일환으로서 매년 계속하여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案은 12월 理事會에서 「稅理士記念日 行使 實施 要綱」 및 「稅에 관한 無料相談 實施 計劃」을 채택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51]

또 1970년 同記念日 기념행사로서 稅務研究發表大會와 記念懸賞 作文외에 새로이 「稅理士의 노래」 제정을 추진하여 40편의 응모 작품 가운데 선발하였다. 그 외에도 稅務에 관한 無料相談所의 開設과 記念 特別講演會를 열기도 하였고, 2월 16일에는 다음과 같은 오전의 統一論題 오후의 自由論題로 나누어 제1회 稅務研究發表大會도 열렸다.

가. 統一論題에서는,

① 稅理士의 社會的 역할과 그 미래상

② 稅理士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③ 株式會社 監査制度의 개정과 稅理士制度와의 관계

나. 自由論題에서는,

① 資産損失을 둘러싼 所得稅制上 제문제

② 稅務財務諸表에 의한 會計의 합리화

③ 稅理士의 management service

---

50) 上揭書, pp.689~690.

51) 上揭書, p.681.

④ 컴퓨터와 稅理士등 이었다.

이어서 新井隆一 敎授의 「課稅權力의 幻想性에 대하여」라는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 行政法의 입장에서 納稅의 權利와 義務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 전환에 대한 귀중한 내용이었다.[52]

1971년 10월 30周年 記念事業準備委員會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事業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稅理士制度 30周年 記念事業 實行本部」를 설치하였다.[53]

1972년 9월 「稅理士制度 30周年 祝賀 記念式」은 동경 프린스호텔에서 皇太子夫婦 참석하에 거행되었다.[54]

3. 50周年 記念 行事(1992년)

1992년에는 稅理士制度 50周年 記念 행사로써 祝賀 記念式외에 각 稅理士會 50年會史(도서목록 참조)들을 발간하고, 심포지움, 講演會 및 記念 音樂祭 기타 행사들을 가졌다.

XV. 稅理士 實態調査

원래 稅理士 實態調査는 國稅廳이 각 國稅局과 稅務署를 통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왔던 것이나, 連合會가 당국과 협의하여 業界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稅理士會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實態調査를 기획·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실시 要綱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

52) 上揭書, pp.690~691.
53) 上揭書, p.718.
54) 皇太子는 「稅理士의 使命과 職責을 자각하여 稅理士制度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취사를 하였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72년 10월 11일.

1. 第1回 稅理士 實態調査(1968년)

가. 基準日, 對象, 期間

①. 基準日

1967년 12월 31일

② 對象

1968년 1월 1일 稅理士會 회원

③ 期間

67년 1월 1일부터 67년 12월 31일

나. 實施時期 및 回答 마감

① 實施 時期

1968년 8월 중순

② 回答 마감

1968년 9월 30일

다. 調査事項

① 稅理士의 資格등

② 事務所의 形態, 從業員 狀況

③ 關與의 狀況

④ 1967년중 異議申請과 審査請求의 件數

⑤ 1967년중 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調査의 事前通知를 받은 상황등 및 調査入會 狀況

⑥ 1967년중 稅務訴訟에 관련하여 民事訴訟法 제88조에 정한 보좌인이 되었던 건수

⑦ 就任하고 있는 公共的 職責

⑧ 所得稅의 確定申告時 納稅者 指導 件數

⑨ 小企業納稅者에 대한 稅務指導 關與 狀況

調査는 8월 중순 調査票를 全會員에게 송부하여 9월 30일까지 回信토록 하였으나 調査表의 발송이 당초 예정보다 지체되었기 때문에 回答率이 나쁜 회원에 대하여 협력을 구하였다.[55]

위 實態調査의 결과는 1969년 8월 마무리지어 졌다.[56]

2. 第2回 稅理士 實態調査

調査分析 報告書는 韓國租稅硏究所에 보관되어 있고, 내용기재는 생략함.

3. 第3回 稅理士 實態調査(1985년)

1984년 10월(7월 실시) 회원이 행하는 업무의 實態를 구체적·정확히 파악하여 會員業務의 일층 충실과 업무의 개선·진보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1974년 이후 10년만에 제3회 實態調査 集計가 나왔다.

調査는 1984년 1월 1일 현재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調査事項은, 稅理士에 관한 調査와 稅理士의 업무에 관한 調査로 대별하여 총 29개 項目이었고 回答率은 49.1%(21,134 명)이었다.[57]

이 實態調査 分析에 의한 稅理士實態에 관하여는,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에 수록되어 있다.[58]

4. 第4回 稅理士 實態調査

---

5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62.
56) 同 實態調査 결과 개관에 관하여는, 上揭書, pp.682~684.
57) 上揭書, pp.996~997.
58) 申東雲外,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韓國租稅硏究所, 韓國稅務士會, 1988, pp.103~112.

1984년 「稅理士 實態 調査(1985년 보고서 출간)」 후 10년 만에 稅理士 회원의 업무와 사무소 經營을 정확히 파악하여 稅務士業務의 改善·合理化 기여 목적외에 商法과 稅理士法 改正問題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59]를 실시하였다.

XVI 日稅連 會館 建設問題

1. 그간의 經緯

1984년 1월 東京稅理士會의 소유인 澁谷區 千駄ヶ谷의 會館으로부터 日稅連事務所의 移轉 문제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會館 建設 구상수립이 필요하나 이는 수십년 단위의 것이므로 위선 港區芝浦에 있는 「東芝빌딩」 4층 일부(139坪)를 借用키고 하되, 移轉費用 3億円은 全稅共의 預金을 擔保로 銀行에서 借入하되 借入金의 返濟는 2년거치 10년 상환키로 하고 返濟金은 「特別會費」로 충당키로 하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도 각 稅理士會의 회원 1인당 千円, 1993년도에는 500円을 계산한 額을 特別會費로 신설·징수하기로 하였다.

1984년 4월 事務所賃貸借契約書를 調印하고, 6월 18일부터 新事務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60][61]

2. 새 會館 建設問題

1986년부터 1993년 까지 8년간에 걸쳐 日稅連 자체 「會館 建設에 관한 調

---

59)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에 관하여는, 第8章 참조.
6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957~958.
61) 1984년 6월 17일 日稅連 事務所 移轉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84년 6월 25일.

査進行」을 하여 오던중, 최대 장애였던 地價가 下落으로 반전함과 동시에 金利水準의 下落 등 日稅連 會館取得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아 1993년 片岡輝昭 日稅連會長을 委員長으로 한 「會館取得에 관한 特別委員會」가 설치되고 그후 正副會長會, 常務理事會, 理事會 등에서 연구·검토되고 있다.

會館取得의 유의점으로서는,

① 日稅連會館으로서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출 것,

② 羽田空港과 東京驛으로부터의 교통이 편리할 것,

③ 會議場에서 理事會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④ 관련 단체(日稅連, 全稅共, 國民年金基金, 厚生年金基金, 共濟會, 稅退共)와의 공동사용이 가능할 것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1994년 平田公敏 새日稅連會長 하에서는 特別委員會중에 構成員을 증원하여 專門委員會를 설치함과 동시에

① 東京稅理士會와 공동화에 관한 사항,

② 소유형태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取得資金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④ 물건의 선정에 관한 사항등 「基本方針」을 審議하였고, 회원들의 會費增額에 관하여는 1994년 12월 20일 常務理事會와 理事會에서 회원 1인당 會費 400円을 증액키로 하고 會館取得 관련 비용은 特別會計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日稅連 會館의 東京稅理士會와의 공동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辯護士會와 公認會計士協會, 司法書士會 등은 中央組織과 東京에 소재하는 단위조직이 공동취득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特別委員會, 正副會長會, 常務理事會의 결정이 종료된 상태이다.

第 2 節 稅理士業務의 排他的 獨占權 確保와 職域 擴張 努力

Ⅰ.「中小企業診斷士」法案 反對運動

1958년 日稅連은 中小企業廳이 전년도말 立案한 「中小企業診斷士法案」에 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日本公認會計士協會, 計理士會와 협동으로 대책을 검토한 후 이 法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國會에 제안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日稅連의 요망은 일단 실현되었다.[62]

1959년 1월 전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中小企業診斷士 法案의 國會 上程 기미가 보이자 日稅連은 日本計理士協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 등의 우호단체와 다시 회동하여

① 職業會計人은 본래의 업무을 완수하기 위하여 計數管理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고,

② 中小企業診斷員의 업무는 稅理士業務 분야를 침범할 우려가 있으며,

③ 中小企業者의 診斷業務에는 職業會計人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中小企業廳이 立案한 中小企業診斷士 法案에 대하여 3會가 連名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國會, 관계 官廳, 전국 하부조직을 동원하여 法案 반대운동을 실시하였고, 이어 10월에는 3會 連名으로 「反對聲名書」를 작성하여 中小企業廳, 大藏省 등 관계 官廳에 반대의 취지를 분명히하였다.[63]

稅理士業界가 「中小企業診斷士」 資格制度를 반대하는 것은, 만약에 '中小企業診斷이 業으로서 성립되는 경우에는 非稅理士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64]

Ⅱ. 訴訟代理權 獲得을 위한 稅理士法 改正 努力

1959년 2월 名古屋 稅務 懇談會에서 松宮 日稅連 會長은 稅理士法 개정 문

6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505.
63) 上揭書, p.518.
64)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214.

제점으로 稅務調査時 事前通知의 履行, 稅理士訴訟代理權, 代理制度의 創設 등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였다.[65]

1963년 12월에는, 4월부터 稅理士制度의 근본적 검토를 시작하였던 稅制調査會 稅理士制度 特別部會의 결론은 日稅連이 요망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중요 요망사항을 總理에게 답신하여 정부의 稅理士法 개정 立案作業에 반영토록 하였는데 그중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稅理士에게 稅務訴訟代理權을 부여한다. 그 이유로서, 稅務訴訟은 稅務會計의 專門家인 稅理士가 변호하므로서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가 있고 또 원활·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 문제는 납세자 및 납세자 團體인 法人會와 靑色申告會 등도 강력하게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辨理士의 立法 例등을 고려하여 稅理士에게도 稅務訴訟代理權을 부여하거나 적어도 辯護士와의 共同代理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66]고 하였다.

다시 1966년 稅理士法 개정에 있어서도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을 포함한 日稅連의 修正 要望事項[67]과 관련하여,

參議院 大藏委員인 紫田榮 의원의 소견을 보면 '參議院의 자주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나……, 제16회 通常 國會에서 稅理士法 改正案이 次期 國會에서 계속 審査하게 되었다. 稅理士法 改正案은 條文을 깊이 검토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은 法案임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은 일반적 상식으로 되어 國會 내에서 與野를 불문하고 모두 알게 되었다. 法律은 누구에게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원의 職責도 良識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하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당연히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國稅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세무행정에 지

---

6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515.
66) 上揭書, p.576.
67) 稅理士法 改正 修正 要望事項 項目에 대하여는, 上揭書, pp.605~607. 특히 納稅者의 權利擁護와 稅理士의 代理權 존중 문제와 관련하여,
① 稅理士의 稅務에 관한 訴訟代理權을 인정할 것
②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 효력을 강화하여 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을 초래할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稅務公務員의 민간 전직도 많고 신규 응모자도 많다. 그러한 숫자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국가 시험을 한편으로 강화하면서 이와 같은 行政的 矛盾을 은폐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與黨議員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 稅制도 稅法도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法案에 대한 稅理士會의 비장한 결의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경위는 많은 동정과 공감을 갖게 한다. 參議院에는 많은 識見 높은 훌륭한 의원들이 있다. 무릎을 맞대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稅理士法 改正案은 1965년 6월 1일 參議院大藏委員會에서 「審議未了로 廢案」되었다.

Ⅲ. 靑色申告會 問題

全國靑色申告會 總連合이 '個人 事業者를 위한 稅務書類의 作成, 稅務相談은 靑色申告會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망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國稅廳側에서도 일정 경우에 한하여 稅務書類의 作成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였으나, 日稅連은 稅理士法 제50조에 규정하는 臨時稅務書類의 作成을 할 수 있는 자의 확대 해석은 반대키로 하고 反對意見書[68]를 작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69]

1963년 10월 이 「稅理士法 제50조 問題」에 대하여 國稅廳과 日稅連, 全國靑色申告會 總連合 간에 「3자 協定」이 조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小企業 納稅者에 대한 記帳에서부터 申告에 이르기까지 稅務指導에 대하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稅理士法 제50조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는 稅

68) 反對意見書의 내용에 대하여는, 上揭書, pp.565~566.

69) 1963년 10월 17일 이후 1~2개월이 稅理士制度 부침의 중대시기로 판단하여 東京 日比谷公會堂에서 全國納稅者政治連盟結成大會 및 臨時稅理士制度反對總蹶起大會가 열렸고, 이를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蹶起大會가 계속되었다. 이때 前田 日稅連 會長은 "稅理士制度 危機에 처하다……"라는 요지의 聲明을 발표하였다.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237~244.

制調査會 特別部會의 審議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小企業 納稅者에 대한 稅務指導에 관한 양해 사항」을 보면, '申告納稅制度는 납세자 자신이 申告하는 외에는 稅理士의 關與, 靑色申告會의 指導, 稅務署의 納稅相談 등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小企業納稅者에 대하여는 記帳에서부터 申告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적극적인 지도가 부족하였다. 이것은 申告納稅制度의 건전한 발전으로 보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들 납세자를 위하여 稅務相談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記帳에서부터 申告에 이르기까지 계속적 지도가 특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小企業納稅者의 요망에 부응하여 靑色申告會 總連合, 日稅連 및 國稅廳은 하기와 같이 실시할 것을 양해하기로 하였다.

첫째, 全國靑色申告會 總連合 및 日稅連은 그 조직을 통하여 靑色申告會의 機能 및 稅理士의 職能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기타 실정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小企業納稅者에 대한 記帳 및 決算과 申告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指導(필요한 경우에는 記帳代行 포함)를 실시한다.

둘째, 國稅廳은 상기 시책에 대하여 가능한한 지원과 협력을 한다. 또 관계機關을 통하여 特殊法人인 商工會議所 및 商工會에 대하여서도 협력을 구한다.

셋째, 全國靑色申告會 總連合과 日稅連 및 國稅廳은 상기의 시책이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하여 각각의 조직을 통하여 필요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하여 제반문제를 협의한다'는 등.[70]

Ⅳ. 稅理士의 「稅務監査制度」 建議

1967년[71] 稅理士制度 25주년을 맞아 稅理士의 사회공공적 사명과 제도의

7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574~575.

71) 1967년 6월 中國 최초의 수폭실험에 성공하였고, 프랑스도 6,7월에 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남태평양에서 원폭실험을 강행하였다.

비약적 발전의 견지에서 稅制 및 세무행정의 民主的 改善의 노력, 中小企業者를 위한 적절한 稅務指導 體制의 確立, 稅理士制度의 改善 合理化에 부응하기 위한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統一的 연수제도의 실시키로 하였다.

이 해 株式會社의 監査役 制度를 폐지하고 公認會計士에 의한 외부 監査制度를 실시하려는 案이 논의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稅理士도 監査適格者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2월 監査役 制度의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요로에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를 보면,

첫째, 法人의 內部 監査役 制度의 폐지는 時機尙早이고 오히려 제도의 改善 合理化 방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監査役 制度와 公認會計士 制度는 그 목적상 기능이 각기 다른 것으로서 각각의 입장에서 제도의 존치방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현행의 證取監査 이외의 監査 대상에 대하여 널리 외부 監査制度의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監査人의 適格性 및 監査人의 필요 인원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稅理士는 稅理士法上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는 職業人임과 동시에 실제로 稅務會計 監査業務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이미 사회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장차 外部 監査 대상의 확대 검토에 있어서는 적어도 현행 證取監査 이외의 監査 대상에 대하여는 稅理士도 公認會計士와 동등하게 法制上의 監査適格者로 함으로써 제도의 寡占體制를 배제하고 外部監査의 효율화 방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2] 이러한 주장은 1953년에 이미 관계기관에 陳情書를 제출한 바 있고,[73] 日稅連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V. 「社會保險勞務士法」 問題 解決

7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33.
73) 第5章 第4節 참조.

1967년 9월 日稅連 總務部는 制度專任部會를 열어 「社會保險勞務士」(이하 「社勞士」라 한다)法案에 대한 對策을 審議하였다. 그 결과 同法案 제3조 제2항(자격)을 修正하여 稅理士에게도 勞務管理士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社勞士法案에 관한 陳情書」[74]를 제출하기로 하고 陳情書 제출후 業界의 요망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勞務士法對策委員會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968년 2월 日稅連은 社勞士法案을 다루는 國會등의 움직임이 業界의 요망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 점을 중시하여 緊急法對策本部會를 열어

첫째, 同法案이 二元立法 형태로 國會에 上程이 확정적이라는 사실.

둘째, 法 제3조(자격)중에 稅理士를 추가토록 하는 修正案은 法 이론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회원의 旣得權 確保를 위하여는 요망의 취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론하였으나, 의견조정을 유보한 채 최종적으로 同法案對策을 法對策本部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社勞士法案은 '다른 法律에 별도로 정한 경우 및 稅理士, 會計士 등이 그 업무에 부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삽입하여, 4월 衆議院 緊急同意로 제안·가결되었고 5월 參議院에서도 原案대로 가결되었다.

이에 日稅連은 社勞士法의 실시를 목전에 두고 9월 5일 社勞士法對策委員會와 商法改正對策委員會의 合同委員會를 개최하여 「社勞士業務에 관한 統一講習會」의 실시 要綱案에 대하여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 講習會는 日稅連과 각 單位會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② 開催日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동년 11월 日稅連은 勞動大臣과 社會保險廳長官에게 「社勞士法의 시행에 따른 稅理士의 業務取扱에 관하여」라는 要望書를 제출하였다.[75]

社勞士法의 시행 기일 및 同法 제27조에 따른 「政令으로 정하는 업무」를

---

74) 陳情書 내용에 관하여서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47.

75) 社會保險勞務士法의 시행에 따른 稅理士의 業務取扱에 관한 要望書 내용에 관하여는, 上揭書, p.665.

명시하기 위한 政令이 11월 制定·公布됨으로써 12월부터 실시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厚生·勞動 兩省의 省令 및 社勞士의 선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고시도 公布되었다.

1981년 全國社會保險勞務士會(이하 「全社勞連」이라 한다)는 社勞士法 改正을 진행하였고, 稅理士가 부수업무로서 社勞士業을 할 수 없도록 社勞士法 제27조 단서 「단……政令으로 정하는 업무에 부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를 삭제하려는 것이었다.

日稅連은 稅政連과 연대하여 改正案의 國會 上程前에 삭제 철회 운동을 전개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각 지방출신 自民黨 勞動·社會部會委員會 및 衆·參議員, 社會勞動委員會 委員에게 중점적 반대 진정[76]을 하는 한편 3월 全社勞連 간부 임원과 2차에 걸친 懇談會를 갖고 稅理士가 附隨業務로서 행하는 예외 규정은 존속하기로 하였다.[77]

한편 社勞士가 賃金臺帳을 작성하는 때 源泉徵收 事務의 일부를 행하는 자가 있으나 稅理士法 위반으로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므로써 이 건은 일단락된다.[78]

同法案은 國會 參議院에 먼저 제출되어 社會勞動委員會에서 審議·可決되는 과정에서 行政書士會의 요구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參議院과 衆議院에서 可決되었다.[79]

1992년 年頭 社會保險勞務士連合會가 다시 상기 附隨業務의 削除를 위한 法改正을 시도하였으나 稅理士會의 緊急 陳情으로 동년 4월 이를 철회하였다.[80]

Ⅵ. 「不動産鑑定士法」 問題 解決

---

76) 勞務士法 改正에 관한 陳情書에 대하여, 上揭書, pp.905~906.
77) 上揭書, p.903.
78) 上揭書, pp.903~904.
79) 上揭書, p.907.
80)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448.

1969년[81] 經濟面에서 일본은 國民總生産이 西獨을 추월하여 美國 다음 제2위 국이 된다. 稅制面에서 정부의 稅制調査會는 8월 「經濟의 안정적 성장에 대응하는 稅制의 향방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諮問, 「稅制簡素化에 대한 제3차 答申」, 「土地稅制의 향방에 대한 答申」을 한다.

동년 7월 日稅連은 不動産鑑定士 및 同特例試驗에 대한 法律案이 國會에 上程됨에 따라 稅理士에게 受驗資格을 인정하여 줄 것을 政令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要望書를 작성하여 參議院建設委員會 委員長에게 제출하였다.[82]

「不動産鑑定士 特例試驗 및 不動産鑑定士補 特例試驗에 관한 法律案」이 1970년 3월 國會에서 可決·公布되므로써 일정 실적경험 年數가 있는 稅理士에 대하여는 受驗資格이 주어졌는데 2년간의 限時立法이었기 때문에 각 稅理士會에서는 受驗에 대비한 講習會를 실시하여 강사의 알선·파견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6월에 公布된 鑑定士 및 鑑定士補 特例試驗 受驗資格등에 관한 政令에서는 稅理士의 受驗資格 부여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日稅連이 당국과 절충을 계속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83]

Ⅶ. 公認會計士의 稅理士會 入會 問題

1. 公認會計士인 會員의 脫會 問題 등

1970년[84] 3월 24일 日稅連 常務理事會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稅理士法 제51조의 2에 규정한 公認會計士인 稅理士의 特例에 대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81) 1969년 7월 21일 美國의 아폴로 11호의 암스트롱 선장이 달의 「고요의 바다」에 착륙하여 우주여행의 일보를 내디뎠다.
8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80.
83) 上揭書, p.702.
84) 1970년 3월부터 183일간 大阪 萬國博覽會가 개최되어 77개국이 출품·참가하였다. 3월에는 적군파 학생에 의한 요-도호 납치사건과 三島由紀夫 「방패회」 간부의 할복 자살사건이 있었다.

지적함과 아울러 회원 일부가 이 제도를 확대 해석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는데 대하여 엄격히 비판하는 意見書를 채택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稅理士業務를 상시 행하는 公認會計士인 稅理士에 대하여는 稅理士會에 入會하고 專業의 稅理士와 마찬가지로 會則등을 지켜 會의 監督과 統制하에 稅理士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通知의 特例는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으로서 通知制度의 운영에 맡기는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公認會計士인 稅理士는 稅理士業務에 대한 그 비중이나 관여 건수로 보아 그 실태가 專業 稅理士와 다를바 없다.

넷째, 최근 通知의 特例를 이유로 稅理士會로부터 脫會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稅理士制度의 통일적 운용과 회원에 대한 會의 역할과 질서유지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稅理士法을 통한 主務官廳의 監督·行政事務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稅理士制度를 유지하는 法定組織중에 회원은 稅理士制度의 개선·진보에 노력하여야 할 連帶責任이 있는 것이고 稅理士會의 회원인 이상 公認會計士 資格을 가진 자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85]

2. 通知公認會計士制度 廢止

稅理士法은 1980년 10월 13일 施行됨으로서 稅理士業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法 施行에 따른 施行令과 施行規則 制定時 日稅連側은 大藏省과 國稅廳에 대하여 5개항의 要望事項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公認會計士가 國稅局長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稅理士業務의 범위는 受任 件數 5건 또는 稅理士報酬 년액 100万円 미만으로 한정하도록 요망하였으나,

① 위촉자 수는 10명으로 한다. ② 위촉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위촉자가 개

8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94.

인인 경우에는 그 수의 1/2로 한다. ③ 通知公認會計士로서 시행일 후 3년간 계속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그 이후의 위촉자의 수는 20명으로 하도록 한다.

1981년 개정 稅理士法 施行時 未入會 稅理士 3,886명에 대하여 改正法 취지를 通知하고 稅理士會에 入會토록 한 결과 4월 13일까지 520명이 入會하고 135명이 登錄抹消 절차를 마쳤다. 法 개정 6개월 경과후 未入會 稅理士數는 3,231인으로서 辯護士 235명(通知辯護士 52명 포함), 公認會計士 1,732명(通知公認會計士 1,386명 포함), 稅理士 1,264명이었다.

通知公認會計士制度는 1983년 10월 13일까지만 존속하였는데,[86] 1983년 10월 개정 稅理士法 施行으로 3년간 유보되었던 通知公認會計士制度가 廢止되자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稅理士會에 入會한 公認會計士는 약 660명, 3년간 약 860명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稅理士會에 入會節次를 거치지 않은 약 540명에 대하여는 登錄抹消措置를 취하였다.[87]

한편 公認會計士의 자격으로 稅理士業務를 하는 소위 許可制度에 대하여 國稅廳은 이미 1983년 8월 26일부로 「稅理士法 附則 제37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公認會計士의 申請에 대한 國稅局長의 許可基準등에 대하여」라는 통달을 시달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公認會計士들은 公認會計士會에 入會하여 公認會計士로서 활동하는 외에 稅理士로서 당연히 稅理士會에 入會하여 稅理士會의 敎育 및 監督하에 稅務業務를 하고 있다.

日稅連이 조사한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 報告書」에 의하면 1993년 12월말 현재 1,674명의 公認會計士가 고유의 公認會計士業務를 하는 외에 稅理士로서 稅理士會에 入會·登錄하여 稅理士業務를 수행하고 있다.[88][89]

---

86) 上揭書, p.901.
87) 上揭書, pp.950~951.
88) 第8章 第3節 Ⅶ 他士業 資格 참조.
89) 稅理士會는 會員이 辯護士, 公認會計士 등 어떠한 명의를 갖고 있더라도 稅理士의 業務에 관하여는 稅理士會가 정한 報酬規定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登錄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는 公認會計士의 企業會計 監査業務와 稅務士의 稅務業務(행정 포함)를 구분하는 취지이면서도 公認會計士가 稅務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稅務士會의 入會·登錄·敎育·業務遂行 및 報酬體系, 監督등에 대한 체제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도 운영면에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Ⅷ. 「臨時稅理士」 反對運動

稅理士法 제50조의 소위 臨時稅理士의 資格付與를 둘러싸고 日稅連은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있어서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1970년 10월 全國商工會連合會가 自民黨 稅制調査會에 대하여 '商工會등의 經營指導員등에게 臨時稅理士制度의 적용을 받도록 稅理士法 施行令 14조의 개정을 요망한다'는 취지의 要望書를 제출하였다. 이어 1971년 5월 商工會連合會는 日本商工會議所와 함께 日稅連에 대하여 「經營指導員에 대한 臨時的인 稅務書類 作成등의 資格付與에 대한 協助의 件」이라는 제목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안을 첨부하여 施行令 개정에 협력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日稅連 指導部와 制度部는 수차 회합을 거쳐 11월 商工會의 요망에 대한 반대의견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全國商工會連合會의 要望書를 받은 自民黨側에서도 經營指導員을 臨時稅理士로서 활용하는 것이 民主商工會 대책상 유력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강하여 自民黨 同稅制調査會는 본건을 審議하기 위하여 「稅의 執行에 관한 小委員會」를 설치하였다.

日稅連은 稅制改正에 관한 自民黨 稅制調査會에 대한 요망 설명에 이어 상기 改正反對要望書를 제출하여 稅理士法 제50조의 확대 적용에 반대하고, 施行令 개정의 불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11월 개최된 自民黨 稅制調査

(開業)の手引, 1993, p.58.

會「稅의 執行委員會」에 副會長을 公述人으로 출석시켜 商工會 要望事項의 反對意見을 설명하였다.[90]

商工會등의 經營指導員에게 소위 臨時稅理士資格을 付與하기 위한 稅理士法 施行令 제14조 개정 문제는 1971년 12월 自民黨 稅制調査會 小委員會에서 稅理士會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여 개정한다고 決議되어 「1972년도 稅制改正大綱」의 말미에 '商工會의 經營指導員중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臨時稅理士의 許可 대상에 추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관계 지역의 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日稅連은 同施行令의 개정으로 인한 확대 적용되는 경우 稅理士의 職域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절대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제반사정상 施行令의 개정은 결정적이였으므로 國稅廳, 中小企業廳, 全國商工連合會 등과 교섭을 계속하여 施行令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稅理士業界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약하였다.[91]

1972년 1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緊急常任理事會를 개최하여 施行令 改正 反對의 기본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당초 自民黨이 施行令 개정을 결의할 때 '稅理士會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전제로 施行令 개정에 찬성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나 현재 地方自治團體 公務員, 農協·漁協 직원들에게 인정된 것과 같이 그대로 둔다면 稅理士의 職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1월 國稅廳으로부터 施行令이 개정되는 경우 國稅廳 및 中小企業廳, 日稅連, 全國商工會連合會의 4자에 의한 양해사항에 관한 調整試案이 제시되었다. 同試案에는 商工會의 經營指導員에게 資格付與가 결정되는 경우의 設置, 地區, 人數, 許可 稅目, 許可 時期 및 期間, 對象, 事務範圍 등 허가의 대상이 되는 자의 요건을 한정함과 동시에 國稅廳, 中小企業廳의 협력의무를 협

90) 商工會등「臨時 稅務書類作成의 資格付與」에 대한 要望書의 요지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726.
91) 上揭書, p.727.

정하고자 한 것이다.

日稅連은 同試案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國稅廳, 中小企業廳, 商工會連合會와 절충을 거듭한 결과 稅理士事務所와의 거리 제한을 제외하고 양해사항 안대로 동의하였다. 그 절충에 있어서는,

① 設置對象이 된 商工會로부터의 稅理士事務所와의 거리,

② 經營指導員의 經營改善補給事業에 종사한 년수,

③ 한 商工會에 許可되는 經營指導員의 수,

④ 臨時의 稅務書類 作成의 대상이 되는 자의 所得金額 등이 논의되었다.[92]

1972년 1월 日稅連 正副會長 會議時 「臨時稅理士」라는 종래의 통칭은 부적절하므로 이후 통일호칭으로서 「臨稅」로 칭하기로 하였다. 稅理士法 施行令 제14조의 改正案이 2월에 議決·公布되고, 國稅廳, 中小企業廳, 日稅連, 全國商工會連合會의 4자에 의한 상기 양해사항 조인식이 각계 요인 참석하에 國稅廳에서 있었고, 國稅廳은 동일부로 「商工會의 臨職員에 대한 臨時稅務書類作成등의 허가에 대하여」라는 長官 통달을 발하였다.[93]

1976년 1월 商工會 「臨稅」문제와 관련하여 商工會側은,

① 制限所得을 300万円으로 引上할 것,

② 20㎞의 距離制限의 2 가지 점을 주장하였으나 距離制限에 대하여는 山間僻地, 暴雪地帶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所得制限 300万円 건에 대하여 日稅連은 200万円 선으로 주장하여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國稅廳은 國民所得과 消費者物價등을 고려하여 250万円[94] 案으로 조정하였다.[95]

日稅連은 小企業納稅者 對策과 稅理士法 改正 作業과의 관련사항 검토 중 근본적 방법론으로서,

---

92) 稅理士法 施行令 제14조중 商工會에 관한 양해사항의 내용은, 上揭書, pp.732~733.

93) 上揭書, p.733.

94) 이 250万円은 1979년 그간의 物價上昇과 所得伸張등을 감안하여 300万円으로 인상하였다. 上揭書, pp.868~870.

95) 上揭書, pp.832~835.

① 小企業納稅者 對策을 완전히 稅理士業界에서 인수하는 방법,

② 小企業納稅者 對策에서 稅理士業界가 손을 떼는 방법,

③ 현재의 協力方式을 계속하면서 改善策을 강구하는 방법 중 ③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여 단계적으로는 小企業納稅者 對策을 稅理士業界에서 모두 인수하는 태세의 稅理士法 改正 要綱으로 「稅務書類의 범위의 擴大」「稅務相談 범위의 擴大」의 방향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國稅廳에서 通知된 商工會의 「臨稅」허가자의 1976년도분 所得稅確定申告書 작성 상황을 보면 「臨稅」許可人員 367명, 申告作成 件數는 23,640건이었는데 모두 所得控除前 所得이 350万円 이하였다.[96]

Ⅸ. 「行政書士法」改正 問題 解決

1. 行政書士會의 請願으로 行政書士法 改正運動 展開

1977년 1월 行政書士法 일부 改正案에 대하여 行政書士 업무는 稅理士法上 당연히 稅理士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稅理士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行政書士會가 진행중인 同法 改正案은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다는 관점에서,

첫째, 無償業務를 行政書士의 獨占業務로 하려는 개정은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 稅理士등이 行政書士 자격을 갖는 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개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였다.

2. 日稅連의 對應

96) 上揭書, p.836.

日稅連은 辯護士會, 公認會計士 協會등과 同法案에 대한 반대의견을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日稅連과 日稅政連은 衆·參 兩院에 反對請願을 하였다. 현재 官公署에 제출하는 약 3,000종의 서류 전부를 行政書士의 獨占業務로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무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고 7稅目 이외는 모두 行政書士의 업무로 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3월 이후 衆·參 兩院 의원에 대하여 강력한 反對請願을 계속한 결과 國會쪽에서도 급속히 稅理士業界의 反對請願의 취지를 이해하여 100여명의 의원이 日稅連側의 請願의 소개자가 될 정도였고, 自動車販賣, 整備業界등에서도 行政書士法 改正反對로 측면적 효과가 있어 行政書士法의 개정 請願은 上程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다. 즉, 自民黨의 地方行政部會가 行政書士法 改正問題를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自民黨 政務調査會도 「찬성」「반대」의 쌍방 請願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野黨들도 같은 경향으로 선회함으로써 行政書士會의 請願으로 인한 行政書士法 개정의 위기가 저지된 것은 日稅連이 중심이 되어 稅理士業界가 일치 단결로서 反對請願을 한 성과였다.[97]

X. 제1차 商法 改正 反對運動(外部 監査法人 範圍 縮小)

1. 外部 監査制度의 必要性

1965년 3월에 발생한 山陽特殊鋼의 倒産 및 粉飾決算 事件을 계기로 大企業의 經理業務 부정을 폭로하는 불상사가 연발하여 중대한 사회문제가 됨으로써 企業의 粉飾決算 防止策의 강화가 긴급한 과제로 되어, 먼저 大藏省의 企業會計審議會에서 監査基準, 監査實施準則, 監査報告準則 등 일련의 개정조치가 강구되어 1966년 4월에 마무리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監査 주체인 公認會計士의 지위강화의 관점에서 日本公認會計士 協會의 特殊法人化와 監査

97) 上揭書, p.832.

法人制度의 신설을 주안으로 하는 公認會計士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동년 6월 실현되었다.

2. 法務省의 監査制度 改正 試案

다시 企業會計審議會에서는 1966년부터 證券去來法에 따른 監査制度의 향방을 商法上의 監査制度와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나 이와 같은 방향의 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商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法務省의 法制審議會 商法部會는 1966년 11월부터 粉飾決算防止를 위한 商法의 개정 문제에 대하여 審議·檢討하기 시작하여 1967년 5월에는 「監査制度에 관한 問題點」를 A안과 B안으로 발표하여 관계 요로의 의견을 구하였다. 그후 그 결과를 B안에 따라 審議를 진행하여 1968년 9월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의 명의로 「株式會社 監査制度 개정에 관한 試案」을 確定·公表하여 10월 日稅連을 비롯한 각 방면에 의견 조회를 구하였다.

同試案에서 株式會社의 粉飾決算과 不正 經理를 일소하기 위한 株式會社의 監査制度를 강화·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法人의 監査役의 권한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監査役에게 會計監査 외에 業務監査권한도 부여한다.

둘째, 監査役의 地位를 代表役으로부터 독립시킨다.

셋째, 資本金 1億円 이상의 大會社에 대하여는 公認會計士 또는 監査法人에 의한 事前監査를 義務化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러한 社會情勢에 따라 日稅連은 1965년 12월 「商法改正·會計制度特別委員會」를, 1966년에는 이를 각각 분리·독립한 特別委員會로 하였고, 67년 12월에는 종합적인 일관된 법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法對策本部」를 발족시킴과 동시에 商法改正特別委員會는 「商法改正對策委員會」로 개조하는 등 商法 監査制度 개정의 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의 충실·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리하

여 1967년 10월 「監査制度에 관한 問題點」에 대하여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監査役의 독립성 유지 기타 會計監査機能을 충실히 하고, 代表役 會議 業務監査 기능을 강화한다는 A안의 방향」보다 監査役에게 業務監査를 행하게 하는 등 그 독립성과 監査機能의 강화를 도모하는 1950년 개정전의 것과 같은 B안의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法務省에 제출하였다.

3. 日稅連의 反對 趣旨

日稅連은 株式會社 監査制度 改正案에 관한 民事局慘事官室 試案이 公表되면서 「資本金 1億円 이상의 株式會社는 公認會計士 또는 監査法人에 의한 會計監査를 받아야 한다」는 會計監査人 制度를 商法에 도입하는 大會社의 特例創設은 稅理士業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아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商法改正對策委員會의 意見書를 法務省民事局慘事官室에 제출하였다.[98]

특히 이 意見書에는 小會社에 대한 조치로서, '소위 大會社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나, 1967년 4월 公表된 監査制度에 관한 문제점에서 A안 및 B안 모두 小會社의 特例로서 小會社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다. 그러나 試案에서는 이를 전혀 무시하고 監査役의 權限 및 機能强化를 小會社에까지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 小會社에 대한 탄력성 있는 배려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日稅連의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法制審議會 商法部會는 각 방면의 의견을 수집한 「株式會社 監査制度 개정에 관한 試案」에 대한 회답을 참고로 약 10개월간 審議하여 의견을 조정 1969년 7월 「株式會社 監査制度 改正 要綱案」을 결정하였는데 그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監査役이 代表役의 직무·집행을 監査하는 것으로 하고 監査役의 監査權을 부여함과 동시에 권한을 강화하는 외에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

98) 同 意見書에 대하여는, 上揭書, pp.668~670.

② 資本金 1億円 이상인 大會社에 대하여 外部 會計監査人 監査를 도입할 것.

③ 企業이 1년 決算을 채용한 경우에 중간 배당을 가능하도록 할 것 등.

이와 같은 동향에 대하여 1969년 10월 日稅連은 商法改正對策委員會를 개최하여 大會社에 대한 特例制度를 설치하는 등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商法의 개정은 稅理士制度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商法改正反對蹶起大會를 개최하여 稅理士會의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法案의 國會 상정을 저지할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10월 東京稅理士會를 시작으로 각 稅理士會의 궐기대회가 있었고, 「株式會社監査制度 改正 要綱案」에 대한 意見書를 法務省에 제출하고 陳情書를 관계 機關등에 송부하였다.[99]

한편 12월에는 商法 改正 反對 國民的 저지운동 차원에서 日稅連과 日稅政連 공동 주체로 中小企業에 위기를 자초할 稅理士制度 붕괴를 꾀하는 商法改正法案의 國會 상정 저지를 위하여 모인 「商法改正反對全國總蹶起大會」를 東京에서 개최하여 「商法改惡粉碎」를 제창한후 가두행진이 있었다. 이어 對策委員會는 이 法案을 國會 上程前에 저지할 것인가? 國會審議 단계에서 저지할 것인가? 를 논의한 끝에 日稅政連과 공동 투쟁으로 國會 衆·參議院의 法務·商工·大藏委員會 등에 대하여 진정하는 한편 自民黨 國會議員 38명을 日稅連會館에 초청하여 稅理士業界의 商法改正反對運動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였다.

日稅連의 반대운동의 한편, 企業會計審議에 있어서는 商法監査와 證券去來法 監査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관점에서 1969년 2월에 企業會計原則의 修正作業에 착수하여 12월 「企業會計原則修正案」을 公表하는 동시에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조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商法改正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발표하였다.

첫째, 商法과 證券去來法에 있어서 會計基準을 일치함으로써 동일회계기준에 따라 監査가 행사여질 것을 명확히 한 규정을 商法에 규정할 것,

둘째, 商法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종속회사 주식 평가에 대하여 低價法의 채

99) 商法 改正에 관한 陳情書의 내용에 관하여는, 上揭書, pp.703~705.

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

셋째, 企業會計原則修正案의 취지에 어긋나는 法務省令과 財務省令을 수정하여 양자가 일치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이를 받은 法制審議會 商法部會는 1970년 3월 商業帳簿와 從屬株式會社의 평가의 2 항목을 추가한 위에 「商法의 일부 改正法律案 要綱案」을 결정하여 法務大臣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日稅連은 3월 法制審議會 委員長에 대하여,

① 粉飾決算防止와 관계없는 株式會社 監査制度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과,

② 大會社 會計監査人制度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③ 支配會社의 監査役 및 會計監査人이 從屬會社를 調査하는 것을 반대한다.

④ 中小會社가 무시되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는 등의 改正反對 要望書를 배포하였다.[100]

日稅連이 反對運動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商法의 일부 개정에 관한 法律 要綱」이 法制審議會으로부터 法務大臣에게 진달되어 國會 上程 공산이 크게 되자, 日稅連의 商法對策 推進本部는 「商法對策特別室」을 설치하고 진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同法律案의 國會 上程을 저지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團體와 공동 주최로 「商法改惡粉碎 中小企業緊急大會」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2월 自民黨 法務部會가 열렸을 때 日稅政連은 中小企業政治連盟, 中小企業家同友會 全國協議會와 공동 주최로 「商法改惡沮止 國民總蹶起大會」[101]를 개최하였다.

4. 外部 監査對象 範圍 縮小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商法改正法律案은 4월 自民黨 政調審議會에서

100) 上揭書, pp.707~708.
101) 이때의 決議文 내용은, 上揭書, pp.720~721.

法務省 原案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日稅連은 이러한 情勢變化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망사항을 작성하여 自民黨 3役을 비롯한 관계 각 의원에게 제출·진정하였으나 同法律案은 國會 會期終了로 次期國會로 넘어가게 되었다.

1972년 2월 日稅政連은 中小企業政治連盟과 공동으로 「商法改惡反對緊急蹶起大會」를 衆·參 國會議員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東京에서 개최하고, 商法問題가 稅理士業界나 中小企業團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임을 촉구하여 同法案의 國會 上程을 지연시켰다.[102]

그러나 同商法 改正法律案이 1973년 2월 特別國會에 上程되자 日稅連은 日稅政連, 中小企業政治連盟 및 中小企業家同友會 등과 공동으로 法務省의 3차 國會 上程 粉碎를 위한 「商法改惡粉碎 國民 總決大會」를 개최하고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商法改正 3法案(商法一部改正案, 同施行에 따른 整理法案, 株式會社 監査特例 法案)이 3월 衆議院에 제출되자 日稅連은,

첫째, 會計監査人의 監査를 본법에서 제외하고 特例法으로 하되 적용회사의 범위를 資本金 1億円 이상에서 5億円 이상으로 인상할 것,

둘째, 會計監査人의 결격사항등이 명확하지 않고 施行令에 委任된 것을 본법에서 명확하게 할 것,

셋째, 粉飾決算 방지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등의 수정 운동을 계속하기로 정하고 會長 이하 任員 다수를 自民黨 本部에 파견하여 출석의원 80여명이 商法問題를 중심으로 간담 협력을 요청하였다.

衆議院에 제출된 「商法改正 3法案」은 5월부터 法務委員會에서 審議開始되었는데, 7월 「資本金 5億円 이상」을 「資本金 10億円 이상」등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衆議院 本會議에서 가결되고 參議院에 이송되자 日稅連은 이러한 修正案이 채택되면 商法改正 反對運動을 정지하기로 하였다.

商法改正 3法案[103]은 7월부터 參議院 法務委員會에서 審議開始되어, 9월 參

---

102) 上揭書, p.739.

103) 「商法의 一部 改正 法律案」, 「株式會社의 監査등에 관한 商法 特例에 관한 法律案」, 「商法 一

議院 本會議에서 일단 審議未了되었다가 익년 2월 일부 修正案[104]으로 가결되었으나 3項目의 附帶決議를 채택하여 參議院 本會議 議決 직후 衆議院으로 이송되었다.

參議院으로부터 이송된 衆議院法務委員會는 3월 一部修正案을 가결, 衆議院本會議에서도 가결되어 1966년 가을 法制審議會가 審議開始한 이래 7년 4개월만에 商法改正 3法案이 성립하였다.[105]

그러나 당초 稅理士業界가 우려하였던 外部 監査對象이 資本金 1億円 이상의 法人에서 10億円 이상으로 인상되어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은 오로지 日稅連 이하 稅理士들의 반대운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法이 시행된 1975년 法人稅 申告時에는, 商法改正에 따른 監査制度가 강화되었으나 外部 會計監査人의 監査理由등으로 決算이 확정되지 않아 申告期限까지 確定申告書를 제출하지 못한 法人에 대하여는 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어 원칙적으로 1개월간 期限延長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106]

XI. 제2차 商法 改正 反對運動(商法·監査特例法 改正 反對)

1. 外部 監査對象 法人 擴大 反對運動

1979년 로키드사건과 政治獻金을 둘러싼 大企業의 不正經理 非行등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는 이러한 事件防止를 위하여 會社法 개정을 商工部會에 요청하였으며 商工部會는 會社法 개정 계획에 착수하였다. 日稅連은 이중 「株式會社의 計算公開에 관한 改正 試案」에 대하여 商法改正一部反對運動을 하기로

部 改正 法律案등의 施行에 따른 관계 法律의 整理등에 관한 法律案」 등 소위 商法 改正 3法의 성립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74년 3월 21일 1면.

104) 參議院의 修正點은 「子會社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母會社의 監査役의 調査등을 거부할 수 있다」 외 2 가지였다.

10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763~764.

106) 上揭書, p.797.

결정하였는데, 이는 資本金의 인하에 따른 會計檢査人의 監査, 强制會社의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인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大規模 會社에 대한 監査制度 强化 名目下에 資本金의 형식적 인하에 의한 外部 會計監査人(公認會計士 및 監査法人)에 의한 外部監査를 강제하는 會社의 범위를 확대할려는 商法改正 방향에 반대한다.

둘째, 會計監査人에 의한 被監査會社의 범위는 「모든 上場法人」과 監査特例法의 운용기준인 「資本 10億円 이상의 法人」에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일부 大企業에서 볼 수 있는 粉飾決算, 不正經理 非行등의 防止의 필요성을 위하여 모든 株式會社의 業務·運營의 修正 公評, 財務·業務에 관한 情報開示시스템을 강화하려는 商法改正 방향은 99%가 中小會社인 현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곤란한 제도이고 事務的·經濟的으로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넷째, 강화가 필요한 大規模의 株式會社에 대하여는 별도의 特例法등에 의한 적절한 규제를 하고, 小規模 株式會社에 대하여는 간소·합리화를 배려하는 商法體系의 대개혁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 등 이었다.

11월 日稅連은 「會計監査人의 監査를 받아야 할 法人의 범위」에 관한 要望書를 法制審議會 商法部會 및 法務大臣에게 제출하였다.[107]

2. 監査特例法의 內容 및 改正

法制審議會 商法部會는 「株式·機關 計算公開의 試案」을 기초로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12월 「商法등의 일부 改正法律案 要綱案」을 결정하여 1981년 1월 法務大臣에게 答申하였다.

그러나 이 要綱案중 稅理士會의 관심사인 中小會社에 대한 半期報告制度등이 빠져있고 「監査特例法」 관계에서는,

---

107) 上揭書, pp.913~914.

① 會計監査人이 관여할 監査强制會社는 여전히 資本金 5億円 이상, 賣出額 2百億円 이상, 負債總額 1百億円중의 1에 해당하는 會社로 하고,

② 資本金 1億円 이상 5億円 미만의 會社에 대하여는 定款의 규정에 따라 任意監査를 인정하고,

③ 監査業務와 稅理士業務와의 특별 이해 관계 배제의 규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稅理士會의 요망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會計監査制度 문제로서 日稅政連이 주축이 되어 國會 法務委員등에 대하여 「商法(監査特例法 改正 一部 反對)에 관한 訴願」의 진정을 하기로 하고, 1981년 1월 日稅政連과 공동 조직으로 商法對策實行本部를 설치 노력한 결과 法務省이 확정하여 3월에 國會에 제출된 「商法등의 一部改正法律案」에서는 特別利害 關係의 規制 强化등 稅理士會의 要望이 대폭 수용되었다.

그러나 日稅連은 業界의 주장 내용 수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資本金 기준을 10億円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계속 진정 운동을 하였으나 '公認會計士와 稅理士의 職務上 및 制度上의 조정을 확실히 하고 상호의 職域侵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監査對象 會社의 범위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의 선에서 일단락되어 당초안에 13개 項의 附帶決議와 함께 衆議院을 통과하였다.[108]

日稅連은 參議院 法務委員會에 參考人으로 출석시켜 監査對象 會社의 범위, 特別 利害關係의 排除, 會計監査人의 獨立性, 사후 監査의 필요성 등 日稅連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參議院에서도 통과되어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109] 稅理士業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外部 監査對象 法人이 資本金 5億円 이상의 法人으로 확대되었다.

108)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340~342.
109)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916~921.

Ⅻ. 제3차 商法 改正 反對運動(大·小會社 區分 立法)

1. 大·小會社 區分 立法 問題

1981년 개정에 의하여 일단락되었던 商法問題는 그후 附帶決議에 의하여 「會計監査에 관한 基本問題」를 중심으로 日稅連 制度部가 業界의 대응방책을 검토한 결과 1982년 3월 「會計監査에 관한 基本問題 構想의 具體化를 위한 理論 構成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기초로 日稅連은 1983년 2월 日本公認會計士協會와 懇談會를 가졌으나 의견 타협을 보지못하자 '계산서류의 공개와 조사인제도를 묶어서 立法化 한다'[110]는 취지에서 제3차 商法改正 문제로서 大·小會社區分立法 = 小規模株式會社法의 制定問題가 부상하게 되었다.

法制審議會 商法部會는 1975년의 「會社法 개정에 관한 問題點」 중 1976년 商法改正範圍 외였던 最低資本金 및 大·小會社의 區分에 대하여 1982년 2월부터 審議를 개시하였다.

이에 日稅連은 1983년 2월 商法問題를 전담하는 商法對策特別委員會를 설치하였고, 1984년부터는 商法部會 審議時 부상된 會計專門家에 의한 外部監査導入構想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商法對策委員會에서는 法制審議會 商法部會의 審議의 추이에 대응하면서 「會計帳簿適法作成證明基準(가칭)」을 검토하고 연구자료로서 「會計帳簿適法作成證明制度에 관한 基本構想」을 확정하였다.

2. 中小會社의 外部監査에 會計調査人(稅理士) 關與 問題

동년 5월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에서 「大·小會社(公開·非公開) 區分 立法

110) 杉田 等, 「稅理士制度と商法改正問題」, 名古屋稅理士會, 稅理士制度50周年記念誌 중, p.23.
그외 大塚三郎, 「第3次商法改正の回顧」, 〃 〃 〃 , p.20.
大西孝之, 商法改正と監査制度, 名古屋稅理士會, 稅理士制度50周年記念誌 중, p.26.

등에 관한 問題點」을 정하여 公表하였고, 10월 日稅連은 中小會社에 대하여 會計專門家에 의한 外部監査에 대하여 조건부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大·小(公開·非公開)會社 區分 立法등에 관한 問題點에 대한 意見書」를 심의 결정하여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에 제출하였는데,[111] 中小會社에 대한 外部監査 導入 構想을 중심으로 한 商法改正 문제는 意見書를 제출한 후에도 稅理士業界의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었다.

日稅連이 관심을 갖는 「專門家에 의한 外部監査」의 가능한 조건으로서 먼저,

① 定規監査와는 다른 한정된 「監査」로서

②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③ 中小會社로서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

④ 外部監査人으로 인한 부담과 監査人의 책임을 배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언하였는데, 日稅連商法對策委員會는 그 전제 조건을 근본적으로 예의 검토하여 1985년 2월 「專門家(監査)의 基準, 內容등의 問題」 및 「會計帳簿適法作成證明基準」을 정리하여 理事會에 보고하였다.

大藏大臣의 諮問機關인 企業會計審議會에서 中小會社를 대상으로 하는 會計專門家에 의한 外部監査制度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 特別部會를 설치하여 審議하기로 결정하자 日稅連도 商法對策委員會 내에 商法學者와 會計學者로 구성되는 「外部監査問題硏究會」를 설치하였다.[112]

1986년 商法改正 문제는 아직 法制審議會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稅制審議議員懇談會 任員에게 稅理士의 생각을 전달하는 한편 自民黨의 「商法에 관한 小委員會」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로 하였다.

法制審議會 商法部會는 1984년 3월 「商法監査問題硏究會」가 제출한 硏究報告書를 審議하는 한편, 5월 「大·小(公開·非公開)會社 區分등에 관한 問題點」을 공표하고 널리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1986년 5월 商法 및 有限會社法 개정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討論을 종결하고 法務省 民事局 參事官室에서

111)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976~978.
112) 上揭書, pp.998~999.

「商法·有限會社法 改正試案」을 立案하여 日稅連등 관계 방면에 의견 조회를 하였다.

日稅連 商法對策委員會는 각 稅理士會의 의견을 종합하여 最低資本金制度, 計算의 公開 및 會計檢查人에 의한 調查制度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商法·有限會社法 改正試案에 대한 意見書」를 審議하여 法務省 審議官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意見書는 中小會社의 규제 강화에 관련하는 改正 項目 및 稅理士의 업무 및 制度에 관한 중요 項目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1984년 10월 「大·小(公開·非公開)會社 區分 立法에 관한 問題點」의 제출 당시의 입장과 같으며 가장 중요 項目인 「會計調查人에 의한 調查制度」에 대하여는 '試案에서 제안한 債權者 保護를 목적으로 한 中小會社의 計算의 明確化를 위하여 稅理士가 會計調查人으로서 公正·不偏한 입장에서 참여케하여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찬성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中小會社의 실태를 감안한 監查制度를 적극적·건설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담은 것이었다.[113]

3. 核心事項 保留 立法

제3차 商法改正案은 公開, 外部監查制度 등 가장 중요한 項目은 보류한 채 1990년 6월 22일 國會를 통과하여 1991년 4월 1일부터 施行에 들어갔다.[114] 그러나 衆議院과 參議院 法務委員會의 附帶決議의 내용을 보면 「會計調查人에 의한 調查制度」라는 文言도 분명하지 않아 業界 희망의 관철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附帶決議는 中小會社의 外部監查制度의 조속한 立法을 지시[115]하고 있으므로 멀지않아 제4차 商法改正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113) 上揭書, pp.1019~1020.
114)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375~376.
115) 衆議院과 參議院에서 中小會社의 計算 適正을 擔保하는 제도에 대하여는 會計專門家에 의한

中小會社를 주 고객으로 하는 稅理士가 그 中小會社의 會計監査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稅理士業務의 범위에서 會計調査人의 자격으로 監査業務에 참여하여 업무의 영역확보를 하기 위한 商法改正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이 商法改正問題[116]는 日本稅理士業界의 가장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제4차 商法改正이 기대된다.

4. 제4차 商法改正을 위한 準備

法制審議會 商法部會에서는 90년 12월부터 차기 개정을 위하여 審議를 시작하여 會社法 小委員會에서는 91년 봄부터 合併法制의 審議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中小會社의 計算書類의 登記所에 있어서의 公開, 그 計算의 適正 擔保 제도의 검토 작업이다.

計算書類의 登記所에 있어서의 公開는 지난 改正時 法制審議會의 答申중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法案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 計算의 適正을 擔保하는 제도는 中小會社의 監査問題(稅理士의 會計調査人 參與 問題)로서 商法監査問題研究會 이래 이미 논의되어 왔고, 그 뒤는 稅理士會와 公認會計士協會 쌍방의 타협문제가 걸려 있다.

日稅連은 1991년 3월 理事會에서 中小會社의 計算擔保 제도에의 대응에 대하여,

① 稅理士制度의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中小會社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中小會社의 計算適正을 擔保하는 제도의 擔當者로서 稅理士가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금후 立法當局, 公認會計士協會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의견조정을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日稅連 商法對策委員會에서는 이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公認會計士會와의 의견조정을 위한 協議會를 가지고

검토와 각계의 이해를 구하여 조속한 立法措置를 강구하도록 附帶決議하였다. 上揭書, p.61.

116) 商法改正問題에 관하여는, 上揭書, pp.339~340, 441~444.

이미 전국 각 稅理士會의 商法對策委員會를 중심으로 그 지방의 公認會計士會와의 협의를 개시하여 中小會社의 計算의 명확화의 필요성 및 中小會社의 計算의 適正을 擔保하는 제도로서의 선택 가능한 방책을 검토하여 중앙단계의 교섭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日稅連은 法務省, 公認會計士會의 3자에 의한 의견조정에 들어가 이후 調査對象 會社의 범위, 調査의 內容(調査會社의 負擔), 調査人의 資格制度, 調査者의 책임문제 등을 해결하여 中小會社 計算의 適正擔保하는 제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117]

XIII 通算省의 「顧問稅理士」[118]問題

1. 顧問稅理士制度의 問題點

日稅連은 1973년 9월 小企業納稅者를 위하여 「小企業納稅者對策特別委員會」를 설치하였다. 먼저 自民黨에서 小規模事業對策을 위하여 익년도 豫算에 107億円을 추가 반영하고, 稅務相談과 指導强化를 위하여 익년도 通算省이 記帳指導要員 6,000명과 顧問稅理士[119] 3,500명을 위촉하여 대도시의 商工會 相談所의 支部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稅理士業界로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찬동하기 어려웠다.

첫째, 經營指導員의 대폭 증원은 「臨稅」[120]의 확대를 용인하는 것이고 經營指導員에 의한 稅務 記帳指導등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一般 納稅者는 經營指導員이 稅理士業務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 無資格稅

117) 上揭書, pp.61~62.

118) 自民黨의 小規模 事業對策의 일환으로 中小企業廳 소관하에 豫算措置가 강구되었던 것으로 稅理士業界로서는 종전부터 계획하였던 小企業 納稅者 對策의 일환으로 협력하게 된 것이다.

119) 내용은 약간 달리 하는 것이나 1966년 초 각 地方 三菱信託銀行에 稅務相談室을 개설하여 稅理士를 파견하기로 한 경우는 있었다. 日稅連과 銀行側의 협의내용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620.

120) 第6章 第2節 Ⅶ 참조.

理士 배출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고,

둘째, 종래부터 稅務申告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記帳代行등은 稅理士의 職能分野인데, 商工會등에 의한 적극적인 稅務 記帳指導의 실시는 稅理士業務가 부당하게 용인·침식될 우려가 있어 적어도 稅務關聯 제단체가 행하는 이상이 건 확대로 인하여 이후 복잡한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小規模事業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稅務 記帳指導의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넷째, 또 顧問稅理士 3,500명이라고 하나, 商工會, 商工會議所등이 指導한 납세자에 대하여 顧問稅理士가 관여한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商工會등 指導員의 手足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 商工會의 經營指導士도 稅理士와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顧問稅理士를 商工會 經營指導員과 같은 레벨로 보일 우려도 있다.

2. 日稅連의 小企業納稅者에 대한 稅務指導對策

이에 日稅連은 73년 10월 常務理事會를 개최하여 小企業納稅者對策을 審議하면서, 「小企業納稅者에 대한 稅務指導對策의 基本方向」에 있어서 法人會와 日本稅務協會 및 自民黨의 小規模事業者의 근본적 대책에서 고려되었던 商工會와 商工會議所의 稅務記帳指導등이 稅理士業務 및 稅理士職域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래 小企業納稅者에 대한 稅務指導는 稅理士法에 기초한 稅理士의 독점성·공공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어디까지나 稅理士會가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각 단체가 그 본래의 기능에 파생적으로 稅務에도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諸團體와의 제휴가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諸團體는 어디까지나 그 본래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稅務에 관하여는 稅理士만이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稅理士가 그 직능을 제공하고 小企業納稅者의 稅務指導에 대하여 다른 단체와 제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일적·기본적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日稅連은 諸團體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그때그때의 미봉적인 대처 태도를 버리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였다.

① 稅務業務에 관한한 다른 단체에 의한 事前協議申請 慣行 확립

② 稅理士會 조직을 통한 회원 稅理士의 派遣方式 확립

③ 稅理士의 전문적 기능과 타단체 본래 기능의 명확한 인식기능과 구분의 철저

④ 稅理士法 위반 행위의 蓋然性이 있는 不當行爲의 규명과 배제

⑤ 指導 責任態勢의 확보

⑥ 稅理士會 指導所의 개입과 활용

⑦ 小企業納稅者 내지 小規模事業者의 대상범위의 명확화

⑧ 稅理士의 指導內容의 명확화

⑨ 계속지도 期間의 명확화와 期間 경과후 稅理士 알선방법의 철저

⑩ 國家助成金의 運用協議의 철저와 豫定指導 件數 및 適正謝禮金의 明確化 등.[121]

1973년 12월 小企業納稅者對策特別委員會는 自民黨의 「小規模事業對策의 근본적 강화」책을 검토한 결과 「小規模事業者의 근본적 강화에 대한 意見書」와 「同 構想에 관한 要望書」[122]를 채택하였다.

1974년 日稅連은 「商工會議所, 商工會의 顧問稅理士制度 창설에 관한 本會의 要望意見등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稅務關聯團體는 그 기능을, 稅理士는 그 職能을 제공한다」는 것을 諸團體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經營指導員, 「臨稅」등과 稅理士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商工會, 商工會議所등의 사용인이 아님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123]

---

121)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769~770.

122) 稅理士會의 조직과 稅理士의 전면적 활용 방안등을 담은 要望書의 내용에 대하여는, 上揭書, pp.771~772.

3. 顧問稅理士의 派遣

商工會議所, 商工會의 顧問稅理士制度는 1974년 10월 1일 발족 예정이므로 통일적인 顧問契約書를 작성하기로 하고,[124] 동년 10월 日稅連, 商工會議所, 商工會 3會 會長 會談에 이어 11월 3會 專務理事 會談을 열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 5개항을 협의하였다.

① 顧問稅理士에는 稅理士會에서 파견된 稅理士를 위촉할 것.

② 顧問稅理士의 指導對象者는 所得額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稅理士의 위촉이 곤란한 자로서 前年所得特典控除前 200万円 이하인 자.

③ 法人稅는 원칙으로 指導對象에서 제외한다.

④ 指導 계속 기간은 원칙으로 1년, 특별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⑤ 業務內容은 원칙으로 相談과 指導에 한정한다 등.

위와 같이 난항을 거듭한 顧問稅理士制度는 12월 東京에서 日稅連, 商工會, 商工會議所 3會의 합의를 거쳐 「顧問稅理士 委囑費 補助의 실시에 관한 諒解事項」[125]을 조인[126]하자, 비로소 중단되었던 行政上의 절차가 개시되어 中小企業廳은 각 通算局에 실시통달을 발함과 동시에 각 都道府縣에 豫算措置를 지시하였고 國稅廳도 이 제도에 협력하도록 통달을 발하였다.

1974년 12월 조인된 顧問稅理士 派遣 件은 派遣方式과 所得制限[127]등에 마찰의견이 있었으나 1975년 商工會議所와 商工會가 기본방침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정지되었다. 1976년 中小企業廳 豫算에서 「顧問稅理士委囑費」가 「專門相談員의 委囑費」로 전환된데 대하여 대책을 협의하면서 派遣方式과 所得金額 200万円 기준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日稅連의 주장대로 관철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123) 上揭書, p.782.
124) 上揭書, p.787.
125) 同 내용에 관하여는, 上揭書, pp.792~793.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310~311.
126) 3자 조인에 관하여는, 日本稅理士連合會, 稅理士界, 1975년 1월 11일.
127) 商工會側은 控除前 300万円 基準, 日稅連은 200万円 基準을 주장함.

1976년 1월 日稅連은, 4월부터의 商工會議所, 商工會 등 타 團體의 小企業 納稅者 納稅指導 확충 사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稅務에 관한 專門相談員은 稅理士로 일원화되도록 「公益團體등에 대한 稅理士의 派遣에 관한 規則案」[128]을 검토·제정키로 하였으나, 稅理士制度를 근본적으로 고려할 때 稅務會計는 稅理士의 獨占業務로 하는 法改正의 진행 관계상 위 규칙의 적용기간을 「당분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129]

1976년도의 專門相談員의 「4월 1일 發足」 당초 방침은 國會의 사정에 의하여 국가의 豫算措置가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中小企業廳과 商工會議所, 商工會에는 全國商工會連合會長으로부터 3월에 「稅理士 派遣 規則에 관한 알림」이 있었으나, 中小企業廳은 5월에 각 通算局과 각 都道府縣에 「1976년도 小規模事業指導費 補助金의 運用에 대하여」의 통달과 함께 실시되었다.[130]

XIV. 稅理士法의 根本的 改正 努力

1. 過誤賦課에 대한 損害賠償制度 創設 建議

1972년 6월 日稅連은 大藏省, 自治省 및 國稅廳등 관계 當局에 대하여 1951년 제정된후 수차 부분적 개정에 그친 현행 「稅理士法 改正 基本 要綱」을 작성하여 건의하였고, 11월 理事會에서는 同改正案의 國會 상정을 목표로 稅理士法 改正運動 計劃 大綱(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을 확정하였다.

11월 日稅連은 大藏大臣, 自治省大臣, 國稅廳長官에게 「잘못 賦課된 課稅處分에 따른 損害賠償制度의 創設」에 관한 建議書를 제출하였다.[131]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

---

128) 同 規則 制定의 긴요성에 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 812~813.
129) 同 規則의 내용에 관하여는, 上揭書, pp.815~818.
130) 上揭書, p.819.
131) 上揭書, p.746.

1973년[132] 稅制面에서는 土地稅 관계에서 法人의 土地讓渡利益에 法人稅와는 별도로 20%의 土地讓渡益重課稅(우리나라의 特別附加稅 해당)가 창설되었다.

1974년[133] 稅制面에서 석유제품의 이상가격 상승에 따른 企業의 高收益과 인플레이득에 과세하는 「會社臨時特別稅」[134]와 발전용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電源開發促進稅」가 신설되었고,[135] 日稅連은 「超過利得稅의 創設에 관한 要望書」[136]를 각 政黨과 大藏省등 관계 방면에 제출하였다.

2. 稅理士法 改正에 관한 基本要綱 確定

1974년 3월 日稅連은 「稅理士法 개정에 관한 基本要綱」을 확정하여, 1975년 2월 日稅政連과 공동으로 東京에서 「稅理士法 改正 推進 總蹶起大會」를 개최하여,

① 稅理士制度를 「國民을 위한 制度」로 확립한다.

② 稅理士의 權利의 보장을 명문화한다.

③ 합리적 稅理士試驗制度를 확립한다.

④ 稅理士 組織團體의 自主權을 확립한다.

⑤ 일원화된 稅務扶助制度를 확립한다는 등의 5개항의 슬로우건과 大會決

---

132) 1973년 1월 베트남에 평화협정이 조인되고,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다.

133) 박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 있었고, 미국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인한 조기퇴임이 있었다. 오일쇼크의 진행으로 消費者物價가 전년대비 126.2%나 상승하였고 購買力低下 景氣不況이 극심하였다. 12월 佐藤榮作元 首相이 日本人 네번째로 노벨平和賞을 수상하고 中·日 國交正常化 2년째에 中·日 航空協定이 調印되어 航空機가 대륙간을 항행하게 되었다. 8월 28일 美·蘇·西獨에 이어 原子力船 「むつ」호의 실험에 성공하였다.

134) ① 會社臨時特別稅와 稅理士業務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778~779.
② 이 會社臨時特別稅는 1976년 期限來到로 폐지되었다. 上揭書, p.801.

135) 上揭書, p.776.

136) 그 내용에 관하여는, 上揭書, pp.777~778.

議文을 채택하고, 衆·參議員, 大藏省, 각 政黨에 「稅理士法 改正 早期實現에 관한 陳情書」[137]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 陳情書에서는 '辯護士制度가 국민의 基本的 人權擁護를 사명으로 하는 것과 같이 稅理士制度를 「國民을 위한 制度」로서, 稅理士는 國民의 財産權을 租稅의 領域에 있어서 擁護하는 사명을 맡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稅理士法 개정…… 稅理士의 약한 입장을 改善하여 납세자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稅務官廳과 대등한 입장에서 職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가 요망된다. 따라서 稅理士會의 自治權을 확립하고 稅의 職業專門家 집단으로서 자주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稅理士法의 根本的 改正

1979년 12월 通算國會에서 稅理士法 改正 法律案을 審議하기 시작하여 1980년 2월 10項의 附帶決議를 채택하여 衆議院을 통과하였고, 3월 參議院 大藏委員會 一部修正 및 10項의 附帶決議를 채택, 4월 4일 參議院 本會議에서 修正案 可決 衆議院 送付, 4월 8일 衆議院 本會議에서 可決되었다. 參議院 단계에서의 修正은 제1조의 稅理士의 使命외에 「申告納稅制度의 理念에 대하여」라는 문언이 삽입되었다. 4월 8일 성립된 개정 稅理士法은 4월 14일 改正·公布되었다.[138]

이 개정에 따라 日稅連과 각 稅理士會도 會則·規則등의 개정 특히 日稅連은 會則·規則과 각 稅理士會의 「標準會則」을 制定하였다. 稅理士法은 10월에 施行되었으나 施行前인 4월 1일 施行項目은 稅理士試驗에 관한 것, 稅理士審査會의 運營 및 懲戒處分에 관한 것과, 익년 4월 1일 施行事項으로서는 試驗制度에 있어서 試驗科目의 免除 및 稅務公務員의 會計學 연수에 관한 지정외에 未入會稅理士에 대하여는 시행후 6개월 이내 稅理士의 入會를 義務化하는

137) 陳情書 내용에 관하여는, 上揭書, pp.807~808.
138) 上揭書, p.882.

것과 辯護士인 稅理士, 公認會計士인 稅理士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入會할 것을 義務化한 것은 특기할 만 하다.

施行令과 施行規則 公布日은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고, 施行令과 施行規則에서는 登錄에 관한 事項, 計算事項·審査事項등을 기재한 書面의 添附事項, 稅理士審査會의 運營事項, 稅理士會의 分割등의 要件, 行政書士의 業務範圍, 公認會計士가 당분간 小規模로 행할 수 있는 稅理士業務의 범위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標準會則」은 5월 개최된 正副會長 會議에 原案이 제안되어 각 稅理士會의 會則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의 小企業 納稅者에 대한 援助業務, 報酬規定의 制定, 사용인의 監督義務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1980년 稅理士法 개정으로 「稅理士 報酬規定」은 「稅理士業務에 대한 報酬의 최고 한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 國稅廳長官의 고시 대신으로 日稅連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때부터 각 稅理士會의 會則으로 정하게 되었다.[139]

1980년 稅法 개정으로 日稅連은 6월 30일까지 「標準會則」을 각 稅理士會에 送付하고 각 稅理士會는 9월 중순까지 臨時總會를 개최하여 會則變更을 결정하여 稅理士法의 시행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 大藏省, 國稅廳이 改正稅理士法의 施行令, 施行規則 制定作業을 하는 동안 日稅連은 당국에 대하여 公認會計士가 행하는 稅理士業務의 規制등의 施行令과 施行規則과 制度의 運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망하였다.

① 稅理士의 업무로서 제외 稅目을 필요 최소한도로 할 것(施行令)

② 稅理士의 자격으로 會計에 관한 事務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施行規則)

③ 稅理士登錄의 細目과 관련하여 稅理士證票의 개선 합리화를 기할 것(施行規則)

④ 行政書士가 행하는 稅務書類의 作成은 本條 규정 이외의 細目을 추가하지 말 것(施行令)

---

139) 上揭書, p.885.

⑤ 公認會計士가 행하는 稅理士業務의 규모는 受任 건수 5건 이하 또는 稅理士報酬 년액 100万円 미만의 것에 한정할 것(施行規則) 등, 이하 생략[140]

稅理士法은 1980년 10월 13일 施行됨으로서 稅理士業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施行令과 省令 公布의 주목할 점은 稅理士業務의 범위, 行政書士가 稅務書類 作成이 가능한 稅目의 범위, 公認會計士가 행하는 稅理士業務의 規模 稅理士會의 분할등이었다. 行政書士가 행하는 稅務書類 作成이 가능한 稅目의 범위에 새로이 不動産取得稅 외 5稅目이 추가되었다.

XV. 「中小企業 承繼稅制」問題

1982년 9월 日稅連 常務理事會에서 中小企業 事業承繼制 등 17항에 걸친 1983년도 稅制改正建議書를 결정하여 실현토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中小企業인 法人 및 個人事業者의 대부분은 世代交替期에 이르렀으나 地價의 이상앙등에 따른 相續稅 負擔이 과중하게 되는 등 현행의 相續稅制度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中小企業의 원활한 事業承繼를 곤란하게 하여 企業의 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中小企業은 일본 經濟의 기반을 이루어 지역사회 활동에도 중심적 역할을 하여 온 것을 고려하여 제도상의 개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業承繼制를 고려함에 있어 事業用 財産의 生前贈與 및 納稅猶豫制度, 居住用·事業用土地의 評價, 非上場 株式의 評價, 物納과 延納에 관한 制度 나아가서는 相續稅와 贈與稅의 基礎控除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經濟社會, 國民生活, 企業經營의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1983년 稅制改正에 관한 建議書 참조).

이 문제는 1982년 自民黨 내에서도 검토되어 同黨 내에 中小企業 承繼稅制議員連盟이 발족되었고 研究會를 구성하여 富岡幸雄 中大敎授를 「中小企業

140) 上揭書, pp.885~886.

承繼稅制問題 硏究會」座長으로 한 바 있다.

中小企業廳은 中小企業의 事業承繼 원활화를 위한 相續稅에 있어서 同族法人의 評價方法 改善등 요구에 대하여 일부로부터 中小企業者 優待에 비판 여론도 있었으나 이후 稅法 개정에 반영되었다.

XVI 固定資産評價 證明書 交付 事務의 簡素化 運動

日稅連이 오랜 동안 요망하여 왔고 1985년도 稅制改正 要綱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固定資産評價 證明書 交付 事務 簡素化에 대하여 1월 自治省 稅務局으로부터 통지가 있었다. 相續稅등 申告時 필요한 固定資産評價 證明書는 원칙적으로 그 所有主 또는 所有者의 同意를 얻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所有者의 同意를 얻은 자」중에는 그 所有者로부터 稅務代理를 委任받은 稅理士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稅理士가 그 所有者를 위하여 固定資産評價 證明書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委任狀 없이도 稅務代理의 권한을 證明하는 書面의 寫本으로서 固定資産評價 證明書 交付 申請書에 첨부하면 交付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141]

그간 辯護士나 司法書士는 종전부터 이러한 편의제도의 혜택이 있었으나 稅理士의 경우에는 日稅連의 오랜 동안의 노력 결과 문제가 해결되었다.

XVII 白色 申告者 記帳制度에 대한 對應

1. 白色 申告者에 대한 國稅廳의 記帳指導 方針

1984년 4월 300万円 초과 白色申告自營業者의 記帳義務制度化에 따른 國稅

141) 上揭書, pp.987~988.

廳懇談會에서 國稅廳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白色申告自營業者의 記帳義務에 대하여 1984년 3월 31일부로 大藏大臣名義로 告示한다.

② 이 제도는 1985년 施行으로 1984년 가을까지 지도를 구체화한다. 단 損益計算方式은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다.

③ 罰則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있으나 記帳을 전제로 하여 稅務調査가 진행된다.

④ 제도의 실시와 현실과의 격차는 단시일내에 만족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대응방향을 고려한다.

⑤ 납세자에 대한 주지 철저등은 豫算등과의 관련 때문에 초년도는 일반적 說明會를 고려하고 차년도 이후 검토한다 등.

2. 日稅連의 對應

이에 대하여 日稅連側은,

첫째, 記帳指導의 실시방법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對象人員(115만정도), 地域分布(도시집중)를 충분히 고려하여 稅理士會는 물론 관련 團體 특히 靑色申告會, 商工會등과의 記帳指導 방법에 충분히 협의·검토할 것.

둘째, 確定申告期의 稅務援助에 관련하여 改善 方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가 1984년 3월 31일부 官報에 法人稅法, 所得稅法, 租稅特別措置法의 개정 관련 施行規則을 公布한 후, 日稅連은 「白色申告自營業者에 대한 記帳義務의 制度化에 따른 구체적 방책」[142]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142) 上揭書, pp.971~975.

3. 記帳義務制度化의 趣旨

1947년 申告納稅制度가 실시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후에 새삼 記帳義務를 제도화하고자 하는데는 日本稅制上 다음과 같은 특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제도화의 취지 설명을 보면 현행(1984년 당시) 稅制는 自主申告納稅制度에 의하고 있어 納稅義務者는 스스로 소득을 산출하여 申告納稅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個人에 있어서는 事業所得, 不動産所得, 山林所得(이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法人에 있어서는 業務의 성과에 대하여 自進申告를 하기 위하여는 거래에 관한 記帳이 필수적인 것이고, 특히 이번 法改正으로 所得稅法과 法人稅法上의 記帳義務가 제도화되었다. 이 記帳義務는 원래 申告納稅制度로 된 1947년 시점에 병행하여 발족하였어야 할 것이나 당시는 終戰의 혼란기로서 記帳 관행이 사회일반에 정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대신에 靑色申告制度에 의한 記帳奬勵政策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靑色申告의 보급은 소기의 진전을 보지못하였고 특히 所得稅 분야에서는 납세자 과반수가 소위 白色申告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白色申告에 의한 申告納稅는 記帳不備로 「槪算」 내지 「標準率」에 의한 것이 되어 적정납세의 확증도 없이 부담·공평면에서 문제가 많아 申告納稅制度 발족 이래 30여년이 지난 지금 記帳義務制度가 法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143]

그러나 이 記帳義務에는 加算稅등 벌칙은 없다.[144] 이 記帳義務制度는 國稅廳 소관으로서 1985년도를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였고 稅理士會로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白色記帳指導運營 要領」을 정하여 대상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個別方式과 講習會方式의 지도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다.

---

143) 上揭書, pp.971~972.

144) 우리나라와 같이 記帳義務 不履行 加算稅등 罰則을 과하면 記帳擴大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納稅義務는 國家經費의 國民負擔이라는 租稅本質論上 租稅의 申告納付義務 이외의 附隨的 義務를 설정하여 加算稅를 賦課하는 것은 憲法違反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記帳義務나 報告義務 등에 대한 加算稅 賦課는 없다고 한다.

國稅廳도 白色記帳指導에 대하여 講習會를 갖고 지도를 위하여 稅理士會에 「記帳指導擔當稅理士」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白色記帳制度는 1985년 豫算에 반영되어 각 地方 國稅局 단위로 記帳指導專門官 1인과 주요 稅務署에 記帳指導推進官이 배치되기 까지 하였다.

XVII 稅務公務員에 대한 事前「指定硏修」實施

1. 稅務公務員에 대한 指定硏修

개정 稅理士法은 종전의 特別稅理士試驗을 폐지하는 한편 일정 事務에 일정 년수 이상 종사한 稅務公務員과 管理·監督的 지위에 5년이상 在職한 者에 대하여 稅理士審査會가 지정한 硏修를 修了하고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을 免除받도록 하는 제도, 즉 稅務公務員에 대한「指定硏修」를 1982년 4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2. 指定硏修의 內容

日稅連은 이를 엄격하게 실시 운영하도록 1981년 10월 國稅廳 幹部와의 懇談會 席上에서 要望하였고 稅理士審査會에 제출된 要望事項 내용은 다음과 같다.[145]

첫째, 개정 稅理士法에 지정된 취지와 國會에서의 質疑등의 취지가 제도의 실시에 반영되도록 배려할 것,

둘째, 硏修의 내용은 적어도 稅務大學校 本科의 簿記와 會計學과 같은 정도로 하고 일정수준의 修了 試驗을 설정하여 엄격히 유지할 것,

---

14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928.

셋째, 稅理士制度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도 一般試驗과 均衡을 잃지 않도록 배려할 것 등.

이 指定硏修에 대하여는 衆議院과 參議院 大藏委員會에서 '稅務公務員에 대한 會計學의 試驗을 免除한 것과 관련하여 稅理士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硏修에 대하여 稅理士審査會의 指定, 運營, 實施 전반에 걸쳐 엄정을 기하고 一般試驗과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배려할 것'의 附帶決議를 한 바 있다.

大藏省은 개정 稅理士法의 施行에 따른 稅務公務員에 대한 稅理士試驗 科目중 會計學에 관한 科目의 免除 요건을 정하여, 同法에 규정한 職에 대하여는 「管理·監督的 地位」로 규정하는 한편 施行規則 제2조의 3에 「指定硏修」를 新設, 稅理士審査會가 硏修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정 稅理士法은 종전의 特別稅理士試驗을 폐지하는 한편 일정 事務에 일정 년수 이상 종사한 稅務公務員과 管理·監督的 지위에 5년이상 在職한 者에 대하여 稅理士審査會가 지정한 硏修를 修了하고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을 免除받도록 하는 것이다.

1982년 指定硏修로 公告된 것은 稅務大學校의 本科(高等科), 專科(專門官 硏修), 通信硏修會計學(通信敎育科 會計學, 通信敎育科 上級簿記會計學)의 3부이고 地方稅 職員의 硏修에 대하여는 지정하지 않았다.[146]

이 稅務公務員에 대한 事前 「指定硏修」 實施 制度는 우리나라 稅務士制度에도 반영되었으면 한다.

XIX 建設省의 「建設業經理士」 呼稱 變更 問題

1. 建設省의 建設業經理士

1981년 9월 建設省이 建設業 會計의 特異性과 後進性을 고려하여 이를 충실화하기 위하여 「建設業經理士」의 호칭를 창설하고 그 檢定制度를 企劃·檢

146) 上揭書, p.932.

討중이었고,[147] 이 제도의 창설은 稅理士制度 및 稅理士業務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었다.

財團法人 建設業 振興基金이 「建設業經理士 檢定試驗」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이 檢定試驗은 「建設業에 있어서 簿記·會計 지식의 보급과 會計·經理처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建設業 經營의 合理化 및 近代化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여 1981년도에는 우선 3급과 4급 檢定試驗을 실시하려고 한 것이었다.

2. 日稅連의 對應

이에 日稅連은 1981년 10월 建設省과 建設業振興基金에 대하여 이 試驗의 任意 檢定制度로서의 실시는 좋으나 資格制度로서 일반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는 「士」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計理士會, 公認會計士協會도 강한 위기감[148]을 갖고 있었으므로 日稅連과 동일 보조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149]

1981년 日稅連은 구체적으로,

① 經理士라는 칭호는 資格制度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② 建設業의 認·許可時 「建設業經理士」의 고용 조건의 추가를 반대한다.

③ 建設業者의 報告義務에 포함되는 財務諸表 작성자를 「建設業經理士」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등 반대의견을 建設省과 建設業振興基金에 文書로 제출하였다.

1982년 1월 日稅連, 日本計理士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는 「建設業經理士」制度의 발족에 위기감을 갖고 3會가 다음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150] 認·許可申請 事務에 영향이 큰 行政書士會와 「士」문제의 부당 표시 우

147) 建設經理士 檢定制度 創設에 대한 建設部 計劃局 振興課 調査書는, 上揭書, pp.908~909
148)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344.
149)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910~911.

려가 있다고 보아 辯護士會도 다음과 같이 共同步調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각 團體는 각각 主務官廳에 대하여 진정을 한다.

② 각 團體 連名으로 國會에 대하여 陳情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報道 관계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등.

日稅連으로서는 그 명칭에 대하여 「經理」를 사용하는 경우 「士」를 사용할 수 없고, 「士」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經理」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을 정하여 구체적으로는 「建設業經理主任者」「建設業事務士」「建設業簿記士」등의 명칭을 고려하였다.

1982년 2월 建設省으로부터 日稅連에 「建設業經理士」의 명칭을 「建設業經理事務士」로 변경한다는 것과,[151] 建設業經理事務士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稅理士의 職域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試驗實施의 내용과 운용에 대하여 8개 項의 回信을 하여옴으로써 이 문제는 日稅連의 목적대로 관철되었다.[152]

XX 農業協同組合의 「臨稅」 問題

1. 農協 臨稅

全國農協中央會는 1977년 11월 傘下 道府縣 農協中央會에 대하여 農協組合員에 대한 所得稅, 相續稅, 固定資産稅, 市町村民稅등의 稅務相談·指導를 개선·체제정비 강화를 목적으로 「農業關係 稅務相談 機能整備 强化對策 要綱」을 시달하였다. 또 稅務相談과 指導의 對象稅目을 相續稅, 固定資産稅, 市町村民稅에 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臨時의 稅務書類 作成者(소위 「臨稅」)의 양성 및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資格認定試驗을 실시하고자 하

150) 上揭書, p.925.
151) 建設業經理事務士로 해결된 경위에 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82년 2월 25일.
152)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926~927.

였다. 또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稅務當局의 협력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實施要綱에 있어서는 國稅廳의 事前 注意로 '稅務相談은 組合員에 대한 稅務의 일반적인 相談으로서 稅理士業務인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作成, 稅務相談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었다.

이에 日稅連은 農協의 「臨稅」에 대하여 期間 嚴守와 稅目은 所得稅에 한정할 것 등으로 감시하여 왔으나 農協의 지나친 행동에 대하여는 경고를 발하기로 하고, 「小企業納稅者對策委員會」에서 검토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웠다.

첫째, 稅務相談 窓口의 설치에 의한 稅務相談의 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체가 稅理士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묵인·방치하지 않는다.

둘째, 農協의 「臨稅」의 증가와 그에 따른 無資格稅理士의 발호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農協側에서도 「臨時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日稅連과 農協側이 3월 사무차원 단계에서 절충을 한다.

이 절충시에 日稅連은 다음과 같은 개선·요망을 하였다.

① 稅務相談, 稅務書類의 作成 등 문언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은 稅理士法上 문제가 있고,

② 稅務相談의 경우 窓口機關을 설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相談을 組合員에게 하는 것은 稅理士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 경우에는 稅理士會로부터 派遣하는 稅理士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日稅連의 小企業納稅者 對策 및 派遣規則의 취지와 운영 실정등에 관한 설명),

③ 「臨時稅理士」라는 문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農協臨稅」에 대하여, 「商工會臨稅」 경우의 稅理士法 施行令 제14조에 따른 양해사항과 같은 규정 조건을 두도록 협의할 것 등.

이에 대하여 農協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① 이 제도의 취지는 組合員의 營農生活 改善이 목적이지 稅理士의 職域侵

害나 稅理士法 無視등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② 窓口相談 의도는 農政과 稅制와의 특수한 관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해설과 문제의 제1차적인 대처와 정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경우의 窓口는 단지 擔當部署를 의미할 뿐이다.

③ 農協으로서는 「臨稅」의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臨稅」 양성 강습회등도 과세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職員의 자질향상 목적이고 최근 수년 경향을 보더라도 거의 증가되지 않는 실정인 바 이는 稅理士會의 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규정조건에 있어서도 「商工會臨稅」의 경우와 역사와 실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④ 稅理士 派遣 문제는 內部體制 문제로서 현재인이 위촉되어 있는 顧問稅理士의 증강문제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⑤ 「臨時稅理士」라는 호칭은 이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 農協側에서 밝힌 조직의 개요는 農協數 4,763(지소등 점포수는 12,000) 여개, 職員數는 16,194명, 農協 당 組合員 수는 평균 1,600인, 確定申告者 수는 110만, 전 農協의 지도부문 豫算은 294億円, 臨稅를 설치한 組合員 20.9%, 顧問稅理士를 두고 있는 組合員 11.6%였다.

2. 日稅連의 對應

1978년 3월 日稅連의 臨稅對策審議時

① 所得制限, 指導擔當 稅目의 범위, 派遣規則 적용의 가부 등. 小企業納稅者對策의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의 여부.

② 指導 回數와 謝禮金 問題.

③ 담당 稅理士에 대한 特別硏修會 개최 여부.

④ 일반 회원의 業務擴大에 대한 배려등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5월 正副 會長 회의시 農協이 추진하고 있는 稅務相談機能整備强化 對策에

대하여 日稅連은 獨占權 擁護와 職域擴大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대처 개요을 제의하였다.

① 農協職員에 의한 稅務相談 실시에 반대하고 稅理士會는 派遣 規則을 준용하여 稅務相談 담당 稅理士를 파견할 것,

② 派遣된 稅理士의 擔當業務 범위는 所得稅(讓渡所得稅 포함)를 중심으로 相續稅, 固定資産稅 등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상담범위에 응할 것,

③ 稅務相談 對象者의 所得制限은 두지 않고 高所得者에 대하여는 一般稅理士의 有料相談을 권장할 것,

④ 稅理士相談日을 설정하여 그 回數 및 謝禮金 부담에 있어서는 農協과 절충할 것,

⑤ 稅理士會에 있어서 農協과 稅制에 관한 特別硏究會를 개최할 것,

⑥ 非派遣顧問稅理士에 대하여는 日稅連의 방침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할 것 등.

3. 靑色申告의 普及 奬勵 및 記帳 指導와 繼續 對應

① 靑色申告의 普及 奬勵 및 記帳 指導에는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

② 靑色申告에 대한 계속 記帳指導에 대하여는 日稅連, 農協만이 절충할 것이 아니라 國稅廳의 日本稅務協會등과 연락하여 豫算을 받아 실행할 것,

③ 이 경우 指導對象者의 所得이 종래부터 日稅連이 설정하고 있는 제한을 상회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나, 小企業納稅者對策上 본질적으로는 제한선을 유지하는 한편 高所得者에 대하여는 一般稅理士 관여 방향으로 권유할 것,.

④ 상기 指導는 현재 일부 國稅局과 稅理士會 간에 시행 단계에 있으나 전국 통일이 되도록 國稅廳과 절충할 것,

⑤ 계속 記帳指導 담당 稅理士에 대한 特別硏究會를 개최할 것 등.

결국 日稅連의 農協 臨稅에 대하여는「臨稅」擴大에 반대하고, 標準率 적용

農家에 대한 申告所得稅 事務에 대하여는 종래와 같이 農協 및 市町村 臨稅의 업무로 할 수밖에 없으나 적정한 운용에 대하여 계속 감시하기로 하였다.

3월 이후 農協과 日稅連과의 절충이 계속된 이후 8월 사무 차원의 절충 결과 農協臨稅問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게 되었다.[153]

XXI. 建設省의 「不動産 콘설턴트(consultant)」 問題

1. 不動産 콘설턴트

1990년 建設省 經濟局 不動産課에서 새로운 資格制度로서 「不動産 콘설턴트」 제도를 창설하기로 하여 3월 「不動産 콘설턴트 제도 硏究會」(위원장 田中啓一 敎授)를 발족하고 4월 검토 개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宅地建物去來主任者의 人才育成, 수준향상을 하여 不動産 콘설팅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얻기 위하여 不動産鑑定士와 宅地建物去來主任者의 중간 레벨의 「不動産 콘설턴트」 資格制度의 창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의 「宅地建物去來主任者」를 受驗資格者로 한다는 것이었다.

단, 정부가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建設大臣의 告示에 따라 公益法人이 실시하는 시험을 정부가 인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法律에 의한 資格制度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不動産 콘설팅 업무가 稅務業務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당초부터 稅理士業務뿐만 아니라 不動産에 관계되는 주변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성질의 것이었다. 制度硏究會의 報告書에서도 '관련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專門的 知識을 가진 자를 코디네이트(coordinate)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는 不動産콘설턴트에 관한 資格制度'로 예정하여 專門的 知識을 가진 不動産鑑定士, 稅理士, 公認會計士, 辯護士, 建築士 등을 不動産 콘설턴트가 코디

153) 上揭書, pp.844~850.

네이트하여 업무 침해등을 막고자 하였다.

2. 日稅連의 反對

그러나 그 資格試驗인 不動産에 관한 租稅構造(讓渡, 保有, 取得 등)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최선의 稅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建築經理士 문제를 야기시켰던 建設省과 정치문제화되어 日稅連은 국회에 반대의 진정을 하는 한편 관련 사업단체와의 공동투쟁에 들어갔다.[154]

不動産 콘설턴트 資格制度의 창설은 稅理士業務를 분명히 침해함은 물론 稅理士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여 日稅連, 日稅政連이 반대 자세를 분명히하는 한편 衆·參 兩院에 대하여 반대 진정을 하였다. 또 이 문제는 日稅連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日本辯護士連合會,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 日本行政書士會連合會, 日本土地家屋調査會 등 관련 6 士 단체가 懇談會를 갖고 반대운동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991년 日稅政連이 주최가 되어 國會에 진정을 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不動産 콘설턴트」 제도는 稅理士, 公認會計士, 辯護士, 不動産鑑定士, 建築士 등에 광범하게 관계되고 그 조정을 不動産 콘설턴트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적인 專門職業의 業務調整은 각 업무의 독점성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상기 報告書에 의하면 관계 분야와의 조정이 필요한 공식적인 專門 資格으로서 不動産鑑定士(鑑定評價), 稅理士(稅務), 公認會計士(稅務, 金融), 辯護士(法律), 建築士(建築技術)라고 제시하고 이들 업무의 調整은 不動産 콘설턴트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建設大臣이 공고한 자격의 전문 지식 所有者가 코디네이트할 수밖에 없다.[155]

---

154)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381~382.
155) 上揭書, pp.384~385.

나. 建設省에서는 「不動産 콘설턴트」 제도를 공적인 專門職業 자격이 아닌 취업제한(不動産 콘설턴트가 아니면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 정도로 생각한 것이나 이 不動産 콘설턴트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職業 자격으로 오인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예측하지 아니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적 자격을 가진 專門職業 資格者의 職域을 침해하여 당해 專門職業 제도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다. 稅理士制度의 社會的 機能을 무시한 不動産 콘설턴트 제도는 창설할 수 없다. 大規模 不動産 會社등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에서 稅務關係의 相談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 그러나 稅關係는 法 적용이 복잡하여 稅法에 통달하지 않으면 적절한 상담에 응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稅의 專門家가 아닌 자에게 무책임하게 指導를 맡길 수는 없다 등.

不動産 콘설턴트 문제는 1992년 建設省과 절충이 시작되어 1월에 관련 6사업단체와 懇談會 후 日稅連으로서는 계속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였고,[156] 名古屋稅理士會를 先頭[157]로 日稅連 전체의 「不動産 콘설턴트제도 창설 반대 총궐기대회」를 1992년 5월 7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 日稅連의 贊成 轉換

이에 동년 4월 建設大臣은 片岡 日稅連 會長에게 ① 不動産 콘설턴트를 자격제도로 하지 않는다. ② 試驗合格者에게 특정의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資格士法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등의 최종 해결안을 제시하자, 日稅連으로서는 創設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기 총궐기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158]

동년 6월 日稅連 常務理事會에서 '不動産 콘설턴트 문제 해결에 대하여 그

156) 그간의 궐기대회등 반대운동의 경위에 관하여는, 上揭書, pp.386~391.
157) 名古屋稅理士會, 稅理士制度50周年記念誌, 1992년, p.29.
158) 上揭書, p.29.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6 사업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한다'고 의결하면서도 日稅連으로서는 찬성 다수로 의결되었다.[159]

동년 7월 建設省 고시 제1277호로 「不動産 콘설턴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審査·證明事業 認定規定」이 고시되었고, 동년 10월 審査·證明事業의 인정단체가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다.

① 認定法人의 명칭 財團法人 不動産流通近代化센터

② 認定法人의 住所(생략)

③ 審査·證明事業의 명칭 不動産 콘설턴팅 機能試驗·登錄事業[160]

第 3 節 國際化, 對外 關係

Ⅰ. 日稅連의 U. R. 對策

1994년 5월 필자가 日稅連을 방문하였을 때 마침 우리나라도 전 산업분야에 걸쳐 國際化·開放化에 따른 U. R. 대책에 부심하던 때라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 稅務業務에 대한 日稅連의 開放化 대책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日稅連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예측하여 대비한 것으로 이미 資格取得 要件을 개방하여 國籍에 관계없이 稅理士試驗에 合格하는 등 資格要件이 갖추어지면 內國人과 동등하게 자유로이 稅理士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필자가 다시 실제로 外國人으로서 日本稅理士試驗에 合格하여 開業하고 있

159) 建設省으로부터 일보 양보로 볼 수 있는 2 項目의 제안이 있었고, 더 큰 문제인 稅理士法 改正問題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정하였던 反對 總蹶起大會를 연기하였었다.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452~453.

160) 上揭書, pp.392~393.

는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던 바 다음 표와 같은 國籍別 稅理士資格 取得者 現況 表를 제시하여 주었다.

國籍別 稅理士資格 取得者現況(94년 4월 말 현재)

國　　家	男子 (名)	女子 (名)	計 (名)
韓　　國	63	23	86
中　　國	7	2	9
臺　　灣	1		1
美　　國	1		1
英　　國	1		1
其他 國家	16	2	18
計	89	27	116

한국인(재일교포)이 단연 많고 미국인과 영국인이 각각 1명이며, 기타 국가 18명에 대하여는 궁금하여 다시 질문하였던 바 사할린(소련 국적)과 조선(북한) 국적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稅務士法도 國籍 條項을 개방하여 世界人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稅務士試驗에 응하여 合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亞太稅理士協會(AOTCA) 結成

日本稅理士業界(日稅連)가 주축이 되어 1992년 11월 6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稅務에 관한 職業專門家 10개 단체가 모여 「亞太稅務士協會」(Asia-Oceania Tax Consultants' Association, 이하 AOTCA라 함)를 결성하였고, 초대 會長에는 日稅連 會長인 片岡輝昭[161]씨가 選任되고 각 加盟團體의 추천

에 따라 副會長 10명과 監事 2명이 결정되었는데, 우리나라 方孝宣 韓國稅務士會 會長은 副會長에 被選되었다.

1993년 11월 11일 호주 시드니市에서 제1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는데 초년도 사업으로 會 規約과 事業計劃에 따라 會報와 論文集이 발간된 바 있고, 1994년 11월 9,10일 일본 東京에서 개최된 제2회 理事會 및 제1회 定期總會에서 香港稅務學會와 日本稅務研究센터가 新規入會함으로써 가맹단체가 13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때 각국의 대표들은 친교와 협력을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한 외에 小松芳明 亞細亞大學 敎授의 租稅問題의 國際化에 관한 記念講演과 日本稅理士制度의 現狀과 課題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고, 95년 理事會는 韓國의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決議하였다.

---

161) 片岡輝昭씨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直前 會長으로서 1988년 필자가 日本稅理士制度 研究次 渡日時 韓國과 日本 양국의 稅務士·稅理士間의 관계 증진을 위한 좋은 寄稿를 당부하였던 바, 귀국후 韓國 稅務士들에게 보내는 Message로서 「日本の稅理士について」라는 特別寄稿文을 전하여 「韓國의 稅務士 여러분들에게」로 번역하여 소개된 바 있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會長 片岡輝昭, 「韓國의 稅務士 여러분들에게」, 權海浩 飜譯, 季刊 稅務士 봄號, 韓國稅務士會, 1988, pp.6~7.

第 7 章　稅理士 制度

第 1 節　稅理士制度의 基本 理念

Ⅰ. 稅理士의 法的 地位

1. 納稅義務者와 稅務官署와의 對等性

納稅義務者와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租稅法律主義의 원리상 대등한 지위에 선다. 租稅法律主義는 租稅法律에 정하여진 納稅義務 성립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있는 때 納稅義務가 성립하고, 실정 租稅法律上의 納稅義務 확정요건을 만족한 행위가 있는 때 이미 성립된 納稅義務가 확정된다는 法理(租稅要件 이론)를 따른다.[1)]

納稅義務者의 신고에 의한 納稅義務의 확정, 租稅行政廳의 更正이나 決定處分에 의한 納稅義務의 확정, 租稅行政廳의 賦課處分에 의한 納稅義務의 확정 등의 法 효과가 효과의사에 의하여 그 내용을 발생하거나 法律에 의하여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法 효과 그 자체가 실정 法律에 정하여져 그 실정 法律에 의하여 納稅申告 행위나 更正·決定·賦課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나 처분은 의사표시를 中核으로 하는 法律行爲가 아니라 認識의 表示, 判斷의 表示, 觀念의 通知를 中核으로 하는 準法律行爲, 즉 確認行爲인 것이다.[2)]

따라서 현행 租稅法 제도 하의 納稅義務者와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와의

---

1) 新井隆一, 「稅理士制度の基本理念」, 日稅研論集 第24號 中,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p.3.
2) 上揭論文, p.4.

租稅法律 관계는 權力服從關係, 즉 上下關係에 의한 하명이 아니라 納稅義務者와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간에 동일한 입장에서 경합적인 대등관계인 것이다.[3]

2. 稅理士와 租稅行政廳과의 對等性

稅理士와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는 租稅法律 관계상 대등한 지위에 선다.

稅理士는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와 대등 관계에 있는 納稅義務者의 위촉에 의하여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작성」, 「稅務相談」을 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稅理士法 제2조 1항), 이에 부수하여 「稅務書類의 작성, 會計帳簿의 記帳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사무」를 業으로 하고 있다(稅理士法 제2조 2항).

따라서 稅理士의 행위는 위촉자의 納稅義務에 대하여 상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촉자를 위하여 그 納稅義務의 적법성을 유지하는데 봉사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稅理士는 租稅에 관련한 위촉자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의 지위에 서는 위촉자와 동격의 地位者로서 官公署와도 대등적 관계자인 것이다.

3. 稅理士의 法的 地位와 稅理士의 業務

稅理士의 업무에 있어서 그 절차 수행의 방법, 노력의 목표, 봉사의 목적등 모두가 실정 租稅法律의 解釋·適用, 상대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극히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여서 納稅申告 행위등의 法的 性質은 행위자의 효과의사를 요소로 하지 않는 認識의 表示, 判斷의 表示 내지 觀念의 通知를 中核的 요소로 하는 準法律行爲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효과의사는 배제된다.

따라서 稅理士는 그 업무가 위촉자의 위촉을 받고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촉자의 효과의사에 의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자로부터

3) 上揭論文, p.5.

도 독립적인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것은 稅理士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된다.[4]

II. 稅理士의 使命

1. 納稅義務의 適正한 實現

稅理士의 使命은 稅理士法 제1조에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된 公正한 立場에서 申告納稅制度의 이념에 따라 納稅義務者의 신뢰에 부응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適正을 도모하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稅理士의 使命의 中核은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適正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상으로는 納稅義務者와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租稅法令을 통한 합치, 즉 適法한 納稅義務의 과부족없는 실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稅理士의 使命」은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使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納稅義務者의 使命을 기초로 한 것이다.[5]

2. 稅務에 관한 專門家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稅務」라 함은 租稅法律에 정하여진 租稅에 관한 法律要件의 내용을 특정하는 作業, 즉 실정 租稅法律의 解釋作業, 그 내용을 특정한 실정과 租稅法律에 정하여진 租稅에 관한 法律要件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는 작업, 그 인정한 사실을 法律에 적용하는 작업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작업인 것이다.

이를 行政廳에서 본다면 更正·決定의 처분, 賦課處分 등 租稅行政의 中核적

4) 上揭論文, p.6.
5) 上揭論文, p.9.

인 행위이고, 納稅義務者 쪽에서 본다면 納稅申告行爲, 稅理士의 입장에서 보면 稅理士의 업무인 것이다.

稅理士가 「稅務에 관한 專門家」인 것은 租稅에 관한 「法律의 解釋」, 「事實의 認定」, 「法律의 適用」이라는 3 요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능력 내지 기술을 가진 자로서 이를 구사하여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작성 및 稅務相談」, 즉 「財務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능력 내지 기술을 가진 자를 말한다.[6]

3. 獨立하여 公正한 立場

稅理士가 租稅法律의 적정한 해석, 적정한 실현을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합리적인 입장이란 결국 적정 내지 정당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稅理士法 제1조에서 규정한 「公正한 立場」이란 이러한 합리적인 정당한 입장을 말한 것이다. 이는 納稅義務者 측에도 치우치지않고 국가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의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公正 내지 公正한 立場이란 어디에도 拘束되지 않는 立場, 즉 「獨立한 立場」이지 않으면 안된다.

租稅에 관한 法律의 解釋, 事實의 認定, 法律의 適用에 稅理士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가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

4. 納稅義務者의 信賴

稅理士는 「納稅義務者의 信賴에 부응하여」 使命을 수행하여야 한다. 稅理士는 「專門家로서의 能力」을 갖는 것은 물론 稅理士로서의 信用과 品位를 해하는 자여서는 안된다. 稅理士法은 이에 관련하여 「缺格條項」(稅理士法 제4조), 「登錄拒否事由」(稅理士法 제24조), 「登錄의 取消」(稅理士法 제25조), 「業務의

---

6) 上揭論文, p.10.

停止」(稅理士法 제43조)등의 규정을 두고, 「脫稅相談의 禁止」(稅理士法 제36조), 「秘密嚴守 義務」(稅理士法 제38조), 「使用人등에 대한 監督義務」(稅理士法 제41조의 2), 「助言義務」(稅理士法 제41조의 3), 「業務의 制限」(稅理士法 제40조), 「信用失墜行爲의 禁止」(稅理士法 제3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7]

5. 「納稅者 權利」의 擁護

稅理士法 제1조의 「稅理士의 使命」 규정에 「납세자의 權利擁護」라는 文言을 추가 삽입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權利」라 하면 납세자의 租稅法律上의 權利와 理論上의 權利로 나눌 수 있고, 이는 實體法上의 權利와 節次法上의 權利로 나눌 수 있다.

납세자의 租稅法律上의 權利는 「납세자」의 이론상 權利에서 유래한다. 납세자의 실정 租稅法律上의 權利외에 「실정 租稅法律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納稅義務를 賦課하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權利」, 「租稅法律 규정에 위반하는 納稅義務를 과한 처분을 履行하지 않을 權利」, 「憲法에 違反하는 租稅法律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의 성립을 거절하고 履行하지 않을 權利」, 「현재의 妥當性을 결여한 내용의 租稅法律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의 성립을 거절하고 이행하지 않을 權利」 등[8]이다.

이들 중 「租稅法律에 규정되지 않는 納稅義務를 賦課하는 처분을 履行하지 않을 權利」, 「租稅法律의 규정에 違反하는 納稅義務를 과한 처분을 履行하지 않을 權利」, 「憲法에 違反하는 실정 租稅法律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의 성립을 거절하고 履行하지 않을 權利」는 稅理士法 제1조에서 말한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適正한 實現」의 해석의 실질 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稅理士의 납세자의 權利擁護는 실정 租稅法律上의 權利와 稅理士法 제1조의 「稅理士의 使命」중에 이미 이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7) 上揭論文, p.15.
8) 新井隆一 敎授는 이 4 가지 「履行하지 않을 權利」를 「不納稅의 權利」라고 한다. 上揭論文, p.16.

그렇게 본다면 稅理士法 제1조의 「稅理士의 使命」의 규정에 「납세자의 權利의 擁護」의 문언을 추가·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稅理士法 제1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9]

第 2 節 稅理士業務와 法的 性格

Ⅰ. 稅理士의 意義

미국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稅務에 관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행하는 職業專門家가 없다. 法律家 및 대리인의 承認에 관한 法律(RECOGNITION OF ATTORNEYS AND AGENTS) 제1조(a)항 「어떤 州 ……의 最高 裁判所에 속하는 法曹會의 회원인 자는 本項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특정의 당사자를 대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임을 선언하는 書面을 行政機關에 제출함으로써 당해 行政機關에 대하여 제3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b)항에 「어떤 州…… 公認會計士로서 활동하는 적정한 자격을 가진 자는 本項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특정 당사자를 대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자임을 선언하는 書面을 財務省 내에 國稅廳에 제출함으로써 行政機關에 대하여 제3 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財務省 規則(CIRCULAR) 230호 제10. 3條(a)항과 (b)항도 위의 내용과 같다.

그 외에 同規則 제10. 3조(c)항에 따라 「本條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登錄을 받은 者」, 즉 「登錄代理人(enrolled agents)」과 同條(d)항에 규정한 「……保險計理士登錄合同委員會에 의하여 保險計理士로 登錄을 받은 者」, 즉 「登錄保險計理士(enrolled actuaries)」와, 同規則 제10. 5조(c)항이 「國稅廳 業務規

9) 上揭論文, p.17.

制部長이 業務登錄 여부를 결정·유보하고 있는 申請人에 대하여 暫定的으로 업무의 承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暫定的 承認을 받은 자가 同規則 제10. 7조(c)항 「누구라도 租稅申告書의 작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租稅申告者 作成者」 등이 稅務에 관한 납세자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이상으로 보아 辯護士, 公認會計士, 登錄代理人 기타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제3 자를 代理할 수 있다. 단, 登錄保險計理士는 각종 年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자유로이 타인의 申告書作成등을 할 수는 있으나 內國歲入法典 제7701조(a)항 제36호에서 「租稅申告書 作成者(income tax return preparerer)라 함은 대가를 받고 租稅의 신고서 또는 당해 租稅의 還給請求書를 작성하는 자 또는 이를 위하여 제3 자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각종 義務違反에 대하여는 각종의 罰則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稅務에 관한 업무를 稅理士가 독점적인 職業專門家로서 담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이를 위한 「稅理士法」 제3조 제1항에 稅理士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 「稅理士試驗 免除者」, 「辯護士」, 「公認會計士」로 규정하고, 稅理士法 제18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日稅連의 「稅理士名簿」에 登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번 登錄하면 계속 유효한데 대하여, 美國의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 이후 登錄의 경우 3년마다 최저 72시간의 교육을 받고 登錄更新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10]

II. 稅理士의 業務

1. 稅理士業務의 意義

10) 高野幸大, 「稅理士業務とその法的性格」, 日稅研論集 第24號 中,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p.23.

稅理士의 업무는 稅理士法 제2조 제1항에서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작성」, 「稅務相談」과 제2항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 財務書類의 작성, 會計帳簿의 記帳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사무를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稅理士의 업무로 본다는 說[11]과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사무로 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들 사무를 業으로 하는 경우의 당해 業이 稅理士業務라는 說[12]로 나눈다.[13]

따라서 이들 사무를 행하는 者가 法 제3조의 稅理士資格을 가지고 法 제19조에 따라 登錄을 받은 者가 아닌 경우에도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稅理士法에 저촉되지 않는다.

2. 稅務代理의 法的 性格

稅理士法 제2조 제1항 제1호 稅務代理의 규정에서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稅務代理가 대리뿐만 아니라 대행의 槪念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문제로서 稅務 「대리」가 종래부터 法律行爲의 대리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의 대행을 포함하는 것이다.[14][15][16]

參議院 大藏委員會에서도 稅務代理의 범위에 대하여 사실행위의 대행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나, 대리라는 말이 통상 法律行爲의 경우에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稅理士法 改正時 稅理士業務의 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리, 대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稅務代理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17]

---

11) 北野弘久, 稅法學の基本問題, 東京:成文堂, 1984, p.459.
12) 新井隆一, 「稅理士法 第2條 第1項 第3號 (稅務相談)の意義」·稅研35·36 合併號, p.18.
13) 高野幸大, 前揭論文, p.24.
14)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新稅理士法要說, 三訂版, 1990, 5, p.51.
15) 高野幸大, 前揭論文, p.24.
16) 稅理士法 제30조에 의한 代理權限을 명시한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稅務代理 행위에 있어서도 稅務官署가 이를 인정하고 眞實代理權限이 있는 경우에는 無權代理行爲가 아니다. 東京地昭和39년 2월 28일判·昭和35년 (行) 114호, 東京地方稅理士會, 前揭書, pp.636~638.
17) 高野幸大, 前揭論文, p.24.

稅務代理의 法的 性格을,

① 眞正代理로 파악하는 說(眞正代理說--新井隆一)

② 特殊代理로 파악하는 說(特殊代理說--北野弘久)

③ 代行行爲로 파악하는 說(代行行爲說--新井隆一)로 나눈다.[18]

「眞正代理說」은 稅理士의 稅務代理는 行政法에 있어서 私人의 행위의 眞正代理에 속하는 것이다. 行政法에 있어서 私人의 대리는 民主行政의 확충 또는 보충으로서 인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稅理士의 稅務代理는 民主行政의 原則의 확충 또는 보충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眞正代理說은 사적 자치의 확충으로서 인식되는 民法上의 대리와 구별하여 行政法에 있어서 私人의 행위의 대리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民法上의 代理制度의 기능과 行政法上의 代理제도의 기능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나, 民法上의 대리와 行政法上의 대리가 法律 관계의 본질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稅務代理를 眞正代理하는 근거는 稅務代理의 대상이 되는 行政法上의 私人의 행위가 본래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과, 納稅申告書등에 있어서 본인인 法人의 代表者등에 의한 署名捺印이 행위의 본질상 요구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2 가지 점에 있다.

「特殊代理說」은 稅理士法에서 정한 稅務代理를 民法上의 대리와는 다른 稅理士法上의 특수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說에서도 民法上의 대리와 特殊의 대리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단, 1964년의 稅理士法 일부 改正案이 法律 행위의 「대리」와 사실행위의 「대행」과를 구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고, 稅理士法의 「稅務代理」에는 대리와 대행의 양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稅務代理는 대행을 포함하는 槪念이라는 의미에서 特殊代理인 것이다. 稅務代理에서 대행의 부분을 제하면 民法上의 대리와 차이가 없어진다.[19]

「代行行爲說」--納稅申告를 稅務代理하는 경우 「대리」의 개념중에는 「대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申告行爲의 法的 性格은 ① 法律行爲로 보는 說 ② 準法

18) 上揭論文, pp.25~26.
19) 上揭論文, pp.26~27.

律行爲로 보는 說 ③ 신고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기본적 신고와 附隨的 신고로 나누어 法律行爲, 準法律行爲 및 事實行爲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說로 나눈다. ③說에 따르면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相對方, 相對方과 본인의 3면 관계를 전제로 「본인과 代理人間에 대리인은 代理權을 갖고 대리인이 그 代理權을 근거로 相對方에게 法律行爲를 한다면 그 法律效果는 본인과 相對方間에 직접 발생한다.」 使者와 대리의 차이는 法律行爲에 있어서 주체적 자유의 유무이다. 準法律行爲에 있어서도 대리인은 인정된다. 따라서 基本的 신고와 附隨的 신고중 事實行爲를 제하면 신고의 대리는 항상 가능하다.

代行行爲說의 근거인 稅理士法 제33조 「당해 신고서등에는, 아울러 본인……이 署名捺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條의 署名捺印은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어, 稅理士法上의 稅務代理가 眞正代理가 아니라 代行行爲說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가 納稅義務의 확정등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그 의미 내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도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할 필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法律行爲인 附隨的 신고인 경우에는 당해 書類의 效果意思를, 準法律行爲인 기본적 신고인 경우에는 당해 書類의 확인 내용을 제3 자인 稅理士가 주체적 결정을 할 자유를 갖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한 稅務代理는 眞正代理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眞正代理說이 代行代理說을 비판하는 것과 같이 위의 본인의 署名捺印 행위는 본질상 요구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0]

3. 「他人의 要求에 따라」의 意義

稅理士法 제2조 제1항은 「稅理士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租稅……에 관한 다음에 게기하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最高 法院의 判例는 零細商工業者에 의하여 조직된 任意團體인 A 交友會(民法上權力없는 社團)의 事務局長이 在職中에 稅理士의 자격을 갖지 않고 交

20) 上揭論文, pp.27~33.

友會의 事務所에서 同會의 회원인 B 有限會社 외 43명의 稅務書類인 法人稅確定申告書를 작성한 것이 稅理士法 違反인지를 다룬 事件에서[21] 行爲人의 辯護士등은 「자기의 意思에 관계없이 從業員으로서의 義務에 따라 同會의 사무로서 각 회원을 위하여 稅務書類의 작성에 종사한 것」이므로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稅務書類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稅理士法에 違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22]

그러나 이 경우 각 회원을 위한 稅務書類의 작성이 각 회원의 승락, 즉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同會의 從業員의 의무로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각 회원의 稅務書類 작성 의뢰가 同會의 가입을 원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23]

4. 「業으로 하는」의 意義

「業으로 하는」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稅理士法 제2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무를 반복·계속하는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를 갖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복·계속하여 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행위의 회수에 관계없이 반복·계속할 의사를 갖고 행하는 경우에는 「業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 辯護士法 제72조 「……報酬를 받을 목적으로……」(상기 辯護士法의 경우는 부당한 報酬와 같은 弊害防止 취지를 담은 취지라고 한다). 일본 公認會計士法 제2조 제1항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報酬를 받고……」와는 대조적으로 稅理士의 경우는 營利目的의 유무 내지 有償無償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獨逸 稅理士法 제2조 제1항에서도 「主된 職業, 從된 職業, 有償 또는 無償과는 관계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4]

---

21) 最高裁 1966年 3月 31日, 刑集 20卷 3號, p.146.
22) 高野幸大, 前揭論文, p.41.
23) 上揭論文, p.42.
24) 上揭論文, p.44.

이에 비하여 美國 內國歲入法典 제7701조 (a)항 제36호에서 「대가를 받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租稅申告書 作成者는 대가를 받고 행한 자여야 한다.

辯護士의 訴訟활동이 專門的 법적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稅理士業務의 경우 複雜性이나 專門性을 요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면서도 稅務書類의 작성등의 경우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또 無償 또는 저렴한 金額으로 稅理士業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존재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까지 규제하지 않는다면 有償으로 업무를 행하는 자의 업무를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稅理士制度 그 자체의 존재도 위험에 빠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 稅理士法의 해석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5. 勤務稅理士 問題

稅理士資格을 갖고 稅理士登錄을 받은 자가 타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勤務稅理士라 한다.

첫째, 稅理士인 자가 法人의 從業員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당해 法人의 고객에 대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둘째, 法人등의 從業員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당해 法人을 위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경우,

셋째, 他稅理士 또는 辯護士·公認會計士 기타 職業專門家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경우,

넷째, 稅理士資格을 갖지 않고 法人등의 從業員으로서 당해 法人등을 위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경우 등.

둘째의 경우나 넷째의 경우, 法人의 經理擔當 從業員으로서 당해 法人을 위하여 稅理士業務를 한 경우는 稅理士業務를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첫째의 경우에 고객에 대한 써비스 제공은 稅理士法上 문제가 되고,[25] 셋째의 경우는 非稅理士의 사무소, 非稅理士에 의한 稅理士業務 監督

등에 비추어 稅理士事務所 설치 규정등에 문제가 있다.

第 3 節 稅理士의 權利와 義務

Ⅰ. 稅理士 開業을 前提로 한 權利와 義務

稅理士業務와 관계에서 權利와 義務를 살펴보면,

첫째, 업무를 개시하는 前提가 되는 權利와 義務(稅理士登錄에 관한 權利와 義務)

둘째,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權利와 義務(調査立會權)

셋째, 업무를 개시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權利와 義務(會費納付義務) 등이 있다.

1. 登錄에 관한 權利와 義務

稅理士의 자격을 가진 자가 稅理士業務를 하고자 하는 때는 먼저 稅理士名簿에 登錄하지 않으면 안된다(法 제18조). 登錄은 所屬이 예정되는 稅理士會를 통하여 日稅連에 申請하여야 한다. 登錄申請을 받은 日稅連은 缺格條項(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登錄拒否 事由(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稅理士名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缺格事由, 登錄拒否事由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의 고장으로…… 적정을 결할 우려가 있는 자」(제6호),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稅理士의 직책에 비추어 稅理士로서의 適格性을 결한 자」(제7호)등의 규정이나, 日稅連이 登錄拒否를 결정한 경우에는 國稅廳長官에게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法 제24조의 2). 또 日稅連이 登錄을 拒否하는 경우 資格審査會에서 審査하고, 申請者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法 제22조 제2항), 그 결정은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

25) 上揭論文, p.47.

등록후 「稅理士證票」를 교부하고 등록과 동시에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 區域의 稅理士會의 회원이 된다.

2. 事務所 設置義務

가. 1人 1사무소

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法 제40조). 그리고 그 명칭은 稅理士事務所라고 하여야 한다(同條 제2항). 또 稅理士事務所를 2 이상 설치할 수 없다(同條 제3항).

1人 1사무소로 한 것은,

첫째, 稅理士의 業務活動의 본거를 1개소로 한정하는 것이 法律 관계를 명확히하는데 편의하고,

둘째, 個人의 監督 능력을 넘는 업무의 範圍를 확대하는 것을 규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稅理士 이외의 자가 稅理士業務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등 2 가지 이유에서 이다.[26]

그러나 1980년 稅理士法 개정 이전 이미 설치되어 있던 2 또는 3 사무소에 대하여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한 稅理士 1代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27] 이들 복수 사무소에 대하여 國稅廳長官은 「특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소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28]

稅理士事務所라 함은 通達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稅理士業務를 집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계속적인 稅理士業務를 집행하는 장소인지 여부는 외부에 대한 表示의 有無, 設備狀況, 使用人의 有無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判定'한다.[29] 本店에서 全額을 출자하여 本店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는 「체인점」의 경우 稅理士가 그 「使用人에 대한 監督義務」[30]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

---

26)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日本稅理士法逐條解說(新訂版), p.95.
27) 1980년 改正法 附則 제16항.
28) 1980년 法 改正 附則 제17항.
29) 基本通達 제33조.
30) 法 제41조의 2.

소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監督의 範圍는 稅理士의 能力, 地域에 있어서 稅理士의 數와 需要, 관여하는 會社의 大小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인수를 산출할 수 있으나 감독불능의 인수를 고용할 수 없다.[31]

나. 稅理士事務所의 名稱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에 대하여 1980년 法 개정 이전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고 통일적인 명칭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적 문제로 된 無資格稅理士를 배제하여 納稅義務者의 편의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80년 法 改正時 「稅理士事務所」로 통일하였고,[32] 稅理士가 아닌 자는 稅理士事務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法 제53조 제1항), 이에 違反한 자는 罰金이 과해진다(法 제62조 제1호).

日稅連은 개정 稅理士法에 근거하여 1980년 10월 2일 사무소 명칭에 관한 會則 제34조 제2항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그 稅理士의 姓名을 쓰고 기타 文字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개정하여 1981년 2월 2일 認可를 받았다. 그 결과 「○○稅理士事務所」등으로만 看板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명칭 제한에 대한 會則 변경은 稅理士의 營業自由를 부당히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는 명칭의 變更 登錄을 하지 않은 稅理士가 있었다. 이에 日稅連은 稅理士의 명칭 제한에 관한 조회를 하였던 바 大藏省 및 法制局은,

첫째, 稅理士法 제40조 제2항에 「稅理士事務所라 칭한다」고 한 것은 定義規定이지 일정 명칭의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

둘째, 會則에 의한 명칭 제한은 회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일부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한 會則에 의한 명칭 통일은 사적 자치의 범위내이다.

셋째, 그러나 「姓名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타의 文字를 사용하여서는 안된

31) 司法書士의 使用人은 3인에서 5인까지이다. 稅理士法의 立法過程에서도 이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勤務稅理士와의 관계등을 이유로 단념하였다. 小林博志, 「稅理士の權利と義務」, 日稅研論集 第24號 中,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p.108, 주(14).

32) 第6章 第1節 Ⅵ 참조.

다」라고 한 것은 합리적 제약이라 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나 違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33]

이에 日稅連은 1982년 7월 23일 會則 제34조 제2항을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그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임을 명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홍보하였다.

①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姓名)稅理士事務所」로 한다.

② 前項의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稅理士(姓名)事務所」라고 한다.

③ 기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會則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다.

日稅連의 準則에 看板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제는 각 稅理士會의 자주성에 맡긴다.

또 稅理士事務所에는 標札이 게시되는데, 日稅連의 準則에 의하면 標札에 대하여 「連合會에 登錄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法 제10조)고 하여 登錄된 명칭과 동일성이 요구된다. 결국 登錄, 標札과 看板의 명칭은 無資格稅理士의 추방이라는 稅理士法의 취지등을 고려한다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II. 開業後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權利와 義務

1. 稅理士 委囑 契約

日稅連의 報酬 규정에 稅理士 報酬는 「顧問 報酬 및 稅務代理 報酬, 不服請求代理 報酬, 調査立會 報酬, 稅務書類의 作成 報酬 및 稅務相談 報酬」로 구별한다(報酬規定 제2조).

稅理士 顧問 계약을 위임 계약 내지 위임 유사로 보는 民法 제651조의 적용을 인정한다는 說과 稅理士 顧問 계약을 無名 계약으로 보아 民法 제6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說[34]로 나누며 전자가 通說이다. 이에는 無理由 解除를

33) 小林博志, 前揭論文, p.70.

34) 東京稅理士會顧問契約特別委員會의 1979년 硏究 報告에서도 稅理士顧問契約은 稅理士法등 公法의 규제를 받아 私的 자치가 수정된 것이고, 顧問 契約이 法律事務뿐 아니라 會計事務를 포함한

인정한다는 說과 無理由 解除를 제한한다는 說이 있다.[35]

2. 納稅의 準備段階에 관련한 權利와 義務

가. 助言義務(法 제41조의 3)

稅理士法 제41조의 3에 의하면 稅理士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첫째, 위촉자가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면하려고 하는 사실,

둘째, 위촉자가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는 사실,

셋째, 위촉자가 國稅 또는 地方稅의 課稅標準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과장한 사실이 있음을 안 때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助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義務는 1980년 法 改正時 신설된 규정으로서 위촉자의 不正行爲에 대하여 「是正助言義務」를 명함으로서 納稅義務者의 적정한 納稅義務 실현을 하게 하여 申告納稅制度의 실질을 거양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36]

그러나 이 助言義務는 稅理士 委囑契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稅理士法에 이 義務規定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稅理士法 改正 作成案 과정에서 도입반대 의견이 강하여 國會審議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은 규정이다.

이 규정의 違反에 대하여는 첫째, 稅理士法上의 義務이기 때문에 責任 違反에 대하여 懲戒責任이 생기고, 둘째, 稅理士 顧問 契約上의 義務이기 때문에 民事責任이 생긴다.[37]

助言義務 규정의 대상은 당연히 脫稅相談 禁止와 不眞正稅務書類의 作成 禁止가 포함된다. 위촉자의 「不正한 事實」을 알고 유효한 助言을 하지 않은

포괄적인 것으로 계속성을 갖는다는 2 가지 이유에서 民法上의 전형계약으로서의 委任契約과는 다른 無名契約이고 民法 제651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 小林博志, 前揭論文, p.77.

35) 上揭論文, pp.75~76.

36) 松澤智, 前揭書, p.78.

37) 小林博志, 前揭論文, p.79.

경우에는 稅理士法과 契約上의 助言義務 違反이 되는 것이다. 또 稅理士가 脫稅를 적극적으로 방조·유도한 경우에는 제36조의 脫稅相談에 해당한다.[38]

나. 脫稅相談의 禁止

稅理士法 제36조에서 「稅理士는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면하게 하거나, 또는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을 것을 指示·相談, 기타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脫稅相談등 제36조 違反의 행위를 한 稅理士에 대하여는,

① 1년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 또는 禁止의 懲戒處分,

② ①과 동시에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万円 이하의 罰金의 刑事罰을 받는다.

脫稅相談의 대상이 되는 國稅와 地方稅에는 稅理士의 獨占業務의 대상이 되는 租稅뿐만 아니라, 稅理士의 獨占業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印紙稅, 登錄稅, 關稅 등도 포함한다.[39]

3. 納稅節次, 更正, 不服請求등에 직접 관련한 權利와 義務

가. 稅務代理權의 明示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이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稅務官署에 제출하여야 한다」(稅理士法 제30조)고 稅務代理權의 明示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그 증명 방법에는 代理行爲와 동시에 본인으로부터의 授權이 있음을 알 수 있는 書面을 제출하는 형식(社會保險勞務士法施行規則 제16조의 2, 不動産登記法 제35조 제1항 5호, 信託規則 제14조 4항)과 일반적 代理權의 書面에 의한 증명을 하는 형식(民事訴訟法 제80조 제1항, 行政不服審査法 제13조 제1항, 非訟事件訴訟法 제7조)이 있다.

稅理士가 하는 複數의 대리, 代行行爲가 하나의 稅務代理인지 여부는 納稅

38) 上揭論文, p.81.
39) 稅理士法要說, p.119, 稅理士法逐條解說, p.91.

義務者, 稅務官公署, 행위의 목적이 된 事項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稅理士法 제2조 제1항 1호에서 稅務代理로 게기한 申告·申請·請求·不服請求는 각각 하나의 代理行爲이다.

신고중 確定申告와 修正申告도 각각 하나의 稅務代理로서 파악하고, 不服申請의 경우에도 異議申請과 審査請求는 별개의 代理行爲로 파악한다. 「權限이 있음을 정하는 書面」은 稅務代理의 範圍등을 명확히하는 委任狀의 형식이 바람직한 것이나 稅理士法 제30조의 취지로 보아 顧問 계약의 副本등 위임의 존재를 나타낸 것으로 족하다.[40]

나. 復代理人選任權

「稅理士는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 즉 納稅義務者의 復代理人을 選任하는 경우에는 納稅義務者로부터 特別委任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에서는 委任狀의 형식은 규정이 없으나 復代理人의 選任에 있어서는 納稅義務者의 委任狀이 필요하다.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의 復代理人의 選任이기 때문에 復代理人은 稅理士 내지 稅理士業務를 許可받은 자에 한한다. 稅理士事務所의 職員은 단순한 補助者이기 때문에 復代理人으로 選任될 수 없다.

다. 稅理士證票의 提示義務

稅理士는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 稅務官署의 職員과 面接時 稅理士證票를 제시하여야 한다(稅理士法 제32조). 이 규정은 제30조의 書面 제시 義務와 特別委任의 규정(法 제31조)과 함께 稅理士가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여 稅務代理를 하는 것을 보장함과 동시에 無資格稅理士의 稅理士業務를 배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稅理士證票의 제시는 稅務公務員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하여야 한다.[41] 稅務公務員은 稅理士證票의 제시가 없는 경우 面接을 拒否할 수 있다.

---

40) 小林博志, 前揭論文, p.85.
41) 新稅理士法要說, p.106.

라. 作成書類의 署名捺印 義務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 租稅에 관한 신고서등을 작성하여 稅務官署에 제출하는 때는 당해 신고서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稅理士法 제33조).

이 때 署名捺印하는 경우에는 稅理士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納稅義務者의 대리인으로서 신고서등의 書類를 작성한 稅理士의 책임과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마. 書面添附權

稅理士法 제33조의 2에 의하면 稅理士는,

첫째, 申告納稅方式등에 의한 課稅標準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計算·整理 또는 相談에 응한 事項」 등을 기재한 書面을 당해 신고서에 添附할 수 있고,

둘째,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相談을 받고 審査한 때 당해 신고서가 法令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기재한 書面을 添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稅理士임을 부기하여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후자의 審査事項을 기재한 書面添附制度는 1980년 改正時 설정된 것으로 納稅義務者가 작성한 신고서를 稅理士가 審査하여 納稅義務者의 신고를 適正하게 하고, 稅務官署도 이를 존중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활화와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목적이었다. 후자의 審査對象은 「신고서」이고, 관계 財務書類를 審査한 경우에도 財務書類가 適正하게 작성되었음을 기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42]

稅理士法 施行規則 제14조의 3에 의하면 書面에는 「相談에 응한 事項」이나 「相談을 받은 事項」을 기재하여 相談의 내용을 稅務官署에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書面添附權은 사실상 稅理士의 稅務相談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43]

바. 調査立會權과 調査의 通知

---

42) 新稅理士法要說, p.112.
43) 稅理士法逐條解說, p.84.

稅務公務員에 대하여 「租稅의 課稅標準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 그 帳簿書類를 調査하는 경우에 있어서 ……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書面을 제출한 稅理士가 있는 때는 당해 稅理士에게 調査 日時와 場所를 通知할 義務」를 과하고 있다(法 제34조).

본인에게는 通知되었으나 대리인인 稅理士에게 通知가 없는 경우에도 稅理士는 調査에 立會할 수 있다.

그러나 納稅義務者가 稅務公務員에 대하여 稅理士가 立會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調査를 중지할 수는 없다.[44]

사. 更正에 대한 意見 聽取權

稅理士法 제35조에 의하면 제33조의 2 「計算事項을 記載한 書面」 또는 「審査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添附한 신고서에 대하여 당해 書面을 添附한 稅理士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제도는 官公署와 稅理士간의 사실 인정이나 法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稅理士의 의견을 통하여 양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세무행정의 간소화와 원활화를 기할 목적에서이다.[45]

更正을 한 원인으로 된 사실에 稅理士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稅理士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나, 실제상은 官署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에도 稅理士의 의견 陳述權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 不服請求에 대한 意見 聽取權

稅理士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不服請求와 관한 稅務代理 권한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여(稅理士法 제30조, 行政不服審査法 제12조) 대리인으로서 不服申請을 한 稅理士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이 제도도 國稅不服審判所등과 稅理士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行政訴訟의 간소화와 원활화를 기할 목적에서이다. 不服請求에 대한 의견 청취도 更正에 대한 의견 청

44) 小林博志, 前揭論文, p.89.
45) 上揭論文, p.90.

취권과 마찬가지이다. 의견 청취하여야 할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裁決한 경우에도 裁決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法 제35조 제3항).

자. 不服請求의 取下

稅理士法 제31조에 의하면 稅務代理로서의 稅理士가 不服請求를 取下하는 경우 特別委任이 필요하다. 단, 이 규정은 行政不服審査法 제12조 제2항에서 不服請求에 대하여 「特別委任」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稅理士法 제31조가 없더라도 特別委任은 필요한 것이다. 特別委任이라 함은 納稅義務者가 不服請求 取下 권한을 委任狀의 형식으로 稅務代理를 한 稅理士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차. 稅務代理權과 기타의 權利

稅務代理權, 代行權은 위촉 계약등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나 稅理士法에서 稅務代理權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稅理士가 행사하는 稅務代理權 및 代行權은 眞正代理權·代行權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항이다. 예를 들면 稅理士法 제33조에 의한 稅理士가 작성하여 稅理士로서 署名捺印한 신고서에 納稅義務者도 署名捺印하도록 되어 있어 稅理士의 署名捺印 有無가 書類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稅理士의 진정한 代理權을 否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6]

稅務調査의 경우도 納稅義務者에게 通知하고 稅理士에게도 通知함으로써 稅理士의 진정한 代理權을 否定하는 것이므로 稅理士를 진정한 대리인으로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條文의 관행을 改正·修正할 필요가 있겠다.

稅理士의 代理權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稅務訴訟代理權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납세자가 權利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稅務訴訟이 필요하고, 이를 稅理士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의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편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47]

---

46) 上揭論文, p.92.

47) ① 三木義一, 「稅務當局による指導の範圍と稅理士の對應」 稅理 29卷 9號, p.12.
② 小林博志, 前揭論文, p.92.

그러나 稅理士試驗에는 訴訟法 科目이 없는 등 稅務訴訟代理權을 인정할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3 가지 방향이 있는 바

첫째, 辨理士와 같은 규정을 정비하여 稅理士를 輔佐人[48]으로 하는 方法,[49]

둘째, 租稅裁判所를 두어 稅理士 國家試驗에 訴訟法 科目을 추가하고 硏修하여 稅理士에게 訴訟代理權을 認定하는 方法,[50]

셋째, 辯護士와 共同 法律事務所에서 대응하게 하는 것[51] 등이다.

4. 稅理士業務에 직접 관련한 기타의 權利와 義務

가. 帳簿作成의 義務

稅理士는 稅理士業務에 관한 帳簿를 작성한다(法 제41조). 帳簿에는 委囑者別로 건별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 양식은 日稅連이 정한다(法 제49조의 13 1항 4호, 日稅連會則 제64조). 帳簿의 구체적 양식을 日稅連이 정하도록 한 것은 稅理士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1980년 法 改正時 도입되었고 作成義務 違反者에 대하여는 懲戒가 과해진다.

帳簿(기재내용)가 稅務調査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으나 유권해석에 의하면 所得稅法이나 法人稅法의 質問檢査權을 근거로 帳簿를 볼 수 없다.[52] 그러나 稅理士法 제55조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나. 秘密을 지킬 義務

稅理士法 제38조에 의하면 稅理士는 業務上 지득한 秘密을 누설 또는 도용

48)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에 의하면 1993년중 稅理士가 民事訴訟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輔佐人」資格으로 行政訴訟을 수행한 사례가 7건 있다. 第8章 第4節 X 稅務訴訟 참조.
49) 加納淸, 「稅理士の法改正と稅務訴訟代理權」, 稅法學 141號, p.32.
50) 中川一郎 發言, 「シンポジウム稅理士と稅務訴訟代理權について」, 稅法學 143號, pp.28~35.
51) 野間 發言, 「シンポジウム稅理士と稅務訴訟代理權について」, 稅法學 143號, pp.28~35.
52) 1980년 4월 1일 參議院大藏委員會에서 伊豫田 政府委員의 答辯, 小林博志, 前揭論文, p.94.

하여서는 안된다. 이 의무는 稅理士가 아니게 된 자와 稅理士業務를 한 通知辯護士등에도 과해진다(法 제50조, 제51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万円 이하의 罰金에 과해진다(法 제60조 1호). 특히 刑事罰이 과해지는 것은 稅理士에게는 의뢰자인 納稅義務者의 資産등 秘密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 稅理士가 그 秘密을 누설한다면 納稅義務者는 稅理士에게 안심하고 의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醫師나 辯護士등에도 守秘義務가 있으나 稅理士는 醫師나 辯護士보다 고도의 守秘義務가 과해진다.[53]

稅理士가 알고 있는 고객의 정보도 稅務調査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調査의 대상이되므로써 守秘義務가 해제된다는 說[54]이 통설이나, 稅理士는 稅務行政機關의 調査를 거부할 수 있다는 說도 유력하다.[55]

다. 使用人을 監督하는 義務

稅理士法 제41조에 의하여 稅理士는 사용인과 기타 종사자를 監督할 義務가 있다. 이것은 1980년 法 改正時 신설된 것으로 사용인에 의한 非違行爲가 많았던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이 義務는 辯護士등 다른 士에는 볼 수 없는 규정으로 이 義務의 도입에 반대도 강하였다. 그것은 民法에 사용자 책임이 있어 별도로 사용인의 監督義務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司法書士의 補助者는 5인으로 되어 있으나 稅理士의 사용인의 수는 勤務稅理士를 어떻게 셀 것이냐는 문제등이 있어 단념하였다.[56]

라. 報酬請求權

稅理士는 고객으로부터 納稅節次의 대리, 대행을 의뢰받고 처리한 경우 報酬를 청구할 수 있다. 稅理士法은 稅理士會의 會則에서 「稅理士業務에 대한 報酬의 최고 한도액에 관한 규정」(法 제49조의 2 제2항 7호)을 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그것은 위촉자인 納稅義務者를 부당한 高額 報酬로부터 보호하려

53) 上揭論文, p.96.
54) 田中二郎, 租稅法, 東京:有斐閣, 1983, p.210.
55) 小林博志, 前揭論文, p.96.
56) 1979년 6월 5일 衆議院大藏委員會 福田 政府委員 答辯.

는 취지에서 종래는 國稅廳長官이 최고한도액을 정하였으나 지역차가 있어 최고한도액을 각 稅理士會가 정하여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는 절차로 변하였다. 이에 日稅連은 「稅理士의 業務 報酬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1989년 개정), 「會計業務 報酬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1989년 개정)을 제정하여 각 稅理士가 稅理士報酬에 관한 會則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辯護士도 각 辯護士會 會則에서 報酬의 표준을 정하고 있으나 判例上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57]

士의 報酬에 대하여 宅地建物去來業者의 報酬規定과 같이 「최고한도액」을 정한 규정과 辯護士의 報酬規定과 같이 「標準告示」의 2 종류가 있으나, 稅理士의 報酬規定은 宅地建物業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자에 속하여 納稅義務者를 부당히 높은 報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58]

稅理士와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때 報酬를 결정하지 않은 때도 상당액의 報酬額을 지불할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稅理士會의 報酬規定, 委任事務의 種類, 事務處理에 요하는 시간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報酬額을 결정하여야 한다. 委任契約이 성립한 시점이 報酬請求權이 성립한 것이나 報酬의 지불은 사무를 수행한 후가 될 것이다.

III. 稅理士의 業務에 直接 관련되지 않는 權利와 義務

1. 信用失墜行爲의 禁止 義務

稅理士는 稅理士法 제37조에 따라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어떠한 행위가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稅理士의 信用과 品位는 稅理士 일반의 信用 또는 品位이다.[59]

---

57) 福岡高裁, 1963年 7月 31日 判決(判時 352號, p.62).
58) 小林博志, 前揭論文, p.98.

2. 稅理士會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權利와 義務

1956년 稅理士法 개정에 의하여 稅理士會의 强制加入制度가 도입되고 稅理士會의 登錄과 동시에 稅理士會 所屬이 되었다. 强制加入制度의 도입 이유는 辯護士의 辯護士會 强制加入과 마찬가지로 稅理士會의 稅理士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稅理士 자치의 철저를 기하고 稅理士業務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稅理士會가 稅理士法 개정 운동에 요하는 特別資金으로 「5千円의 特別會費」를 징수하여 소위 稅理士會의 정치단체인 「稅理士政治連盟」에 지출하는 결의에 대하여 어떤 회원이 ① 政治團體에의 寄附는 稅理士會의 목적 범위 밖이다. ② 決議는 회원의 사상 신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의견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熊本地裁 1986년 2월 13일 判決은 稅理士會는 公益法人이고, 民法 제43조가 적용되어 「稅理士會가 政黨이나 특정의 政治家의 後援會에 政治資金을 寄附하는 것은 稅理士會의 목적(權利能力)에 맞지 않는 것이나 稅理士會가 가진 公益性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여 稅理士會가 직접 政治獻金을 하지 않더라도 그 政治團體인 稅理士政治連盟에서 資金을 배포하는 사실에서, 稅理士政治連盟이 통로가 되어 본래 할 수 없는 公益法人으로부터의 政黨이나 政治團體에의 政治資金의 寄附가 합법화되었다. 또 特別會費의 納入强制에 반대한 회원에 대하여 일정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의 표명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의 무효의 판단을 하였다.[60]

그러나 高等法人인 福岡高裁 1992년 4월 24일 判決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判決을 취소하여 결의를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61]

첫째, 舊稅理士法 제49조(현 제49조 6항) 「稅理士會는 稅理士의 義務의 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개선·진보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회원의 指導, 連絡 및

---

59) 稅理士가 委囑者로부터 電話加入權差押解除 교섭을 의뢰받고 稅務署와 교섭하였으나 교섭 경과를 委囑者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달받은 資金을 보관하면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業務停止處分 9개월의 懲戒處分을 받았다.

60) 小林博志, 前揭論文, p.103.

61) 上揭論文, pp.103~104.

監督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同法 제49조의 12「稅理士會는 세무행정 기타 國稅 또는 地方稅 또는 稅理士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권한있는 官公署에 건의를 하거나 諮問에 답신할 수가 있다」 및 이들과 같은 취지의 稅理士의 規則을 근거로 하여 稅理士法의 개정을 권한있는 官公署에 건의하거나, 法의 制定이나 개정에 관하여 관계 단체나 관계 조직에 활동하는 것은 稅理士會의 목적 범위내이고 法律上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가 稅理士會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稅理士會가 이 단체에 이러한 활동을 위한 資金을 寄附하여 활동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稅理士會의 목적 범위내의 행위라 생각되어 진다」고 하였고,

둘째, 본건 特別會費중 일부는 政治家에게 寄附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稅理士法改正運動을 위한 大會費, 旅費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건 결의는 특정정치가의 정치헌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셋째, 본건 決議가 특정의 政治家에게 한 政治獻金 목적으로 아니고, 稅理士會에 있어서 회원은 稅理士法 개정에 반대하는 언론도 가능하므로 決議가 회원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兼業에 대하여

法律上「士」의 兼業에 대하여, ① 常勤의 公職에의 就任禁止와 營業事業에의 관여 제한, ② 常勤 公職에의 就任 禁止, ③ 제약 없음의 3 유형이 있다.

①은 辯護士 및 公證人으로서 辯護士는 일정 常勤 公務員의 就任은 禁止되고, 兼業에는 辯護士會의 허가가 필요하다(辯護士法 제30조). 公證人도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公證人法 제5조).

稅理士에게는 ②의 제약이 과해진다. 즉, 稅理士가「報酬를 받는 公職」에 就任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된다(法 제43조). 또 稅理士登錄 전에「報酬를 받는 公職」에 就任하였던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된다. 그러나 營利事業의 관여에 대하여 法律上 제약이 없다.

辯護士, 公證人 및 稅理士 이외의 士는 ③의 유형으로 司法書士등에는 法律上 兼業에 대하여 제약이 없다. 稅理士法에서는 兼業禁止가 없고 稅理士가 法人의 任員을 겸임할 수 있으나 商法에서는 顧問稅理士가 監査役에 就任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顧問辯護士의 監査役 就任에 문제된 裁判例가 있으나, 顧問稅理士가 監査役 就任에 문제가 된 裁判例는 없다.

學說上으로는 ① 顧問稅理士는 稅理士로서 전문분야로 會社에 봉사하는 것으로 會社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므로 監査役 就任에 문제가 없다는 說,

② 業務 내용에 따라 顧問稅理士의 監査役 就任은 兼業禁止에 반하는 경우라는 說,

③ 顧問稅理士가 會社에 유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監査役 就任은 兼業禁止에 반한다는 說의 3 說[62]이 있으나, 顧問稅理士가 會社의 代表役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監査役에 就任하여도 兼業禁止에 반하지 않는다는 說이 유력하다.[63]

第 4 節 稅理士의 責任

Ⅰ. 稅理士의 民事上 責任

1. 民事上 責任의 種類

稅務業務의 위촉을 받은 稅理士와 이를 위촉한 납세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고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稅理士에게는 債務不履行의 책임이 지워

62) 川島いづみ「稅理士の業務展開展開をめぐる知つておきたい事例と/クライアトの監査役就任と業務責任」稅理 33卷 8號, p.71.
63) 上揭論文, p.71.

진다. 이 때 발생하는 民事責任에는 위촉된 사무처리의 懈怠로 인한 「債務不履行」의 民事責任과, 懈怠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과실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不法行爲」의 책임이 있다.[64]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債務不履行의 형태는 履行遲滯, 履行不能, 不完全 履行의 3 형태중 「不完全 履行」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5]

2. 獨逸에 있어서 稅理士의 民事上 責任

가. 稅理士의 業務 委囑 契約의 法的 性格

獨逸 稅理士法 제33조는 稅理士의 활동 범위로서 ① 稅務上의 助言 ② 稅務事務 處理 및 租稅上 義務履行의 대리 ③ 稅務事務 處理 및 租稅上 義務履行에 대한 원조의 3 영역을 들고 있다.[66]

이로써 위촉자와 稅理士와의 法律關係는 雇用契約說, 請負契約說, 混合契約說이 대립된다.[67]

나. 稅理士의 民事責任

(1) 責任의 要件

① 계약 當事者간의 責任

稅理士에 대한 民事上의 責任 추급의 일반적 요건은 객관적인 과실의 사실, 인과관계, 歸責可能性이고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因果關係와 歸責可能性(고의·과실)이다.

因果關係--因果關係의 판단 기준은 「相當因果關係 理論」에 따라 그 損害 발생 원인과 稅理士의 행위 시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故意過失--故意의 판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過失의 인정은 곤란하다. 過失槪

---

64) 松澤智, 前揭書, p.97.
65) 首藤重幸, 「稅理士の責任, 稅理士の權利と義務」, 日稅研論集 第24號 中,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p.122.
66) 中川一郎, 「西ドイツの1975年 11月 4日 編 稅理士法 について」, 稅法學320號, 1977年 8月, p.34.
67) 上揭論文, p.36.

念에 대하여도 法律의 槪念이 불충분하여 통상 양심적으로 경험 풍부한 직역에 속하는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注意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判例는 稅理士의 注意義務를 확대하여 稅理士의 義務와 可能性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保證人의 지위에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68]

② 제3 자에 대한 責任

稅理士의 중대한 注意義務 違反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稅理士의 回答이나 증명이 제3 자의 財産處分 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稅理士法 제63조는 「稅理士 및 稅務代理士는 그 職務가 다망하거나 의뢰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거절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稅理士와 稅務代理士는 이의 지체로 인하여 생기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責任의 制限

稅理士의 民事責任의 制限(면책)은 2차대전 이후 중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稅理士와 위촉자간의 협정으로 稅理士의 過失로 인한 損害發生에 대하여 면책을 정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判例는 이를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 경과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3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損害賠償請求權[69]의 소멸시효의 단축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判例와 學說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3. 日本稅理士의 民事上 責任

가. 稅理士의 民事上 責任 理論

稅理士의 民事上 責任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不完全 履行의 存在, 稅理士 歸

68) 首藤重幸, 前揭論文, p.124.

69) 獨逸稅理士法 제68조는 「委任者와 稅理士 또는 稅務代理士간에 계약 관계로부터 생기는 委任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은 당해 請求權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責事由 存在, 不完全 履行의 違法性을 전제로 한다.

(1) 不完全 履行의 存在

稅理士業務인 稅務代理등 業務隨行에 있어서 필요한 注意를 나태하여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損害가 발생한 경우, 즉 단순히 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稅額보다 過少 또는 過大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제출에 따라 적극적인 損害가 발생한 때(加算金과 法定利子와의 차이 등) 不完全 履行의 존재를 인정한다.

(2) 稅理士의 歸責事由

「歸責事由」라 함은 稅理士의 故意·過失을 말한다. 故意는, 債務不履行 사실을 알고 무엇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이다. 過失은 債務者의 職業, 그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注意를 결하여 債務不履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稅理士 歸責事由 요건을 둘러싼 거증책임은 稅理士에게 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不完全 履行의 違法性

不完全 履行이 있는 경우에도 法律上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不完全 履行이 되지 않는다. 그 요건으로서는 일반적인 債務者의 留置權 동시 履行의 抗辯權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損害賠償請求權의 範圍

(1) 相當因果關係

稅理士에게 民事上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依賴者인 납세자에게 발생한 稅法上의 損害의 결과와 그 원인이 된 稅理士의 행위간에 因果關係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因果關係의 범위에 대하여는 「相當因果關係」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가 된 稅理士의 행위 또는 不作爲가 결과로 나타난 손해

의 발생사이에 보통 예상되는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인이 되는 稅理士의 행위로부터 보통 예측되는 범위의 결과사이에 당해 因果關係를 한정하는 것이 相當因果關係說이다.

(2) 過失相殺

稅理士의 獨占業務로 되어 있는 稅務書類의 작성, 稅務代理, 稅務相談 등에 대한 委囑業務를 稅理士가 租稅法規등에 따라 정확하게(납세자의 이익에 도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위촉자인 납세자로부터 情報提供이나 資料作成등에 대한 협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생한 稅務上의 손해 전부를 稅理士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不完全 履行에 대하여 위촉자인 납세자에게도 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稅理士의 損害賠償責任을 경감·상쇄하여야 할 것이다.

(3) 賠償額

不完全 履行에 의한 損害賠償의 범위는 不完全 履行과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전손해액이다. 稅理士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대부분은 稅理士의 過失에 의한 過大申告와 過少申告 관계이다.[70]

그중에는 특히 過大申告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過大申告에 대하여는 更正請求 期間이 지난 경우 過大申告된 부분의 申告納付稅額과 이에 대한 民事 또는 商事法定利子 合計額이 賠償額이 될 것이다.

過少申告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납세자가 納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賠償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過少申告 加算稅나 過少納付 加算稅 상당액은 賠償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71]

(4) 제3 자에 대한 稅理士의 民事責任

稅理士의 故意·過失에 의하여 직접 위촉관계가 아닌 제3 자의 損害가 발생

70) 佐藤義行, 「職業上の善管注意義務と賠償責任」, 稅理33卷 8號, 1990. 7, p.46.
71) 首藤重幸, 前揭論文, p.131.

한 경우에는 不法行爲(民法 제709조)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이 稅理士에게 지워질 수 있다. 稅理士와 의뢰한 납세자간에 발생한 損害를 債務不履行에 의한 책임이나 不法行爲에 의한 책임으로 구성상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제3 자와의 관련에 있어서 稅理士의 民事責任은 不法行爲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3 자에 대한 책임은 不法行爲 책임 요건의 존부에 따라 판단된다.

다. 稅理士 賠償責任保險

獨逸 稅理士法 제67조는 「稅理士와 稅務代理士는 그 직업 활동에서 생기는 책임의무의 위험에 대하여 적당한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職業責任保險加入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日本稅理士法에는 없다.

1987년 12월 損害保險會社 7개사에 의하여 稅理士 賠償責任保險이 大藏省에 의하여 承認되었고 1988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稅理士 賠償責任保險은 法令에 따라 자격을 가진 專門職業人을 위한 「專門職業人 賠償責任保險」의 하나로서 稅理士가 專門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72]

專門職業人의 賠償責任保險에 대하여는 이미 醫師·建築家·公認會計士·藥劑師·獸醫師·辨理士·辯護士·技術士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稅理士 責任保險 계약 약관상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稅理士의 故意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는 保險對象이 되지 않고 加算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脫稅相談이나 守秘義務 違反에 대한 損害도 保險對象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稅理士法 제36조(脫稅相談禁止)와 제38조(守秘義務)의 실효성을 외적으로 보강한 것이고,

셋째, 稅理士가 業務執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保險에 의한 損害補塡받을 수 없는데 이는 稅理士法 제41조(帳簿作成義務) 관계의 보완이다.

72) 石田滿, 「稅理士の責任の範圍と損害賠償をめぐる問題點」, 稅理 31卷 5號, 1988年, 5月, p.7.

獨逸 稅理士法은 職業責任保險에의 加入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稅理士 등과의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損害賠償請求權은 3년 시효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시효를 단축한 것이나 이로 인한 위촉자의 불이익의 발생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 제67조의 保險强制加入制度이다. 請求期間을 단축하여도 좋다는 법제 정책적 판단의 기초는 위촉자인 납세자에게 발생한 損害救濟의 실효성을 保險에 의하여 담보코자 한 것일 것이다.

어쨌든 먼저 실시한 日本 公認會計士 賠償責任保險의 운영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견해[73]도 있으나, 이러한 保險制度의 성립으로 稅理士에 대한 民事責任請求가 가능해진 후 稅理士와 납세자간에 위화감없이 진행되는 損害賠償請求訴訟은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74]

II. 稅理士의 行政上 責任

稅理士 懲戒制度는 납세자의 權利利益 救濟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納稅義務의 실현에 稅理士가 관여하는 경우에 納稅義務가 租稅法規에 따라 적정하게 실현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稅理士 懲戒制度의 1차적 기능은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에 있는 것이다.

1. 稅理士 懲戒 節次의 槪要

稅理士의 懲戒 節次는 大藏大臣에 대한 稅理士 懲戒對象인 행위나 사실을 通知함으로써 개시된다(法 제47조). 이 通知를 받은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地方公共團體長이나 稅理士會는 稅理士의 懲戒對象인 행위나 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때 의무적으로 大藏大臣에게 通知하여야 한다(同條 제1항, 제2항). 이 通知를 받은 大藏大臣은 通知對象이 된 稅理士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

73) 上揭論文, p.12.
74) 首藤重幸, 前揭論文, p.137.

는 3인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稅理士審査會에 諮問하여 그 議決에 따라야 한다(同條 제5항). 이때 당해 稅理士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同條 제4항), 이러한 절차를 거쳐 懲戒處分을 하는 경우 大藏大臣의 처분의 이유를 부기한 書面에 의하여야 하며(同條 제6항), 처분후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法 제48조).

稅理士審査會의 구성에 대하여는 제48조의 2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懲戒處分에 대한 審査를 행하기 위하여는 稅理士審査會에 6인으로 된 懲戒審査委員을 두어(法 제48조의 6), 稅理士審査會 議決 정도 懲戒審査委員의 審査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稅理士審査會의 議決은 過半數로서 議決한다(法 제48조의 8).

이 稅理士審査會와 懲戒審査委員의 懲戒審査에 관한 會의 운영방법이나 위원의 관여 형태에 관한 규정은 극히 간단하여 法律 수준으로서는 불명한 점이 많다.[75]

稅理士審査會는 大藏大臣으로부터 懲戒處分의 諮問을 받을 때 먼저 懲戒審査委員에 의한 審査를 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議決한다. 懲戒審査委員에 의한 審査에 稅理士審査會 委員이 참가하는지 여부는 당해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나, 委員會의 委員 3인에 의한 議決에 있어서는 당연히 懲戒審査委員의 審査結果가 존중된다. 懲戒審査委員에 의한 審査는 合同審査이고 過半數 出席이 필요하다.[76]

2. 稅理士에 대한 懲戒의 內容

가. 稅理士法에 의한 稅理士의 懲戒處分

(1) 懲戒權者

稅理士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에 대한 懲戒權者는 大藏大臣이다.

---

75) 上揭論文, p.139.
76)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新稅理士法要說, 三訂版, 1990, p.151.

1980년 이전의 懲戒權者는 國稅廳長官이었으나 懲戒處分의 신중화를 기하기 위하여 稅理士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懲戒權者를 상향 조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懲戒處分權者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稅理士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日稅連 會長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懲戒處分의 種類와 效果

懲戒處分의 종류는 稅理士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戒告

戒告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稅理士의 업무나 稅理士資格에는 하등 제약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名譽나 업무상 信用失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뿐이다.

② 1년 이내 稅理士業務의 停止

이 기간동안 稅理士登錄은 말소되지 않고 稅理士資格이나 稅理士身分을 잃는 것은 아니나 業務停止의 告知를 받은 때로부터 1년간 일체의 稅理士業務를 할 수 없다.

③ 稅理士業務의 禁止

稅理士業務의 禁止는 稅理士資格을 박탈하는 처분이고 懲戒處分중 가장 重處分이다. 稅理士登錄은 말소되고(法 제26조 제1항 4호), 稅理士會도 당연히 退會된다(法 제49조의 6 제3항).

稅理士法 제4조에는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稅理士資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3년을 경과하면 다시 稅理士로서 登錄申請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稅理士法 제24조 7호의 「稅理士로서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할 우려가 있고 기타 稅理士의 직책을 고려하여 稅理士로서의 적격성을 결한 자」에 대하여는 登錄拒否 규정이 있기 때문에 懲戒處分을 이유로 登錄을 拒否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懲戒節次

① 懲戒請求人

稅理士法 제47조에서 懲戒請求人은 地方公共團體의 長이나 稅理士會로 규정하고 있다. 稅理士法에는 이와 같이 懲戒請求人이 규정되어 있으나, 辯護士

法은 懲戒請求人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辯護士法 제58조 제1항). 이는 한편으로는 辯護士의 懲戒權을 辯護士會의 자치권능의 일부로 인정하는 대신 자치권능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懲戒請求를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稅理士 懲戒의 경우 懲戒權의 소재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직무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당해 직무의 공정·적절한 수행을 외부로부터 보다 강하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除斥期間

稅理士法에는 懲戒에 대한 除斥期間을 두고 있지 않다. 行政分野의 각종 職業專門家制度에서 辯護士制度 이외에는 懲戒處分의 除斥期間에 대한 규정이 없다. 辯護士法 제64조는 懲戒의 除斥期間을 懲戒事由 발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稅理士法에 除斥期間을 두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稅理士가 懲戒事由 處分事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사실이 판명되는 것은 통상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의 稅理士에게 懲戒處分을 하지 않는 것은 稅理士業務의 공정확보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懲戒處分權者가 懲戒處分事由나 懲戒期間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7]

③ 辨明의 機會

大藏大臣은 稅理士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 당해 稅理士에게 辨明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제47조 제4항).

④ 懲戒事由 該當行爲후의 事情

예를 들어 去來先으로부터 받은 納稅資金을 稅理士가 유용하였다가 稅理士審査會에서 審議가 개시되기 전에 반환한 경우 징계판단 여하. 懲戒制度의 목적이 1차적으로 납세자의 權利救濟에 있는 것이 아니라 稅理士 질서의 유지에 의한 納稅義務의 적정 실현에 있는 이상 稅理士法등을 위반한 것 자체가 納稅義務의 적정실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懲戒이기 때문에 당해

77) 首藤重幸, 前揭論文, p.145.

違反行爲후의 事情은 懲戒審査의 판단 재료로 될 수 없다.[78]

(4) 懲戒處分의 具體的 事例(생략)

나. 稅理士會의 稅理士 懲戒處分

稅理士會는 會則중에 稅理士法중의 懲戒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懲戒處分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東京稅理士會 會則 제47조 제1항은 「會長은 회원이 稅理士에 관한 法令 또는 會則을 違反한 때 당해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는 「訓告」와 「1년 이내의 會員權의 停止」의 2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 때 懲戒는 紀律委員會에 諮問하여 그 答申을 얻은 후에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議長이 결정한다. 당해 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처분에 異意가 있는 경우에는 日稅連에 異意를 신청할 수 있다.[79]

III. 稅理士의 刑事上 責任

1. 稅理士法上 稅理士의 刑事上 責任

稅理士法 제58조 이하에서 稅理士法 違反에 대한 刑事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行政上의 義務違反에 대하여 刑法의 刑名이 있는 刑罰을 과하는 것으로서 行政罰중 行政 刑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行政 刑罰에는 法에서 特別規程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刑法 總則이 적용된다.

가. 稅理士法上 刑事罰의 種類

78) 上揭論文, p.146.
79) 東京稅理士會 會則 제50조.

稅理士法 違反에 대한 刑事罰중 가장 중요한 것은 脫稅相談등의 禁止違反(稅理士法 제58조)으로서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万円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이 處罰 규정은 「臨時稅理士(臨稅)」에게도 적용된다.

無資格稅理士 행위의 禁止(法 제52조) 違反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万円 이하의 罰金刑이 과해진다(法 제59조). 또 守秘義務 違反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万円 이하의 罰金이 과해진다. 이 守秘義務에 대하여는 稅理士의 使用人 기타 從業員도 적용대상이고 臨時稅理士도 마찬가지이다. 業務制限(法 제42조) 違反, 業務停止(法 제43조) 違反, 業務停止處分(法 제45조, 제46조) 違反은 懲役 1년 이하 또는 20万円 이하의 罰金이 과해진다(法 제61조).

大藏大臣의 稅理士會나 日稅連, 國稅廳長官이 稅理士에 대한 보고·질문·검사와 관련하여 稅理士會나 稅理士가 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나 답변을 한 경우에는 5万円 이하의 罰金이 과해진다(法 제63조).

나. 稅理士法上 刑事罰에 관한 問題

(1) 稅理士法 違反에 있어서의 過失

稅理士法 제58조 이하 刑事罰의 대상이 되는 義務違反중 故意에 의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過失에 의한 것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稅理士法 제45조 脫稅相談등의 행위가 故意가 아닌 過失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보다 낮은 수준의 懲戒對象이 된다.

종래 行政法 學說에 의하면 刑事犯에 있어서 故意(범의)를 요건으로 하고, 특히 法律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過失의 경우에도 벌하는 것이 원칙이나(刑法 제38조), 行政犯에 있어서는 故意가 아니라도 벌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것은 行政刑罰이 범인의 주관적 악성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 아니라 行政上의 義務者의 義務違反 사실에 착안하여 그 違反者를 처벌하여 行政上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故意가 아닌 過失의 경우에도 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80]

각종 申告義務 違反, 記帳義務 違反, 證明書등의 携帶義務 違反등에 대하여 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81]

(2) 稅理士法 違反에 있어서의 共犯

行政犯에 대하여 刑法의 共同正犯의 규정(刑法 제60조)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行政犯에서 刑法上의 敎唆(刑法 제61조)나 幇助(同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견해가 나뉜다. 特別規定이 없는 한 行政犯에 대하여도 刑法의 敎唆나 幇助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通說이다.[82]

2. 기타 稅理士의 刑事上 責任

稅理士의 刑事上의 責任에 대하여 稅理士法 이외의 점에서 稅務公務員에 대한 贈賄罪(刑法 제198조),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背任罪(제247조), 業務上 橫領(제253조)과, 脫稅犯에 대한 관련 稅理士의 脫稅犯의 共同正犯[83]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해 稅理士는 脫稅에 대한 共同正犯이 성립함과 동시에 稅理士法 제36조의 脫稅相談 禁止規定에 위반하여 同法 제58조에 의한 刑罰의 대상이 되어 이 2 개의 犯罪 관계는 刑法 제54조에 의한 관념적 경합관계가 된다.

第 5 節 稅理士試驗制度

Ⅰ. 稅理士 試驗制度의 沿革

---

80) 首藤重幸, 前揭論文, p.152.
81) 中川一郎, 稅理士法改正問題の批判(1), 稅法學 156號, 1963, p.6.
82) 首藤重幸, 前揭論文, p.153.
83) 東京高裁 1966년 2월 18일 判決에 의하면 稅理士가 法人稅 脫稅에 대하여 전반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조언을 하고 이에 의하여 구체적인 脫稅行爲가 행하여진 경우 稅理士에게 脫稅에 대한 共同正犯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首藤重幸, 前揭論文, p.154.

1.「稅務代理士法」時 無試驗制度

稅理士制度의 모체는 1942년 2월 制定된「稅務代理士法」이다.

稅務代理士制下에서는

① 辯護士

② 稅務官廳 등에서 3년이상 國稅事務에 종사한 사람(단, 퇴직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③ 租稅 또는 會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公認會計士(단, 1948년 이후)

등에 해당하는 자가 大藏大臣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稅理士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許可制度였다.

2.「稅理士法」以後 一部 試驗制度

終戰後 租稅制度에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고 納稅制度의 民主化(申告納稅制度·靑色申告制度의 採用) 및 合理化가 행하여져 稅務代理士制度의 개혁이 필요하였으므로 稅務代理士制度에 관한 샤프의 勸告를 받아들여 1951년 6월「稅理士法」이 制定되었다. 이때 자격있는 자로서는

① 辯護士 ② 公認會計士 ③ 稅理士試驗 合格者 ④ 稅理士試驗 全科目 免除者 등으로 규정되어 試驗制度가 탄생되었다.[84]

II. 稅理士 試驗制度

1. 稅理士 試驗制度의 特色

84)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1027~1028.
② 申東雲外, 稅理士制度의 發展方向, 前揭書, pp.85~89.

일본 稅理士 試驗制度는 國家 試驗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85]

첫째, 科目制度의 試驗임과 동시에 科目選擇 制度를 취하고 있다.

둘째, 科目制度를 채용하면서 전년도까지의 合格 科目은 자동적으로 免除한다.

셋째, 試驗科目의 일부에 대한 免除規定이 많다.

넷째, 受驗資格이 한정되어 있다.

다섯째, 試驗合格 요건으로서는 實務經驗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섯째, 特別稅理士試驗制度(1985년도에 폐지됨) 등이 있다.

2. 受驗資格

가. 資格에 의한 것.

① 計理士

② 會計士補

나. 경력에 의한 것

① 國稅, 地方稅에 관하여 3년이상 경력자

② 行政機關 또는 會社의 會計檢査, 金融檢査, 경리 5년이상 경력자

③ 지방공공단체의 租稅에 관한 감사위원 또는 보조 5년이상 경력자

④ 稅理士, 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辨理士 등의 업무보조 5년이상 경력자

⑤ 사법서사 또는 행정서사 10년이상 경력자

⑥ 기타

다. 學識에 의한 것

① 대학 등에서 法律學, 經濟學을 전공한 자.

---

8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1028.

② 司法試驗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③ 高等試驗 합격자

3. 稅理士審査會가 인정하는 자

稅理士審査會가 위의 경력, 학식기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자

4. 試驗免除

가. 科目 一部 免除

전과목을 일시에 합격할 필요가 없고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받으면 이후의 그 과목은 계속하여 면제된다.

나. 稅法에 속하는 과목 면제

① 大學 등의 敎授, 助敎授, 講師로서 3년 이상 法律, 財政學을 강의한 자

② 法律學, 財政學에 관한 碩士, 博士學位 소지자

③ 官公署에서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酒稅, 物品稅 부과사무 10년 이상 종사자의 國稅에 관한 稅法

④ 國稅에 관한 法律의 立案事務에 10년 이상 종사자의 國稅에 관한 稅法

⑤ 위 이외의 國稅에 관한 15년 이상 종사자의 國稅 科目

⑥ 地方稅의 부과 立案에 관하여 15년 이상 종사자의 地方稅에 관한 과목

⑦ 기타

다.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免除

① 대학 등에서 商學에 속하는 과목의 敎授, 助敎授, 講師로서 3년 이상 강의한 자

② 商學 등의 碩士, 博士學位 소지자

③ 計理士 및 會計士補

④ 稅務公務員으로서 稅理士審査會가 指定한 硏修(「指定硏修」[86]라 함)를 하고 일정조건에 도달한 자

「指定硏修」는 稅務大學校 本科, 專科, 通信硏修, 自治大學校 稅務稅制會計學 硏修 등을 말한다.

5. 受驗科目(5科目)

一部科目合格制度와 科目選擇制度가 특징이다.

가. 稅法에 속하는 과목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酒稅 또는 物品稅法 중 1科目, 國稅徵收法, 地方稅의 住民稅와 事業稅에 관한 것중 1科目, 地方稅의 固定資産稅에 관한 부분등 7科目中 3과목 선택, 단, 所得稅法과 法人稅法 중 1과목은 必須

나. 會計學에 속하는 과목

簿記論(商業簿記와 工業簿記, 단 原價計算제외), 財務諸表論 등 2과목은 必須

6. 試驗實施

受驗者數 등을 고려하여 매년 7월부터 8월초 사이에 3일간 실시하며 실시요령은 매년 6월 1일 官報에 公告한다.

1926년 제1회 試驗때는 3904명이 응시하였으나 1986년(36회)에는 47,583명으로 무려 12배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직전 이전시험에 1科目이라도 합격한 자는 계속 응시하게 된다고 하며, 必須科目인 簿記論과 財務諸表論科目 合格

86) 第6章 第2節 XVII 참조.

後에 稅法科目에 응시하는 경향이 있고 稅法科目間에도 偏向이 크다고 한다.

제1회부터 1986년 제36회 실시 試驗에서는 原書提出 47,583명중 38,905명 즉 82%가 응시하여 876명이 합격하였으며 5과목 일시합격자는 단 2명 뿐으로 지금까지 총 合格者數 23,442명중 5과목을 동시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합해서도 92명 뿐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7. 稅理士 特別試驗

1951년 稅理士法 全面改正時 다음과 같은 경력자에게 筆記 및 口頭試驗을 통하여 稅務士 자격을 부여하여 왔으나 1985년 폐지되었다.

① 관공서에서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20년 이상자로써 시행령이 정하는 분야의 업무경력이 일정년수 이상이 된 자.

② 計理士 또는 會計士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III. 試驗結果

稅理士 試驗 應試原書 接收者數는 1951년 제1회 시험시 3,904명이었으나, 1986년 應試原書 接收者數는 47,583명으로 12배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급격한 經濟發展과 納稅節次의 복잡화에 따른 專門職業人의 需要增加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女性合格者는 1952년 제2회 때에 1명(2명의 자녀를 가진 주부였다)이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1954년 1명, 1956년 3명, 1958년 1명(17세의 소녀가 단 1회에 전과목 합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1959년 11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58년 10월 이미 전국의 女性 稅理士 49명이 모여 「婦人稅理士同士會」를 조직하여 業界의 발전을 위하여 동참하고 있다.

1951년부터 1986년간의 年度別 應試原書 接受者數, 受驗者數, 受驗率, 合格

者數, 一部合格者數등은 다음 稅理士試驗 結果表와 같다.

稅理士試驗結果表[87]

區分 / 年度(回次)	受驗申請者數	受驗者數	受驗率 %	合格者數	一部合格者數
1951 (1)	3,904	3,112	80	內 6 35	963
1952 (2)	3,704	3,195	86	內 1 80	1,016
1953 (3)	4,823	4,419	92	內 5 129	1,404
1954 (4)	7,093	6,374	90	內 2 186	1,432
1955 (5)	9,040	7,849	87	內 4 250	2,091
1956 (6)	10,246	8,980	87	內 4 328	2,284
1957 (7)	11,151	9,771	88	內 5 452	2,351
1958 (8)	13,089	11,423	87	內 5 479	3,307
1959 (9)	15,284	13,184	86	內 6 468	2,412
1960 (10)	15,644	13,538	87	內 7 618	3,449
1961 (11)	16,893	13,745	81	內 5 568	3,263
1962 (12)	19,135	15,443	81	內 6 615	3,399
1963 (13)	21,758	17,624	81	內 2 610	3,602
1964 (14)	27,654	23,053	83	內 7 789	5,239
1965 (15)	29,763	23,428	78	內 2 767	5,370

87)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p.1045~1046.
② 申東雲外, 稅理士制度의 發展方向, 前揭書, pp.88~89.

區分 / 年度(回次)	受驗申請者數	受驗者數	受驗率 %	合格者數	一部合格者數
1966 (16)	32,379	26,251	81	內 840	5,418
1967 (17)	34,313	28,015	82	內 1 804	4,887
1968 (18)	35,516	28,736	81	內 6 755	4,871
1969 (19)	37,284	29,543	79	內 2 762	5,137
1970 (20)	38,217	30,579	80	內 661	5,128
1971 (21)	41,803	32,997	79	內 1 721	6,044
1972 (22)	44,232	35,095	79	內 4 838	6,520
1973 (23)	44,390	35,002	79	內 760	6,486
1974 (24)	45,372	36,353	80	內 795	6,184
1975 (25)	47,159	37,799	80	內 781	5,804
1976 (25)	50,334	40,979	81	內 1 822	8,656
1977 (27)	53,000	43,500	82	內 848	6,607
1978 (28)	52,057	42,996	83	內 1 755	6,222
1979 (29)	50,471	41,565	82	內 1 785	6,324
1980 (30)	52,117	42,588	82	內 2 872	6,815
1981 (31)	52,527	43,439	83	內 1 824	5,216
1982 (32)	50,830	41,019	81	內 894	6,070
1983 (33)	50,662	41,359	82	內 1 891	5,821

區 分 年度(回次)	受驗申請者數	受驗者數	受驗率 %	合格者數	一部合格者數
1984 (34)	49,403	40,264	82	內 1 844	6,001
1985 (35)	48,461	39,739	82	內 1 940	5,954
1986 (36)	47,583	38,905	82	內 2 876	6,035

※ 合格者란의 內숫자는 5科目 同時合格者 數임.

Ⅳ. 1994년 稅理士試驗(제44회) 槪要[88]

1. 試驗狀況

1994년도 受驗接受者는 59,756명, 受驗者는 49,913명으로 제1회(1951년)에 비해 受驗者가 약 16배 증가하여 國家試驗중 제일 큰 규모의 試驗으로 되었다.

延 受驗申請 科目數는 109,914 科目, 受驗科目數는 75,772 科目이나 된다.

試驗結果 稅理士審査會는 970인(그중 女性合格者는 291명)의 合格者와 7,113명의 一部合格者로서, 合格者는 작년 비 95명, 一部合格者는 작년 비 492명 증가하였다. 合格者중 最 年少者는 20세, 最 年長者는 67세이고, 全科目(5과목) 合格者는 3명이다.

2. 試驗結果의 分析

科目 合格率은 예년과 비슷하고, 合格率은 大學在學 18.2%, 大學卒 16.3%, 高卒 15.0%, 短期大學 14% 순이다. 年齡別 合格率은 25세 이하 22.3%, 26~

88)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95年 2月 15日자 제5면.

30세 18%, 31~35세 16.9%, 36~40세 14.8%, 41세 이상이 8.4%로써 예년과 같이 高年齡層의 合格率은 낮아지고 있다.

科目別 合格 結果는 다음 표와 같다.

科目名	受驗者數(人)	合格者數(人)	科目別合格率(%)
簿記論	24,810	3,244	13.1
財務諸表論	19,030	2,230	11.7
所得稅法	4,064	518	12.7
法人稅法	7,758	939	12.1
相續稅法	6,284	924	14.7
消費稅法	8,607	1,068	12.4
酒稅法	921	94	10.2
國稅徵收法	999	114	11.4
住民稅	480	47	9.8
事業稅	833	87	9.9
固定資産稅	1,936	218	11.3
合計	75,772	9,483	12.5

第 6 節 稅理士의 報酬

Ⅰ. 稅理士의 業務 및 付隨業務와 報酬

1980년 稅理士法 개정으로 「稅理士 報酬規定」은 「稅理士의 업무에 대한 報酬의 最高 限度額에 관한 基準」으로서 종래 國稅廳長官의 고시 대신으로 日稅連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때부터 각 稅理士會의 會則으로 정하게 되었다.[89]

稅理士法에 의하면 稅理士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租稅(通行稅, 印紙稅, 登

89)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885.

錄免許稅, 關稅, 法定外普通稅 등 특정의 租稅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작성」, 「稅務相談」을 행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이나, 그 외에도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소위 「附隨業務」) 財務書類의 작성, 會計帳簿의 記帳의 대행 기타 財務에 관한 사무를 業으로 할 수 있다(단, 타의 法律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또 현재 稅理士는 中小企業을 去來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업무만에 그치지 않고 中小企業의 consultant로서 management service분야에도 응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납세자의 요구에 응하여 社會保險勞務士業務와 不動産去來相談 및 中小企業 承繼問題와 經營者 개인의 資産運用面의 충고 등 써어비스의 대상과 분야가 아주 광범위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업무와 관련한 報酬에 대하여 稅務士法에서는 稅理士會의 會則으로 「稅理士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報酬規定은 각 稅理士會 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基準은 日稅連이 정하므로 日稅連의 기준 그대로 하고 있다.

각 稅理士會는 회원이 어떠한 명의를 갖고 있더라도(辯護士, 公認會計士 등) 稅理士의 업무에 관하여는 稅理士會가 정한 報酬規定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90]

1992(평성 4)년 3월 26일 개정된 「稅理士業務 報酬의 最高 限度額에 관한 基準」과 부수업무인 「會計業務 報酬의 最高 限度額에 관한 基準」(1987년 3월 25일)은 다음과 같다.

II. 稅理士의 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 限度額[91]

9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登錄(開業)の手引, 1993, p.58
91) 부록 「稅理士의 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 참조.

税理士業務의 내용별 실제 報酬 限度額은 「税理士의 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 限度額에 관한 基準」(별첨 부록 참조)에 의하고 그 내용은 다음 「別表」와 같다.

별표 제1 顧問報酬(月額)

(税務代理 및 税務相談을 포함하고, 税務書類의 作成 報酬는 별도로 받는다)

가. 所得税

總所得金額基準	年間 去來金額基準	
200万円 未滿	2,000万円 未滿	20,000円
300万円 〃	3,000万円 〃	30,000円
500万円 〃	5,000万円 〃	45,000円
1,000万円 〃	1億円 未滿	65,000円
2,000万円 〃	2億円 〃	75,000円
3,000万円 〃	3億円 〃	85,000円
5,000万円 〃	5億円 〃	95,000円
5,000万円 以上	5億円 以上	105,000円
1千万円증가마다	1億円증가마다	5千円 加算

나. 法人税

期初資本金等 基準	年間 去來金額基準	
200万円 未滿	2,000万円 未滿	30,000円
300万円 〃	3,000万円 〃	35,000円
500万円 〃	5,000万円 〃	50,000円
1,000万円 〃	1億円 未滿	70,000円
3,000万円 〃	3億円 〃	85,000円
5,000万円 〃	5億円 〃	100,000円
1億円 未滿	10億円 〃	130,000円
3億円 〃	30億円 〃	160,000円
5億円 〃	50億円 〃	190,000円
5億円 以上	50億円 以上	220,000円
2億円 증가마다	20億円 증가마다	3万円 加算

다. 住民稅 및 事業稅

事業所(地方稅法에 규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말함. 이하 같음)

1개소마다 所得稅 또는 法人稅 정하는 報酬額의 10% 相當額

라. 消費稅, 特別地方消費稅 기타 消費稅

매 稅目마다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정하는 報酬額의 50% 相當額

(注) 複數의 事業所는 事業所마다 受任 1건으로 취급한다. 단, 消費稅에 대하여는 事業所 數에 관계없이 1건으로 취급한다.

마. 給與등의 源泉所得稅 기타 稅目(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외 稅目을 제외한다)

1稅目마다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정하는 報酬額의 30% 相當額

(注) 複數의 事業所가 있는 경우에는 事業所마다 受任 1건으로 취급한다.

별표 제2 稅務代理報酬

(稅務書類의 作成報酬는 별도로 받는다)

가. 所得稅

總所得金額基準	年間 去來金額基準	
200万円 未滿	2,000万円 未滿	60,000円
300万円 〃	3,000万円 〃	75,000円
500万円 〃	5,000万円 〃	100,000円
1,000万円 〃	1億円 未滿	170,000円
2,000万円 〃	2億円 〃	255,000円
3,000万円 〃	3億円 〃	300,000円
5,000万円 〃	5億円 〃	400,000円
5,000万円 以上	5億円 以上	450,000円
1千万円 증가마다	1億円 증가마다	2.5千円 加算

(注) 所得稅중 分離課稅讓渡所得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所得金額基準	年間 去來金額基準	
300万円 未滿	3,000万円 未滿	100,000円
500万円 〃	5,000万円 〃	150,000円
1,000万円 〃	1億円 未滿	200,000円
3,000万円 〃	3億円 〃	350,000円
5,000万円 〃	5億円 〃	500,000円
5,000万円 以上	5億円 以上	550,000円
1千万円 증가마다	1億円 증가마다	5万円 加算

나. 法人稅

다음 기준에 의한 報酬額에 기초 資本金 등(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의 액의 0.5% 相當額을 가산한다. 단, 加算額은 50万円을 초과하지 못한다.

所得金額 基準	年間 去來金額基準	
100万円 未滿	2,000万円 未滿	60,000円
150万円 〃	3,000万円 〃	80,000円
200万円 〃	5,000万円 〃	100,000円
400万円 〃	1億円 未滿	170,000円
1,200万円 〃	3億円 〃	300,000円
2,000万円 〃	5億円 〃	400,000円
4,000万円 〃	10億円 〃	550,000円
1.2億円 〃	30億円 〃	700,000円
2億円 〃	50億円 〃	800,000円
2億円 以上	50億円 以上	900,000円
1億円 증가마다	25億円 증가마다	10万円 加算

다. 住民稅 및 事業稅

業所 1개소마다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정하는 報酬額의 30% 相當額

라. 消費稅, 特別地方消費稅 기타 消費稅

期間去來金額	500万円 未滿	20,000円
	1,000万円 〃	40,000円
	3,000万円 〃	60,000円
	5,000万円 〃	80,000円
	1億円 〃	100,000円
	5億円 〃	120,000円
	5億円 以上	150,000円
	1億円 증가마다	1万円 加算

(注) 複數의 事業所가 있는 때는 事業所마다 受任 1건으로 취급한다. 단, 消費稅에 대하여는 事業所數에 관계없이 受任 1건으로 취급한다.

마. 相續稅

基準 報酬額 100,000円에 다음 기준에 의한 報酬額을 加算한다.

遺産의 總額	5,000万円 未滿	200,000円
	7,000万円 〃	350,000円
	1億円 〃	600,000円
	3億円 〃	850,000円
	5億円 〃	1,100,000円
	7億円 〃	1,350,000円
	10億円 〃	1,700,000円
	10億円 以上	1,800,000円
	1億円 증가마다	10万円 加算

[加算報酬]

① 「遺産의 總額」에 관계되는 報酬額에 관하여는 共同相續人(受遺者를 포함) 1인 증가시마다 10% 相當額을 加算한다.

(注) 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共同相續人 수에 算入하지 않는다. 包括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共同相續人에 加算한다.

② 財産 評價등의 사무가 현저히 복잡한 경우에는 기본 報酬額을 제외하고 100% 相當額을 限度로 하여 加算할 수 있다.

(注)「현저히 複雜」한 경우라 함은 事案의 내용이 극히 번잡 또는 광범하여 資料의 收集, 法令의 適用 기타 事務處理를 위한 特別調査, 研究 또는 써어비스의 제공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바. 贈與稅

取得財産의 價額	100万円 未滿	35,000円
	300万円 〃	60,000円
	500万円 〃	100,000円
	1,000万円 〃	120,000円
	2,000万円 〃	150,000円
	3,000万円 〃	180,000円
	5,000万円 〃	250,000円
	5,000万円 以上	280,000円
	1千万円 증가마다	3万円 加算

[加算報酬]

財産 評價등의 사무가 현저히 복잡한 경우에는 100% 相當額을 限度로 加算할 수 있다.

사. 地價稅

基本報酬額 200,000円에 다음 基準에 의한 報酬額을 加算한다.

課稅 價額	15億円 未滿	500,000円
	20億円 〃	700,000円
	25億円 〃	900,000円
	25億円 以上	1,100,000円
	5億円 증가마다	20万円 加算

[加算報酬]

土地등의 評價등의 사무가 현저히 복잡한 경우에는 基本報酬額을 제외하고 100% 相當額을 限度로 하여 加算할 수 있다.

(注) 「현저히 복잡」한 경우라 함은 예컨대 土地의 필지수가 많으므로 인하여 案의 내용이 극히 복잡 또는 광범위하여 資料의 收集, 法令의 適用, 기타 事務處理를 위하여 特別調査, 研究 또는 써어비스의 제공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아. 固定資産稅

固定資産價額	500万円 未滿	20,000円
	1,000万円 〃	35,000円
	3,000万円 〃	50,000円
	5,000万円 〃	65,000円
	1億円 〃	100,000円
	1億円 以上	135,000円
	5千万円 증가마다	3.5万円 加算

(注) 複數의 事業所가 있는 경우에는 事業所마다 受任 1건으로 취급한다.

자. 기타 稅目(法 제2조 제1항 규정하는 제외 稅目을 제외한다)

基本 報酬額 200,000円에 다음의 基準에 의한 報酬額을 加算한다.

課稅標準額	500万円 未滿	20,000円
	1,000万円 〃	40,000円
	3,000万円 〃	60,000円
	5,000万円 〃	100,000円
	1億円 〃	200,000円
	5億円 〃	500,000円
	10億円 〃	1,000,000円
	10億円 以上	1,100,000円
	1億円 증가마다	10万円 加算

(注 1) 特別土地保有稅에 대하여는 「固定資産價格」을 「取得價額」으로 하여 위의 固定資産稅의 규정을 준용한다.

(注 2) 事業所稅외에 課稅標準이 資産의 數量, 事業所의 面積, 기타 基準으로 하는 稅目에 대하여는 위의 「자」에 규정하는 「다음의 基準」을 「다의 규정」, 즉 住民稅 및 事業稅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不服請求에 대한 代理의 報酬

(稅務書類의 作成報酬는 별도로 받는다)

① 異議申請	300,000円
② 審査請求	500,000円

[加算報酬] 事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에는 100% 相當額을 限度로 加算할 수 있다.

(注) 「현저히 複雜」한 경우라 함은 예컨대 土地의 필지수가 많으므로 인하여 事案의 내용이 극히 복잡 또는 광범위하여 資料의 收集, 法令의 適用, 기타 事務處理를 위하여 特別調査, 研究 또는 써어비스의 제공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4. 稅務書類의 作成報酬

가. 納稅申請書, 修正申告書 및 更正請求書(당해 신고서 및 請求書에 첨부하여야 할 明細書등의 稅務書類를 포함)

① 所得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30% 相當額

② 法人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50% 相當額, 단 前事業年度의 실적

을 기준으로 하는 豫定申告書의 作成報酬는 당해 稅務報酬額의 20% 相當額을 報酬로 한다.

③ 住民稅 및 事業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30% 相當額

④ 消費稅, 特別地方消費稅 및 기타 消費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50% 相當額, 단 消費稅法 제42조에 의한 중간 신고서의 作成報酬는 당해 稅務代理 報酬額의 20% 相當額을 限度로 한다.

⑤ 相續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50% 相當額

⑥ 贈與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30% 相當額

⑦ 地價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50% 相當額

⑧ 固定資産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50% 相當額

⑨ 기타 租稅

별표 제2에 정하는 稅務代理 報酬額의 50% 相當額

나. 不服請求書 50,000円

다. 기타 書類(法人設立申告書, 靑色申告承認申請書, 法定調書, 年末調整關係書類 및 給與所得의 源泉徵收票 등)

事案마다 20,000円

[加算報酬] 同種의 書類가 10건을 초과하여 작성하는 때는 1건 증가시마다 2,000円을 加算한다.

라. 法 제33조의 2 제1항 業務에 대한 報酬

별표 제2에 정하는 당해 稅目에 관계되는 稅務代理報酬額의 20% 相當額

별표 제 5. 稅務相談 報酬

가. 口頭에 의한 것	1시간 이내	20,000円
[加算報酬] 1시간을 넘는 때는 1시간마다		10,000円
나. 書面에 의한 것		125,000円
다. 書面에 의한 것으로서 특별히 調査硏究가 필요한 것		250,000円

(注) 「특별히 調査硏究가 필요한 것」이라 함은 相談 내용이 위촉자로서는 극히 중대한 것 또는 事案이 극히 복잡하거나 異例的인 것이여서 특별한 調査硏究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 法 제33조의 2 제2항 業務에 대한 報酬

제2항에 정한 당해 稅目에 관계되는 稅務代理 報酬額 相當額

별표 제6. 調査立會 報酬

1일당	60,000円

(注) 1일 미만인 것은 1일로 본다.

별표 제7. 日當, 旅費 및 宿泊料

가. 日當	1일	50,000円

(注) 1일 미만의 경우에는 1일로 본다.

나. 旅費 및 宿泊料 實 費

III. 會計業務에 대한 報酬 最高 限度額

위와는 별도로 會計業務에 관한 報酬는, 「會計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92]에 의한다.

第 7 節 稅理士와 稅務行政 爭訟

'稅理士에게 訴訟代理權을 인정하여 주도록 하는 稅理士法 개정'[93]은 稅理士業界의 오랜 동안의 요망사항이다. 稅理士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납세자의 權利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약 15,000명의 辯護士외에 61,000명이 넘는 稅理士가 稅務訴訟에 활약한다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稅務訴訟이 활성화될뿐 아니라 신속한 사건처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편의론을 넘어, 司法制度중 訴訟代理人의 役割, 稅理士業務와 訴訟代理制度와의 整合的 關係性,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 稅理士 관여의 不可缺性 등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92) 부록 「會計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 참조.

93) 이에 대한 최초의 시도로서, 1963년 12월에는, 4월부터 稅理士制度의 근본적 검토를 시작하였던 稅制調査會 稅理士制度 特別部會의 결론은 日稅連이 요망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중요 요망사항을 總理에게 답신하여 政府의 稅理士法 改正 立案作業에 반영토록 하였는데, 그중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稅理士에게 稅務訴訟代理權을 부여한다. 이유로서, 稅務訴訟은 稅務會計의 專門家인 稅理士가 변호하므로서 비로소 納稅者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가 있고 또 원활·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 문제는 納稅者 및 納稅者 團體인 法人會 및 靑色申告會 등도 강하게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辨理士의 立法 예등을 고려하여 稅理士에게 稅務訴訟代理權을 부여하거나 적어도 辯護士와의 共同代理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前揭書, p.576.

이들 전반에 걸쳐 西獨의 稅理士訴訟代理權과를 비교·검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94]

Ⅰ. 稅務行政 爭訟에 있어서 稅理士의 權限

1. 制度의 槪觀

稅理士法 제2조 稅理士의 업무중 爭訟에 관한 稅務代理에 대하여 「稅務官公署(稅務官署를 제외하고 國稅不服審判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租稅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不服審査法(1962년 法律 제160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 申請, 請求 또는 不服請求(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에 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酒稅法 제2장의 규정에 관계되는 신고, 申請 및 不服請求를 제외한다. 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또는 당해 신고 등 또는 稅務官公署의 調査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稅務官公署를 상대로 하는 주장 또는 陳述에 대하여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것(다음 호의 稅務書類의 작성에 그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不服請求에 대한 代理業務를 인정하면서 訴訟代理는 부정하고 있다.

1980년 法 개정 이전의 규정도 訴訟代理를 제외하였고, 1951년 日本稅理士制度 확립이래 訴訟代理權은 稅理士業務 대상으로부터 계속 제외되어 왔다. 그 이유는 訴訟代理權은 辯護士의 獨占的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稅務에 관한 不服請求 대리는 稅理士의 獨占的인 업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95]

2. 代理人으로서의 權限

---

94) 岡田正則, 「稅理士と稅務行政爭訟」, 日稅研論集, 第24號 中,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년, pp.165~166.

95) 「不服請求人은 辯護士·稅理士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代理人으로 선임할 수 있다.」 國稅通則法 제107조 제1항. 이로써 辯護士·稅理士·公認會計士는 不服請求 代理를 할 수 있다.

不服請求의 대리인은 먼저 관계 書類의 작성이나 제출등 法律上의 행위를 대리하고 기타 사실상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즉, 不服請求의 書面(異議申請書, 審査請求書), 處分行政廳의 答辯書나 辨明書에 대한 申請人의 反論書, 口頭意見陳述申請, 參考人의 陳述要求, 鑑定人에 의한 鑑定要求, 物件의 提出要求, 檢證의 申請, 執行停止의 申請의 申請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또 본인을 대신하여 口頭意見陳述, 證據書類나 證據物의 제출, 檢證立會, 書類의 閱覽, 通知나 裁決書등의 受領등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단, 본인의 행위와 대리인의 행위에 齟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가 우선한다. 이러한 대리인의 권한은 行政廳에 대하여 委任狀을 제출함으로써 발생한다. 단, 不服申請의 取下와 復代理人의 선임은 본인의 書面에 의한 特別委任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96] 稅理士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도 行政廳의 허가를 얻어 口頭意見陳述시 輔佐人으로서 본인을 원조할 수 있다.[97]

3. 訴訟에 있어서의 權限

稅理士는 稅理士法등의 규정이나 民事訴訟法 제79조 제1항에 따라 訴訟代理人이 될 수 없으나, 訴訟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輔佐人」으로서 依賴人의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輔佐人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法定에서 당사자 또는 訴訟代理人(法定代理人이나 辯護士)을 보조하는 말한다. 따라서 稅理士는 輔佐人으로서 依賴人이나 辯護士등과 함께 법정에서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輔佐人의 선임에 있어서는 書面에 의한 위임등 특별절차가 필요없다. 輔佐人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訴訟代理人이 취소하거나 경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한다.[98] 그러나 輔佐人으로서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民訴法 제88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訴訟代理人은 法院의 허가를 얻어 輔佐人과 함께 출두할 수 있

96) 國稅通則法 제107조 제2항, 稅理士法 제31조, 行政不服審査法 제12조.
97) 國稅通則法 제84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
98) 民訴 제88조 제2항

다」고 규정하여, 法院의 허가와 본인이나 訴訟代理人과 함께 출두하도록 규정하여 단독적인 訴訟 수행이 불가능하여 稅理士가 專門家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稅務訴訟에 있어서 輔佐人制度는 금일까지 별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 民事訴訟法 제7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簡易裁判所에서는 辯護士 이외의 자도 裁判所의 허가를 얻어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어, 稅理士는 依賴人의 少額 債權·債務에 관계되는 사건의 訴訟代理人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단, 「報酬를 받을 목적으로」 訴訟代理를 할 수 없고,[99] 소위 自願人으로서 대리인일 뿐이다.[100]

4. 稅務行政爭訟에 있어서 稅理士와 辯護士등의 관여의 現狀과 問題點

가. 現狀

(1) 稅務事件 出訴率

1965년부터 1990년까지 稅務行政爭訟 건수 推移는 다음과 같다.[101]

자료 ① 稅務行政爭訟件數(要處理件數)의 推移

	1965년도	1970년도	1975년도	1980년도	1985년도	1990년도
異議申請	38,705건	19,897건	26,099건	89,855건	23,887건	11,555건
審査請求	15,003건	10,337건	29,079건	23,961건	19,952건	8,894건
訴　訟	1,483건	3,143건	1,852건	1,272건	1,151건	959건

99) 辯護士法 제72조.
100) 岡田正則, 前揭論文, pp.168~169.
101) 上揭論文, p.170.

위의 자료에서 1980년대 전반의 건수 증가는 샐러리맨의 減稅鬪爭 때문이었고, 異議申請이나 審査請求 건수에 비하여 訴訟 건수가 격감하는 것은, 「……납세자가 신뢰하고 있는 稅理士에게 訴訟代理權이 없기 때문에 訴訟段階에 들어가는 사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稅理士의 손을 떠나 납세자로서는 전혀 새로운 辯護士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번잡과 불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訴訟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日稅連은 주장하고 있다.[102] 이와 같은 稅務事件에 대한 出訴率의 저하는 異議申請과 審査請求후의 行政訴訟간에는 커다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稅理士의 事件 關與率

稅務行政 事件에 대한 稅理士의 關與의 推移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자료② 稅務行政爭訟에 대한 稅理士의 關與의 推移

	1967년	1973년	1983년
回答稅理士數	12,611명(100%)	10,558명(100%)	18,658명(100%)
異議申請의 代理	2,180명(17.3%)	473명(4.5%)	367명(2.0%)
審査請求의 代理	1,168명(9.3%)	288명(2.7%)	285명(1.5%)
稅務訴訟의 輔佐人	28명(0.2%)	5명(0.05%)	7명(0.04%)
(同許可의 比率)	데이타 없음	7명중 5명(71.4%)	데이타 없음

稅理士가 稅務事件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經驗」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異議申請 관여 17.3% → 4.5% → 2.0%, 審査請求 4.3% → 2.7% → 1.5%로 저하하고 있고 訴訟輔佐人의 경우는 극소수이다.

이에 대한 원인의 해명과 해결방향을 도출하지 않는한 權利救濟制度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稅務行政爭訟의 辯護士·稅理士등의 관여 비율에 관한 통계는 없으나, 1983년 國稅不服審判所

102) 稅理士界 1974년 9월 11일 付 「日本辯護士連合會との交涉經過」, 岡田正則, 前揭論文, p.170.

의 샘플 조사에 의하면 審査請求에서 稅理士나 公認會計士가 대리인으로 된 비율이 약 40%, 辯護士가 대리인으로 된 비율이 약 10%였고, 동년의 不服請求 사안에 대한 대리인 관여의 비율은 稅理士가 약 40%, 辯護士·公認會計士가 약 5%,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약 15% 기타가 40%였다.

최근 辯護士側에서 '司法硏修에 있어서도 稅法이나 稅務實務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裁判例가 課稅廳의 주장을 判決 이유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현실이고, 그 책임을 裁判官 1인의 연구부족에 돌릴 수 밖에 없다. 결국 原告代理人(辯護士)의 영향 부족이 裁判官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判決에 영향을 미친다'는 自省의 소리가 높다. 岡田 敎授는 稅務行政訴訟의 訴訟代理를 둘러싼 문제사항이--稅務에 관심을 가진 辯護士가 약간 많아진 것 이외-- 30년 전과 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있어서는 불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103]

나. 問題點

이상과 같이 稅務行政爭訟에 대한 稅理士의 關與率이 저조하고, 辯護士의 관여도 저조, 불충분한데도 辯護士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조직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稅理士가 訴訟代理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稅理士가 原告의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는 제도상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II. 稅務行政 爭訟에 있어서 訴訟代理

1. 訴訟代理人이란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 稅理士가 訴訟代理 권한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103) 岡田正則, 前揭論文, pp.171~172.

전제로 訴訟代理人의 성격을 살펴보면, 民訴法 제79조 제1항에서 訴訟代理人에 대하여 「法令에 의하여 裁判上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 辯護士가 아니면 訴訟代理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法定代理人(親權者, 後見人, 法人의 代表 등 法令에 근거한 대리인) 이외에 辯護士만이 訴訟代理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연 訴訟代理人은 辯護士에만 한정된 것인가? 통설은 「法律家로서 충분한 능력과 식견이 없는 자가 訴訟代理를 業으로 하는 것은 사건을 혼란케하고……濫訴의 폐해가 생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104]

그러나 첫째, 여기에서 말하는 「法律家」란 辯護士만이라고 이해할 것인가?

訴訟代理人의 역할에는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한다는 측면과,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辯護한다는 2 가지 측면이 있다. 專門家로서의 訴訟代理人 = 法律家에게 기대하는 것은 후자의 역할일 것이다. 訴訟過程 전반에 걸쳐 당사자 본인을 辯護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訴訟代理人의 능력으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능력을 稅理士가 가지고 있다고 보증된다면 상기 法律家중에 稅理士를 포함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訴訟代理人으로서 불가결의 요건인 「충분한 능력과 識見」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訴訟專門家로서의 辯護士는

① 법규의 지식과 법적 사고력,

②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과 연관하여 설득적인 논의를 정연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

③ 訴訟實務의 熟達,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입장,

⑤ 專門家로서 職業倫理에 충실할 것 등을 전제로 한다.

稅務行政爭訟과 稅理士를 연관지어 보면 ①②④의 능력에 관하여는 租稅事件에 관한한 稅理士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단, ③의 訴訟法의 지식과 실무 숙달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稅理士가 訴訟代理權을 담당할 경우의 최

104) 兼子一·竹下守夫, 裁判法(新版), 東京:有斐閣, 1978, p.307.

대의 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105]

셋째, 무엇을 위하여 「충분한 능력과 識見」이 필요한가?

그것은 訴訟代理人이 처해있는 司法制度上의 지위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訴訟代理人은 公權力과 私權力의 어디에도 제약되지 않고 상대방과 法律上 대등·평등하게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당사자의 신뢰 관계 구축의 기초로서 필요한 것이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稅理士는 당사자와 결코 宥和的·豫定調和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行政權이나 司法權에 대등하게 대항할 수 있는 法律的 지식을 갖춤과 동시에 독립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訴訟代理人이 되기 위하여는 辯護士가 司法機關의 일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稅理士도 行政機關이나 司法機關의 일부가 될 수 없다.[106]

2. 稅務訴訟代理權을 둘러싼 論議의 經緯

1951년 稅理士法 制定 당시 稅理士會의 稅務代理權 확충 요구는 강력하였는데, 國稅不服審判所와 같은 機關이 창설되지 않아서 救濟節次가 불충분하였고, 특히 協議團制度[107]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으며 이때 稅理士의 訴訟代理權 확보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稅務訴訟代理權의 요구는 일찍 日稅連 機關紙 「稅理士界」 창간호(1952년 11월 20일付, 評壇)에서부터 주장되었다. 그때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적정실현」이라는 稅理士의 직책은 「稅務訴訟代理가 인정됨으로써 首尾一貫 완수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稅務訴訟代理權 획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후 關係官廳과 國會에 그 취지를 주장하였으나 충분한 납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적어도 辯護士와 공동으로 訴訟代理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

105) 岡田正則, 前揭論文, p.174.

106) 上揭論文, pp.174~175.

107) 協議團制度는 제1차 「샤-프 勸告」에 따라 1950년에 창설되어 1970년 國稅通則法 改正(國稅不服審判所 設置)등에 따라 폐지되었다.

1959년 日稅連 代理權調査硏究會「稅理士의 代理權의 확충방향에 관한 答申」에서 訴訟代理權의 획득을 목표로 노력하면서 訴訟에 있어서 輔佐人 및 事實審인 租稅審判所를 창설하면 대리인이 되도록 중점 노력하였다.

稅務訴訟代理權의 논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1963년 12월 6일 政府稅制調査會 稅理士制度特別部會의 答申과 이를 기초로한 稅理士法 改正案부터이다. 이 答申에서는 稅理士의 輔佐人制度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日稅連은 稅理士法 改正 要望書의 제출과 訴訟代理權 필요성 주장[108]하였는데 그 요점은 납세자의 권리옹호면에서 merit가 크다는 점과,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의 예, 輔佐人은 지위가 불안정함으로 납세자의 권리옹호 제도에는 맞지않다는 점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日稅連의 요망에 대하여 辯護士側에서는 行政節次의 대행과 司法領域에 있어서의 訴訟代理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民訴法 제79조와 같이 辯護士 이외에는 일체의 訴訟代理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대국가의 철칙」이라고 비판하였다.[109]

1968년 日稅連 稅理士硏究調査會의「일본에 있어서 稅理士制度의 향방에 대한 答申」에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의 예를 들어「납세자의 權益을 보호하는 後見的 임무를 직책으로 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稅理士는 사안관여의 처음부터 訴訟段階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代理機能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후 日稅連의 목표는 稅務訴訟代理權으로부터「出廷陳述權」으로 전환하여, 1972년「稅理士法 개정에 관한 基本 要綱」에서는 종래의 이유에 덧붙여 訴訟件數의 低調, 敗訴率의 높음, 대리하는 사건이 國稅通則法 제75조 등에 한정된 것 등을 지적하였다.[110]

이에 日辯連은 出廷陳述權에 대하여서도 반대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輔佐人制度로의 개정에 대하여도 반대하였고,[111] 1980년 稅理士法 개정 이후 稅理

108)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283號, 1963년 12월 1일付.
109) 岡田正則, 前揭論文, p.176.
11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73년 1월 21일부.
111) 日辯連의 견해 및 교섭 경과에 대하여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74년 9월 11일부 및

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논의는 소강상태이다.

3.「稅務訴訟代理士」의 構想

납세자 權益保護 차원의 논의과정에서「稅務訴訟代理士」에 관한 구상이 있다.[112]

그 요점은 ① 기존 稅理士에게 일정 시험을 과하여 合格者에게만 訴訟代理權을 인정한다.

② 시험과목은 民事訴訟法 등 法定技術을 익히도록 한다.

③ 訴訟代理士는 事實審 裁判所에서만 활동하게 한다(事實審인 租稅裁判所를 창설한다).

위의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不服請求에서 訴訟에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稅理士가 依賴者와의 일상적 접촉에 의하여 稅務事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과, 訴訟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稅理士가 납세자의 신뢰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점.

둘째, 辯護士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事件處理를 할 수 있고 稅務訴訟을 일상업무의 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裁判의 신속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辯護士와는 달리 稅務의 專門家로서 정확한 논점 설정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신속하게 事件處理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稅理士業界뿐만 아니라 많은 中小企業家들의 바램이다.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辯護士側은 계속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다. 즉, 稅理士는 辯論主義, 상호 審問등의 훈련을 받지 않아 訴訟技術的으로 미숙하여 司法의 신뢰를 실추한다는 것이다.[113]

1976년 8월 10일부 참조.

112) シンポジウム,「稅理士と稅務訴訟代理權について」, 稅法學, 1962年, 143號, pp.28~29.

113) 上揭論文, 野間 發言.

그외 「稅務訴訟代理士」의 시험은 그 성격상 司法試驗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司法試驗이나 司法修習過程에 稅法을 추가하여 稅務에 강한 辯護士를 양성하는 것이 稅法學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국민의 권리보호에서도 더 낫다는 의견이다.[114]

근래 稅務事件에 대한 代理權의 확장과 관련하여 輔佐人制度(辨理士法 제9조와 같이 法院의 허가없이 輔佐人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나 特別復代理人制度(辯護士인 대리인과 동석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제안도 있었으나 稅理士業界로서는 輔佐人制度에 대하여 불신감이 강하고 이들 제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 訴訟實務와 稅理士의 能力

1972년 9월 日本辯護士連合會의 「日稅連의 稅理士法에 관한 基本 要綱에 대한 反對 意見書」에서 주장한 稅理士의 訴訟代理權 否定論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訴訟뿐만 아니라 稅務에 관한 抗告訴訟도 '當事者主義, 口頭辯論主義, 證據의 諸原則 등의 民事節次法의 전반적 이해와 實務硏修를 거친 辯護士만이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의 입장에서 보면 필수의 요건이기 때문에 辯護士 이외의 자가 訴訟代理權을 갖도록 인정하는 것은 국가 司法制度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訴狀의 작성에 있어서 租稅實體法과 節次法의 해석을 기초로 違法性의 주장을 구성하는 작업은 稅理士의 관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稅理士가 일상의 업무를 통하여 原告의 사건을 주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租稅實體法과 節次法의 해석에 있어서 專門家이기 때문이다. 辯護士側으로서는 '稅理士는 통달의 범위내에서 활동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나 國稅通則法 제99조에 의하면 國稅不服審判所는 國稅廳長官의 통달과 다른 해석에 따라 裁決

114) 北野弘久, 「稅務辯護士制度について」, 稅法學141號, 1962년, p.29.

이 가능하고, 이를 전제로 審査請求代理人인 稅理士는 통달과 다른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稅理士는 통달 전반을 검토하여 통달의 適否를 논하고 나아가 法令의 適否를 논하는 능력을 갖추어 訴訟에 있어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口頭辯論의 능력문제인데 課稅處分의 取消訴訟의 審理는 刑事訴訟의 審理와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바, 檢察官에 대한 辯護人의 辯論能力과 마찬가지 능력을 稅務行政訴訟의 原告側 訴訟代理人은 가져야 할 것이다. 課稅行政官廳의 代理人과 동등의 租稅實體法, 節次法 및 訴訟法의 지식을 요한다.

그런데 課稅官廳의 대리인은 國稅局의 訟務官이 검사가 아닌 경우 辯護士와 동등의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課稅官廳側의 대리인은 辯論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물론 訟務檢事의 監督下에 訴訟活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으나 課稅官廳의 대리인은 實務擔當者로서 능숙하게 訴訟實務를 수행하고 있고, 地方稅의 경우에도 擔當 公務員이 訴訟代理人이 된다.[115]

이들로 미루어보아 稅理士가 課稅官廳側의 대리인과 동등 이상의 租稅實體法, 節次法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稅務行政訴訟에 관한 訴訟法의 지식이나 변론 능력에 관해서 稅理士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復代理人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立證責任등의 증거의 제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자. 立證責任의 배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學說이 있으나 原告側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과해지는 것은 아니다. 必要經費·損金, 所得控除·稅額控除, 節次的 違法, 推計課稅 등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분된다. 장부나 원시기록등의 증거능력의 평가나 과세근거 사실의 제시등에 대하여는 租稅實體法의 지식이 결정적 중요 역할을 하는데 특히 稅理士의 訴訟代理人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115) 岡田正則, 前揭論文, p.179.

5. 辨理士의 訴訟代理權과 比較檢討

가.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辨理士法 제9조의 2 제1항은 「辨理士는 特許法 제178조 제1항, 實用新案法 제47조 제1항, 意匠法 제59조 제1항, 商標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訴訟에 관하여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特許등에 관한 審決의 取消訴訟(東京高等法院의 專屬管轄)에 있어서 訴訟代理人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侵害訴訟(差止請求와 損害賠償訴訟)에 있어서는 法院의 허가없이도 輔佐人으로 될 수 있어 民事訴訟法 제88조 제1항(訴訟代理人의 法院의 許可 要件)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나. 辨理士의 訴訟代理人制度 創設의 經緯

辨理士의 訴訟代理人制度가 도입된 것은 1948년 法 개정 때이다. 이 해에 特許法, 辨理士法 개정은 전쟁 직후의 경제부흥과 산업재건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였으나 訴訟代理人制度를 도입할 예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法案의 審議過程에서 의원제안에 의하여 법안수정의 형태로 辨理士法 제9조의 2가 성립된 것이다.

1921년 辨理士法 제정시부터 辨理士는 輔佐人으로서만 활동하여 왔으나, 法개정 이후 審決取消訴訟에 관하여 訴訟代理人으로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辯護士法(1949년 제정)등 일련의 「士」業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1948년 6월 19일 參議院 鑛工業委員會에서의 辨理士法 제9조의 2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提訴人(權利者)의 권리옹호와 裁判의 신속화를 들고 있다. 즉, '特許事件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급에 있어서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번 特許法 改正時 東京高等法院이 事

實審을 담당함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辨理士를 訴訟代理人으로 하는 것이 權利者(提訴人)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필요하고, 또 法院側으로서도 迅速·的確한 判決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편리할 것이다'.

둘째, 동일 사건에서 대리인이 자꾸 바뀌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審判에서는 辨理士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나 訴訟에서는 辯護士에게 넘겨 裁判에서 審決取消의 判決을 받고 이번에는 다시 特許局에 이송되면 辨理士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등 불편한 점을 들고 있다.

審議중 商工省은 찬성하였고, 法務省은 의문을 제시, 大法院과 日辯連은 반대 태도였으나 法案은 그대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후 辨理士會는 제9조의 2에 열거된 제4항 이외의 것(審決取消의 경우 이외에 特許등의 실시권에 관한 訴訟)까지도 訴訟代理를 할 수 있도록 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116]

다.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行使의 現狀

1988년 자료를 보면(자료③) 東京高等法院에서 審決取消訴訟 건수는 204건인데, 辨理士 관여 건수가 172건(84.3%)이고 그중 辨理士만이 대리인으로 된 사건수가 110건(전체 53.9%), 辯護士와 함께 대리인 또는 輔佐人이 된 사건수는 60건(29.4%)이었다.

侵害訴訟에서는 輔佐人으로 관여한 사건수는 61건중 28건(45.9%)으로서 辨理士의 訴訟代理 및 輔佐人 제도는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③ 특허訴訟에 있어서 辨理士 관여상황(1988년 判決 分)

(1) 審決取消訴訟 (東京高等法院)

116) 岡田正則, 前揭論文, p.182.

事件總數 204건(內當事者系 40건), 辨理士 關與數 172건 (84.3%)

種別 / 事項	原告(査定系·當事者系)					被告(當事者系의)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件數	110	60	21	13	204	13	8	18	1	40
비율 %	53.9	29.4	10.3	6.4	100	32.5	20.0	45.0	2.5	100

(2) 東京地方侵害訴訟(行政不服)

事件總數 41건(內行政不服事件 3건), 辨理士關與數16件(39.0%)

種別 / 事項	原告					被告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件數		12	23	6	41		10	24	4	38
비율 %		29.3	56.1	14.6	100		26.3	63.2	10.5	100

(3) 名古屋高等法院侵害訴訟

事件總數 4건, 辨理士 關與數 2건 (50%)

種別 / 事項	原告					被告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件數		2	1	1	4		2	2	0	4
비율 %		50.0	25.0	25.0	100		50.0	50.0	0.0	100

(4) 大阪高等法院侵害訴訟

事件總數 16건, 辨理士 關與數 10건 (62.5%)

種別 / 事項	原告					被告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辨理士	辯護士와 辨理士	辯護士	本人	計
件數		10	6	0	16		7	8	1	16
비율 %		62.5	37.5	0	100		43.8	50.0	6.2	100

라. 檢討

辨理士가 취급하는 特許關係 取消訴訟과 稅務行政訴訟과의 異同을 살펴본다.

(1) 取消訴訟의 性質

전자가 審決의 取消訴訟인데 대하여 후자는 行政廳의 處分의 取消訴訟이다. 稅務行政訴訟의 목적은 자기에게 納稅義務가 없다는 법관계의 형성 또는 확인, 즉 違法하게 부과된 不利益의 除去, 즉 「不納稅의 權利」[117]의 실현으로 전자가 東京高等法院 管轄인데 비하여 후자는 각 地方法院 管轄이다. 후자의 訴訟對象은 行政處分인데 대하여, 전자의 審決取消訴訟의 목적은 特許權등의 권리의 실현에 있고 이 訴訟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3 자적 절차를 거친 審決이다. 特許審決의 절차적 특색은 「審決取消訴訟은 1심이 생략되고 特許廳의 審判이 準司法的 성격을 갖는 점이다. 즉, 審判은 特許廳長官에 의하여 지정된 除斥(特許法 제137조, 138조)·忌避原因(特許法 제139조, 제141조)이 없는 3인의 審判官의 합의체에서 口頭審理로 행하여진다(特許法 제145조). 職權에 의한 것 외에 申請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지고(特許法 제150조) 審決로써 절차가 종료되는(特許法 제157조 제1항) 외에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審決은 「前審으로서의 裁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特許廳 審決의 取消訴訟이 東京高等法院을 제1심(事實審)으로 하여 控訴審을 생략하는 특수한 심리방식을 채용한 것은 「審決」이라는 처분이 특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 연혁이다.

戰前의 제도는 特許廳의 抗告審의 審決에 대하여 事實審의 法院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大法院에 출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戰後 일본국 憲法의 司法審査 原則에 맞춘 것이다.

---

117) 新井隆一, 負擔の公評/記帳の責任, 成文堂, 1984, p.200.

둘째 이유는 特許廳 審決의 전문기술성을 고려하여 본질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特許廳의 審判節次는……特許權을 부여하여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行政處分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行政廳의 절차에는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特許廳의 審判이 東京高等法院의 前審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辨理士와 稅理士業務의 相違

稅理士와 辨理士의 일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訴訟에 있어서 역할도 당연히 달라진다. 稅理士의 업무는 대행등 사실행위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하여 辨理士의 경우는 申請 및 그 附隨業務, 즉 事實認證이 법적 활동의 주가 되기 때문에 辨理士는 일상업무의 연장으로서 訴訟代理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상업무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고 개인차도 있다. 따라서 양자간에 訴訟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견해는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3) 訴訟技術, 法院의 審理의 向方

特許訴訟審理는 法院에 專門部가 설치되어 專門調査官이 배치된다.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도 꼭 같은 심리체제가 유지된다. 또 訴訟技術에 관하여는 각각 전문기술적 사항에 관한 行政訴訟으로서 양자 모두 民事訴訟과는 다르다.

(4) 行政權과의 관계에 있어서 兩 제도의 趣旨의 차이

1980년 稅理士法 개정에 이르기까지 日稅連을 비롯한 稅理士 각 단체의 自治團體로서의 성격은 매우 강하였다. 그 성과가 同法 제1조(독립한 공정한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稅理士會는 현행법의 지위 기타로 보아 자주단체로서 미성숙한 단체」라는 비판도 있다. 行政權과의 관계를 기타 유사 직업과 비교하여 본다.

자료④ 稅理士·辯護士·辨理士와 自治團體의 身分保障에 대하여

	會에 대한 監督權	會則의 制定變更	登錄에 대한 審査請求	懲戒權者
稅理士	大藏大臣(總會 議決의 取消와 任員의 解任)	大藏大臣의 認可	國稅廳長官	懲戒審査委員의 審査에 따라 稅理士審査會의 議決을 거쳐 大藏大臣
辯護士	大法院 報告, 調査를 依賴함	記載事項과 法定	日辯連(→東京高等法院)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기초로 日辯連이 裁決(東京高等法院의 取消訴訟)
辨理士	通産大臣	特許廳長官을 거쳐 通産大臣의 認可	通産大臣	審査會의 議決에 따라 通産大臣

6. 獨逸聯邦共和國에 있어서 稅理士의 訴訟代理權과의 比較檢討

일본의 稅理士制度는 獨逸의 稅理士制度와 비슷하다. 그러나 獨逸에서는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 稅理士가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채용한 獨逸의 稅理士制度의 이념은 무엇인가?

가. 財政法院에서의 訴訟代理

獨逸에서는 稅務行政訴訟을 財政法院(Finanzgericht)에서 취급한다. 이 法院은 연혁적으로 行政權에 의한 裁判에서 파생된 것이다. 獨逸民事訴訟法 제78조 제1항은 「란트法院 및 그 上級審에 해당하는 法院에 있어서 그 관할에 속하는 辯護士를 대리인으로……」라고 하여 辯護士强制主義 原則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財政法院法 제62조 제1항은 「이해 관계인은 대리인에게 代

理를 시킬 수 있고 口頭辯論에 있어서 輔佐人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法院은 결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選任 또는 輔佐人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財政法院에 있어서는 民事訴訟上의 訴訟代理制度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본인 訴訟도 가능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위의 民事訴訟과 같은 辯護士 强制도 일본에 있어서와 같은 辯護士 間接 强制도 아니다. 또 獨逸의 行政法院에 있어서와 같은 最上級審(聯邦行政法院)에서의 辯護士 强制制度도 채용하고 있지 않다.

財政法院에 있어서 訴訟代理人이 되기 위하여는 읽고 쓰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法院의 조치는 稅理士등의 職業으로서 대리를 하는 自然人(獨逸稅理士法 제3조 및 제4조)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稅理士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갖지 않고 稅務事件에 대하여 「업무로서」[118] 援助行爲를 행하는 자는 退去命令을 받는다(財政法院法 제62조 제2항). 따라서 稅理士는 稅務事件에 관하여 訴訟代理를 할 수 있다.

代理權의 範圍(der Umfang der Vollmacht)에 대하여 財政法院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民事訴訟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 대리인은 民事訴訟에 있어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訴訟行爲 復代理人의 選任, 訴訟費用의 受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民訴法 제81조), 「和解, 소송물의 포기 또는 상대방 청구의 認諾에 의하여 訴訟을 종료할 것」이 명시적으로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代理權은 제한된다. 또 稅務行政訴訟의 경우 辯護士 强制制度를 채용하고 있지 않아 依賴人은 포괄적인 대리를 위임하지 않고 個別訴訟行爲에 대하여 대리의 위임을 할 수 있다(民訴法 제83조 제2항).

稅理士는 刑訴法에 있어서 대리인(辯護人)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刑訴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法院에서 辯護人이 될 수 있는 자는 辯護士 및 獨逸大學의 法律學 敎員에 한정하고 있으나, 租稅通則法 제392조 제1항에서 租稅刑事事件에 관하여는 예외를 정하여, 「財政官廳이 刑事 節次를 독자적으

118) 業務로서라 함은 ① 어떤 활동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 자기의 職業活動의 일부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② 독립한 활동으로 報酬의 受領有無는 관계없다.

로 진행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刑訴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稅理士도 辯護人에 選任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辯護士 또는 獨逸 大學의 法律學 敎員과 공동인 때 한하여 변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依賴人이 刑事法로서 송치되기 이전의 대리에 대하여 稅理士도 辯護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119]

나. 制度採用의 趣旨

財政法院이 상기와 같은 訴訟代理制度를 채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聯邦財政法院에 있어서도 代理强制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辯護士 이외의 대리인의 취급에 대하여 異論이 있었고, 職權探知主義가 강한 경우에 대리인의 능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20] 또 어떤 註釋書의 해설에 의하면 「財政法院에서의 訴訟 關係人의 代理問題는 가장 논의가 많았던 문제의 하나이다. 政府 原案은 聯邦財政法院에서의 절차에 대하여는 代理强制를 도입하고, 일정 職業團體 加入者에게만 대리를 인정하도록 예정하였었다. 國會의 大藏委員會는 政府案에 찬성하여 政府案과 마찬가지로 聯邦財政法院에서의 代理强制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法務委員會는 이 문제의 전반적인 복잡성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견해였다.

그 위에 어떤 法律의 草案이 '당장' 준비되어 다른 上級聯邦法院에서의 대리의 許可가 이 法律에 의하여 규정되도록 되고 말았다고 한다. 財政法院의 관계인의 대리에 대하여는 그 때문에 종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21]

財政法院 창설 당초에 왜 이와 같은 代理人制度를 도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行政法院 및 高等行政法院의 대리인의 경우와 마찬

119) AO/FGO Kommentar, 8. Auflage §392 AO, S.22.
120) 南博方, 租稅爭訟の理論と實際, 弘文堂, 1975, p.142.
121) AO/FGO Kommentar §62 FGO, S.2~3.

가지라고 한다.[122]

또 「1945년 후 수년내 行政裁判權의 재도입과 行政訴訟 창설시 辯護士 强制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결합되게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公權力의 행위에 의한 權利의 侵害를 받는다고 생각한 시민을 위한 法院에의 구제의 길을 간이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訴訟費用이 불어날 위험을 될 수 있는 한 낮추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公法의 경험이 부족한 辯護士가 갖는 특수한 법적 지식에의 불신감을 고려하면서도」[123]

결국 국민측에서의 權利救濟 수단의 이용이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다. 1975년 聯邦財政法院 負擔輕減法등에 의한 代理人의 制限

그러나 1975년에 이르러 聯邦財政法院에 있어서 상기와 다른 訴訟代理制度가 변경된다. 즉, 聯邦財政法院負擔輕減法(Gesetz zur Entlastung des Bundesfinanzhofs) 제1조는 「聯邦財政法院에 있어서는, 각 관계인은 辯護士, 稅理士 또는 公認會計士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리케하여야 한다. 上告 또는 抗告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公法上의 法人이나 官廳은 法官의 자격있는 公務員 또는 職員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聯邦財政法院에서의 訴訟代理人의 범위는 辯護士, 稅理士·公認會計士에 한정되었는데, 이 法에 의한 변경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獨逸의 行政爭訟制度의 최근의 과제는 간소화·신속화이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聯邦財政法院에 있어서도 대리인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생겼다. 한정의 이유는 上告審에서의 절차의 복잡성과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소송수행에 대응하기 위하여서이다. 이와 같은 변경의 배경에는 1971~1973년

122) ① Z. B. H. GÖrg, K. Müller, Finanzgerichtsordnung. S.
② 岡田正則, 前揭論文, p.191,
123) ① 岡田正則, 前揭論文, p.191.
② O. Bachof, Über die Notwendigkeit des Anwaltszwanges im Verwaltungsprozess, NJW 1954 Heft7, S.256.

전반까지를 볼 때 上告審의 대부분은 辯護士에 의하여 訴訟代理가 행하여져 왔고 그 외에도 稅理士·公認會計士가 대리인으로 되어 왔다. 이에 聯邦財政法院에서의 代理制度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聯邦行政法院에 따른 것이다.[124]

聯邦行政法院에서의 代理强制는 司法 組織과 法律에 능통하지 않은 관계인을 위하고, 나아가서 간소화 및 신속화와 上告審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적합한 관계와 사실을 분별하는 法律問題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辯護士 또는 法律學大學 敎員에 의한 관계인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5년 訴訟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財政法院과 行政法院의 부담경감을 위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이 法은 1985년까지 時限立法이었으나 1985년 7월 4일 改正法 및 1990년 12월 6일 改正法에 의하여 적용기한이 199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125]

라. 檢討

聯邦財政法院이 訴訟代理權의 범위를 한정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行政法院案의 訴訟代理權 규정을 둘러싼 1950년대에 행해진 Otto Bachof와 칼 헤르만 울-레와의 논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호프의 주장은 ① 審理의 형편상 聯邦行政法院과 란트上級行政法院에 있어서는 辯護士 强制制度가 채용되어야 하고, ② 下級法院에서는 辯護士 强制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울-레의 주장은 ① 聯邦行政法院이나 란트上級行政法院의 경우 辯護士 强制主義는 찬동하나, ② 下級法院에까지 强制하는 것은 違憲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裁判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단순히 국민이 裁判에 접근하게 쉽도록 그치지 않고 訴訟代理人制度를 통하여 무책임한 소송지연을 방지하는등 정확

124) Vgl. Jens Meyer-Ladewig, Das Gezetz zur Entlastung des Bundesfinazhofs, DStR 1975, S. 451 ff., 454..
125) 岡田正則, 前揭論文, p.192.

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訴訟代理人의 범위는 訴訟節次의 특수성보다도 전문직의 윤리에 호소하여 전문직의 자치를 통하여 대리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審理의 촉진을 도모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보더라도 訴訟代理人에 있어서 전문직의 자치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126]

7. 展望

이상의 고찰로 稅務行政訴訟에 있어서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은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되기 위하여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 不服請求 및 訴訟回避 實態의 克服

먼저 訴訟代理를 하는 전제로 신분보장·단체 자치가 필요하다. 이후 稅理士法 개정에 있어서 稅理士 각자가 訴訟代理權과의 관련한 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의뢰하는 것만이 稅理士의 업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납세자의 적정한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職業專門人의 일원으로서 일정의 職業倫理에 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의 확립은 稅理士가 「납세자의 입장에 서기 위한 刺激」이 될 수 있는 것이다.[127]

나. 輔佐人으로서

辨理士法 제9조와 마찬가지로 法官의 허가없이 輔佐人이 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의 稅務行政訴訟의 폐쇄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辯護士

126) 上揭論文, p.193.
127) 上揭論文, p.193.

側에 제시하여 상호의 職域防衛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타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하면 자연적으로 개정의 방향이 도출될 것이다. 辯護士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稅理士會는 현행 제도하에 개개의 稅理士가 輔佐人으로 되어 訴訟한 실적을 쌓아간다는 방침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稅理士의 訴訟代理權 획득의 전제구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稅理士가 輔佐人으로서 실제로 法廷에서 활동함으로써 訴訟代理人으로서의 변론 능력등의 실력을 기르고 나아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28]

다. 訴訟代理人으로서

訴訟代理權 획득을 위하여는

첫째, 行政權과의 관계에서의 독립성과 자치성이 필요하다.

둘째, 法曹一元論의 입장에서 稅理士의 訴訟代理權을 부정하는 논의가 日辯連에서 강하게 일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稅務行政訴訟의 실태는 法曹一元論과 맞지않고 被告行政廳과 原告側과의 실질적 對等性[129]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稅理士가 訴訟代理人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면에서도 行政救濟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民訴節次와 分離檢討가 되어야 할 것이다.[130]

셋째, 稅理士의 法的 能力의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訴訟法등의 研修와 試驗科目의 改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31]

---

128) 上揭論文, p.194.

129) 稅務行政官廳과 納稅者, 稅務行政官廳과 納稅者의 代理人인 稅理士와의 지위의 對等性에 대하여는, 第7章 I 稅理士의 法的 地位 참조.

130) 이 점에 관하여는, 行政訴訟 전반에 걸친 포괄적 문제 제기로서, 阿部泰隆, 「行政訴訟の基本的缺陷と改革の視點」, 公法研究52號, 1990, p.138.

131) 岡田正則, 前揭論文, p.194.

第 8 章 稅理士 및 稅理士事務所의 實態[1]

稅理士 및 稅理士事務所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필자가 1988년 2월과 1994년 5월 日稅連, 東京稅理士會, 近畿稅理士會, 九州北部稅理士會와 몇 稅理士事務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수치에 관련된 것은 日稅連이 1994년 4월부터 다음과 같이 제4회 稅理士 및 稅理士事務所의 實態調査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1995년 3월 15일자 稅理士界에 분석·발표되었으므로 이를 번역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코자 한다.

第 1 節 調査要領 및 回答狀況

1. 머 리 말

日稅連은 1994년 4월 日稅連制度部 주관(擔當副會長 森 金次郎, 近畿稅理士會 會長임)으로 全國稅理士會 會員을 대상으로 하여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를 실시하였다. 이 調査의 목적은 사회 경제 情勢가 현저히 변화한데 대하여 稅理士業務 및 稅理士事務所의 실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타로 파악하여 會員 業務의 개선과 합리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외에 稅理士會의 구체적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번의 調査 내용을 과거의 調査 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前回(1984년)에 실시한 것을 답습하였으나 그후 稅理士業務의 實態 變遷등을

1) 第6章 第1節 XV 「稅理士 및 稅理士事務所 實態調査」 참조.

고려하여 몇 가지 조사 항목을 加除·修正하였는데, 「調査要領」 및 「各稅理士會의 回答 狀況」은 다음과 같다.

2. 調査要領

가. 基準日　　1994년 1월 1일

나 對象者　　1994년 1월 1일 현재의 稅理士會 會員

다. 期間　　원칙적으로 1993년 1월 1일~동년 12월 31일의 1년간

라. 調査項目　　1994년 1월 1일 현재의 稅理士 個人, 事務所의 運營등을 파악하기 위한 「I 稅理士에 관한 調査」와, 1993년중 收入 및 業務處理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II 1993년중의 稅理士業務에 관한 調査」로서 전부 29 項目.

마. 實施時期　　1994년 4월 1일(發送), 동월 30일(回答期限)

바. 實施方法　　日稅連으로부터 全稅理士에 대하여 직접 調査票[2]를 송부하고 回收하는 방법으로 실시(無記名回答)

사. 調査項目--「稅理士에 관한 事項」과 「業務에 관한 事項」으로 나눈다.

1) 稅理士에 관한 事項

① 性別

② 年齡

③ 最終學歷

④ 業務從事 年數

⑤ 稅理士가 된 資格

⑥ 資格取得前의 職業

⑦ 他士業 資格

⑧ 勤務處

2) 지면 관계상 調査票의 내용 기재 생략.

⑨ 稅理士事務所의 經營 形態

⑩ 會計法人

⑪ 컴퓨터

⑫ MAS 業務

⑬ 兼資格 또는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 행하는 社勞士業務

⑭ 從業員 및 專從者

⑮ 法人任員

⑯ 公共的 任職

⑰ 稅務關聯 團體·職業團體 등 任員

⑱ 稅理士 職業賠償責任保險

⑲ 納稅者로부터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損害賠償의 請求

2) 1993년 중 稅理士業務에 관한 調査

① 個人·法人의 관여 형태별 관여 건수

② 個人·法人의 규모별 관여 건수

㉮ 決算書類의 作成 또는 記帳代行 주식회사의 수

㉯ 資本金額과 負債總額의 비율로 본 주식회사의 수

③ 稅目別 관여 건수

④ 報酬別 관여 건수

⑤ 년간 收入金額

⑥ 總所得 金額

⑦ 總所得 金額의 收入內譯

⑧ 稅務調査--稅理士 本人이냐 納稅者냐

⑨ 異議申請--稅理士 本人이냐 納稅者냐

⑩ 稅務訴訟--稅理士 本人이냐 納稅者냐 등.

今回의 調査는 과거의 統計와의 비교의 필요에서 기본적인 것은 前回에 실시한 項目을 답습하여 29개 項目으로 하였다. 그 중 稅理士法 개정과 商法改正問題등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稅理士가 된 資格, 會計法人, 稅理士職業賠償責任保險, 決算書類의 作成 또는 記帳代行을 하고 있는 株式會社의 數, 資本金額과 負債總額의 비율로 본 株式會社의 數 등 一部項目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을 변경하였다. 3)

3. 稅理士會의 回答狀況

<표 1> 제4회 稅理士 實態調査

區分 / 稅理士會別	發送數 94. 1. 1 現在 稅理士會會員數	回答數			回答率 %
		開業稅理士	勤務稅理士	計	
東京	15,449	3,513	914	4,427	28.7
東京地方	5,664	2,016	458	2,474	43.7
關東信越	6,180	2,721	471	3,192	51.7
近畿	11,513	4,738	1,145	5,883	51.1
北海道	1,948	790	168	958	49.2
東北	2,635	1,387	267	1,654	62.8
名古屋	3,226	886	251	1,137	35.2
東海	3,343	1,438	308	1,746	52.2
北陸	1,284	492	124	616	48.0
中國	3,116	1,660	374	2,034	65.3
四國	1,546	673	134	807	52.2
九州北部	2,658	1,229	200	1,429	53.8
南九州	1,829	871	131	1,002	54.8
沖繩	241	116	16	132	54.8
合計	60,632	22,530	4,961	27,491	45.3

3)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1994年 7月 15日자 제9면 日稅連 第38回 定期總會議案(발췌)중.

<표 2> 제3회 稅理士 實態調査

區分 / 稅理士會別	發送數 84. 1. 1 現在 稅理士會會員數	回答數 開業稅理士	勤務稅理士	計	回答率 %
東京	11,419	3,440	524	3,964	34.7
東京地方	3,801	1,649	221	1,870	49.2
關東信越	4,080	1,954	192	2,146	52.6
近畿	8,478	3,782	566	4,348	51.3
北海道	1,356	560	58	627	46.2
東北	1,729	853	77	930	53.8
名古屋	2,311	1,091	150	1,241	53.7
東海	2,324	1,177	158	1,335	57.4
北陸	843	357	82	439	52.1
中國	2,295	1,399	195	1,594	69.5
四國	1,070	508	65	573	53.6
九州北部	1,873	1,007	140	1,147	61.2
南九州	1,347	809	44	853	63.3
沖繩	142	63	4	67	47.2
合計	43,068	18,658	2,476	21,134	49.1

第 2 節 第4回 稅理士 實態調査 結果의 槪要

제4회 實態調査는 종전과 같이 稅理士 全員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調査票의 발송수 60,632통에 대하여 유효 회답수 27,491통으로 回答率은 45.3%로서 前回 調査時에 비하여 回答率 3.8%가 저하되었다.

1984년 이후 사회 경제 情勢의 변화와 잇따른 稅制改正에 따라 稅理士의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회원수도 17,564인(40.8%) 증가하였다. 납세자 수는 1982년과 1992년을 비교하면 申告納稅者數 30.4% 증, 가동 法人數

48.7% 증가로 稅理士 1인당 관여 건수는 前回 調査時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 단, 開業稅理士의 比率은 前回 調査時보다 6.3% 저하하여 신규 개업의 곤란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 제4회 調査

區 分		回 答 數	構 成 比
開業稅理士		22,530	82.0(100.0)
開業年數	5年 未滿	4,060	(18.0)
	10年 未滿	4,846	(21.5)
	20年 未滿	6,571	(29.2)
	30年 未滿	4,859	(21.6)
	40年 未滿	1,651	(7.3)
	40年 以上	437	(1.9)
	無 記 入	106	(0.5)
勤務稅理士		4,961	18.0
合 計		27,491	100.0

<표 4> 제3회 調査

區 分		回 答 數	構 成 比
開業稅理士		18,658	88.3(100.0)
開業年數	5年 未滿	4,325	(23.1)
	10年 未滿	3,707	(19.9)
	20年 未滿	6,869	(36.9)
	30年 未滿	2,583	(13.8)
	40年 未滿	1,031	(5.5)
	40年 以上	144	(0.8)
	無 記 入		
勤務稅理士		2,476	11.7
合 計		21,134	100.0

조사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Ⅰ.「稅理士에 관한 調査」

1. 第3節 Ⅰ~Ⅶ은 稅理士 개인에 관한 항목으로서 開業稅理士와 勤務稅理士를 구분하지 않고 全稅理士를 대상으로 하였다. 性別에서는 여성의 구성비가 다시 증가하여 5.6%로 되었으나 開業稅理士는 4.0%에 머물렀다. 新規開業者의 취업 연령의 높음도 요인이 되었으나 연령별로 60세대가 43.1%로 가장 많았고 업무종사 년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27.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學歷은 前回 調査時까지 舊制中學卒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번 調査에서는 大卒이 29.4%로 가장 높았다.

稅理士가 된 資格은 試驗合格 38.8%, 特別試驗 合格 38.4%, 試驗免除 16.9%로 자격취득 방법이 다양함을 보여주었고, 자격취득전의 직업은 稅務職公務員이 50.0%, 稅理士事務所 職員이 28.2%, 會社員이 12.2% 순이였다.

他士 資格 소유자는 開業稅理士 24.2%(前回 34.7%)로서 資格別로 보면 行政書士, 社會保險勞務士, 公認會計士가 주였다.

2. Ⅷ은 勤務處를 가진 稅理士에 대한 조사항목이다. 勤務稅理士는 前回에 11.7%였으나 今回 18.0%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女性稅理士의 경우에는 41.9%가 勤務稅理士였다.

3. Ⅸ~Ⅺ은 稅理士事務所에 관한 항목으로서 開業稅理士만을 調査對象으로 하였는데, 稅理士事務所의 경영형태는 공동 경영이 2.0%에 지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이 단독경영임을 알 수 있다.

공동경영은 1974년 1.5%, 1984년 2.1%와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아 稅理士 事務所의 공동 조직화의 검토가 시급하다. 會計法人에 대하여는 開業稅理

士 12.2%이고 20%를 넘는 稅理士會가 3개會였다. 컴퓨터의 이용 상황은 이용비율 68.6%로서 그 이용 형태는 自所導入(퍼스널 컴퓨터)이 77.4%이다.

평균 종업원 수는 한 事務所에 4.4명으로 성별로는 여성 2.6명 남성 1.8명 중 稅理士 有資格者가 4,551명이였다.

4. XII~XIII은 開業稅理士만의 부수업무의 실시사항에 관한 조사이다. 稅理士의 부수업무로서 MAS업무가 13.0%, 社會保險勞務士業務가 26.1%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XV~XVII은 開業稅理士만의 직책의 就任事項에 관한 조사이다. 法人의 任員은 35.4%, 공공적 직책은 6.3%, 세무 관련 단체등의 임원은 13.6% 稅理士가 취임하고 있다.

6. XVIII~XIX는 開業稅理士의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損害賠償請求에 관한 조사이다. 1988년부터 「稅理士職業賠償責任保險」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그 가입상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이 保險 加入率은 34.3%로써 1993년 중 賠償金을 지불한 건수는 387건이고 그중 保險金을 수령한 것은 77건이었다.

II. 「稅理士業務에 관한 調査」

1. 第4節 I~II는 1993년 중 開業稅理士의 관여(취급) 건수에 관한 조사이다. 1993년 중 1인당 관여 건수는 個人 28.0건 法人 40.3건 합계 68.3건이다. 前回 조사에서 1인당 71.4건으로 건수면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관여 건수를 관여 형태별로 보면 「記帳에서 決算후 申告書를 작성하여 稅務代理까지」의 case가 압도적으로 많아 58.7%를 차지하고 있다. 稅目別 관여 건수를 보면 國

稅 관계가 평균 115.9건, 地方稅 관계가 평균 73.8건 합계 189.7건(前回 154.4건)이다.

2. Ⅲ은 報酬別 관여 건수(고문 계약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다. 월액顧問報酬의 평균액은 個人이 20,400円 정도 法人이 38,100円 정도이고, 평균 년액 결산보수는 個人의 경우 89,600円 정도, 法人의 경우에는 212,200円 정도였다.

3. Ⅳ～Ⅵ은 稅理士의 收入에 관한 조사로서 稅理士 事務所의 平均收入 금액은 대략 3千万円 정도였고, 所得金額의 조사는 勤務稅理士를 포함한 全稅理士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전체 평균은 958万円 정도, 開業稅理士만을 보면 1,003万円 정도였다.

4. Ⅶ～Ⅸ는 1993년중 開業稅理士에 의한 納稅者의 權利救濟 등에 관한 조사로서 稅務調査의 입회건수는 1인당 5.7건이였는데 그 전말은 「申告是認」 22.3%, 「修正申告」 72.5%, 「更正處分」 0.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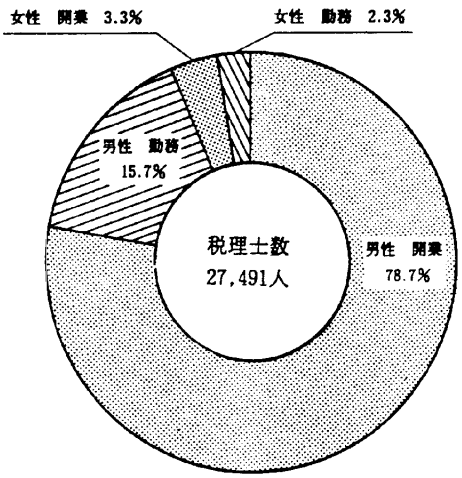
國稅不服請求 代理件數는 異議申請 293건, 審査請求 212건 합계 505건(前回 815건)이었고, 자기의 관여 사건으로 소송까지 이른 건수는 48건으로 그중 民事訴訟法 제88조의 輔佐人으로 된 건수는 7건이었다.

第 3 節 「稅理士에 관한 調査」 結果(Ⅰ～XIX)

Ⅰ. 性別

이번 조사에 있어서 남녀 구성비는 남성 94.4%에 대하여 여성은 5.6%였다. 前回調査에서 여성의 구성비가 2.8%인데 비하여 10년간 女性稅理士의 진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開業稅理士 83.4%, 勤務稅理士 16.6%, 여성은 開業稅理士 58.1%, 勤務稅理士 41.9%로서 前回에 비하여 남녀 공히 6%정도 開業率이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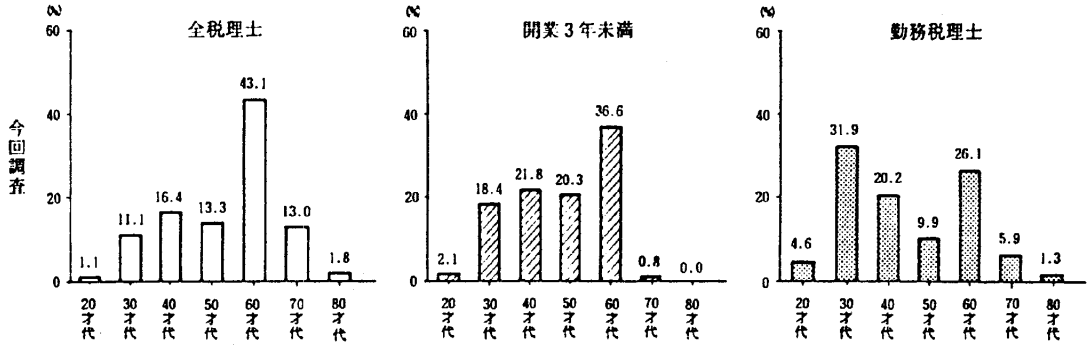
<표 5> 男女의 構成比



Ⅱ. 年齡

제2회 조사(1974년)시는 40대가 37.9%, 제3회 조사(1984년)시는 50대가 37%, 금회에는 60대가 43.1%로서 年代 移行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年齡 分布



<표 7> 男女別 開業稅理士와 勤務稅理士의 比率

	稅理士數	開業稅理士			勤務稅理士
		計	開業 3年 以上	開業 3年 未滿	
計	(100.0)	(82.0)	(74.2)	(7.8)	(18.0)
	27,491	22,530	20,380	2,150	4,961
男性	(100.0)	(83.4)	(75.9)	(7.5)	(16.6)
	25,944	21,631	19,680	1,951	4,313
女性	(100.0)	(58.1)	(45.2)	(12.9)	(41.9)
	1,547	899	700	199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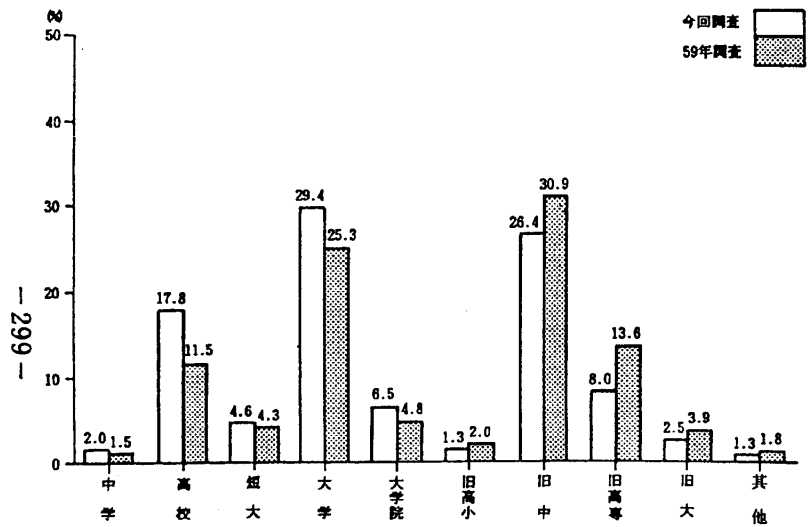
<표 8> 年代別 開業稅理士와 勤務稅理士의 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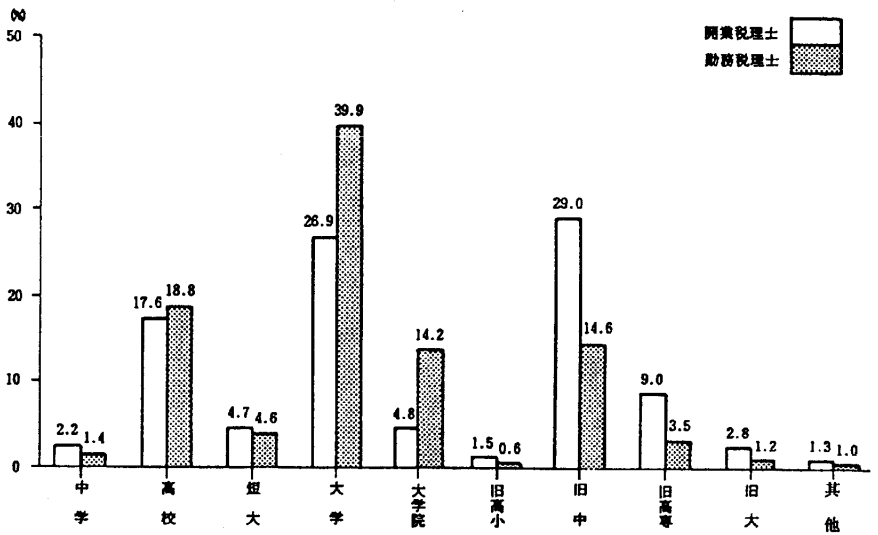
	全稅理士	開業稅理士	開業 3年 未滿	勤務稅理士
20歲代	(1.1) 292	(0.3) 65	(2.1) 45	(4.6) 227
30歲代	(11.1) 3,050	(6.5) 1,471	(18.4) 395	(31.9) 1,579
40歲代	(16.4) 4,517	(15.6) 3,515	(21.8) 468	(20.2) 1,002
50歲代	(13.3) 3,668	(14.1) 3,175	(20.3) 436	(9.9) 493
60歲代	(43.1) 11,851	(46.8) 10,555	(36.6) 787	(26.1) 1,296
70歲代	(13.0) 3,580	(14.6) 3,285	(0.8) 17	(5.9) 295
80歲代	(1.8) 483	(1.9) 418	(0.0) 1	(1.3) 65
無 記 入	(0.2) 50	(0.2) 46	(0.0) 1	(1.3) 65
合 計	(100.0) 27,491	(100.0) 22,530	(100.0) 2,150	(100.0) 4,961

Ⅲ. 最終學歷

學歷은 大學卒이 가장 많은 29.3%이고 다음이 舊制中學卒業 26.4%, 高校卒業이 17.8% 순인데, 勤務稅理士의 경우에는 연령층은 낮으나 開業稅理士에 비하여 大學卒이 39.9%, 大學院卒이 14.2%로 高學歷임을 알 수 있다.

<図 9> 學歴 分布





	計	中学	高校	短大	大学	大学院	旧高小	旧中	旧高専	旧大	其他	無記入
今回調査（全税理士）	(100.0) 27,491	(2.0) 554	(17.8) 4,907	(4.6) 1,276	(29.4) 8,048	(6.5) 1,795	(1.3) 359	(26.4) 7,271	(8.0) 2,195	(2.5) 690	(1.3) 347	(0.2) 49
84年調査（全税理士）	(100.0) 21,134	(1.5) 325	(11.5) 2,437	(4.3) 913	(25.3) 5,344	(4.8) 1,006	(2.0) 428	(30.9) 6,521	(13.6) 2,870	(3.9) 827	(1.8) 383	(0.4) 80
開業税理士	(100.0) 22,530	(2.2) 486	(17.6) 3,976	(4.7) 1,048	(26.9) 6,063	(4.8) 1,091	(1.5) 330	(29.0) 6,549	(9.0) 2,021	(2.8) 630	(1.3) 295	(0.2) 41
開業3年未満	(100.0) 2,150	(0.8) 17	(46.9) 1,008	(6.3) 135	(33.8) 727	(5.9) 127	(0.1) 3	(3.9) 83	(0.8) 17	(0.4) 8	(0.9) 20	(0.2) 5
勤務税理士	(100.0) 4,961	(1.4) 68	(18.8) 931	(4.6) 228	(39.9) 1,985	(14.2) 704	(0.6) 29	(14.6) 722	(3.5) 174	(1.2) 60	(1.0) 52	(0.2) 8

Ⅳ. 業務從事 年數

業務從事 년수는 5년 미만이 22.7%, 5년 이상 10년 미만 22.2%,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7.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9.2%, 30년 이상이 8.3%로서 前回 調査時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종사 년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10년 미만이 43.5%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는 10년 미만이 68.6%를 점하고 있다.

<표 10> 男女別 業務從事 年數

	今回調査			84年 調査
	計	男	女	計
合 計	100.0 27,491	100.0 25,944	100.0 1,547	100.0 21,134
1年 未滿	4.2 1,152	3.9 1,006	9.4 146	5.0 1,046
1年 以上	8.6 2,363	7.9 2,049	20.3 314	21.7 4,591
3年 以上	9.9 2,713	9.6 2,482	14.9 231	
5年 以上	22.2 6,103	22.1 5,733	24.0 370	20.2 4,267
10年 以上	27.1 7,472	27.4 7,139	21.5 333	34.6 7,314
20年 以上	19.2 5,275	19.9 5,157	7.6 118	12.7 2,688
30年 以上	6.5 1,784	6.8 1,763	1.4 21	5.0 1,054
40年 以上	1.8 496	1.9 492	0.3 4	0.7 150
無 記 入	0.5 133	0.5 123	0.6 10	0.1 24

Ⅴ. 稅理士의 資格

稅理士가 된 資格은 稅理士試驗合格과 特別試驗合格이 38.8%와 38.5%로서 전체 77.3%를 점하여 前回와 비슷하나, 今回는 試驗免除가 16.9%로서 前回의 6.5%에 비하여 10%를 상회하고 있다(일부과목 면제를 받고 다른 과목에 대하여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자를 試驗免除者로 집계하였다).

免除科目을 보면 稅法科目 免除가 53.6%, 會計科目 免除가 4.9%, 全科目 免除가 25.6%였고, 이들 試驗免除者중 國稅 관계 職員이 55.0%, 大學院 修了者가 30.6%로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표 11> 男女別 開業稅理士·勤務稅理士別 稅理士資格의 基礎

	今回調査					84年 調査
	計	男	女	開業稅理士	勤務稅理士	計
試驗合格	38.8 10,676	36.4 9,433	80.3 1,243	36.4 8,200	49.9 2,476	41.8 8,838
特試合格	38.5 10,578	40.2 10,430	9.5 148	41.8 9,424	23.3 1,154	39.9 8,424
試驗免除	16.9 4,650	17.4 4,510	9.0 140	16.1 3,635	20.5 1,015	6.5 1,384
資格認定	1.1 296	1.1 293	0.2 3	1.1 249	0.9 47	3.2 683
稅務代理士	1.2 332	1.3 331	0.1 1	1.3 300	0.6 32	3.9 831
計理士	0.5 130	0.5 129	0.1 1	0.5 116	0.3 14	1.1 226
辯護士	0.2 61	0.2 61		0.2 56	0.1 5	0.2 50
公認會計士	4.2 1,155	4.4 1,140	1.0 15	4.0 914	4.9 241	4.0 855
特例認定	0.0 0					0.1 21
合 計	27,878	26,327	1,551	22,894	4,984	21,312
稅理士數	100.0 27,491	100.0 25,944	100.0 1,547	100.0 22,530	100.0 4,961	100.0 21,134

Ⅵ. 資格取得前의 職業

資格取得前의 職業은 稅務公務員 출신이 50.0%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 稅理士事務所 職員이 28.2%, 會社員이 12.2% 순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稅理士事務所 직원이 52.6% 다음이 會社員 19.4%, 稅務職 公務員이 12.7% 순이다.

<표 12> 男女別 資格取得前의 職業

	今回調査			84年 調査
	計	男	女	計
稅理士事務所 職員	(28.2) 7,744	(26.7) 6,930	(52.6) 814	(26.6) 5,619
他士業事務所 職員	(2.0) 550	(2.0) 520	(1.9) 30	(1.9) 403
其他 公務員	(1.0) 276	(1.0) 267	(0.6) 9	(1.7) 356
公共企業體等 職員	(0.6) 156	(0.6) 152	(0.3) 4	(0.6) 118
敎 員	(0.9) 234	(0.8) 218	(1.0) 16	(1.1) 229
會 社 員	(12.2) 3,360	(11.8) 3,060	(19.4) 300	(13.9) 2,947
學 生	(2.1) 568	(1.9) 495	(4.7) 73	(1.3) 283
其 他	(3.6) 990	(3.3) 848	(9.2) 142	(3.7) 789
無 記 入	(0.8) 223	(0.8) 206	(1.1) 17	(0.3) 65
合 計	27,840	26,239	1,601	21,321
稅理士數	(100.0) 27,491	(100,0) 25,944	(100,0) 1,547	(100,0) 21,134

Ⅶ. 他「士」業 資格

他士業資格의 保有狀況을 보면 6,643명, 즉 24.2%가 稅理士외 다른 資格 1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前回 조사시의 34.7%에 비하면 10.5% 하락한 비율이다.

保有資格으로서는 行政書士가 3,258명 11.9%(前回 16.8%), 社會保險勞務士가 1,802명 6.6%(前回 12.5%), 公認會計士가 1,674명 6.1%(前回 7.5%)이고, 稅理士로 등록한 公認會計士 1,674명중 1,057명, 즉 63.1%가 監査業務에 종사하고 있다.

<표 13> 他士業資格의 保有狀況

(回答稅理士數 : 6,643명)

	他士業資格	構成比	
		今回 調査	84年 調査
辯護士	70	0.9	0.5
公認會計士 (士補)	1,674	20.5	16.2
司法書士	199	2.4	3.6
行政書士	3,258	39.9	36.5
辨理士	7	0.1	0.2
不動産鑑定士(士補)	249	3.1	2.8
中小企業 診斷士	406	5.0	6.1
社會保險 勞務士	1,802	22.1	27.4
土地家屋 調査士	53	0.6	0.9
其他	438	5.4	5.8
合計	8,156	100.0	100.0

Ⅷ. 勤務稅理士

勤務稅理士의 數는 前回 조사시에는 回答稅理士 21,134명 중 2,476명(11.7%)[4]였으나 今回에는 回答稅理士 27,491명중 4,961명(18.0%)으로서 6.3%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勤務稅理士는 男性回答者 25,944명중 4,313명(16.6%)이었으나 여성의

4) 權海浩外,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韓國租稅硏究所, 1988, p.106.

경우에는 回答者 1,547명중 648명(41.9%)이 勤務稅理士였다. 勤務稅理士의 勤務處로서는 稅理士事務所가 62.9%로 가장 많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75.6%가 稅理士事務所였다. 그외 民間會社에 15.9%, 公認會計士事務所에 6.5%순이다.

<표 14> 勤務稅理士數

	稅理士數	勤務稅理士數	男 性	女 性	無記入
今回 調査	27,491	(100.0) 4,961	(86.6) 4,300	(13.1) 648	(0.3) 13
84年 調査	21,134	(100.0) 2,476	(89.6) 2,218	(8.1) 201	(2.3) 57

<표 15> 勤務處別 勤務稅理士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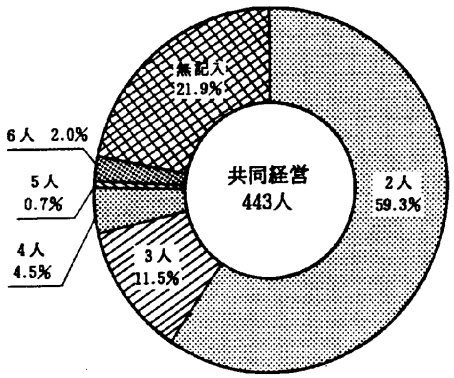
	勤 務 稅 理 士		
	計	男	女
稅理士事務所	(62.9) 3,120	(61.0) 2,623	(75.6) 490
稅理士主宰 會計法人	(4.4) 217	(4.3) 184	(5.1) 33
公認會計士 事務所	(6.5) 320	(5.7) 243	(11.7) 76
監査法人	(3.0) 148	(3.1) 134	(2.0) 13
其他士業事務所	(0.5) 27	(0.6) 24	(0.5) 3
民 間 會 社	(15.9) 789	(17.4) 750	(5.4) 35
稅務關聯團體	(5.6) 277	(6.3) 273	(0.6) 4
其 他	(2.9) 146	(3.2) 139	(0.9) 6
無 記 入	3	2	
合 計	5,047	4,372	660
回 答 數	(100.0) 4,961	(100.0) 4,300	(100.0) 648

Ⅸ. 稅理士事務所의 經營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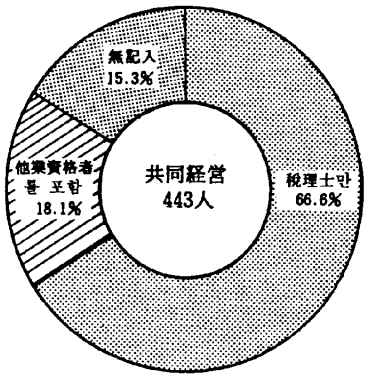
22,530명중 單獨經營이 21,520명(95.5%)으로서 대부분이고 共同經營이 443명(2.0%), 無記入이 576명이었다. 共同經營者의 人數는 2인의 경우가 59.3%로서 가장 많고 3인의 경우가 18.1%였다.

共同經營의 파트너로서는 66.6%가 稅理士이고 他士의 경우가 18.1%이다. 또 共同經營의 形態는 完全共同이 31.6%, 不完全共同이 42.2%로서 장래를 모색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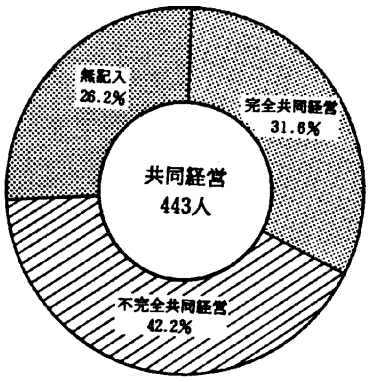
<표 16> 共同經營者의 人數



<표 17> 共同經營者의 資格



<표 18> 共同經營의 形態



X. 會計法人

會計法人으로 운영하는 稅理士는 전체의 12.2%인데 前回의 7.6%에 비하여 많이 신장된 추세이고, 지역별로는 東北稅理士會가 25.4%, 沖繩稅理士會 22.4%, 中國稅理士會 21.6% 순이다. 그 會計法人에 있어서 稅理士의 地位는 「代表取締役社長」 78.4%, 「代表取締役이나 다른 代表者가 있는 경우」 5.2%, 「代表取締役 이외의 任員」이 1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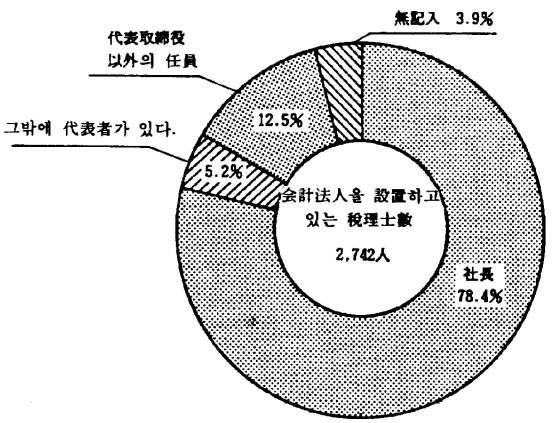
당해 法人의 保有株式 또는 出資比率은 「50% 이상」이 75.1%, 「50% 미만」이 20.1%이다.

會計業務의 受託方法은 「稅理士事務所에서 一括契約」이 64.1% 「稅理士業務와 구분하여 去來處와 直接契約」이 28.5%이다. 法人의 所在地는 「稅理士事務所에 併設」이 88.6%이고 支店 또는 出張所는 「없다」가 88.3%를 점하고 있다.

<표 19> 會計法人의 設置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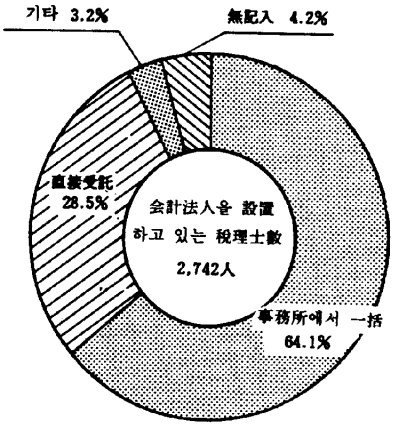
	開業稅理士數	設置	設置割合	
			今回 調査	84年 調査
合計	22,530	2,742	12.2	7.6
東京	3,513	335	9.5	5.3
東京地方	2,016	161	8.0	5.2
關信	2,721	344	12.6	8.2
近畿	4,738	393	8.3	4.4
北海道	790	60	7.6	5.4
東北	1,387	352	25.4	20.9
名古屋	886	91	10.3	4.8
東海	1,438	132	9.2	6.5
北陸	492	81	16.5	8.1
中國	673	124	18.4	15.4
四國	673	124	18.4	11.4
九州北部	1,229	125	10.2	6.5
南九州	871	160	18.4	12.9
沖繩	116	26	22.4	22.2

<표 20> 당해 會計法人에 있어서 稅理士의 地位



<표 21> 會計業務의 受託方法

計	稅理士事務所一括受託	稅理士業務와區分直接受託	其 他	無 記 入
(100.0)	(64.1)	(28.5)	(3.2)	(4.2)
2,742	1,759	781	88	114



XI. 컴퓨터(會計法人 包含) 利用 狀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開業稅理士가 68.6%로 前回의 56.4%에 비하여 12.2% 증가하였다. 從業員이 4인 이상의 稅理士事務所가 90% 이상 이용하며, 컴퓨터 이용 형태는 자기 소유가 77.4%로 前回에 비하여 14.0% 상회하였고, 민간 계산센터등의 이용률은 12.0%로 前回의 28.4%에 비하여 16.4% 감소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稅理士의 평균 거래 건수는 82.4건으로 全稅理士 평균 64.6건에 비하여 17.8건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稅理士會別 컴퓨터 利用狀況

	開業稅理士數	컴퓨터(會計法人包含)			利用者	利用形態			
		利用	利用않음	無記入		自所導入	民間計算센터	併用	無記入
合計	22,530	68.6 15,440	28.3 6,386	3.1 704	15,440	77.4 11,950	12.0 1,846	5.6 867	5.0 777
東京	3,513	74.2 2,607	22.6 795	3.2 111	2,607	80.5 2,100	9.6 249	4.7 123	5.2 135
東京地方	2,016	71.4 1,438	25.4 513	3.2 65	1,438	82.5 1,186	10.0 144	3.5 51	4.0 57
關東信越	2,721	68.0 1,849	29.4 801	2.6 71	1,849	73.4 1,357	15.1 280	6.8 126	4.7 86
近畿	4,738	68.1 3,224	28.6 1,356	3.3 158	3,224	78.9 2,544	10.4 334	5.1 166	5.6 180
北海道	790	65.5 518	30.3 239	4.2 33	518	78.8 408	11.6 60	5.4 28	4.2 22
東北	1,387	61.8 857	35.7 495	2.5 35	857	75.8 650	13.0 111	6.8 58	4.4 38
名古屋	886	73.6 652	23.8 211	2.6 23	652	75.6 493	12.9 84	6.7 44	4.8 31
東海	1,438	72.0 1,035	24.7 355	3.3 48	1,035	74.8 774	13.9 144	6.6 68	4.7 49
北陸	492	66.0 325	29.9 147	4.1 20	325	67.7 220	16.9 55	7.4 24	8.0 26
中國	1,660	65.7 1,092	31.3 519	3.0 49	1,092	73.9 807	15.2 166	6.0 65	4.9 54
四國	673	57.9 390	37.9 255	4.2 28	390	76.6 299	12.6 49	4.6 18	6.2 24
九州北部	1,229	60.4 742	36.5 449	3.1 38	742	79.2 588	9.3 69	6.5 48	5.0 37
南九州	871	71.6 623	25.8 225	2.6 23	623	73.8 460	13.6 85	7.1 44	5.5 34
沖繩	116	75.9 88	22.4 26	1.7 2	88	72.8 64	18.2 16	4.5 4	4.5 4

Ⅻ. MAS 業務(會計法人 包含)

전체 13.0%가 MAS(management assistant service)業務를 실시하고 있다. 前回 13.9%에 비하여 0.9% 감소하고 있는데 MAS業務가 여전히 稅理士業務의 부수적 써어비스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S業務의 내용은 경영전반이 66.5%로 가장 많고 다음이 財務 38.7%, 勞務 9.1%, 販賣 2.8, 기타 3.1%이다.

MAS業務 報酬를 받고 있는 것은 37.2%로서 前回의 28.0%보다 10% 증가하였으나 開業 3년 미만의 稅理士중 MAS業務를 수행하는 경우는 7.3% 정도인 것으로 보아 MAS業務가 고도의 경험과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알 수 있다.

<표 23> MAS業務의 實施率

計	開業稅理士		
	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	無記入
22,530	2,922	17,947	1,661
100.0	13.0	79.6	7.4

<표 24> MAS業務의 報酬

計	開業稅理士		
	받는다	받지 않는다	無記入
2,922	1,087	1,358	477
100.0	37.2	46.5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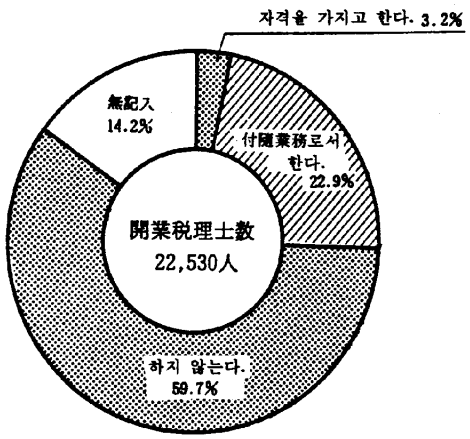
<표 25> MAS業務의 內容

計	開業稅理士				
	經營全般	財務	販賣	勞務	기타
2,922	1,942	1,131	81	265	92
100.0	66.5	38.7	2.8	9.1	3.1

XIII 兼資格 稅理士業務 付隨 社會保險勞務士業務

社會保險勞務士業務를 행하는 開業稅理士는 社會保險勞務士의 자격을 갖고 하는 경우와 부수업무로서 하는 경우를 합하여 26.1%로서 前回의 21.9%에 비하여 4.2% 증가하고 있다.

<표 26> 社會保險勞務士 兼業 比率



XIV. 從業員 및 專從者(會計法人 包含)

開業稅理士중 從業員이 있는 稅理士事務所 수가 13,825로서 61.4%이다. 이는 前回의 85.6%에 비하여 稅理士 單獨 運營 事務所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從業員의 총수는 61,021명(남성 24,516, 여성 36,505)이고, 1 事務所당 4.4명(남성 1.8, 여성 2.6)으로 前回 4명과 비슷하다.

종업원 규모를 보면 1~3명이 57.2%, 4~6명 23.9%, 7~10명 11.2%, 11~20명 6.2%, 21명 이상이 1.5%이다.

專從者가 있는 稅理士事務所는 11,562로서 전체의 51.3%이다. 專從者 總數는 14,078명(남성 2,434, 여성 11,644)이고 1 事務所당 1.2명(남성 0.2, 여성 1.0)이다

<표 27> 從業員 規模別 稅理士事務所 數

		開業稅理士		84年 調査
		回答數	構成比	(構成比)
從業員規模別	1~3人	7,909	57.2	59.7
	4~6人	3,302	23.9	24.3
	7~10人	1,542	11.2	10.7
	11~20人	861	6.2	4.5
	21人 以上	211	1.5	0.8
	計	13,825	100.0	100.0

<표 28> 資格保有者가 있는 稅理士事務所 數

	今回調査	84年 調査
合計	(100.0) 2,977	(100.0) 2,207
1人	(86.1) 2,564	(88.6) 1,956
2人	(9.5) 284	(8.4) 185
3人	(2.5) 74	(1.8) 40
4人	(0.8) 22	(0.6) 12
5人 以上	(1.1) 33	(0.6) 14

XV. 法人의 任員 就任

稅理士중 7,978명, 전체의 35.4%(前回 43.9%)가 法人의 任員(會社의 任員과 醫療法人이나 學校法人등의 任員을 포함)으로 취임하고 있다. 그 직책으로서는 「監査役 또는 監事」가 가장 많고 就任法人의 수는 21,128社중 17,352社(82.1%)이다.

<표 29> 法人任員의 就任狀況

	開業稅理士數	法人役員에 就任한 稅理士數	監査役(監事)						其他(相談役等)					
			監査役 또는 監事에 就任한 稅理士數	就任한 稅理士數의 內訳					其他役員에 就任한 稅理士數	就任한 稅理士數 內訳				
				1社	2社	3社	4社以上	無記入		1社	2社	3社	4社以上	無記入
合計	22,530	(100.0) 7,978	(83.9) 6,691	2,156	1,529	995	1,375	636	(1.7) 132	92	18	8	2	12
1 東京	3,513	(100.0) 1,527	(82.5) 1,260	401	294	182	259	124	(1.8) 27	18	3	1		5
2 東京地方	2,016	(100.0) 603	(80.1) 483	197	105	62	62	57	(1.3) 8	6				2
3 関東信越	2,721	(100.0) 803	(82.2) 660	226	154	94	111	75	(1.7) 14	10	4			
4 近畿	4,738	(100.0) 1,841	(86.7) 1,596	446	366	260	392	132	(1.4) 25	19	2	2	1	1
5 北海道	790	(100.0) 317	(85.2) 270	76	53	42	77	22	(2.2) 7	5	1		1	
6 東北	1,387	(100.0) 446	(86.1) 384	117	88	73	72	34	(1.6) 7	2		3		2
7 名古屋	886	(100.0) 342	(83.6) 286	80	71	49	68	18	(1.5) 5	5				
8 東海	1,438	(100.0) 459	(83.9) 385	133	96	51	68	37	(0.4) 2			1		1
9 北陸	492	(100.0) 177	(75.7) 134	56	27	13	28	10	(2.3) 4	3	1			
10 中国	1,660	(100.0) 625	(85.3) 533	173	119	76	113	52	(1.8) 11	10	1			
11 四国	673	(100.0) 190	(78.4) 149	63	33	16	23	14	(3.2) 6	2	3	1		
12 九州北部	1,229	(100.0) 363	(84.8) 308	94	74	47	60	33	(2.5) 9	7	2			
13 南九州	871	(100.0) 255	(85.5) 218	83	43	26	39	27	(2.7) 7	5	1			
14 沖縄	116	(100.0) 30	(83.3) 25	11	6	4	3	1						

XVI 公共的 職責

稅理士중 1,424명 전체의 6.3%(前回 6.7%)가 公共的 職責에 就任하고 있다. 그 직책을 보면 調整委員 263명(18.5%), 監査委員 196명(13.8%), 地方自治體 審議委員등 395(27.7%), 民生委員 158명(11.1%)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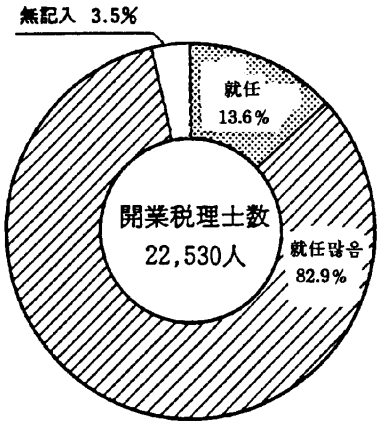
<표 30> 職責別 就任狀況

	就任稅理士數	構成比
調停委員	263	18.5
監査委員	196	13.8
地方自治體審議委員等	395	27.7
民生委員	158	11.1
地方裁判所鑑定委員	70	4.9
其他	463	32.5
合計	1, 545	
回答數	1, 424	100.0

XVII 稅務關聯團體·職業團體등의 任員 就任

稅理士중 稅務關聯團體·職業團體등 任員으로 3,053명 전체의 13.6%가 취임하고 있다. 이는 前回調査時의 7.0%에 비해 6.6%가 증가한 숫자이다.

<표 31> 稅務關聯團體·職業團體 등 任員의 就任狀況



XVIII 稅理士 職業賠償責任保險

稅理士 職業賠償責任保險에는 開業稅理士 22,530명중 7,739명(34.3%)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過少申告가 保險對象이 아니기 때문」이 13.4%, 「損害補償額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6.0%, 기타 31.2%이나 無記入者가 48.4% 있는 것으로 보아 이 保險의 필요성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稅理士 職業賠償責任保險 加入狀況

	開業稅理士數	稅理士職業賠償責任保險			未加入	未加入理由				
		加入	未加入	無記入		당해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보험사	손해보상액 불충분	보험가입 대상 이외	其他	無記入
合計	100.0 22,530	34.3 7,739	64.2 14,456	1.5 335	(100.0) 14,456	(1.0) 150	(6.0) 861	(13.4) 1,941	(31.2) 4,513	(48.4) 6,991
1 東京	100.0 3,513	39.1 1,374	59.5 2,091	1.4 48	(100.0) 2,091	(1.3) 28	(7.9) 166	(11.6) 243	(29.2) 611	(50.0) 1,043
2 東京地方	100.0 2,016	41.8 842	57.0 1,150	1.2 24	(100.0) 1,150	(1.7) 20	(7.1) 82	(14.7) 169	(31.5) 362	(45.0) 517
3 関東信越	100.0 2,721	33.7 916	65.0 1,770	1.3 35	(100.0) 1,770	(1.6) 28	(7.2) 127	(16.2) 286	(29.8) 527	(45.2) 802
4 近畿	100.0 4,738	30.4 1,442	67.7 3,208	1.9 88	(100.0) 3,208	(1.0) 31	(5.8) 187	(12.9) 415	(30.8) 988	(49.5) 1,587
5 北海道	100.0 790	31.1 246	67.6 534	1.3 10	(100.0) 534	(0.9) 5	(4.7) 25	(12.7) 68	(33.7) 180	(48.0) 256
6 東北	100.0 1,387	33.4 463	65.4 908	1.2 16	(100.0) 908	(0.8) 7	(5.5) 50	(12.8) 116	(33.8) 307	(47.1) 428
7 名古屋	100.0 886	38.4 340	60.4 535	1.2 11	(100.0) 535	(0.7) 4	(4.3) 23	(13.5) 72	(31.0) 166	(50.5) 270
8 東海	100.0 1,438	38.5 554	60.2 866	1.3 18	(100.0) 866	(0.3) 3	(5.3) 46	(16.4) 142	(29.7) 257	(48.3) 418
9 北陸	100.0 492	34.1 168	63.9 314	2.0 10	(100.0) 314	(1.0) 3	(1.6) 5	(12.4) 39	(33.8) 106	(51.2) 161
10 中国	100.0 1,660	30.5 506	68.2 1,132	1.3 22	(100.0) 1,132	(0.7) 8	(4.2) 47	(13.0) 147	(31.4) 356	(50.7) 574
11 四国	100.0 673	28.5 192	70.0 471	1.5 10	(100.0) 471	(0.6) 3	(3.6) 17	(12.3) 58	(36.9) 174	(46.6) 219
12 九州北部	100.0 1,229	29.7 365	68.6 843	1.7 21	(100.0) 843	(0.7) 6	(5.6) 47	(12.9) 109	(33.0) 278	(47.8) 403
13 南九州	100.0 871	33.1 288	64.4 561	2.5 22	(100.0) 561	(0.7) 4	(5.5) 31	(11.9) 67	(31.4) 176	(50.5) 283
14 沖縄	100.0 116	37.1 43	62.9 73		(100.0) 73		(11.0) 8	(13.7) 10	(34.2) 25	(41.1) 30

XIX 納稅者로부터 稅理士業務와 관련한 損害賠償 請求

1993년중 納稅者로부터 稅理士業務와 관련하여 損害賠償 請求를 받은 稅理士는 開業稅理士 22,530명중 491명으로 전체의 2.2%이다. 前回의 130명 0.7%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93년중 損害賠償 請求를 받은 건수는 402건이고 그중 賠償金을 지불한 건수는 387건이며 그중에서 稅理士 職業賠償責任保險金을 受領한 것은 77건이다(자료 표 생략).

第 4 節 「稅理士의 業務에 관한 調査」 結果

Ⅰ. 個人·法人의 關與 形態別 關與의 件數

93년중 個人(事業所得者만을 대상으로 함)의 관여 건수는 回答稅理士가 19,651명이고 관여 건수는 합계 550,130건, 1 稅理士당 28.0건(前回의 31.0건)이다.

이를 관여 형태별로 보면 「記帳에서 決算하여 申告書 작성후 稅務代理까지」가 45.5%(前回 51.0%), 「決算하여 申告書 작성후 稅務代理까지」가 35.3%(前回 29.9%), 「稅務書類의 作成 및 稅務代理」가 15.8%(前回 14.1%)이다.

法人의 경우에는 回答稅理士가 19,616명 관여 건수 합계가 789,750건으로 1 稅理士당 40.3건(前回 40.4건)이다.

이를 관여 형태별로 보면 「記帳에서 決算하여 申告書 작성후 稅務代理까지」가 67.7%(前回 65.6%), 「決算하여 申告書 작성후 稅務代理까지」가 23.7%(前回 25.6%), 「稅務書類의 作成 및 稅務代理」가 5.0%(前回 5.2%)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記帳에서 決算하여 申告書 작성후 稅務代理까지」의 업무가 58.7%로 가장 많다.

開業 3년 미만의 稅理士에 대한 평균 관여 건수는 個人·法人 합계 21.3건으로 開業 년수가 오래되어 신용이 축적되어야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신고종류별 관여 건수는 個人·法人 합계 靑色 申告者가 91.1% 白色 申告者가 8.9%의 비율이다.

<표 33> 個人事業者 關與 形態別 關與 件數 構成比

	回答税理士數	個人의 關与形態別 関与件数							申告種類別件数	
		申告・税務代理 記帳・決算	税務代理 決算・申告	税務書類의作成 及び税務代理	税務代理만	税務相談	其他	合計	青色	白色
合計	19,651	250,457	194,099	86,889	5,224	8,060	5,401	550,130	443,425	106,705
1 東京	2,961	20,614	11,562	8,801	628	714	635	42,954	35,725	7,229
2 東京地方	1,761	18,115	13,137	6,007	240	479	202	38,180	32,776	5,404
3 関東信越	2,436	40,966	24,006	9,459	469	674	209	75,783	61,667	14,116
4 近畿	4,131	45,558	54,006	26,985	1,323	3,068	1,827	132,767	105,624	27,143
5 北海道	648	7,683	5,949	2,382	292	225	201	16,732	13,312	3,420
6 東北	1,223	14,944	13,011	5,875	156	378	274	34,638	24,510	10,128
7 名古屋	761	15,646	3,869	1,197	208	169	26	21,115	19,255	1,860
8 東海	1,305	31,424	10,805	2,991	167	297	103	45,787	41,295	4,492
9 北陸	437	9,918	9,551	3,080	170	184	133	23,036	18,153	4,883
10 中国	1,477	16,690	18,915	6,529	256	435	203	43,028	35,172	7,856
11 四国	559	4,981	7,258	4,677	395	302	933	18,546	11,245	7,301
12 九州北部	1,053	11,058	11,212	3,260	455	843	419	27,247	21,868	5,379
13 南九州	795	12,212	9,390	2,963	324	181	148	25,218	20,366	4,852
14 沖縄	104	648	1,428	2,683	141	111	88	5,099	2,457	2,642

<표 34> 法人의 關與 形態別 關與 件數 構成比

	回答税理士数	法人의 關与形態別 関与件数							申告種類別件数	
		申告・税務代理 記帳・決算	税務代理 決算・申告	税務代理 税務書類의作成	税務代理만	税務相談	其他	合計	青色	白色
合計	19,616	534,829	187,366	39,150	7,426	16,524	4,455	789,750	776,920	12,830
1 東京	3,154	75,865	20,738	5,919	1,449	3,164	685	107,820	106,297	1,523
2 東京地方	1,800	55,110	12,118	1,986	346	805	203	70,568	69,829	739
3 関東信越	2,340	85,310	21,530	2,977	538	1,357	302	112,014	109,876	2,138
4 近畿	4,117	81,372	37,871	9,770	2,158	6,313	1,608	139,092	136,710	2,382
5 北海道	676	20,062	10,110	2,660	589	451	213	34,085	33,261	824
6 東北	1,207	37,213	12,816	2,698	326	588	133	53,774	52,669	1,105
7 名古屋	780	22,201	5,665	1,078	256	698	102	30,000	29,684	316
8 東海	1,262	40,758	11,109	1,313	282	821	238	54,521	53,953	568
9 北陸	410	13,390	5,353	958	143	177	59	20,080	19,811	269
10 中国	1,441	40,869	18,023	3,488	490	698	216	63,784	62,905	879
11 四国	565	18,387	7,070	1,952	247	381	267	28,304	27,334	970
12 九州北部	1,006	18,576	13,302	1,865	300	737	309	35,089	34,586	503
13 南九州	758	24,124	9,984	1,650	214	295	94	36,361	35,943	418
14 沖縄	100	1,592	1,677	836	88	39	26	4,258	4,062	196

II. 個人·法人의 規模別 關與 件數

個人事業者의 관여 건수(합계 457,547건)를 所得 계급별로 보면 事業所得 금액 200万円 미만이 28.3%, 300万円 미만이 20.2%, 500万円 미만이 25.0%, 1,000万円 미만이 17.7%, 3,000万円 미만이 6.7%, 3,000万円 이상이 2.1%의 비율이다.

法人의 관여 건수(합계 728,738건)를 규모별로 보면 資本金·出資金 300万円 미만이 28.5%, 1,000万円 미만 43.6%, 3,000万円 미만 19.5%, 5,000万円 미만이 4.0%, 5,000万円 이상 4.4%이다.

관여 건수를 法人의 종류별로 보면 株式會社와 有限會社가 전체의 95.6%를 점하고, 평균 관여 건수도 株式會社 19.7건, 有限會社가 21.1건이다.

稅理士가 관여하고 있는 株式會社중 93.3%가 資本金 5,000万円 미만의 회사이고 그 대부분에 대하여 決算書類를 작성하여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記帳代行에 대하여는 資本金 1,000万円 미만의 회사중 86.1%가 記帳代行을 하고 있으나 資本金 상승에 따라 記帳代行의 비율은 낮아진다.

<표 35> 個人事業者에 대한 關與 件數

	回答税理士数	個人（事業所得者만）의 規模別 関与件数								
		200万円未満	300万円未満	500万円未満	1,000万円未満	3,000万円未満	5,000万円未満	1億円未満	1億円以上	合計
合　計	17,990	129,484	92,610	114,273	80,716	30,642	6,603	2,434	785	457,547
1 東　京	2,692	8,031	6,098	8,085	6,835	3,703	868	371	118	34,109
2 東京地方	1,634	8,000	6,700	8,301	5,769	2,454	550	214	237	32,225
3 関東信越	2,216	19,291	13,506	16,121	10,300	3,681	689	191	58	63,837
4 近　畿	3,710	25,402	21,027	29,679	22,144	6,791	1,522	464	137	107,166
5 北海道	607	4,400	2,818	2,971	2,213	1,073	276	122	38	13,911
6 東　北	1,146	9,106	5,816	7,171	5,221	2,136	467	191	32	30,140
7 名古屋	703	5,767	4,153	4,403	3,110	989	287	153	47	18,909
8 東　海	1,184	10,885	7,528	10,152	6,917	2,410	397	141	36	38,466
9 北　陸	403	5,905	3,937	4,955	3,006	1,140	154	77	14	19,188
10 中　国	1,379	11,575	7,448	8,826	5,735	2,332	473	169	23	36,581
11 四　国	522	4,435	3,115	3,397	2,114	768	182	69	9	14,089
12 九州北部	964	7,299	4,626	4,713	3,862	1,821	421	157	15	22,914
13 南九州	735	7,583	4,874	4,819	2,827	1,165	280	102	17	21,667
14 沖　縄	95	1,805	964	680	663	179	37	13	4	4,345

<표 36> 法人에 대한 關與 件數

	回答税理士数	法人의 規模別 関与件数（資本金·出資金別）									
		300万円未満	1,000万円未満	3,000万円未満	5,000万円未満	1億円未満	3億円未満	5億円未満	5億円以上	無法人出資	合計
合　計	18,787	207,585	318,402	142,063	29,306	13,725	6,424	2,320	3,837	5,076	728,738
1 東　京	3,013	31,134	38,175	18,505	4,333	2,315	1,315	690	1,150	717	98,334
2 東京地方	1,728	22,747	29,970	9,328	2,037	794	348	120	169	362	65,875
3 関東信越	2,254	32,818	47,728	17,069	2,922	1,384	682	224	213	612	103,652
4 近　畿	3,856	27,199	49,708	32,350	7,097	3,300	1,453	512	1,087	1,121	123,827
5 北海道	644	8,268	13,603	5,967	1,279	557	293	78	149	123	30,317
6 東　北	1,170	13,792	23,336	9,851	1,806	1,042	409	109	171	318	50,834
7 名古屋	758	7,474	12,283	6,045	1,308	614	325	105	158	238	28,550
8 東　海	1,231	15,060	24,334	10,233	1,656	789	306	87	183	426	53,074
9 北　陸	401	3,793	8,284	4,313	850	336	131	34	57	103	17,901
10 中　国	1,397	17,208	27,493	10,971	2,247	942	391	100	171	417	59,940
11 四　国	537	7,513	11,828	4,336	835	360	168	66	114	152	25,372
12 九州北部	974	8,542	14,568	6,932	1,432	719	297	114	147	271	33,022
13 南九州	729	11,567	15,368	5,073	1,127	423	177	47	49	193	34,024
14 沖　縄	95	470	1,724	1,090	377	150	129	34	19	23	4,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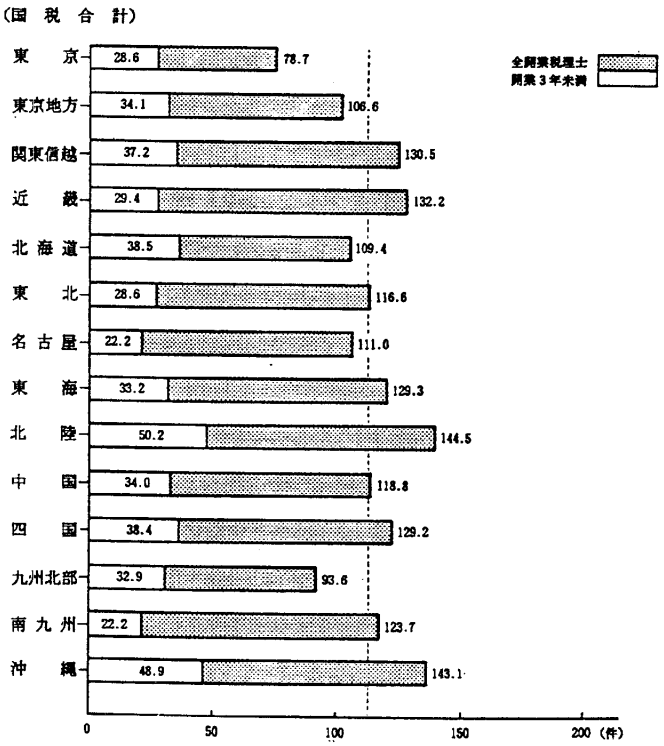
Ⅲ. 稅目別 關與 件數

國稅의 세목별 관여 건수는 所得稅 890,492건, 法人稅 623,183건, 消費稅 466,528건, 相續稅 23,409건, 贈與稅 45,542건, 地價稅 7,319건, 기타 15,537건 합계 2,072,010건이다. 稅務書類의 작성과 代理 건수를 보면 1 稅理士당 115.9건(回答稅理士 17,023명, 關與 件數 1,972,172건)이 되는데, 이는 前回調査時 79.6건(回答稅理士數 15,547명, 關與 件數 1,236,785건)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이나 消費稅 신설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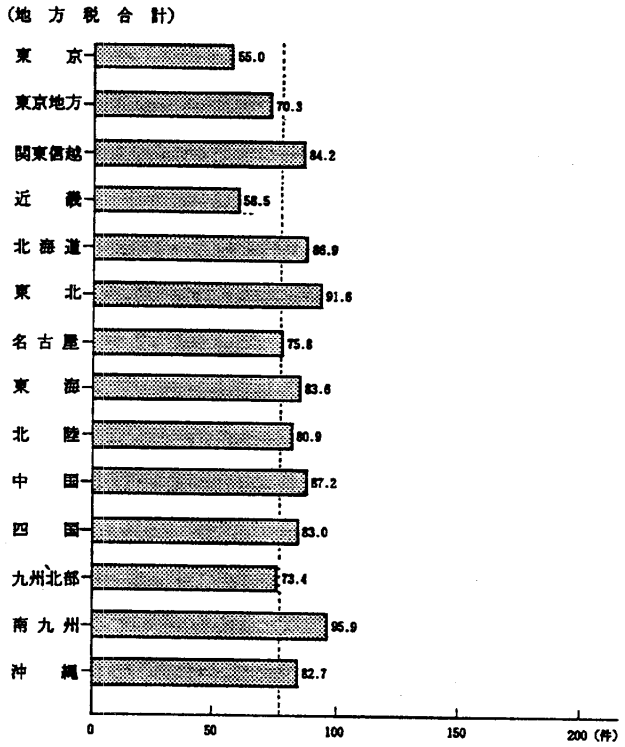
또 法 제3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계산사항등을 기재한 書面 첨부제도의 활용 상황을 보면 稅務書類作成·代理 건수 1,972,172건, 그중 당해 書面을 첨부한 건수가 97,705건으로 전체의 5.0%(前回 6.4%)가 된다.

地方稅 관계의 세목별 관여 건수는 事業稅, 411,038건, 住民稅 353,100건, 固定資産稅 86,570건, 事業所稅 10,305건, 特別地方消費稅 4,467건 기타 8,541건 합계 874,021건, 稅務書類作成·代理 건수 1 稅理士당 73.8건(前回 74.8건)이다.

<표 37> 稅理士會別 平均 關與 件數(國稅)



<표 38> 稅理士會別 平均 關與 件數(地方稅)



<표 39> 稅目別 平均 關與 件數(國稅)

	稅務書類作成·稅務代理			稅務相談·其他		
	回答 稅理士數	關與件數	平均件數	回答 稅理士數	關與件數	平均件數
所得稅	16,095	857,302	53.3	3,443	33,190	9.6
法人稅	15,443	584,574	37.9	3,753	38,609	10.3
消費稅	13,068	451,419	34.5	1,276	15,109	11.8
相續稅	6,731	18,305	2.7	1,624	5,104	3.1
贈與稅	6,056	41,317	6.8	1,061	4,225	4.0
地價稅	2,663	6,152	2.3	476	1,167	2.5
其他	621	13,103	21.1	488	2,434	5.0
合計	17,023	1,972,172	115.9	6,272	99,838	15.9

<표 40> 稅目別 平均 關與 件數(地方稅)

	稅務書類作成·稅務代理			稅務相談·其他		
	回答稅理士數	關與件數	平均件數	回答稅理士數	關與件數	平均件數
事業稅	10,408	403,004	38.7	640	8,034	12.6
住民稅	9,023	346,158	38.4	587	6,942	11.8
固定資産稅	3,258	84,410	25.9	345	2,160	6.3
事業所稅	2,332	9,798	4.2	185	507	2.7
特別地方消費稅	1,194	4,107	3.4	132	360	2.7
其他	589	7,889	13.4	149	652	4.4
合計	11,593	855,366	73.8	1,075	18,655	17.4

Ⅳ. 報酬別 關與 件數(顧問契約이 있는 경우)

月額 顧問報酬를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1万円 미만이 23.4%, 1万円 이상 2万円 미만이 34.7%, 2万円 이상 3万円 미만이 24.0% 순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2万円 이상 3万円 미만이 26.1%, 3万円 이상 4万円 미만이 25.6%, 4万円 이상 5万円 미만이 14.4% 순으로 月額 顧問報酬額의 평균은 개인 20,400円, 법인 38,100円 정도이다.

年額 決算報酬額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5万円 미만 37.8%, 5万円 이상 10万円 미만이 35.9%, 10万円 이상 20万円 미만이 19.0%로서 20万円 미만이 92.7%를 점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5万円 이상 10万円 미만이 17.3%, 10万円 이상 20万円 미만 40.0%, 20万円 이상 30万円 미만이 20.9%로서 年額 決算報酬額 평균은 개인 89,600円, 법인이 212,200円 정도이다.

<표 41> 月額 顧問報酬別 關與 件數

	個人		法人	
	關與件數	構成比	關與件數	構成比
1万円未滿	55,350	23.4	16,733	3.0
2万円未滿	81,816	34.7	70,002	12.6
3万円未滿	56,733	24.0	145,964	26.1
4万円未滿	24,089	10.2	142,843	25.6
5万円未滿	9,580	4.1	79,971	14.4
7万円未滿	5,919	2.5	62,732	11.3
10万円未滿	1,637	0.7	22,576	4.1
15万円未滿	665	0.3	11,343	2.0
15万円以上	276	0.1	4,989	0.9
合計	236,065	100.0	557,153	100.0

<표 42> 年額 決算報酬別 關與 件數

	個人		法人	
	關與件數	構成比	關與件數	構成比
5万円未滿	129,991	37.8	26,415	4.9
10万円未滿	123,897	35.9	94,199	17.3
20万円未滿	65,529	19.0	217,238	40.0
30万円未滿	15,679	4.5	113,658	20.9
40万円未滿	5,177	1.5	43,837	8.1
50万円未滿	2,449	0.7	22,543	4.2
100万円未滿	1,647	0.5	20,033	3.7
150万円未滿	199	0.1	3,023	0.6
150万円以上	125	0.0	1,386	0.3
合計	344,693	100.0	542,332	100.0

V. 稅理士事務所의 收入金額

稅理士事務所의 平均 收入金額은 약 3,000万円인데, 이를 계급별로 보면 1,000万円 미만이 35.4%, 1,000万円 이상 3,000万円 미만이 27.9%, 3,000万円 이상이 30.9%의 비율이다. 이를 開業年數別로 보면 10년 미만은 1,000万円 미

만이 55.3%이고 10년 이상은 3,000万円 이상이 43.5%를 점하고 있어 일본의 納稅義務者가 稅理士로서의 경험과 신용이 축적된 事務所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稅理士事務所의 收入金額과 컴퓨터 이용 관계를 보면 컴퓨터 이용의 경우 평균 收入金額 3,000万円 이상 稅理士事務所가 42.4%를 점하고 비이용의 경우는5.4%에 지나지 않는다.

<표 43> 稅理士會別 稅理士事務所의 平均 收入金額[5)]

(万円)

平均	東京	東京地方	關東信越	近畿	北海道	東北	名古屋	東海	北陸	中國	四國	九州北部	南九州	沖繩
3,008	3,190	3,113	3,355	2,841	2,907	2,846	3,170	3,354	3,211	2,737	2,589	2,544	2,810	3,019

<표 44> 開業 年數別 收入金額

	開業10年未滿		開業10年以上		合 計	
500万円未滿	(37.9)	3,373	(13.3)	1,818	(23.1)	5,191
500万円以上	(17.4)	1,554	(9.0)	1,228	(12.3)	2,782
1,000万円以上	(17.9)	1,591	(15.5)	2,113	(16.4)	3,704
2,000万円以上	(9.2)	821	(13.0)	1,777	(11.5)	2,598
3,000万円以上	(4.9)	434	(11.1)	1,506	(8.6)	1,940
4,000万円以上	(2.3)	202	(7.4)	1,013	(5.4)	1,215
5,000万円以上	(2.4)	211	(9.9)	1,344	(6.9)	1,555
7,000万円以上	(1.3)	119	(7.8)	1,065	(5.3)	1,184
1億円以上	(0.8)	69	(6.0)	811	(3.9)	880
2億円以上	(0.0)	3	(1.3)	175	(0.8)	178
無 記 入	(5.9)	529	(5.7)	774	(5.8)	1,303
合 計	(100.0)	8,906	(100.0)	13,624	(100.0)	22,530

5) 地方別 稅理士事務所의 平均 收入金額이 平準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總所得 金額(土地의 讓渡所得金額 등 臨時的 所得 除外)

이 항목은 勤務稅理士를 포함한 全稅理士를 대상으로 하였고 유효 回答率이 25,729명으로 回答率 93.6%였다. 總所得 金額 300万円 미만이 17.5%, 300万円 이상 500万円 미만이 15.8%, 500万円 이상 700万円 미만이 15.3%, 700万円 이상 1,000万円 미만이 16.3%, 1,000万円 이상 1,500万円 미만이 13.5% 합계 78.4%(前回 86.5%)를 점하고 있다.

稅理士의 平均 總所得 金額은 958万円 정도인데, 開業稅理士 평균이 1,003万円 정도, 勤務稅理士 758万円 정도이다.

<표 45> 總所得 金額別 稅理士數(構成比)

	回 答 數	全稅理士 (構成比)	開業稅理士 (構成比)	勤務稅理士 (構成比)
300万円未滿	4,740	17.5	18.8	10.6
300万円以上	4,351	15.8	14.5	21.7
500万円以上	4,216	15.3	13.3	24.5
700万円以上	4,486	16.3	15.5	20.1
1,000万円以上	3,725	13.5	14.0	11.4
1,500万円以上	1,852	6.7	7.4	3.7
2,000万円以上	1,489	5.4	6.1	2.2
3,000万円以上	673	2.4	2.9	0.6
5,000万円以上	172	0.6	0.7	0.1
1億円以上	25	0.1	0.1	0.0
無 記 入	1,762	6.4	6.7	5.1
合 計	27,491	100.0	100.0	100.0

<표 46> 稅理士會別 平均 總所得 金額

(万円)

	平均	東京	東京地方	關東信越	近畿	北海道	東北	名古屋	東海	北陸	中國	四國	九州北部	南九州	沖繩
全稅理士	958	1,084	1,032	1,015	906	897	857	1,023	1,073	921	853	826	833	826	766
開業稅理士	1,003	1,074	1,074	1,060	940	932	888	1,121	1,131	965	887	841	841	860	785
勤務稅理士	758	784	845	759	767	737	695	684	801	754	702	792	792	615	621

Ⅶ. 總所得 金額의 收入內譯(土地 讓渡所得등 臨時所得 除外)

總所得 金額의 收入內譯을 보면 「稅理士業務 收入(會計業務 포함)」이 62.3%, 「기타 資格業務 收入」 1.6%, 「給與 收入」 19.7%, 「기타 收入」 16.4%의 비율로 되어 있다.

開業 年數 3년 미만의 경우 「稅理士業務 收入」이 52.9%, 「기타 資格 收入」이 1.8%, 「給與 收入」이 20.0%, 「기타 收入」이 19.0%이고, 勤務稅理士의 경우 「稅理士業務 收入」 19.3%로서 장래 독립을 목표로 정진할 부분이다.

<표 47> 總所得 金額의 收入 內譯

	稅理士數	總所得金額의 收入內譯(合計)				
		回答 稅理士數	稅理士 業務 收入	其他資格 業務收入	給與收入	其他收入
合 計	27,491	25,483	62.3	1.6	19.7	16.4
東 京	4,427	4,067	64.3	2.0	24.4	9.3
東京地方	2,474	2,308	66.4	1.6	18.0	14.0
關東信越	3,192	2,986	63.2	1.5	17.5	17.8
近 畿	5,883	5,395	62.0	1.8	20.9	15.3
北海道	958	878	60.1	1.5	17.7	20.7
東 北	1,654	1,547	58.3	1.2	18.1	22.4
名古屋	1,137	1,082	62.2	1.3	23.8	12.7
東 海	1,746	1,661	65.4	1.1	19.1	14.4
北 陸	616	576	55.8	1.9	19.4	22.9
中 國	2,034	1,866	57.9	1.7	19.3	21.1
四 國	807	743	59.4	1.5	17.2	21.9
九州北部	1,429	1,324	61.3	1.2	14.6	22.9
南九州	1,002	936	62.5	1.1	15.6	20.8
沖 繩	132	114	64.0	3.4	15.5	17.1

Ⅷ. 稅務調査

1993년중 稅務調査의 立會를 한 稅理士數는 16,442명, 立會 件數 합계가 94,254건으로 1 稅理士당 5.7건(前回 8.1건)이다. 立會 件數를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25,351건 법인 68,493건이고, 개인·법인 모두 90% 정도가 事前通知 後 실시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 顚末을 보면 「申告是認」 22.3%, 「修正申告」 72.5%, 更正處分 0.9%이다.

<표 48> 稅務調査의 顚末

	件 數	構 成 比
申告是認	21,021	22.3
修正申告	68,363	72.5
更正處分	851	0.9
無 記 入	4,019	4.3
合 計	94,254	100.0

<표 49> 個人·法人別 調査 件數

	開業税理士数	税務調査			個人・法人別件数											
					個人						法人					
								事前通知받은件数						事前通知받은件数		
		回答税理士数	調査立会件数	平均立会件数	回税理士答数	立会件数	平立会件均数	回税理士答数	立会件数	平立会件均数	回税理士答数	立会件数	平立会件均数	回税理士答数	立会件数	平立会件均数
合計	22,530	16,442	94,254	5.7	10,457	25,351	2.4	9,515	22,290	2.3	14,437	68,493	4.7	13,571	61,604	4.5
1 東京	3,513	2,654	13,301	5.0	1,271	2,286	1.8	1,137	1,992	1.8	2,445	10,827	4.4	2,288	9,762	4.3
2 東京地方	2,016	1,430	7,142	5.0	812	1,623	2.0	731	1,422	1.9	1,262	5,437	4.3	1,197	4,927	4.1
3 関東信越	2,721	1,949	10,058	5.2	1,226	2,470	2.0	1,132	2,183	1.9	1,683	7,585	4.5	1,568	6,705	4.3
4 近畿	4,738	3,516	23,769	6.8	2,594	8,058	3.1	2,365	7,126	3.0	3,057	15,587	5.1	2,860	13,921	4.9
5 北海道	790	570	3,508	6.2	358	830	2.3	336	774	2.3	506	2,693	5.3	470	2,514	5.3
6 東北	1,387	995	5,299	5.3	612	1,279	2.1	579	1,175	2.0	863	4,053	4.7	820	3,671	4.5
7 名古屋	886	662	4,007	6.1	431	1,072	2.5	396	952	2.4	593	2,928	4.9	564	2,628	4.7
8 東海	1,438	1,109	6,557	5.9	768	1,960	2.6	706	1,702	2.4	959	4,595	4.8	904	4,071	4.5
9 北陸	492	382	2,204	5.8	286	863	3.0	266	789	3.0	299	1,354	4.5	286	1,236	4.3
10 中国	1,660	1,201	7,572	6.3	841	2,105	2.5	746	1,737	2.3	1,063	5,482	5.2	1,005	4,957	4.9
11 四国	673	484	3,309	6.8	308	758	2.5	287	707	2.5	436	2,552	5.9	426	2,475	5.8
12 九州北部	1,229	792	3,482	4.4	503	1,069	2.1	441	895	2.0	657	2,317	3.5	603	2,055	3.4
13 南九州	871	621	3,615	5.8	404	887	2.2	353	756	2.1	543	2,743	5.1	511	2,362	4.6
14 沖縄	116	77	431	5.6	43	91	2.1	40	80	2.0	71	340	4.8	69	320	4.6

※ 위의 표에서 ① 平均 立會 件數 ② 個人 平均 立會 件數 ③ 法人 平均 立會 件數 등을 비교해 보면 각 稅理士會別 平均 件數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 각 地方 國稅局 租稅行政의 일관성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Ⅸ. 不服申請

1993년중 國稅에 관한 不服申請 代理를 한 稅理士數는 전체(22,530명)의 1.4%에 해당하는 309명으로 不服申請의 내용을 보면 異議申請 293건, 審査請求 212건 합계 505건이다. 또 93년중 審決이 완료된 건수는 294건이고 그중 142건(48.3%)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되었다.

<표 50> 異議申請에 대한 處理 狀況

	異議申請	處理件數	未處理件數	全部 또는 一部 取消	原處分 維持
件數	293	212	81	(100)	(112)
構成比	100.0	72.1	27.9	(34.0)	(38.1)

<표 51> 審査請求에 대한 處理 狀況

	審査請求	處理件數	未處理件數	全部 또는 一部 取消	原處分 維持
件數	212	82	130	(42)	(40)
構成比	100.0	38.7	61.3	(19.8)	(18.9)

<표 52> 稅理士會別 處理 件數

	不服申請				異議申請 處理件數			審査請求 處理件數		
	回答稅理士數	國稅不服代理件數	審級別		處理件數	全部또는一部取消件數	未處理件數	處理件數	全部또는一部取消件數	未處理件數
			異議申請件數	審査請求件數						
合計	309	505	293	212	212	100	81	82	42	130
東京	62	91	55	36	39	14	16	17	10	19
東京地方	17	25	13	12	10	6	3	4	1	8
關東信越	29	46	30	16	22	16	8	6	2	10
近畿	72	118	72	46	55	23	17	18	11	28
北海道	5	7	3	4	2	2	1	1	1	3
東北	16	21	10	11	7	5	3	7	4	4
名古屋	11	16	8	8	7	3	1	3	2	5
東海	6	9	5	4	3	1	2	1		3
北陸	6	12	6	6	5	2	1	4		2
中國	46	78	44	34	34	18	10	15	11	19
四國	6	9	6	3	6	1		1		2
九州北部	13	23	16	7	11	5	5	2		5
南九州	11	17	8	9	7	3	1	3		6
沖繩	9	33	17	16	4	1	13			16

X. 稅務訴訟

稅理士가 委囑을 받은 사건으로 行政訴訟에 까지 이르렀다고 回答한 稅理士數는 41명으로 전체(22,530명)의 0.2%였다. 또 訴訟을 제기한 건수는 48건으로서 그중 관여 稅理士가 民事訴訟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輔佐人의 허가를 받아 수행한 경우는 7건(14.6%)이다.

<표 53> 稅務訴訟

	回答稅理士數	稅務訴訟件數	民訴法 88條의 補佐人이 된 件數
合計	41	48	7
東京	10	12	1
東京地方	2	2	
關東信越	2	2	
近畿	13	16	1
北海道			
東北	2	2	
名古屋	1	1	1
東海	2	3	3
北陸	1	1	
中國	3	3	
四國	2	2	
九州北部			
南九州	2	2	1
沖繩	1	2	

第 9 章 結 論

日本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된 공정한 입장에서 申告納稅制度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여 租稅法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

그 業務로서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첫째, 稅務代理(대행포함) 둘째, 稅務書類의 作成 셋째, 稅務相談을 主業務로 하고, 이러한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1] 財務書類의 작성이나 會計帳簿의 기장대행 기타 財務에 관한 사무를 넷째 업무로 하고 있다.

申告納稅制度下에서 이러한 업무는 납세자의 법률상 「租稅債務의 확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稅法의 해석에서부터 세무계산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會計」를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그 전체로서는 「法律業務」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成田 敎授의 사회 써어비스업 분류중 「節次에 관한 사항을 주로하는 業務」나 「處理에 관한 사항을 행하는 業務」가 아니라 「判斷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業務」로서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業務이기 때문에 당연히 「業務獨占權」이 주어져야 할 분야이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동일한 法律業務를 다루는 辯護士가 「사회 전체의 正義의 實現」에 중점을 두는데 대하여 稅理士는 「租稅 正義의 實現」에 중점을 두며, 辯護士가 「국민의 基本的 人權을 擁護」하는데 대하여 稅理士는 稅法의 영역내에서 「국민의 財産權 保護」에 주력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使命과 業務를 담당하도록 예정되어 탄생된 日本稅理士制度는 松澤 智 敎授의 표현과 같이 전쟁준비기의 사회혼란에 맞춰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여 사회로부터 「認知」, 세무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被)「支配」, 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脫出」, 완전한 「獨立」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일본 국내

1) 稅理士法 제2조 제2항.

는 물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專門職業중의 하나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한 발전과정중의 개인적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稅理士會로 결집된 단체력을 발휘하여 「法과 制度의 개선을 위한 勞力」(第2章 참조)과 자체의 조직과 기구를 확장해가면서 「稅理士業務의 排他的 獨占權 確保 및 職域 확대를 위한 勞力」(第3, 4, 5, 6章 참조)에 대하여는 새삼 畏敬의 念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의 발자취는 韓國稅務士會의 발전과정에도 좋은 事例를 제공함은 물론 많은 敎訓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992년 日本稅理士業界는 制度 實施 半世紀를 맞아 「創立 第50周年 記念」의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고, 이로써 회원 각자는 稅理士로서 수행하여야 할 使命과 役割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높이므로써 稅理士業界를 일층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日本稅理士業界의 남은 과제는 첫째, 1980년 개정 이래 15년을 경과하는 동안 사회 경제사상의 변화 및 회원수의 증가로 인한 稅理士法 改正問題,[2] 둘째, 中小會社의 計算 適正과 便宜를 위하여 「會計調査人」으로서 稅理士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商法改正問題,[3] 셋째, 稅務業務의 연장으로 稅理士가 稅務訴訟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訴訟代理權 獲得問題, 넷째, 오랜동안 숙원이었던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自體會館 取得問題 등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日本稅理士業界가 이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底力을 축적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까운 시일내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 硏究가 완성되기 까지 1994년 5월 필자가 渡日時 친절한 안내와 參考資料제공은 물론 歸國後에도 관계 參考圖書를 3회에 걸쳐 보내준 日本稅理士會

2) 稅理士法人 制度 및 稅理士의 有資格者의 登錄前 硏修制度의 導入등의 改正 方向.
3) 1994년 6월 7일 衆議院 法務委員會에서 政府委員의 유리한 답변을 근거로 현재 日本公認會計士協會와 國會議員, 관계 省, 廳 등과의 의견조정 등 구체화에 노력중이다--平田公敏 日稅連 회장의 1995년 年頭所感중.

連合會의 任職員과 東京稅理士會를 비롯한 여러 稅理士會 任職員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附錄]

稅理士法 (1989년 法律 제110호)

稅理士法施行令

稅理士法施行規則

日本稅理士會連合會會則 (1994年 4月 21日 現在)

稅理士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關한 基準(1992年 3月 26日 改正)

會計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關한 基準(1987年 3月 25日 改正)

稅 理 士 法 (1989年 法律 제110호)

第 1 章 總則

제1조(稅理士의 使命)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된 공정한 입장에서 申告 納稅制度의 理念에 따라 納稅義務者의 신뢰에 부응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에 규정된 納稅義務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

제2조(稅理士의業務) ① 稅理士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租稅(印紙稅, 登錄免許稅, 法定外 普通稅(地方稅法 제8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市町村 法定外 普通稅 및 同法 제13조의 3 제4항에 규정하는 道府縣 法定外 普通稅를 말한다) 기타 政令에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事務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1. 稅務代理

稅務官公署(稅務官署를 제외하고 國稅不服審判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租稅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不服審査法(1962년 法律 제160호)의 규정에 따른 申告, 申請, 請求 또는 不服請求(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에 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酒稅法 제2장의 규정에 관계되는 申告, 申請 및 不服請求를 제외한다. 이하 「申告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또는 당해 申告 등 또는 稅務官公署의 調査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稅務官公署를 상대로 하는 주장 또는 陳述에 대하여 代理 또는 代行하는 것(다음 호의 稅務書類의 작성에 그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稅務書類의 作成

稅務官公署에 대한 申告 등에 관계되는 申告書, 申請書, 請求書, 不服請求書 기타 租稅에 관한 政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또한 稅務官公署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大藏省令으로 정한 것(이하 「申告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稅務相談

稅務官公署에 대한 申告 등 제1호에 규정하는 주장 또는 陳述 또는 申告書 등의 작성에 관하여 租稅의 課稅標準등(國稅通則法 제2조 제6호 イ부터ヘ까지에 게기한 사항 및 地方稅에 관계되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稅理士는 前項에 규정하는 업무(이하 「稅理士業務」라 한다) 외에 稅理士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 財務書類의 作成, 會計帳簿의 記帳의 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事務를 업무로 할 수 있다. 단 다른 法律에서 그 事務를 업무로 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조(稅理士의 資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理士가 될 자격을 갖는다. 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者에 대해서는 租稅에 관한 事務 또는 會計에 관한 事務로서 政令에 정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하여 2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

1. 稅理士 試驗에 合格한 者.

2. 제6조에 정한 試驗科目 전부에 대하여,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 試驗이 免除된 者.

3. 辯護士(辯護士가 되는 자격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4. 公認會計士(公認會計士가 되는 자격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② 公認會計士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者는 이 法律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公認會計士로 간주한다.

제4조(缺格條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前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稅理士가 될 자격이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및 準禁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法令 또는 本 法律과 舊 稅務代理士法(1942년 法律 제46호)의 규정에 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을 받은 者로서 그 형의 執行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法令 또는 本 法律과 舊 稅務代理士法 규정에 의하여 罰金刑을 받은 者 또는 國稅犯罰則取締法(1900년 法律 제67호)(地方稅法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關稅法(1955년 法律 제61호) 噸稅法(1958년 法律 제37호) 및 特別噸稅法(1958년 法律 제38호)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通告處分(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에 관계되는 通告處分을 제외한다)을 받은 者로서 각각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 또는 通告의 취지를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法令 또는 本 法律 및 舊 稅務代理士法 이외의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을 받은 者로서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7. 懲戒處分에 의하여 稅理士業務의 수행이 금지된 者로서 당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8. 國家公務員法(1947년 法律 제120호), 國會職員法(1947년 法律 제85호) 또는 地方公務員法(1950년 法律 제261호)의 규정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9. 辯護士法(1949년 法律 제205호) 또는 外國辯護士法에 의하여 法律事務취급에 관한 特別措置法(1987년 法律 제66호), 公認會計士法, 辨理士法(1922년 法律 제100호), 司法書士法(1950년 法律 제197호), 行政書士法(1951년 法律 제4호), 社會保險勞務士法(1968년 法律 제89호) 또는 不動産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1963년 法律 제15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辯護士會로부터 除名,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士補의 登錄의 抹消, 辯護士, 司法書士 또는 行政

書士 등 업무의 禁止, 社會保險勞務士의 失格處分 또는 不動産鑑定士 또는 不動産鑑定士補의 登錄取消 처분을 받은 者로서 그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이들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다시 계속하게 된 者를 제외한다).

10. 稅理士의 登錄이 拒否된 者 중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者 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의 登錄이 취소된 者로서 이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 2 章 稅理士業務

제5조(受驗資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理士試驗에 응시할 수 있다.

1. 會計士補(會計士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者를 포함한다).

2. 稅務官公署에서의 事務 또는 기타 官公署에서 國稅(關稅, 噸稅 및 特別噸稅를 제외한다. 제24조, 제36조, 제41조의 3 및 제46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地方稅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3년 이상인 者.

3. 行政機關에서 政令에 정한 會計檢査, 金融檢査 또는 會社 기타 團體의 經理에 관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5년 이상인 者.

4. 銀行, 信託會社, 保險會社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業務를 영위하는 法人에 있어서 政令에 규정한 貸出 기타 資金의 運用(貸出先의 經理에 대한 審査를 포함한다)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5년 이상인 者.

5. 法人(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特別會計를 포함한다) 또는 事業을 영위하는 個人의 會計에 관한 事務로서 政令에 규정한 업무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5년 이상인 者.

6. 稅理士, 稅務代理士, 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또는 監査法人 業務의 補助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5년이상인 者.

7. 辨理士의 업무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5년 이상인 者.

8. 司法書士 또는 行政書士의 업무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10년 이상인 者.

9. 學校敎育法(1947년 法律 제26호), 舊 大學令(1918년 勅令 제388호), 舊 高等學校令(1932년 勅令 제389호) 또는 舊 專門學校令(1903년 勅令 제61호)의 규정에 의한 大學, 高等專門學校, 大學豫科, 高等學校 高等科 또는 專門學校 또는 政令으로 정한 이들 學校와 동등 이상의 學校를 卒業 또는 修了한 者로서 이들 學校에서 法律學 또는 經濟學을 修業한 者.

10. 司法試驗 제2차시험 또는 高等試驗 本試驗에 合格한 者.

11. 稅理士審査會가 法律學 또는 經濟學에 관하여 前 2號에 게기한 者와 동등 이상의 學歷을 가졌다고 인정한 者.

② 前項 제2호에서 8호까지 규정하는 事務 또는 업무에 2 이상 從事한 者는 각기 당해 事務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기 각호에 규정하는 년수를 10년으로 한 비율에 의해 년수를 환산하며 이들 事務 또는 업무의 2 이상에 從事한 기간을 通算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때는 稅理士試驗에 응시할 수 있다.

③ 前 2項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부터 8호까지 규정한 事務 또는 업무에 유사한 事務 또는 업무로서 稅理士審査會의 인정을 받은 事務 또는 업무는 각각 同項 제2호로부터 8호까지에 규정한 事務 또는 업무로 간주한다.

④ 제1항 제11호 및 前項에 규정한 稅理士審査會의 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大藏省令으로 정한다.

제6조(試驗의 目的 및 試驗科目) 稅理士試驗은 稅理士가 되는데 필요한 學識 및 應用能力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에 정한 科目에 대하여 행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科目(가부터 마까지 게기하는 科目에 있어서는 國稅通則法 기타 法律에 정한 당해 科目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稅法에 속하는 科目」이라 한다)중 受驗者가 선택하는 3科目, 단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科目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가. 所得稅法

나. 法人稅法

다. 相續稅法

라. 消費稅法 또는 酒稅法 중 1科目

마. 國稅徵收法

바. 地方稅法 중 道府縣民稅(道民稅를 포함한다) 및 市町村民稅(特別郡民稅를 포함한다)에 관한 구분 또는 地方稅法중 事業稅에 관한 부분 중 1科目.

사. 地方稅法 중 固定資産稅에 관한 부분.

2. 會計學 중 簿記論 및 財務諸表論의 2科目(이하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이라 한다).

제7조(試驗科目의 一部 免除) ①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試驗科目 중 一部 科目에 대하여 政令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申請에 의하여 그 후에 행하는 稅理士試驗에서 해당과목의 試驗을 免除한다.

② 稅理士試驗의 試驗科目이였던 과목 중 試驗科目이 아니게 된 경우에 前項에 규정한 성적을 받은 者에 대하여 당해 科目은 前條 제1호에 게기한 試驗科目으로 간주한다.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科目의 試驗을 免除한다.

1. 大學 등에서 法律學 또는 財政學에 속하는 科目의 敎授, 助敎授 또는 講師의 職에 在職한 기간이 通算 3년 이상인 者 및 法律學 또는 財政學에 속하는 科目에 관한 연구로 學位를 수여받은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2. 大學 등에서 商學에 속하는 科目의 敎授, 助敎授 또는 講師의 職에 在職한 기간이 通算 3년 이상인 者 및 商學에 속하는 科目에 관한 연구로 學位를 수여받은 者에 대하여는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3. 會計士補(會計士補가 될 자격이 가진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會計學

에 속하는 科目.

4. 官公署에 있어서의 事務 중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贈與稅, 消費稅 또는 酒稅의 賦課 또는 이들 國稅에 관한 法律의 立案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10년 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國稅에 관한 것.

5. 官公署에 있어서 國稅에 관한 事務 중 前號에 규정하는 事務 이외의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15년 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國稅에 관한 것.

6. 官公署에 있어서의 事務 중 道府縣民稅(郡民稅를 포함한다), 市町村民稅(特別區民稅를 포함한다), 事業稅 또는 固定資産稅의 賦課 또는 이들 地方稅에 관한 法律의 立案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10년 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地方稅에 관한 것.

7. 官公署에 있어서의 地方稅에 관한 事務 중 前號에 규정하는 事務 이외의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15년 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地方稅에 관한 것.

8. 제6호에 규정하는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15년 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9. 제7호에 규정하는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20년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10. 다음에 게기하는 者로서 官公署에서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事務를 관리하거나 또는 감독하는 것을 職務로 하는 職 또는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나 經驗을 필요로 하는 事務를 처리하는 것을 職務로 하는 職으로서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職에 재직한 기간이 通算 5년 이상이 되는 者 중 稅理士審査會가 지정하는 研修(稅理士審査會가 稅理士試驗의 試驗科目 중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에 대하여 前條 각 1항에 규정하는 성적을 획득한 者가 가지고 있는 學識과 동등한 정도의 學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研修를 말한다)를 修了한 者에 대하여는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가.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23년 이상이 되는 者.

나. 제7호에 규정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 28년 이상이 되는 者.

다. 가에 규정하는 기간을 通算한 년수의 23분의 28에 상당하는 년수와 나에 규정하는 기간을 通算한 년수를 합계한 년수가 28년 이상이 되는 者.

② 前項 제1호 또는 제4호로부터 9호까지에 규정하는 職 또는 事務 중 試驗의 免除科目이 동일한 職 또는 事務의 2 이상에 從事한 者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職 또는 事務에 대하여 이들 각호에 규정하는 년수를 10년으로 하는 비율에 의하여 년수를 환산하여 이들의 職 또는 事務의 2 이상에 從事한 기간을 通算한 경우에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당해 科目의 試驗을 免除한다.

이 경우 제1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규정하는 職 또는 事務에 從事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職 또는 事務에 從事한 기간을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國稅에 관한 것 또는 地方稅에 관한 것 중 어느 것을 免除하는 다른 事務에 從事한 기간에 通算할 수 있다.

제9조(受驗手數料) ① 稅理士試驗에 응시하려는 者는 實費를 감안하여 政令으로 정한 액의 受驗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納付한 受驗手數料는 稅理士試驗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제10조(合格의 取消 등) ① 稅理士審査會는 부정한 수단으로 稅理士試驗을 치르거나 또는 치르려고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의 결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② 稅理士審査會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하여 정상에 의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稅理士試驗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合格證書 등) ①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에게는 당해 試驗에 合格하였음을 증명하는 證書를 수여한다.

② 試驗科目 중 일부의 科目에 대하여 政令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者에게는 그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科目을 통지한다.

제12조(試驗의 執行) ① 稅理士試驗은 稅理士審査會가 실시한다.

② 稅理士試驗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3조(試驗의 細部事項) 이 法律에 정한 것 이외에 稅理士試驗(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포함한다)의 執行에 관한 細部事項은 大藏省令으로 정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1981년 法 제26호).

第 3 章 登錄

제18조(登錄) 稅理士가 될 자격이 있는 者가 稅理士가 되고자 할 때는 稅理士名簿에 姓名, 生年月日, 설치하려는 稅理士事務所의 名稱 또는 所在地 기타 大藏省令으로 정한 사항을 登錄하여야 한다.

제19조(稅理士名簿) ① 稅理士名簿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비치한다.

② 稅理士名簿의 登錄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행한다.

제20조(變更登錄) 稅理士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는 지체없이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제21조(登錄의 申請)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同條에 규정하는 사항 기타 大藏省令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登錄申請書를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한 登錄申請書에는 그 副本 3통을 첨부하고, 同項의 稅理士會가 당해 申請書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당해 副本 1통씩을 당해 申請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長 및 당해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町村(特別區 및 全部事務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都道府縣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제22조(登錄에 관한 決定)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申請者가 稅理士가 될 자격을 가졌고, 제24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者라고 인정하였을 때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하고, 당해 申請者가 稅理士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였거나 또는 同條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者라고 인정했을 때는 登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관련있는 者에 대하여 登錄을 하고자 할 때 또는 登錄을 拒否하고자 할 때는 제49조의 15에 규정하는 資格審査會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申請者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상당 기간 내에 本人 또는 그의 代理人을 통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名簿에 登錄하였을 때는 당해 申請者에게 稅理士證票를 交付하고 同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한 때는 그 이유를 附記한 서류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한 경우에는 당해 申請者가 稅理士가 될 자격 또는 제24조 각호에 규정하는 登錄拒否事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虛僞로 기재하여 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제출한 者일 때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류에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3조(國家와 日本稅理士會連合會間의 通知) ① 稅務署長과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長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제출한 者가 稅理士가 될 자격이 없거나 또는 다음 條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라고 인정될 때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申請書의 副本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國稅廳長官 및 당해 申請者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長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4조(登錄拒否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理士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懲戒處分에 의하여 辯護士, 外國法事務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辨理士, 司法書士, 行政書士 또는 社會保險勞務士의 업무가 정지된 者 또는 不動産鑑定業者의 업무에 관한 不動産鑑定評價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不動産鑑定士 또는 不動産鑑定士補로서 현재 그 處分을 받고 있는 者.

2. 報酬를 받는 公職(國會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議會의 議員職 및 非常勤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者.

3.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면하거나 면하려고 한 경우, 또는 면하게 하였거나 면하게 하려고 한 者로서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者로서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國稅 또는 地方稅 또는 會計에 관한 事務에 있어서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者로서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稅理士業務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者.

7.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稅理士의 직책에 비추어 稅理士로서의 適格性이 缺如된 者.

제24조의 2(登錄이 拒否된 경우 등의 審査請求) 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이 拒否된 者가 당해 처분에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國稅廳長官에 대하여 行政不服審査法의 정하는 바에 따라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申請書를 제출한 者는 당해 申請書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당해 申請에 대하여 아무런 처

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登錄이 拒否된 것으로 보고 國稅廳長官에 대하여 前項의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審査請求가 있었던 날에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登錄을 拒否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審査請求를 棄却하는 경우에 審査請求人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國稅廳長官은 裁決書에 그 취지를 附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審査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國稅廳長官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登錄의 取消)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의 登錄을 받은 者가 稅理士가 될 자격 또는 제24조 각호에 규정하는 登錄拒否事由에 관한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제출하여 그 申請에 따라 당해 登錄을 한 者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제49조의 15에 규정하는 資格審査會의 의결에 따라 당해 登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취소할 때에는 그 이유를 附記한 서류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처분을 받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前條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취소 당한 者에게 있어서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登錄의 抹消)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그 업무를 廢止하였을 때.

2. 死亡했을 때.

3. 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의 취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前號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제4조 제2호로부터 9호까지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稅理士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稅理士가 前項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는 본인과 그의 法定代理人 또는 그 相續人은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届出하여야 한다.

제27조(登錄 및 登錄抹消의 公告)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의 登錄을 한 때나 그 登錄을 抹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및 登錄을 抹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제28조(稅理士證票의 返還) ① 稅理士의 登錄이 抹消되었을 때에는 그 本人과 그의 法定代理人 또는 그의 相續人은 지체없이 稅理士證票를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반환하여야 한다. 稅理士가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項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稅理士가 稅理士業務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申請에 의하여 稅理士證票를 그 者에게 再交付하여야 한다.

제29조(登錄의 細部事項) 이 法律에 정한 것 이외에 登錄의 節次, 登錄의 抹消, 稅理士名簿, 稅理士證票 그 밖의 登錄에 관한 細部事項에 대하여는 大藏省令으로 정한다.

第 4 章 稅理士의 權利 및 義務

제30조(稅務代理權限의 明示)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權限이 있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稅務官署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特別委任을 요하는 事項)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特別委任을 받아야 한다.

1. 不服請求의 取下

2. 代理人의 選任

제32조(稅理士證票의 提示)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 稅務官公署의 職員과 面談할 때에는 稅理士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제33조(署名捺印의 義務) ① 稅理士가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 租稅에 관한 申告書 등을 작성하여 稅務官公署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申告書 등에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申告書등이 租稅의 課稅標準등에 관한 申告書 또는 租稅에 관한 法令의 규정에 의한 還給金의 還給請求에 관한 書類인 때에는 당해 申告書등에 本人(그 者가 法人 또는 法人이 아닌 사람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稅理士가 稅務書類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書類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稅理士가 前 2항의 규정에 의하여 署名하는 때는 稅理士임을 附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署名捺印의 유무는 당해 書類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⑤ 제1항 후단의 규정은 法人稅法 제151조 또는 地方稅法 제72조의 35의 규정(法人의 代表者등의 自署捺印)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33조의 2(計算事項, 審査事項등을 記載한 書類의 添附) ① 稅理士가 國稅通則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申告納稅方式 또는 地方稅法 제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1호에 게기하는 申告納付 또는 申告納入의 방법에 의하여 租稅의 課稅標準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申告書의 작성에 관한 계산, 정리, 상담에 의한 사항을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書類를 당해 申告書에 添附할 수 있다.

② 稅理士가 前項에 규정하는 租稅의 課稅標準등을 기재한 申告書로서 他人이 작성한 것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그것을 審査하는 경우에 당해 申告書가 당해 租稅에 관한 法令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그 審査한 사항 및 당해 申告書가 당해 法令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를 大藏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書類를 당해 申告書에 添附할 수 있다.

③ 稅理士가 前項의 書類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書類에 稅務士임을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34조(調査의 通知) 稅務官公署의 당해 職員은 租稅의 課稅標準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제출한 者에 대하여 당해 申告書에 관계되는 租稅에 관하여 사전에 그 者에게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고, 그 帳簿書類를 調査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租稅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書類를 제출한 稅理士가 있는 경우에는 아울러 당해 稅理士에 대하여 그 調査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제35조(意見의 聽取) ① 제3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書類가 添附되어 있는 申告書에 대하여 國稅通則法 또는 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書類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당해 更正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稅理士가 계산, 정리 또는 상담에 응하거나 審査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稅務署長(당해 更正이 國稅廳 또는 國稅局의 당해 職員의 調査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國稅廳長官 또는 國稅局長)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당해 稅理士에 대하여 당해 사실에 관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申告書 및 이에 添附된 書類의 調査에 의하여 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法令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와 그 계산에 오류가 있어 更正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國稅不服審判所의 담당 審判官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租稅에 대한 不服請求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調査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不服請求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書類를 제출한 稅理士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稅理士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前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무는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更正 또는 不服請求에 대한 決定 혹은 裁決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36조(脫稅相談등의 禁止) 稅理士는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免脫하거나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도록 指示, 相談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7조(信用失墜行爲의 禁止) 稅理士는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8조(秘密嚴守의 義務) 稅理士는 정당한 이유없이 稅理士業務에 관련하여 知得한 秘密을 타에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안된다. 稅理士를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39조(會則遵守의 義務) 稅理士는 所屬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제40조(事務所設置의 義務) ① 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事務所는 稅理士事務所라고 한다.

③ 稅理士는 稅理士事務所를 둘 이상 設置할 수 없다.

제41조(帳簿作成의 義務) ① 稅理士는 稅理士業務에 관하여 帳簿를 作成하고 委囑者別로, 件別로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作成 또는 稅務相談의 內容 및 그 顚末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帳簿는 閉鎖 후 5년간 保存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使用人등에 대한 監督義務) 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使用人, 기타 從事者를 고용한 때에는 稅理士業務의 적정한 수행에 결함이 없도록 그 사용인 기타 從事者를 監督하여야 한다.

제41조의 3(助言義務) 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委囑者가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免脫하고 있는 사실,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은 사실 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課稅標準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隱蔽하거나 假裝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助言하여야 한다.

제42조(業務의 制限)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從事했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이 稅理士가 된 때에는 移職후 1년간은 그 移職전 1년 이내에 근무하였던 職의 업무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稅理士業務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國稅廳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業務의 停止) 稅理士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辯護士, 司法書士, 外國法事務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辨理士, 司法書士, 行政書士 또는 社會保險勞務士의 업무를 정지당한 경우 또는 不動産鑑定業者의 業務에 관하여 不動産鑑定士 또는 不動産鑑定士補가 不動産의 鑑定評價業務 遂行을 금지 당한 경우에는 그 處分을 받고 있는 동안 稅理士業務를 遂行하여서는 안된다. 稅理士가 報酬있는 公職에 就任하고 그 職에 있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

第 5 章 稅理士의 責任

제44조(懲戒의 種類) 稅理士에 대한 懲戒處分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戒告.
2. 1년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
3. 稅理士業務의 禁止.

제45조(脫稅相談등을 한 경우의 懲戒) ① 大藏大臣은 稅理士가 故意로 진정한 사실에 관하여 稅務代理를 하거나 稅務書類의 作成을 한 경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違反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 또는

稅理士業務의 禁止處分을 할 수 있다.

② 大藏大臣은 稅理士가 상당한 主意를 태만히하여 前項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戒告 또는 1년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제46조(一般的인 懲戒) 大藏大臣은 前條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외에 稅理士가 제3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添附하는 書類에 虛僞記載를 하였을 때 또는 이 法律 혹은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法令의 규정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제44조에 규정하는 懲戒處分을 할 수 있다.

제47조(懲戒의 節次등) ①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稅理士에 대하여 地方稅에 관한 前 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大藏大臣에 대하여 당해 稅理士의 姓名 및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通知한다.

② 稅理士會는 그 會員에 대하여 前 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藏大臣에게 그 會員의 姓名 및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稅理士에 대하여 前 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藏大臣에 대하여 당해 稅理士의 姓名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通知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大藏大臣은 前 2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당해 稅理士에게 그 취지를 通知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또는 그의 代理人을 통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大藏大臣은 前 2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稅理士審査會에 諮問하여 그 議決에 따라야 한다.

⑥ 大藏大臣은 前 2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附記한 書類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稅理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48조(懲戒處分의 公告) 大藏大臣은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5 章의 2 稅理士審査會

제48조의 2(設置) 稅理士試驗(제5조 제1항 제11호 및 同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포함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懲戒處分에 대하여 審議케 하기 위하여 國稅廳에 稅理士審査會를 設置한다.

제48조의 3(組織) ① 稅理士審査會는 委員 3명으로 組織한다.

② 委員은 租稅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大藏大臣이 任命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한다. 단 缺員이 생긴 경우의 補缺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委員은 再任될 수 있다.

제48조의 4(會長) ① 稅理士審査會에 會長 1명을 두며, 會長은 委員중 大藏大臣이 指名한다.

② 會長은 稅理士審査會를 대표하며 會務를 總理한다.

제48조의 5(試驗委員) ① 稅理士試驗의 문제의 작성 및 채점을 실시하기 위하여 稅理士審査會에 試驗委員을 둔다.

② 試驗委員은 稅理士試驗을 遂行하는데 필요한 學識있는 者중에서 稅理士試驗의 실시시마다 稅理士審査會의 추천에 의하여 大藏大臣이 任命하고 그 事務가 終結되었을 때에는 退任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의 6(懲戒審査委員)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규정하는 懲戒處分에 대한 審査를 행하기 위하여 稅理士審査會에 懲戒審査委員 6명을 둔다.

② 懲戒審査委員은 國稅 또는 地方稅의 行政事務에 從事하는 職員, 稅理士 및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稅理士審査會의 추천에 의하여 大藏大臣이 任命한다.

③ 제48조의 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懲戒審査委員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48조의 7(委員등의 勤務) 委員 및 試驗委員 및 懲戒審査委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제48조의 8(議決의 方法) 稅理士審査會의 議事는 委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제48조의 9(庶務) 삭제.

제48조의 10(運營등의 細部事項) 이 章에서 정한 것 이외에 稅理士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第 6 章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

제49조(稅理士會) ① 稅理士는 國稅局 管轄 區域마다 한 개의 稅理士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稅理士會는 會員의 수가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官에 대하여 당해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 내에 새로운 稅理士會를 設立할 수 있는 區域(이하 「指定區域」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③ 國稅廳長官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大藏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請求를 한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 내에 指定區域을 정할 수 있다.

④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區域이 정하여졌을 때는 당해 指定區域 내에 稅理士事務所를 갖고 있는 稅理士는 당해 指定區域에 하나의 稅理士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⑤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稅理士會가 設立되었을 때에는 그 設立시에 당해 稅理士會가 設立된 指定區域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請求를 한 稅理士會(이하 이 項에서 「前의 稅理士會」라 한다)가 設立되어 있었던 區域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고, 당해 前의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었던 區域중 당해 指定區域 이외의 區域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國稅廳長이 정한 것으로 하고 당해 前의 稅理士會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⑥ 稅理士會는 稅理士의 使命 및 職責에 비추어 稅理士의 義務의 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改善과 進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支部(제49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支部를 말한다) 및 會員에 대하여 指導와 連絡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⑦ 稅理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⑧ 稅理士會는 그 名稱중에 稅理士會라는 文句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의 2(稅理士會의 會則) ① 稅理士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는 會則을 정하여 그 會則에 대한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稅理士會의 會則에는 다음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2. 入會 및 退會에 관한 규정.
3. 任員에 관한 규정.
4. 會議에 관한 규정.
5. 稅理士의 品位維持에 관한 규정.
6. 稅理士業務에 관계되는 使用人과 從事者에 대한 監督에 관한 규정.
7. 稅理士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규정.
8. 委囑者의 經濟的 이유에 의하여 無償 또는 현저히 저렴한 報酬로 행하는 稅理士業務에 관한 규정.
9. 會費에 관한 규정.
10. 庶務 및 會計에 관한 규정.

③ 稅理士會의 會則의 變更(政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은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49조의 3(稅理士會의 支部) ① 稅理士會는 각 稅務署 管轄 區域마다 支

部를 設置하여야 한다. 단 國稅局長의 承認을 받은 때에는 인접하는 2 이상의 稅務署 管轄 區域을 地區로 하여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② 支部는 稅理士會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支部에 소속하는 會員에 대하여 指導와 連絡 및 監督을 행한다.

제49조의 4(成立의 時期) 稅理士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제49조의 5(登記) ① 稅理士會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사항은 登記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9조의 6(入會 및 脫會등) ① 稅理士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그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

② 稅理士會는 稅理士事務所를 소속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에 移轉하거나 소속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의 變更(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區域의 變更을 포함한다)이 있고,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가 소속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에 포함되게 된 때는 이러한 移轉 또는 區域의 變更이 있은 때에 당연히 종전의 소속 稅理士會를 退會하여 이러한 移轉 또는 區域 變更후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한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

③ 稅理士는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히 소속 稅理士會를 退會한다.

④ 稅理士는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한 區域에 設置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支部에 소속한 것으로 한다.

제49조의 7(任員) ① 稅理士會는 會長, 副會長 그 밖에 會則으로 정하는 任員을 둔다.

② 會長은 稅理士會를 대표하고 그 會務를 總括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시에 그 職務를 代理하며 會長이 缺員이 된 때는 그 職務를 수행한다.

제49조의 8(總會) ① 稅理士會는 매년 定期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 稅理士會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③ 稅理士會의 會則의 變更, 豫算 및 決算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제49조의 9(總會의 決議등의 報告) 稅理士會는 總會의 決議와 任員의 就任 및 退任을 大藏大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제49조의 10(建議등) 稅理士會는 稅務行政 기타 租稅 또는 稅理士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권한있는 官公署에 建議를 하거나 諮問에 答申할 수 있다.

제49조의 11(合併 및 解散) ① 國稅局의 管轄 區域이 變更됨으로써 그 區域 내에 있는 稅理士會가 合併 또는 解散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稅理士會는 總會의 議決에 따라 合併 또는 解散한다.

② 商法(1900년 法律 제48호) 제100조(債權者의 異議) 및 제103조(合併의 效果)의 규정은 稅理士會가 合併할 경우에는 民法(1897년 法律 제89호) 제73부터 제76조까지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와 民法施行法(1899년 法律 제11호)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法人의 淸算)은 稅理士會가 解散되는 경우에 準用한다.

③ 稅理士會가 合併하였을 때에는 合併에 의하여 解散한 稅理士會에 소속한 稅理士는 당연히 合併후 존속하는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

제49조의 12(日本稅理士會連合會) ① 전국의 稅理士會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의 使命 및 職責에 비추어 稅理士의 義務의 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改善과 進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 대한 指導와 連絡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고 동시에 稅理士의 登

錄에 관한 事務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 稅理士會는 당연히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員이 된다.

제49조의 13(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에는 다음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2 제2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사항.

2.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규정.

3. 제49조의 15에 규정하는 資格審査會에 관한 규정.

4. 제41조의 제1항의 帳簿 및 그 記載에 관한 규정.

5. 稅理士會의 會員 硏修에 관한 규정.

6. 제49조의 2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稅理士業務의 실시 기준에 관한 규정.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會則의 變更(前項 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 기타 政令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은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49조의 14(稅理士會에 관한 규정의 準用) 제49조의 2 제1항, 제49조의 4, 제49조의 5 및 제49조의 7부터 제49조의 10까지의 규정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도 準用한다.

제49조의 15(資格審査會) 1.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資格審査會를 둔다.

2. 資格審査會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請求에 의하여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 또는 登錄의 拒否 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登錄의 取消에 대하여 필요한 審議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3. 資格審査會는 會長 및 委員 4인으로 조직한다.

4. 會長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長으로 이를 補한다.

5. 委員은 會長이 大藏大臣의 承認을 얻어 稅理士, 國稅 또는 地方稅의 行政事務에 從事하는 職員 및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委囑한다.

6. 委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한다. 단 缺員이 생긴 경우 補缺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7. 前 각호에 규정하는 것 외에 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49조의 16(總會의 決議의 取消 및 任員의 解任) 大藏大臣은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總會의 決議 또는 任員의 行爲가 法令 또는 그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에 違反하거나 기타 公益을 해하는 때에는 總會의 決議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할 것을 명하고, 任員에 대하여는 그를 解任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 17(一般的 監督) ① 大藏大臣은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적정한 運營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들 團體로부터 報告를 받거나 그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勸告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職員으로 하여금 이들 團體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와 書類 기타 物件을 검사케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한 報告를 徵取하거나 檢査하는 권한은 犯罪搜査를 위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49조의 18(民法의 準用) 民法 제44조(法人의 不法行爲能力), 제50조(法人의 住所) 및 제55조(代表權의 委任)의 규정은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도 準用한다.

제49조의 19(政令에의 委任) 이 法律에 정하는 것 외에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設立, 運營, 合併, 解散 및 淸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第 7 章 雜則

제50조(臨時의 稅務書類의 作成등) ① 國稅局長(地方稅에 대하여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租稅의 申告 時期에 있어서 그 管轄 區域 내에 災害가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申告者등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稅理士 이외의 者에 대해 그 申請에 따라 2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또한 租稅의 稅目을 지정하여 無報酬로 申告書등의 作成 및 이들에 관한 課稅標準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그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 및 民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法人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法人 기타 團體의 任員 또는 職員에 한한다.

② 제33조 제2항 및 제4항, 제36조와 제38조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게 準用한다.

제51조(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 ① 辯護士는 소속 辯護士會를 경유하여 國稅局長에게 通知함으로써 그 國稅局의 管轄 區域 내에서 수시로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한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는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범위에 있어서 제1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부터 제41조의 3까지, 제43조 전단,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이들 규정중 稅理士業務의 禁止處分에 관한 부분을 除外한다), 제47조,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稅理士로 본다. 이 경우에 제33조 제3항 및 제33조의 2 제3항중 「稅理士임」이라고 한 것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通知을 한 辯護士임」으로 한다.

제51조의 2(行政書士가 행하는 稅務書類의 作成) 行政書士는 行政書士의 名稱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場利用稅, 特別地方消費稅, 自動車稅, 輕自動車稅, 自動車取得稅, 事業所稅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租稅에 관하여 稅務書類의 作成을 業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稅理士業務의 制限) 稅理士가 아닌 者는 이 法律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稅理士業務를 수행할 수 없다.

제53조(名稱의 使用制限) ① 稅理士가 아닌 者는 稅理士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아닌 團體는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또는 이들과 유사한 名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前 2항의 규정은 稅理士가 아닌 者와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아닌 團體가 다른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名稱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54조(稅理士의 使用人등의 秘密 遵守의 義務) 稅理士의 使用人 기타 從事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稅理士業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他에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안된다. 稅理士의 使用人 기타 從事者의 職을 그만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監督上의 措置) ① 國稅廳長官은 稅理士業務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稅理士로부터 報告를 徵取하거나 당해 職員으로 하여금 稅理士에게 質問하거나 혹은 그 업무에 관하여 帳簿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한 報告의 徵取, 質問 또는 檢査의 권한은 犯罪搜査를 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제56조(訴願) 削除.

제57조(事務의 委任) ① 國稅廳長官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한 事務를 國稅局長 또는 稅務署長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國稅廳長官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事務를 國稅局長 또는 稅務署長에게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趣旨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 8 章 罰則

제58조 제36조(제50조 제2항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違反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万円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59조 제52조의 규정에 違反한 者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万円 이하

의 罰金에 처한다.

제6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万円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38조(제50조 제2항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違反한 者.

2. 제54조의 규정에 違反한 者.

② 前項의 罪는 告訴를 기다려 論한다.

제6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万円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에 違反한 者.

2. 제43조의 규정에 違反한 者.

3. 제45조 또는 제46조에 규정한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違反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한 者.

제6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万円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違反한 者.

2.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違反한 者.

제63조 제49조의 17 제1항 또는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報告 또는 質問, 檢査에 대하여 報告를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하거나 質問에 答辯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虛僞의 答辯을 하거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하는 者는 5万円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64조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2조의 제2호 또는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경우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각 本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단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의 당해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注意 및 監督을 다하였다고 證明이 되는 때에는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稅 理 士 法 施 行 令

제1조(稅理士業務의 對象이 아닌 租稅) 稅理士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租稅는, 去來所稅, 日本銀行券發行稅, 印紙稅, 登錄免許稅, 自動車重量稅, 電源開發促進稅, 關稅, 頓稅, 特別頓稅, 狩獵者登錄稅 및 入獵稅, 法定外普通稅(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法定外普通稅를 말하며, 地方稅法 제1조 제2항에 준용하는 同法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 또는 同法 제7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賦課되는 普通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의 2(申告等)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행위는, 租稅(前條에 규정하는 租稅를 除外한다)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不服審査法의 규정에 따른 届出, 報告, 申出, 申立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한다.

제1조의 3(會計에 관한 事務) 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會計에 관한 事務는, 貸借對照表計定 및 損益計定을 설정하여 計理하는 會計에 관한 事務(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機械的 事務를 除外한다)로 한다.

제2조(會計檢査등에 관한 行政事務) 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한 會計檢査, 金融檢査 또는 會社 기타 團體의 經理에 관한 行政事務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會計檢査員의 職員이 행하는 租稅(關稅, 頓稅 및 特別頓稅를 除外한다)收入에 관한 檢査事務.

2. 地方公共團體의 監査委員 또는 補助職員이 행하는 租稅收入에 관한 監査事務.

3. 法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法人의 前條에 규정하는 會計에 관한 事務에 관련된 法令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檢査事務.

4. 資金運用部資金 또는 美國對日援助見返資金의 運用에 관하여 행하는 運用先의 監査事務.

5. 金融檢査官이 행하는 檢査事務.

6. 證券檢査官이 행하는 檢査事務.

7. 金融機關再建整備法 또는 企業再建整備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整備計劃書 또는 最終處理方法書의 審査事務.

제3조(資金의 運用에 관한 事務) 法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한 貸出 기타 資金의 運用에 관한 事務는, 資金의 貸出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에 관련하여 행하는 貸出先 또는 投資先의 업무 및 財産에 관한 帳簿 書類의 審査事務와 당해 審査事務를 포함한 資金의 貸出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에 관한 事務로 한다.

제4조(會計에 관한 事務) 삭제.

제5조(大學等과 同等以上의 學校) 法 제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한 學校는 文部大臣이 1919년 文部省令 제3호에 따라 高等學校 高等科 또는 大學豫科와 同等以上이라고 지정한 學校 및 1928년 文部省令 제24호에 따라 大學 또는 專門學校와 同等以上이라고 인정한 學校로 한다.

제6조(試驗科目의 一部免除의 基準) 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은 만점의 60%로 한다.

제6조의 2(受驗手數料) 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金額은 3,000円으로 한다.

제6조의 3(稅理士會의 通知) 稅理士會가 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大藏大臣에게 通知하는 때는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의 4(稅理士審査會) ① 稅理士審査會의 會長에 事故가 있는 때는 미리 지명된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② 懲戒審査委員은 國稅 또는 地方稅의 行政事務에 종사하는 職員, 稅理士

및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각각 2인씩으로 구성한다.

③ 稅理士의 懲戒處分에 대하여는 懲戒審査委員의 過半數의 出席이 아니면 審査를 할 수 없다.

④ 委員 및 懲戒審査委員은 자기의 관계있는 懲戒處分에 대한 審議 또는 審査에 참가할 수 없다.

⑤ 前 각항에 규정한 것 외에 議事의 節次 기타 稅理士審査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稅理士審査會에서 정한다.

제7조(稅理士會의 設立) ① 稅理士가 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당해 設立하고자 하는 稅理士의 會員으로 될 稅理士 5인 이상이 設立委員으로 되어, 會則을 정하고, 設立總會를 거쳐 法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許可申請書를 國稅廳長官을 경유하여 大藏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設立委員이 設立總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그 日時 및 場所와 會議의 目的事項등을 會議日 2주전까지 會員으로 되어야 할 稅理士에 書面으로 通知함과 아울러 國稅廳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設立總會의 議決은 會員으로 될 稅理士의 1/2 이상의 出席과 그 出席者의 2/3 이상 多數決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會員으로 될 稅理士로서 設立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者는 미리 會議의 目的事項에 대한 贊否의 意見을 밝힌 書面을 出席者에게 委任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⑤ 前項의 규정에 따라 議決權을 행사한 者는 設立總會에 出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申請書에는 會則 및 會員으로 될 稅理士의 名簿 및 設立總會의 議事錄을 添附하여야 한다.

제7조의 2(稅理士會의 會則變更) ① 法 제49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同條 제2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게기하는 사항으

로 한다.

② 稅理士會가 法 제49조의 2 제3항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때는 당해 認可申請書를 國稅廳長官을 경유하여 大藏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申請書에는 同項의 認可에 관계되는 變更前의 會則 및 당해 變更後의 會則과 당해 會則의 變更에 관한 總會의 議事錄을 添附하여야 한다.

제8조(總會의 召集) 稅理士會가 總會를 召集하고자 하는 때는 그 日時 및 場所와 會議의 目的이 되는 사항을 總會日 2주전까지 당회 稅理士會 會則의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제9조(總會의 議事) ① 稅理士會의 總會 議事는 會員 1/2 이상 出席과 出席者의 過半數로서 議決하고 可否同數인 때는 議長이 결정한다.

② 稅理士會의 總會에 있어서 會則의 變更에 따른 議決의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會員의 1/2 이상 出席과 그 出席者의 2/3 이상 多數決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前 2항의 議決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會員은 稅理士會가 前條의 규정에 따라 總會召集의 通知를 하여야 할 會員으로 한다.

제10조(會員名簿) 稅理士會는 그 會員名簿를 작성하고 항상 整備하여야 한다.

제11조(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設立) ① 稅理士會가 法 제49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日本稅理士會連合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會員으로 될 稅理士會는 會則을 정하여 設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法 제49조의 14에 준용하는 法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認可申請書를 國稅廳長官을 경유하여 大藏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6항의 규정은 前項의 申請書提出에 준용한다.

제11조의 2(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의 變更) ① 法 제49조의 13 제2항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同條 제1항 제1호(法 제49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게기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法 제49조의 13 제2항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2조(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總會)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總會에 있어서 會員의 議決權을 會員인 稅理士會의 會員數에 따를 것을 會則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8조 및 제9조 제1항 내지 3항까지의 규정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前項의 규정에 따라 會則으로 會員의 議決權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때에는 同條 제1항 및 제2항 중 「出席者」는, 「出席한 會員의 議決權」으로 대치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의 2(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 ① 資格審査會의 委員에는, 稅理士, 國稅 行政事務에 종사하는 職員, 地方稅 行政事務에 종사하는 職員 및 學識 經驗者 각 1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資格審査會의 會長이 法 제49조의 15 제5항의 承認을 받고자 하는 때는 당해 承認申請書를 國稅廳長官을 경유하여 大藏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資格審査會의 委員中 缺員이 생긴 때는 지체없이 그 缺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資格審査會의 委員은 再任될 수 있다.

⑤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會務를 總理한다.

⑥ 資格審査會는 委員의 過半數의 出席이 아니면 會議를 開會하거나 議決을 할 수 없다.

⑦ 資格審査會의 議事는 出席委員 過半數로 決議하고, 可否同數인 때는 會長이 결정한다.

⑧ 前 각항에서 정한 것 외에 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에서 정한다.

제13조(稅理士會의 報告) 稅理士會가 法 제49조의 9의 규정에 따라 大藏大

臣에게 報告하는 때는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4조(臨時의 稅務書類의 作成등을 許可하는 任職員이 속하는 法人 기타 團體) 法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政令으로 정하는 法人 기타 團體는, 農業協同組合, 漁業協同組合, 事業協同組合 및 商工會로 한다.

제14조의 2(行政書士가 稅務書類의 作成을 할 수 있는 租稅) 法 제51조의 2에 규정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租稅는, 石油가스稅, 不動産取得稅, 道府縣煙草稅(都 煙草消費稅를 포함한다), 市町村煙草稅(特別區 煙草稅를 포함한다), 特別土地保有稅 및 入場稅로 한다.

제15조(당해 職員의 證票携帶) 法 제49조의 1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職員이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하는 경우 또는 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職員이 稅理士에게 질문 또는 기타 업무에 관한 帳簿書類를 檢査하는 경우에 당해 職員은 그 身分證票를 携帶하여 이해관계인의 請求가 있는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稅 理 士 法 施 行 規 則

第 1 章 稅理士의 業務

제1조(申告書等) 稅理士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書類는, 届出書, 報告書, 申出書, 申立書, 計算書, 明細書 기타 이들에 준하는 書類로 한다.

第 1 章의 2 稅理士試驗

제1조 2(金融檢查등의 事務) ① 稅理士法 施行令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檢查事務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大藏省組織規定 제2조의 5 제1항 및 제63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金融證券檢查官이 행하는 檢查事務.

2. 大藏省組織規定 제8조의 5 제1항 및 제56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證券去來 檢查官이 행하는 檢查事務.

② 令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이 정하는 犯則事件의 調查事務는 大藏省組織規定 제8조의 7 제1항 및 제56조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證券去來特別調查官이 행하는 犯則事件의 調查事務로 한다.

제1조의 3(受驗資格의 認定의 申請) ① 稅理士試驗의 受驗資格에 대하여 法 제5조 제1항 제11호 또는 同條 제3항에 규정하는 稅理士審查會의 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稅理士試驗受驗資格認定申請書에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稅理士審查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法 제5조 1항 제11호의 認定을 받고자 하는 때는 學歷 또는 職歷을 證明하는 書面.

2. 法 제5조 제3항의 認定을 받고자 하는 때는 事務 또는 업무의 내용을 證明하는 書面.

3. 住民票寫本.

② 前項의 申請書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稅理士審査會가 제5조 제1항 제11호 또는 同條 제3항의 認定을 한 때 또는 認定을 하지 않은 때에는 稅理士審査會長이 그 취지를 당해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2조(受驗願書) ① 稅理士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稅理士試驗受驗願書에 다음에 게기한 書類를 添附하여 稅理士受驗願書의 接受期間 내에 당해 試驗을 應試하고자 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 稅理士審査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稅理士試驗受驗申請書.

2. 受驗票 및 寫眞票.

3. 受驗資格이 있음을 證明하는 書類.

② 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試驗科目중 一部의 科目에 대한 試驗의 免除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試驗의 免除를 받고자 하는 科目을 前項 제1호의 稅理士試驗受驗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試驗科目중 一部의 科目에 대하여 試驗의 免除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試驗의 免除를 받고자 하는 科目을 제1항 제1호의 稅理士試驗受驗申請書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음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國稅局長이 稅理士試驗受驗願書를 接受한 때에 당해 願書는 同項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審査會長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조의 2(管理監督的地位等) 法 제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職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官公署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國稅(關稅, 頓稅 및 特別頓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 있어서 또한 같다) 또는 地方稅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職으로 한다.

1. 稅務署, 國稅局, 國稅廳(附屬機關을 포함한다) 또는 大藏省主稅局.

國稅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係長 이상의 職 또는 國稅調査官, 國稅徵收官 기타 이들 職에 상당하는 專門的 職(次號에 있어서 「國稅調査官等」이라 함).

2. 前號에 게기하는 官公署 이외의 官公署.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係長 이상의 職 또는 國稅調査官등에 준하는 職으로서 그 職務의 複雜, 困難 및 責任의 도가 前號에 게기하는 職에 상당하는 것.

제2조의 3(指定硏修의 公告) 稅理士審査會는 法 제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硏修를 指定한 때에는 그 취지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제3조(試驗免除의 申請) ① 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法 제6조에 정하는 試驗科目의 全部에 대한 試驗免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稅理士試驗免除申請書에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稅理士審査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住民票 寫本.

2. 法 제8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書類.

② 前項의 申請書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稅理士審査會가 당해 申請者에게 試驗科目 全部에 대한 試驗의 免除를 決定하거나 또는 免除하지 않을 것을 決定한 때는 稅理士審査會 會長이 그 취지를 당해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4조(受驗手數料) 法 제9조 제1항의 受驗手數料는 稅理士試驗受驗願書에 收入印紙를 첩부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제5조(試驗實施地) 稅理士試驗은 東京都, 高崎市, 大阪府, 札幌市, 仙台市, 名古屋市, 金澤市, 廣島市, 高松市, 福岡市, 熊本市, 那覇市 및 稅理士審査會가 指定하는 기타 場所에서 실시한다.

제6조(試驗實施의 日時 및 場所등의 公告) 稅理士審査會 會長은 稅理士試

驗實施의 초일의 2일 전까지 稅理士試驗實施의 日時 및 場所와 稅理士試驗受驗願書의 接受期間 기타 稅理士試驗의 受驗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제7조(試驗合格者등의 公告) 稅理士審査會 會長은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 및 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試驗의 免除科目이 法 제6조에 정하는 試驗科目의 全部에 미치는 者의 姓名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2 章 登錄

제8조(登錄事項) 法 제18조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本籍 및 住所.

2. 法 제3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 및 그 자격의 取得年月日.

3.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事務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 전 5년간의 종사한 職名 또는 그 期間.

제9조(稅理士名簿) 稅理士名簿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정한 양식에 의한다.

제10조(變更의 登錄申請) 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變更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變更의 내용 및 이유, 變更이 생긴 년월일 기타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變更登錄申請書를 소속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登錄의 申請) ① 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사항은, 同項에 규정하는 者의 學歷 및 經歷, 당해자가 法 제4조 각호 및 제24조 각호에 게기하는 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② 法 제21조 제1항의 登錄申請書(이하 「登錄申請書」라 한다)에는 寫眞을 添附하여야 한다.

③ 登錄申請書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다.

④ 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稅理士會는 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가 설치하는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된 稅理士會로 한다.

제12조(稅理士證票) 稅理士證票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淡靑色으로 한다.

제13조(稅理士證票 返還等의 節次) ① 稅理士가 稅理士證票를 亡失하거나 損壞한 때는 당해 亡失 또는 損壞한 稅理士證票의 番號와 당해 亡失 또는 損壞한 年月日 및 場所 기타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당해 稅理士의 소속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稅理士證票의 損壞로 인하여 당해 書類를 제출하는 때는 당해 損壞된 稅理士證票를 당해 書類에 添附하여 返還하여야 한다.

② 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證票를 返還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稅理士證票의 交付를 받은 稅理士의 소속 稅理士會 또는 소속하였던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返還하여야 한다.

③ 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證票의 再交付를 申請하는 稅理士 및 稅理士證票를 亡失 또는 損壞로 인하여 再交付를 申請하는 稅理士는 再交付申請書를 당해 稅理士의 소속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登錄의 抹消에 관한 届出) 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가 同條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届出하고자 하는 者는 그 届出書를 그 해당 稅理士가 소속한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稅理士名簿의 登錄等의 通知)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한 때 또는 당해 登錄한 사항을 變更 또는 抹消한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國稅廳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3 章　雜則

제14조의 3(計算事項, 審査事項을 記載한 書類) 法 제3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記載書類는 별지 제5호 양식 또는 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기재한 書面으로 한다.

제15조 (業務制限에 관한 承認申請) 法 제42조 但書規定에 의한 國稅廳長官의 承認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에 맞게 그 자가 離職前 1년내에 담당하고 있었던 소관 職務에 속하는 事務 및 離職事由를 기재한 申請書를 그 자의 稅務士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을 경유하여 國稅廳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稅理士會의 分割) ① 法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수는 5,000인으로 한다.

② 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國稅廳長官에 대하여 同項에 규정하는 指定區域을 정할 것을 請求하는 稅理士會는, 그 취지를 기재한 申請書에 당해 請求 總會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機關의 議決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 國稅廳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稅理士會가 희망하는 指定區域이 있는 때에는 당해 희망하는 指定區域을 기재한 書面 및 당해 희망하는 指定區域 내에 稅理士事務所를 가진 稅理士의 2/3 이상이 同條 제4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會의 設立을 贊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書類를 당해 申請書에 添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國稅廳長官은 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同項에 규정하는 指定區域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한 稅務署 管轄區域의 일부만을 당해 指定區域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2. 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設立하게 되는 稅理士會의 會員으로 될 稅理士의 數 및 同條 제5항의 규정에 따라 設立되는 稅理士會의 會員으로 될

稅理士의 數 중 하나가 제1항에 규정하는 數의 대략 1/3을 하회하지 않도록 할 것.

④ 國稅廳長官은, 稅理士會가 前 제2항에 규정하는 申請書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同項에 규정하는 指定區域을 指定한 때는 당해 指定區域 및 法 제49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會를 設立 가능한 期限을, 指定區域을 指定하지 않게 된 때는 그 취지를 당해 申請書를 제출한 稅理士會에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제15조의 3(會員의 移動의 通知) 稅理士會는, 會員의 移動이 있은 때는 그 姓名 및 住所 및 入會 또는 退會年月日을 기재한 書類 2부를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國稅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國稅局長은, 당해 書類를 接受한 때 그 1부를 國稅廳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의 通知) ① 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하고자 하는 辯護士는 同項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書類를 소속 辯護士會를 경유하여 당해 辯護士의 事務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國稅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國稅局長이 前項의 書類를 接受한 때에는 당해 書類의 接受를 증명하는 書類를 同項의 書類를 제출한 辯護士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제17조 削除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會則(1994年 4月 21日 現在)

第 1 章 總則

제1조(名稱) 本會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라 칭한다.

제2조(目的) 本會는 稅理士의 使命 및 직책을 고려하여, 稅理士의 義務의 遵守 및 稅理士 業務의 改善 進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稅理士會와 그 會員에 대한 指導, 連絡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고 나아가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事務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事業) ① 本會는 前條에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稅理士會 및 그 會員의 指導, 連絡 및 監督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게 권고 또는 지시를 하는 것.
2. 稅務行政 기타 租稅 또는 稅理士制度에 관한 조사 연구.
3. 稅理士會의 會員의 業務 改善 進步에 관한 조사 연구.
4. 稅理士制度 및 稅理士業務에 관한 홍보활동.
5. 會報의 발행.
6.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事務를 행하는 것.
7. 稅理士會의 會員 硏修에 관한 필요한 施策을 행하는 것.
8. 小規模 零細 납세자에 대한 稅理士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施策을 행하는 것.
9. 稅理士會 會員의 업무에 대한 報酬 및 帳簿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행하는 것.
10. 기타 本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행하는 것.

② 本會는 稅務行政 기타 租稅 또는 稅理士制度에 대하여 권한 있는 官公

署에 建議를 하거나 諮問에 응한다.

제4조(事務所의 所在地) 本會는 東京都 港區에 事務所를 둔다.

제5조(會員) 本會의 會員은 전국의 稅理士會로 한다.

제6조(規則등에의 委任) ① 本會는 稅理士法(이하 「法」이라 한다) 기타 法令이나 本會 會則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規則 또는 細則 기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規則은 總會의 議決로 制定 또는 改廢한다.

第 2 章 任員

제7조(任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인.
2. 副會長 14인 이내.
3. 理事 100인.
4. 監事 14인.

제8조(任員의 選任) ① 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한다.

② 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③ 任員의 缺員이 된 때는 補闕選任한다. 단 常任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다음 定期 總會까지 補闕選任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任員(會長을 除外)의 補闕選任에 있어서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제1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任員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前 各項에 정하여진 외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제9조(會長 및 副會長) ①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의 정함에 따라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의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의 정함에 따라 會長이 缺員이 된 때는 그 職務를 행한다.

제10조(理事)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會務의 執行에 참여한다.

제11조(專務理事) ① 會長은 理事 중에서 3인 이내의 專務理事를 委囑한다.

② 專務理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의 執行을 관장한다.

제12조(常務理事) ① 會長은 제16조 제2항의 規則의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 중에 약간 명의 常務理事를 委囑한다.

② 常務理事는 常務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會務의 執行에 참여한다.

제13조(監事) ① 監事는 會計 및 會務의 執行을 監査하고 부정을 발견한 때는 이를 總會에 보고한다.

② 監事는 前項에 규정된 것 이외에 會則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행한다.

③ 監事는 本會의 다른 任員을 겸하거나 또는 本會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14조(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就任 후 두번째 定期總會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補闕 또는 定員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기타 任員의 任期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任期의 滿了로 退任하는 任員은 새로 選任된 任員의 就任 시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제15조(任員의 退任) 任員은 당해 任員에 選任된 때의 소속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니게 된 때 또는 總會의 解任決議가 있은 때 退任한다.

제16조(會務의 執行) ① 會長, 副會長 및 專務理事는 會務의 執行에 있어서, 稅理士에 관한 法令·會則·規則의 규정 또는 總會, 理事會 또는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반하여 執行할 수 없다.

② 會務의 執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제17조(代表權의 制限) 本會와 會長 또는 副會長과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들은 本會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제18조(任員의 守秘義務) 任員은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上 알게된 稅理士會의 會員에 관한 秘密을 타에 漏泄하거나 盜用해서는 안된다. 任員이 아니게

된 때도 또한 같다.

第 3 章 理事會 및 常務理事會

제19조(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구성된다.

② 理事會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總會에 제출하는 議案.

2. 會則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것으로 한 사항.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建議 또는 答申에 관한 사항.

4. 前 各號에 게기한 것 외에 會務의 執行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理事會의 運營) ①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構成員의 1/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會할 수 없다.

② 理事會의 의장은 會長이 된다.

③ 理事會의 議事는 출석자 過半數로 議決하고 可否同數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理事會의 議事에 대하여 특별의 이해관계가 있는 者는 그 議決에 참여할 수 없다.

⑤ 理事會에 付議할 사항에 대하여 會議를 召集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常務理事會의 결정에 의하여 議案을 書面으로 기재하여 構成員에게 送付하고 당해 議案에 대하여 찬부의 의견을 구하여 書面에 의하여 議決을 할 수 있다.

⑥ 前項의 규정에 의한 議決은 理事會의 議決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書面에 의한 議決에 준용한다.

제21조(常務理事會) ① 常務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專務理事 常務理事로 구성한다.

② 常務理事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理事會의 권한(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결정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행사한다.

③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常務理事會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常務理事會의 의장은 다음 理事會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常務理事會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외에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理事會에 付議하는 議案.

2. 이 會則에서 常務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것으로 한 사항.

⑤ 前條의 규정은 常務理事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同條의 규정 중 「理事會」로 한 것은 「常務理事會」로,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로 한 것은 「副會長 및 專務理事의 1/2 이상의 同意를 얻어」로 대치한다.

第 4 章 顧問, 相談役 및 評議員

제22조(顧問 및 相談役) 會長은 稅理士 業務의 改善 進步에 필요한 사항에 諮問하기 위하여 稅理士 업무에 관한 學識과 經驗있는 者 중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顧問 및 相談役을 委囑할 수 있다.

제23조(評議員會) ① 評議員會는 評議員으로 구성된다.

② 會長은 總會에 付議하여야 할 사항 중 稅理士會의 會員의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評議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③ 評議員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④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會長은 評議員會를 召集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常務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제2항에 규정한 諮問事項을 기재한 서류를 評議員에게 送付하여 評議員會의 召集에 가름할 수 있다.

제24조(評議員의 選出) ① 評議員은 稅理士會의 會員 중 당해 稅理士會의 추천에 의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② 稅理士會는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評議員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稅理士會의 總議를 반영하여 추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稅理士會로부터 추천된 評議員의 수는 均等割數(1인으로 한다) 및 會員

割數(300인에서 균등할수의 총수를 공제한 수를 稅理士會에 評議員을 委囑하는 해의 7월 31일 현재 稅理士會의 會員數에 비례하여 割當한 수로 한다. 이 경우에 割當수가 1인 미만의 단수인 때는 당해 단수 치의 큰 것부터 순차로 會員數의 총수에 찰 때까지 1인으로 切上한다)의 會員數로 한다.

④ 評議員은 本會의 任員을 겸할 수 없다.

⑤ 評議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評議員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 5 章 總會

제25조(召集) ① 會長은, 매년 7월에 定期總會를 召集한다.

② 會長은, 필요있다고 인정되는 때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會長은,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召集의 이유 및 議案에 대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④ 監事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⑤ 前項의 규정에 따라 監事에 의한 臨時總會의 召集은 監事의 過半數로 결정한다.

⑥ 總會를 召集하는 때는 總會일 이전 2주일 전까지 總會의 日時와 場所 및 議案 및 議案의 說明을 기재한 書面에 의하여 稅理士會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6조(議決權) ① 稅理士會는 그 회의 會員의 수와 동수의 議決權을 갖는다.

② 前項의 會員의 수는 總會일 전월의 월말 현재 會員數에 따른다.

제27조(議決의 要件) ① 總會의 議決은 稅理士會의 1/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稅理士會의 議決權의 過半數로서 결정하며 可否同數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總會에서 會則의 變更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稅理士會의 1/2 이상 출석과 그 출석한 稅理士會의 議決權의 2/3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제28조(委任에 의한 議決權의 行使) ① 總會에 출석할 수 없는 稅理士會는 미리 議案에 대한 찬부의 의견을 명시한 書面으로 출석한 다른 稅理士會에 委任하여 그 決議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議決權을 행사한 稅理士會는 總會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9조(總會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總會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이 會則에서 總會의 議決 또는 承認을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會則의 變更.
3. 本會의 중요한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관한 사항.
4. 前 各號에 게기한 것 외에 會務에 관한 중요 사항.

제30조(議事의 制限) 總會에 있어서는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會에 미리 통지한 議案 이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제31조(利害關係者의 排除) 總會의 議案에 대하여 특례의 이해관계가 있는 稅理士會는 그 議決에 참가할 수 없다.

제32조(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에 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② 總會의 議事錄에는 議事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이 署名捺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第 6 章 稅理士의 登錄

제33조(稅理士名簿) 本會에 稅理士名簿를 비치한다.

제34조(稅理士名簿에 登錄하여야 할 사항등) ① 稅理士名簿에는 다음 사항을 登錄한다.

1. 稅理士의 姓名, 本籍, 住所 및 生年月日.

2. 稅理士 事務所의 名稱 및 所在地.

3. 稅理士가 되는 資格區分 및 그 資格取得 年月日.

4.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從事하였던 者는 당해 事務에 從事하지 않게 된 日前 5년 간에 從事한 職名 또는 그 期間.

② 前項 제2호에 규정하는 稅理士事務所의 명칭은 그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稅理士名簿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最終學歷 및 經歷.

2. 所屬 稅理士會의 名稱.

3. 稅理士登錄을 받은 후 報酬있는 公職에 있던 者는 당해 公職 및 그 公職就任 年月日 및 退任 年月日.

4. 法 제43조 전단의 懲戒處分 또는 法 제44조에 규정하는 懲戒處分을 받은 者는 懲戒의 種類 및 懲戒를 받은 年月日.

5. 登錄 番號 및 登錄 年月日.

6. 登錄 事項 變更 年月日 및 變更의 事由.

7. 登錄의 取消 年月日 및 그 事由.

8. 稅理士證票 交付 年月日 및 證票의 番號.

제35조(稅理士의 登錄申請) ① 稅理士名簿에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稅理士 登錄申請書(이하 「登錄申請書」라 한다)를 稅理士 事務所 所在地를 포함한 區域에 設立된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本會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前項의 登錄申請書에는 副本 3통과 함께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寫眞(3월 이내에 촬영한 것).

2. 戶籍抄本(제출일전 3월 이내 交付받은 것으로 하고, 外國人인 경우에는 外國人 登錄法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 登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3. 住民票謄本(제출일전 3월 이내에 交付받은 것).

4. 稅理士가 된 자격을 증명하는 書面.

5. 法 제3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간이 通算하여 2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書面.

6. 法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者임을 알 수 있는 官公署의 證明書.

7. 法 제4조 제4호 내지 10호 및 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者임을 밝힌 誓約書.

③ 제1항에 규정하는 登錄申請書에는 登錄免許稅法의 정한 바에 의하여 同法에 규정한 登錄免許稅額에 상당하는 登錄免許稅를 納付한 領收證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登錄申請書의 進達等) 稅理士會가 登錄申請書를 접수한 때는 登錄申請者의 住所地 管轄 稅務署長 및 市町村(特別區 및 全部事務組合을 포함) 및 都道府縣의 長에게 送付하고, 定本을 소속서류와 함께 本會에 進達하여야 한다.

제37조(登錄에 관한 調査) ① 稅理士會가 前條에 규정하는 登錄申請書를 進達할 때는 당해 申請者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관한 자료 및 稅理士會의 會長의 意見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稅理士會는 稅理士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登錄調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登錄調査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사항은 稅理士會의 會則에 정하여야 한다.

제38조(登錄審査會) ① 本會에 登錄審査會를 둔다.

② 登錄審査會는 登錄申請者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審査를 행한다.

③ 登錄審査會는 會長 및 委員 약간 인으로 조직한다.

④ 登錄審査會의 會長은 本會의 會長으로 한다.

⑤ 委員은 副會長,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 중에 本會의 會長이 委囑한다.

⑥ 登錄審査會는 委員의 過半數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開會 또는 議決을 할 수 없다.

⑦ 登錄審査會의 議事는 出席委員의 過半數 이상의 同意로 議決하고 可否同數인 때는 會長이 결정한다.

⑧ 登錄審査會의 議事는 非公開로 하고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은 정당한 이유없이 登錄審査會의 議事에 관한 職務上 認知한 秘密을 타에 漏泄하거나 盜用할 수 없다.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이 아니게 된 후에도 역시 같다.

⑨ 登錄審査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前 各項에 규정하는 것 외에 總會에서 정한다.

제39조(稅理士名簿의 登錄 또는 登錄의 拒否) ① 本會는 登錄審査會의 議決을 거쳐 稅理士名簿의 登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하고, 登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登錄을 거부한다.

이 경우에 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하거나 登錄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資格審査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登錄申請書를 제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申請書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登錄申請書를 제출한 者로부터 國稅廳長官에 대하여 審査請求가 있은 경우에는 당해 審査請求가 있은 날 本會가 당해 登錄을 거부한 것으로 한다.

제40조(登錄의 取消) ① 本會는 稅理士登錄을 받은 者가 稅理士가 된 자격 또는 法 제24조 각호에 규정하는 登錄拒否 사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한 登錄申請書를 제출하고, 그 申請으로 登錄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는 登錄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登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資格審査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제41조(登錄事項의 變更) 本會는 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變更申請이 있은 때는 登錄事項을 變更한다.

제42조(記載事項의 變更) ① 稅理士는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變更이 있는 때는 그 내용을 本會에 申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本會는 前項의 申告가 있은 때는 記載事項을 變更한다.

제43조(登錄의 抹消) 本會는 稅理士가 法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 때는 지체없이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제44조(手數料) ① 稅理士名簿의 登錄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手數料를 本會에 納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登錄 50,000円.

2. 登錄事項의 變更 2,500円.

3. 稅理士證票 亡失에 따른 再交付 6,000円.

4. 稅理士證票의 再交付(前號 외에 稅理士證票의 記載事項 變更 등에 따른 交付를 포함) 2,500円.

5. 證明 1,200円.

② 前項 각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호에 정한 金額의 手數料를 합한 金額으로 納付하여야 한다.

③ 住居表示의 實施 또는 變更 또는 行政區劃등 또는 그 名稱의 變更(그 變更에 따른 地番의 變更을 포함)에 따른 登錄事項의 變更 또는 稅理士證票의 記載事項의 變更에 의한 證票의 交付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項 제2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金額의 手數料의 納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本會가 登錄을 拒否한 경우 또는 登錄申請者가 登錄의 申請을 취하한 경우에 本會는 제1항 제1호의 手數料를 返還한다.

제45조(稅理士名簿登錄등의 公告) 本會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한 때 또는 登錄을 抹消한 때는 그 이유를 官報에 公告한다.

제46조(稅理士證票의 交付 및 返還) ① 本會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한 者에게 稅理士證票를 交付한다.

② 稅理士의 登錄을 抹消한 때는 당해 登錄을 抹消한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相續人은 지체없이 稅理士證票를 本會에 返還하지 않으면 안된다. 稅理士가 法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法 제45조 또는 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稅理士證票의 亡失 또는 損壞) 稅理士는 稅理士證票를 亡失 또는 損壞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이유를 本會에 申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8조(稅理士證票의 亡失의 公告) 本會는 稅理士로부터 稅理士證票의 亡失申告가 있은 때는 당해 亡失한 稅理士證票의 無效임을 官報에 公告한다.

제49조(稅理士證票의 再交付) 稅理士로부터 稅理士證票의 亡失 또는 損壞申告가 있거나 또는 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稅理士가 稅理士業務를 할 수 있게 된 때에 本會는 申請에 의하여 稅理士證票를 再交付한다.

제50조(登錄등의 細部事項) 登錄의 節次, 登錄의 取消 및 抹消, 稅理士名簿, 稅理士證票 기타 登錄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제3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第 7 章 資格審査會

제51조(資格審査會) ① 本會에 資格審査會를 둔다.

② 資格審査會는 本會의 請求에 의하여 稅理士의 登錄 또는 登錄의 拒否 또는 登錄의 取消에 대하여 審議한다.

제52조(資格審査會의 組織) ① 資格審査會는 會長 및 資格審査會의 會長이 大藏大臣의 承認을 받아 委囑한 4인으로 조직한다.

②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本會의 會長이 된다.

③ 委員會는 稅理士, 國稅의 行政事務에 從事하는 職員, 地方稅의 行政事務에 從事하는 職員 외 學識經驗者 각 1인으로 구성된다.

④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委員중 缺員이 생긴 때 지체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⑤ 委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한다. 단 缺員이 생긴 경우에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제53조(資格審査會의 議事등) ① 資格審査會는 委員의 過半數가 아니면 開會·議決할 수 없다.

② 資格審査會의 議事는 出席委員 過半數로 결정하고 可否同數의 경우에는 會長이 결정한다.

③ 資格審査會의 議事는 非公開로 하고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은 정당한 이유없이 資格審査會의 議事에 관한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他에 漏泄하거나 盜用할 수 없다.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이 아니게 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④ 資格審査會는 審査에 관한 秘密이 있는 때는 當事者, 關係人 및 官公署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陳述, 說明 또는 資料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規則에의 委任) 資格審査會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前 2조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第 8 章 稅制審議會(1990年 1月 23日 新設)

제55조(稅制審議會) ① 本會에 稅制審議會를 둔다.

② 稅制審議會는 會長의 諮問에 의하여 稅制 및 稅務行政 전반에 대하여 調査 및 審議를 행하고 그 결과를 會長에게 答申한다.

제56조(稅制審議會의 組織) ① 稅制審議會는 委員 24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委員은 特別委員 및 專門委員으로 하고 特別委員은 稅制 및 稅務行政에 관한 學識과 經驗者 중에서, 專門委員은 稅理士會 會員 중에서 각각 會長이 委囑한다.

③ 專門委員의 數는 8인 이내로 하고 그의 반수 이내를 常任委員으로서 庶務에 從事하게 한다.

④ 委員의 任期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稅制審議會의 會長은 特別委員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57조(稅制審議會의 審議) 稅制審議會의 審議는 稅制審議會 總會 및 專門委員會에서 행한다.

제58조(規則에의 委任) 稅制審議會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前 2조에 정한 것 외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第 9 章 稅理士의 品位維持

제59조(品位維持의 指導) 稅理士會는 그 會員이 稅理士의 使命에 비추어 稅理士業務의 改善, 進步 및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에 노력함과 동시에 稅理士의 信用 및 品位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60조(會則등의 遵守) 稅理士會의 會員은 稅理士에 관한 法令, 本會의 會則 나아가서 稅理士會의 會則 및 規則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1조(非稅理士와의 提携의 禁止) ① 稅理士는 法 제52조 및 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者로부터 업무의 알선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稅理士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名義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62조(名稱의 使用制限) 稅理士는 稅理士에 관한 法令 또는 本會 또는 稅理士會의 會則의 정하는 것 또는 다른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조직하는 團體에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기타 유사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

第 10 章 報酬 및 帳簿作成

제63조(報酬의 規定) ① 稅理士會는 그 會員이 행하는 稅理士 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규정을 本會의 정하는 기준으로 總會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稅理士會는 前項에 정하여진 규정을 制定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本會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4조(帳簿作成의 義務) ① 稅理士는 稅理士業務에 관한 帳簿를 작성하여 委囑者別, 事件別로 稅務代理나 稅務書類의 作成 또는 稅務相談의 內容 및 그 전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帳簿는 폐쇄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帳簿의 標準樣式(기재사항 포함)은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第 11 章 硏修

제65조(稅理士의 硏修) ① 本會는 稅理士의 會員의 業務改善과 進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硏修에 관한 施策을 실시한다.

② 前項에 규정하는 硏修의 內容 및 實施의 基準 및 運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③ 稅理士會는 本會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硏修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稅理士會의 會員은 前項에 규정하는 硏修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稅理士會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硏修를 실시하는 때는 지체없이 그 요령 및 결과를 本會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 12 章 稅務援助

제66조(稅務援助의 實施) ① 稅理士會는 本會의 정함에 의하여 小規模 零細납세자(無償 또는 현저히 낮은 報酬가 아니면 稅理士에게 委囑하기 곤란한 經濟的 이유가 있는 者)에 대하여 稅理士의 업무에 관한 施策(이하 「稅務援助」라 한다)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前項에 규정하는 稅務援助는 稅理士會의 會員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稅理士會의 會員은 그 소속하는 稅理士會가 실시하는 稅務援助에 從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稅務援助 實施의 基準) ①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稅務援助로서 실시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稅務에 관한 相談.
2. 記帳에 관한 指導.
3. 稅務書類作成에 관한 指導.
4. 前 各號에 게기하는 것 외에 本會 및 稅理士會가 필요로 인정하는 事務.

② 稅務援助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章에 규정한 것 외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第 13 章 監督

제68조(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 대한 一般的 監督) 本會는 稅理士會의 事業 또는 稅理士業務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稅理士會 또는 그 會員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필요한 勸告 또는 指示를 할 수 있다.

제69조(稅理士會에 대한 監督) ① 稅理士會는 稅理士에 관한 法令, 本會의 會則 및 規則을 遵守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本會는 운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稅理士會에 대하여 그 행하는 업무에 관한 質問을 할 수 있다.

제70조(意見의 聽取) 稅理士會가 그 會則을 變更하고자 할 때는 미리 本會의 意見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稅理士會가 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國稅廳長官에게 指定區域을 정할 것을 請求한 때 또는 法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會則을 정하는 때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1조(稅理士會의 報告義務) ① 稅理士會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항을 本會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總會를 召集하는 경우 그 日時, 場所 및 議案.
2. 總會가 終了한 경우 그 議決의 내용.
3. 官公署에 建議를 한 경우 그 建議의 내용.
4. 官公署의 諮問에 대하여 答申을 하는 경우 그 答申의 내용.
5. 稅理士會가 그 會員에 대하여 法 제45조 또는 法 제46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大藏大臣에게 通知한 경우 그 행위 및 사실의 내용.
6. 法 제49조의 16 또는 法 제49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大藏大臣으로부터 命令을 받거나 報告의 要請 또는 勸告를 받은 경우 그 命令, 報告 또는 勸告.
7. 事務所를 移轉한 경우 移轉 후의 事務所.
8. 任員의 變更이 있은 경우 變更 후의 任員의 姓名.
9. 稅理士會가 그 會員에 대하여 處分을 한 경우 그 處分의 종류 및 그 전말.
10. 稅理士會의 區域에 대하여 指定 또는 變更이 있은 경우 그 區域.

② 稅理士會는 매월 말 그 會員數를 2월 10일까지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72조(稅理士에 대한 監督) ① 本會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法 또는 本會 또는 稅理士會의 會則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회 稅理士會의 의견을 받아 당해 會員을 警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警告를 행한 경우에는 本會의 常務理事會의 決議

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③ 本會는 제1항의 警告를 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당해 會員에게 그 취지를 通知하고 상당기간 내에 스스로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辨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本會는 운영상 필요가 있는 때는 稅理士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質問할 수 있다.

제73조(稅理士會의 會員의 不服請求) ① 稅理士會의 處分을 받은 會員은 그 處分에 대하여 不服하는 경우에는 本會에 不服請求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不服請求는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익일부터 1월 이내에 書面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제1항의 不服請求에 대하여는 裁決은 常務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④ 不服請求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前 3항에 정한 것 외에는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第 14 章 會費 및 據出金

제74조(會費) ① 稅理士會는 매 事業年度 마다 會費로서 재적회원수에 15,600円(事業年度 중에 入·退會한 者는 15,600円에 會員이었던 월수를 곱한다. 단 입회 월의 端日數는 1월로 보고 退會時의 端日數는 버린다)을 곱한 金額을 負擔한다.

② 稅理士會는 매월말 그 會員數에 1,300円을 곱한 金額을 익월 말일까지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제75조(特別會費) ① 稅理士會는 本會의 特別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特別會費를 負擔한다.

② 前項의 特別會費의 目的, 金額 및 納期에 대하여는 總會에서 정한다.

③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前項에 규정하는 總會의 議決에 준용한다.

④ 特別會費는 特別會計로 처리한다.

제76조(會費의 免除) ① 本會는 稅理士會가 그 會則의 규정에 의하여 그 會員에 대하여 特定期間 會費의 전부를 免除한 때는 그 稅理士會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會費 중 당해 會費를 免除한 會員 1인당 1,300円에 그 免除한 월수를 곱한 金額을 免除할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會費를 免除한 期間의 時期는 당해 會費의 免除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개시일 전에 遡及할 수 없다.

③ 會費免除의 取扱에 대하여는 前2項에 정한 것 이외에는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제77조(據出金) 稅理士會는 새로 入會한 會員이 있는 월에는 그 월분의 會費에 據出金으로 1인당 15,000円씩의 金額을 加算하여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 15 章 庶務 및 會計

제78조(事務局) ① 本會에 事務局을 두어 庶務를 담당케 한다.

② 事務局에는 事務局長 및 소요 職員을 둔다.

③ 事務局長은 專務理事의 命을 받아 事務局의 事務를 처리한다.

④ 事務局의 職制 및 事務處理에 대하여는 前 2항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제79조(事業年度) 本會의 事業年度는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 終了한다.

제80조(經費) 本會의 經費는 會費, 據出金, 登錄 등에 관한 手數料 收入, 寄附金, 기타 收入으로 충당한다.

제81조(交付金) ① 本會는 제44조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登錄手數料 收入의 일부를 交付金으로 稅理士會에 交付할 수 있다.

② 交付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規則에서 정한다.

제82조(財産의 管理) 本會의 財産은 會長이 관리한다.

제83조(財産目錄의 作成) 會長은 매 事業年度 말일에 財産目錄을 작성하여 本會의 資産 및 負債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제84조(豫算 및 決算) ① 會長은 定期總會에 그 회일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豫算 및 事業計劃을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고, 前 事業年度의 決算 및 事業報告에 대하여 承認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豫算이 성립되지 않는 기간동안 會長은 통상의 會務를 執行하는데 필요한 經費에 한하여 支出할 수 있다.

제85조(監査報告) 監事는 각 事業年度에 있어서 本會의 會計 및 會務의 執行을 監事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 事業年度의 定期總會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6조(會計處理의 稅目) 本會의 會計處理에 대하여는 이 章에 정하여진 것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第 16 章 새로 設立된 稅理士會 등에 관한 特例

제87조(任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任員은 그 소속된 稅理士會가 法 제4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稅理士會를 새로 設立하거나 稅理士會의 區域 變更에 의하여 選任 당시 소속하였던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니게 된 때는 새로 選任된 任員이 就任할 때까지 계속하여 職務를 행한다.

제88조(評議員의 選出에 관한 特例) ① 評議員은, 그 소속하였던 稅理士會가 法 제4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새로 稅理士會를 設立하거나 또는 稅理士會의 區域 變更에 의하여 그 委囑 당시 소속하였던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니게 된 때는 당해 設立日 또는 당해 區域 變更日에 退任한 것으로 한다.

② 法 제4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稅理士會가 設立된 때에 그 設立된 稅理士會의 會員 중에서 稅理士會가 추천하는 評議員의 수는 당해 設立日 전의 稅理士會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評議員의 수를 設立日 현재 새로 設立된 당해 각 稅理士會의 會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안분 계산(1인 미만의 단수는 1인으로 한다)한 수로 하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委囑된 評議員의 任期는 그 委囑日 현재에 있어서 재임하고 있는 다른 評議員의 任期와 동일하게 한다.

제89조(議決權에 관한 特例) 總會의 회일에 속하는 월의 전전월말 후에 새로 設立된 稅理士會의 議決權의 수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設立日의 會員數와 동수로 한다.

제90조(稅理士會의 届出義務에 관한 特例) ① 새로 設立된 稅理士會는 設立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本會에 届出하여야 한다.

1. 稅理士會의 名稱 및 事務所
2. 設立 總會의 開催日時, 場所, 議案 및 決議의 內容
3. 會則 및 規則
4. 任員의 姓名, 會員名簿 및 會員數

② 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總會의 開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前項 제2호에 규정하는 「設立總會」를 「同項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결정한 總會」로 바꾸어 前項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據出金에 관한 特例) 稅理士會의 會員인 者가 새로운 稅理士會가 設立되거나 또는 稅理士會의 區域이 變更됨에 의하여 稅理士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의 稅理士會의 會員으로 되는 경우 당해 稅理士會가 그 會員에 대하여 入會金의 納入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會則의 규정이 있는 때는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인에 관계되는 據出金의 納付를 할 필요가 없다.

附則(생략)

稅理士 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關한 基準[1](1992年 3月 26日 改正)

第 1 章 總則

제1조(趣旨) ① 이 基準은, 稅理士會가 稅理士의 업무에 대한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을 기재한 것이다.

② 稅理士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정한 會計業務에 대하여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報酬의 種類) 稅理士의 報酬는 顧問報酬 및 稅務代理報酬, 不服請求의 代理報酬, 稅務書類의 作成報酬, 稅務相談報酬 및 調査立會報酬로 한다.

제3조(日當, 旅費 및 宿泊料) 資料의 收集 기타 特別事務에 종사한 때에는 前條에 정한 報酬외에 日當, 旅費 및 宿泊料를 받을 수 있다.

제4조(報酬算定의 單位) 報酬는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제2조에 정한 報酬의 종류에 따라 稅目別로 受任 1건으로 算定한다.

제5조(報酬의 減免) 委囑者가 災害를 입거나 기타 公益上의 필요가 있는 때는 報酬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제6조(着手金 및 解約의 경우의 取扱) ① 委囑을 받은 事案에 대하여는 그 報酬額의 50% 相當額 이내의 着手金을 받을 수 있고, 受領한 着手金은 委囑者의 사정에 따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委囑者의 사정에 따라 착수후에 해약하는 때는 報酬의 全額을 받을 수 있다.

第 2 章 顧問報酬

제7조(定義 및 適用區分) ① 顧問報酬는 委囑에 관계되는 稅目의 納稅申告

---

1)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登錄(開業)の手引, 1993, pp..59~62.

또는 課稅標準 申告에 관하여 稅務代理 및 稅務相談의 事務를 포괄적으로 受任하므로써 계속하여 받는 報酬를 말한다.

② 前項에 규정하는 事務에 따른 稅務書類의 作成, 稅務官署의 調査立會 또는 不服請求의 代理를 하는 때에는 그 각각 정하여진 報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適用의 制限) ① 顧問報酬를 받은 때에는 前條 제1항에 정한 申告에 관계되는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관한 事務를 포함하고, 그들 事務에 대하여 중복하여 稅務代理報酬 또는 稅務相談報酬를 받을 수 없다.

②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都民稅 및 特別區民稅를 포함. 이하 「住民稅」라 한다) 및 事業稅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受任 1건으로 취급한다.

제9조(算定基準) ① 顧問報酬의 算定基準은 稅目別로 정한다.

② 所得稅(給與등에 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 事務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算定基準은 契約時의 前年度 總所得金額(所得稅法에 규정하는 總所得金額에서 讓渡所得, 一時所得, 臨時的인 所得 등을 제외한 金額에 所得金額의 計算特例에 의한 각종 控除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단, 總所得金額에 비하여 去來金額이 多額인 경우나 事業의 형태가 複雜 또는 大規模인 경우 등 당해 基準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契約時의 前年의 總去來金額(總所得金額에 관계되는 總收入金額)을 基準으로 할 수 있다.

③ 法人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契約時의 事業年度에 있어서 期初資本金額(期初貸借對照表의 資本의 部에 기재된 資本合計額)으로 한다. 단, 期初資本金등에 비하여 去來金額이 多額인 경우와 事業의 형태가 複雜 또는 大規模인 경우 등 당해 기준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契約時의 前事業年度의 去來金額(益金의 額)을 基準으로 할 수 있다.

④ 所得稅와 法人稅 이외의 稅目에 대한 算定基準은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委囑者가 개인인 경우는 所得稅에서 정한 基準, 法人의 경우에는 法人稅에서 정하여진 基準을 적용한다.

제10조(顧問報酬의 限度額) 顧問報酬의 稅目別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1의 규

정에 의한다.

第 3 章 稅務代理報酬

제11조(定義 및 適用區分) ① 稅務代理報酬라 함은 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중 稅務官署에 대한 租稅에 관한 法令 규정에 따라 申告, 申請, 請求 기타 이들에 준하는 行爲(不服請求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또는 稅務官署에 대한 主張 또는 陳述을 代理 또는 代行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② 前項에 규정하는 事務에 부수하여 稅務書類를 作成하거나 稅務官署의 調査에 立會, 또는 不服請求의 代理를 한 경우에는 각각 정하여진 報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適用의 制限) 委囑을 받은 稅務代理에는 당해 申告에 관계되는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관계되는 事務를 포함하고, 이들 事務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報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受任 1건의 特例) ① 所得稅의 稅務代理에 있어서 分離課稅 讓渡所得(分離課稅에 관계되는 事業所得 및 雜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事案의 報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受任 1건에 포함하지 않고 算定하여 다른 所得稅에 관계되는 稅務代理報酬와 合計額을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규정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所得稅에 관한 顧問報酬를 받을 경우에 있어서 分離課稅 讓渡所得에 관계되는 稅務代理의 委囑을 받은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정한 住民稅 및 事業稅에 관한 受任 1건의 규정은 稅務代理報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算定基準) ① 稅務代理報酬의 算定基準은 稅目別로 정한다.

② 所得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總所得金額(所得稅法에 규정하는 總所得金額, 退職所得金額 및 山林所得金額의 合計額에 所得計算의 特例에 의한 각종 控除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단, 總所得金額에 비하여 去來金額이 多額인

경우와 事業의 형태가 複雜 또는 大規模인 경우등 당해 基準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년 去來金額(總所得金額에 관계되는 總收入金額)을 基準으로 할 수 있다.

③ 所得稅중 分離課稅 讓渡所得에 대한 算定基準은 所得金額(特例에 의한 控除前의 讓渡所得金額)으로 한다. 단, 所得金額에 비하여 去來金額이 多額인 경우와 거래의 내용이 複雜 또는 大規模인 경우등 당해 기준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년 去來金額(分離課稅 讓渡所得에 관계되는 總收入金額)을 基準으로 할 수 있다.

④ 法人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所得金額(法人稅法에 규정하는 課稅標準으로서의 所得金額, 단 缺損金 또는 災害損失金의 당기 控除額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控除前의 金額)으로 한다. 단, 所得金額에 비하여 去來金額이 多額인 경우와 事業의 형태가 복잡 또는 大規模인 경우등 당해 기준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년 去來金額(益金의 額)을 基準으로 할 수 있다.

⑤ 住民稅 및 事業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전3항의 규정을 準用한다.

⑥ 消費稅, 特別地方消費稅 기타 消費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期間去來金額(消費稅에 대한 課稅期間에 관계되는 去來金額, 特別消費稅에 대하여는 月去來金額, 기타 消費稅에 대하여는 計算의 기초가 된 課稅對象期間의 去來金額)으로 한다.

⑦ 相續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遺産의 總額(相續 또는 遺贈, 死因贈與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財産의 價額(3년 이내의 贈與財産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合計額(債務 및 葬禮費 등의 控除前의 金額)으로 한다.

⑧ 贈與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取得財産의 價額(贈與, 看做贈與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財産價額의 合計額(債務負擔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控除前의 金額)으로 한다.

⑨ 地價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課稅價額(地價稅法에 규정하는 課稅價額)으로 한다.

⑩ 固定資産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固定資産價額(家屋 및 償却資産에 대한

固定資産 取得時의 價額, 土地에 대하여는 固定資産 課稅評價額)으로 한다.

⑪ 기타 租稅에 대한 算定基準은 당해 租稅에 관계되는 課稅標準額(特例에 의하여 控除를 한 경우에는 그 特例 控除前의 金額)으로 한다. 단, 課稅標準이 資産의 數量, 事業所의 面積 기타 대상으로 하는 稅目의 基準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5조(稅務代理報酬의 限度額) 稅務代理報酬의 稅目別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2의 규정에 의한다.

第 4 章 不服請求의 代理報酬

제16조(定義 및 適用區分) ① 不服請求의 代理報酬는 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업무중 稅務官署에 대한 租稅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不服審査法의 규정에 따라 異議申請, 審査請求의 代理 또는 代行을 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② 不服請求의 代理報酬는 異議申請, 審査請求의 각 審級別로 受任 1건으로 算定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事務에 부수하여 稅務書類를 作成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報酬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不服請求의 代理報酬의 限度額) 不服請求의 代理報酬의 區分 및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3의 규정에 의한다.

第 5 章 稅務書類의 作成報酬

제18조(定義 및 適用區分) ① 稅務書類의 作成報酬는 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② 不服請求에 관한 書類의 作成報酬의 算定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算定基準) 稅務書類의 作成報酬에 관한 算定基準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法 제33조의 2 제1항 업무에 대한 報酬) 法 제33조의 2 제1항 업무에 대한 報酬는 租稅의 課稅標準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作成하거나 당해 申告書에 法定된 計算事項등을 기재한 書面을 첨부하므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제21조(稅務書類의 作成報酬의 限度額) 稅務書類의 作成報酬의 區分 및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4의 규정에 의한다.

第 6 章 稅務相談報酬

제22조(定義 및 範圍) 稅務相談報酬는 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 또는 法 제3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제23조(稅務相談報酬의 限度額) 稅務相談報酬의 區分 또는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5의 규정에 의한다.

第 7 章 調査立會의 報酬

제24조(定義 및 區分) ① 調査立會의 報酬는 顧問 또는 稅務代理를 委囑한 事案에 대하여 稅務官署가 행하는 稅務調査에 立會하거나 이에 따른 特別事務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② 顧問 또는 稅務代理의 委囑을 받지 않는 事案에 대한 稅務調査의 立會를 委囑한 경우에는 前項에 정한 報酬와 稅務代理報酬를 합하여 받을 수 있다.

제25조(調査立會의 報酬의 限度額) 調査立會의 報酬의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6의 규정에 의한다.

第 8 章　日當, 旅費 및 宿泊料

제26조(日當)　委囑을 받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出張이나 資料收集 기타 特別한 事務에 종사한 때에는 소정의 報酬외에 日當을 받을 수 있다. 단, 제24조에 규정하는 調査立會의 報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旅費 및 宿泊料)　委囑받은 업무에 관하여 出張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報酬 및 日當외에 旅費와 宿泊料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日當등의 限度額)　日當, 旅費 및 宿泊料의 最高限度額은 별표 제7의 규정에 의한다.

第 9 章　기타 特則

제29조(公益法人등의 人格없는 社團등의 取扱)　公益法人등 또는 人格없는 社團등에 관한 顧問報酬의 算定基準은 期初貸借對照表에 計上된 總資産의 帳簿價額에서 總負債의 帳簿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期初資本金 基準으로 보고, 년 去來金額 基準에 대하여는 당해 法人등의 益金의 額으로 한다. 이때 公益事業 및 收益事業의 金額은 合計額으로 한다.

제30조(看做法人課稅의 경우의 取扱)　看做法人課稅를 선택한 경우에는 所得稅에 관한 報酬를 적용한다. 이 경우의 總所得金額은 事業主報酬 및 看做法人所得, 기타 所得額의 合計額으로 하고 所得稅法에 규정하는 所得控除前의 金額으로 한다.

제31조(資産所得의 合算課稅의 取扱)　世帶員이 資産所得을 가진 경우의 稅額計算의 特例, 소위 資産所得의 合算課稅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所得者 및 合算對象 世帶員 개개인에 대한 所得稅에 관하여 報酬를 算定한다.

會計業務報酬의 最高限度額에 關한 基準(1987年 3月 25日 改正)

제1(趣旨) 이 基準은 稅理士業務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基準(이하 「稅理士業務 報酬 基準」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稅理士會가 會計業務에 대한 報酬의 最高限度額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準據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제2(定義) 會計業務報酬는 稅理士業務에 부수하여 財務書類의 作成, 會計帳簿의 記帳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事務를 행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제3(會計業務報酬의 種類) 會計業務報酬의 종류는 會計顧問報酬, 記帳代行報酬, 決算書類作成報酬 기타 書類의 作成報酬 및 會計相談報酬 등이다.

제4(報酬의 算定基準) 會計業務報酬는 稅理士業務報酬 基準에서 정한 顧問報酬를 기초로 算定하고, 특정의 것을 제외하고는 委囑者가 개인인 경우에는 所得稅,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에 관한 각각의 顧問報酬限度額(이하 「稅務顧問報酬」라 한다)을 基準으로 한다.

제5(報酬의 限度額) (1) 會計顧問報酬(月額)

會計顧問報酬는 會計帳簿의 記帳 및 財務書類의 作成등에 관하여 相談에 응하거나 指導를 함으로써 계속하여 받는 報酬를 말한다. 稅務顧問報酬 月額의 50%

(2) 記帳代行報酬(月額)

記帳代行報酬는 委囑者가 제시한 資料 및 證票를 기초로 總計定元帳의 記入 및 試算表作成등의 事務를 행함으로써 받는 報酬를 말한다.

稅務顧問報酬 月額 相當額

단, 所得稅 또는 法人稅 이외의 稅目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하여 記帳을 委囑한 경우에는 稅理士業務報酬 基準에서 정한 당해 稅目에 대한 顧問報酬 月額 相當額을 加算한다.

(3) 決算書類作成報酬

① 記帳代行 契約을 한 경우 稅務顧問報酬 月額 相當額의 6개월분

② 記帳代行 契約을 하지 않은 경우 稅務顧問報酬 月額 相當額의 8개월분 단, 事業年度가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당해 報酬額의 60% 相當額

(4) 기타 書類의 作成報酬

① 通常의 것 25,000円

② 특별한 調査·研究를 필요로 하는 것 500,000円

(5) 會計相談報酬

① 口頭에 의한 것 1시간 이내 20,000円

1시간 초과당 10,000円씩 加算

② 書面에 의한 것 125,000円

③ 稅理士法 제3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審査에 부수한 것은 (3)의 ②에 정한 決算書類作成報酬의 50% 相當額

(6) 상기중 (2),(3),(4),(5)의 報酬를 算定한 경우에 있어서 사안이 현저히 번잡한 경우에는 할증금을 가산할 수 있다. 단, 加算額은 50% 相當額 이내

제6 委囑받은 사안에 대하여 出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日當과 旅費 및 宿泊料를 받을 수 있다.

① 日當 50,000円

(注)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본다.

② 旅費 및 宿泊料 實費

제7 稅理士業務報酬 基準 제5조(報酬의 減免) 및 제6조(着手金 및 解約의 경우의 취급)는 이를 준용한다.

제8 解釋과 適用上의 留意事項

(1) 稅務顧問報酬와의 관계에 대하여

會計顧問報酬는 稅理士業務報酬 基準에 규정하는 稅務顧問報酬와는 별도이고 각각의 報酬를 合算하여 받을 수 있다.

(2) 「稅務顧問報酬 月額(相當額)」에 대하여

「稅務顧問報酬 月額(相當額)」이라 함은 실제 契約에 따라 받는 金額이 아니라 稅理士業務報酬 基準에 규정한 金額을 말한다.[2)]

2) 이상의 기준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登錄(開業)の手引, 1993, pp.73~74.

□ 參 考 文 獻 □

申東雲, 金聖煥, 權海浩,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韓國租稅硏究所, 1988.

權海浩, 「豫算法律主義에 관한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法學博士學位 論文, 1993.

權海浩, 「日本의 法人所得 課稅制度」, 主要國의 法人所得 課稅制度중, 韓國租稅硏究所, 1987.

權海浩, 「日本의 個人所得 課稅制度」, 主要國의 個人所得 課稅制度중, 韓國租稅硏究所, 1988.

新井隆一, 負擔の公評/記帳の責任, 成文堂, 1984.

兼子一·竹下守夫, 裁判法(新版), 東京:有斐閣, 1978.

北野弘久, 稅法學の基本問題, 東京:成文堂, 1984.

稅理士制度, 日稅硏論集 第24號,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硏究センター, 1993.

田中二郎, 租稅法, 東京:有斐閣, 1983.

東海稅理士會(日本), 韓國稅務士考試會, 諸外國の稅理士制度, 東京: 新日本法規出版(株), 1994.

中川一郎, 稅理士法改正問題の批判(1), 稅法學 156號, 1963.

南博方, 租稅爭訟の理論と實際, 弘文堂, 197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制度沿革史(初版), 東京:ぎょうせい, 1969.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制度沿革史(增補改訂版), 東京:ぎょうせい, 1987.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新稅理士法要說, 三訂版, 1990, 5.

日本稅理士會連合會, 日本稅理士法逐條解說(新訂版)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登錄(開業)の手引, 1993.

松澤智, 稅理士の職務と責任, 東京:中央經濟社, 1985.

山本鮮一, 稅務行政の 法的限界, 東京:泉文堂, 1988.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第二回 稅理士の實態調査.

東京稅理士會, 東京稅理士會五十年史.

東京地方稅理士會, 東京地方稅理士會五十年史, 1993, 3. 31.

近畿稅理士會, 近畿稅理士會史 第二號, 1985, 3.30.

北海道稅理士會 50年の歩み, 1994, 3.

名古屋稅理士會, 稅理士制度50周年記念誌, 1992, 11.30.

普賢, 北陸稅理士會, 1992, 12.29.

中國稅理士會, 中國稅理士會史, 1991, 6.1.

九州北部稅理士會, 九州北部稅理士會史, 1992, 6.20.

南九州稅理士會, 南九州稅理士會史, 1993, 3.31.

30年のあゆみ 沖繩稅理士會, 1993, 12.25.

沖繩稅理士會, 沖繩稅理士會 30周年記念誌, 1993, 12.25.

阿部泰隆,「行政訴訟の基本的缺陷と改革の視點」, 公法研究52號, 1990.

新井隆一,「稅理士法 第2條 第1項 第3號 (稅務相談)の意義」·稅研35·36 合併號.

新井隆一,「稅理士制度の基本理念」, 日稅研論集 第24號,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石田滿, 「稅理士の責任の範圍と損害賠償をめぐる問題點」, 稅理 31卷 5號, 1988, 5.

岡田正則,「稅理士と稅務行政爭訟」, 日稅研論集, 第24號,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川島いづみ「稅理士の業務展開展開をめぐる知つておきたい事例と/クライアトの監査役就任と業務責任」稅理33卷 8號.

加納淸,「稅理士の法改正と稅務訴訟代理權」, 稅法學 141號.

北野弘久,「稅務辯護士制度について」, 稅法學141號, 1962.

小林博志,「稅理士の權利と義務」, 日稅研論集 第24號,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佐藤義行,「職業上の善管注意義務と賠償責任」, 稅理33卷 8號, 1990, 7.

首藤重幸,「稅理士の責任, 稅理士の權利と義務」, 日稅研論集 第24號, 東京: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3.

シンポジウム,「稅理士と稅務訴訟代理權について」, 稅法學, 1962, 143號.

高野幸大,「稅理士業務とその法的性格」, 日稅硏論集 第24號, 東京: 財團法人日本稅務硏究センター, 1993.

中川一郎,「西ドイツの1975年 11月 4日 編 稅理士法 について」, 稅法學320號, 1977, 8.

中川一郎 發言, シンポジウム稅理士と稅務訴訟代理權について, 稅法學 143號.

成田賴明,「いわゆる士法の現狀と問題點」, 1970년 10월 1일, ジュリスト463號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理士界, 稅理士實態調査の結果, 1969. 8.11.

三木義一,「稅務當局による指導の範圍と稅理士の對應」稅理 29卷 9號.

O. Bachof, Über die Notwendigkeit des Anwaltszwanges im Verwaltungsprozess, NJW 1954 Heft7.

Jens Meyer-Ladewig, Das Gezetz zur Entlastung des Bundesfinazhofs, DStR 1975.

韓國租稅硏究所 硏究委員 名單

職位	姓名	略歷
所長	申相式	韓國稅務士會 會長·國會議員
硏究委員	郭泰元	西江大 敎授·經博
〃	金東建	서울大 敎授·經博
〃	宋雙鍾	서울市立大 敎授·法博
〃	吳載善	稅務大學 敎授·經博
〃	尹建永	延世大 敎授·經博
〃	尹桂燮	서울大 敎授·經營博
〃	李愚澤	漢陽大 敎授·經營博
〃	李哲松	漢陽大 敎授·法博
〃	李泰魯	서울大 敎授·法博
〃	鄭泰仁	江陵大 敎授·經營博
〃	崔洸	韓國外國語大 敎授·經博
〃	崔明根	서울市立大 敎授·法博
〃	黃厦周	前 國稅審判所長
〃	權海浩	稅務士·法博
〃	金冕圭	稅務士
〃	金完石	江南大 敎授·法博
〃	明炯植	稅務士·圓光大 敎授·法博
〃	徐順鍾	稅務士·法博
〃	李元錫	稅務士
〃	李承文	稅務士
〃	李澤龍	稅務士·明知專門大 敎授·經營博
〃	張珩鍾	稅務士·經營博
〃	趙暎來	稅務士·經營博
〃	洪學杓	稅務士·建國大 敎授·行政博

■ 硏究叢書案內

[1]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2]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3]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硏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4] 附加價値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5]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6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硏究

金 東 建外 1988. 7

7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外 1988. 10

8 附加價値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의 改善에 관한 硏究

崔 明 根外 1991. 11

9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硏究

金 東 建外 1993. 8

10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李 鎭 淳 1994. 10
李 哲 松

■ 研究叢書案內

11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硏究

李 愚 澤 1995. 3

12 租稅制裁法制의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13 財產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金 完 石 1995. 3

研究調査資料案內 ■

[1]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硏究

李 承 文 1987. 2

[2]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3]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4]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 研究調査資料案內

5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6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硏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8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硏究

權 海 浩　1995. 6

調 査 報 告 書
第 8 輯(1995. 6)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硏究

1995年 6月 22日 印刷
1995年 6月 26日 發行
著 者 權 海 浩
發行人 申 相 式
發行處 韓 國 稅 務 士 會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 : 1988年 11月 11日(바 1184)

〈非賣品〉